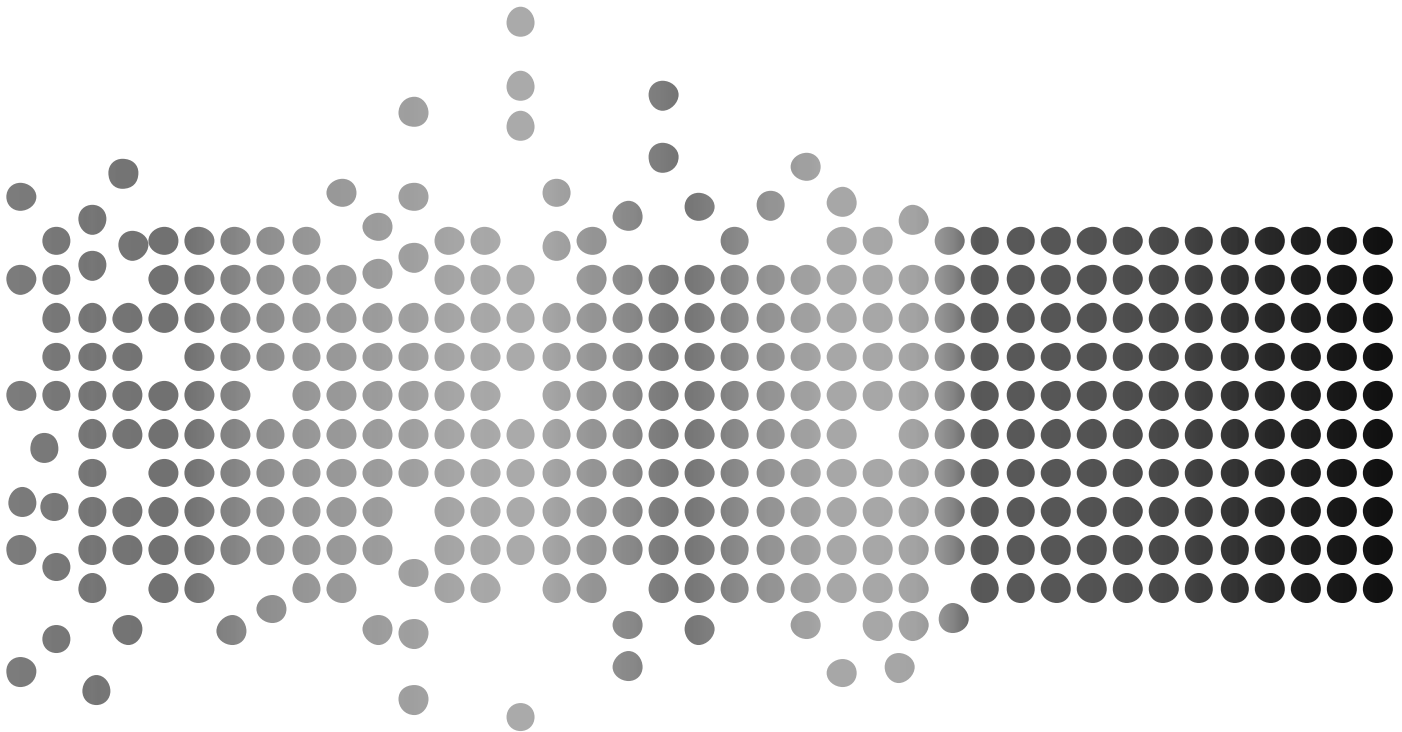




# 2012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Development of Social Indicators by Means of KOWEPS Data

남상호 · 문석웅 · 이경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55-2

---

2012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

발행일 2012년  
저자 남상호 외  
발행인 최병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옵스웨이  
가격 9,000원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ISBN 978-89-8187-749-1 93330

## 머리말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정책대상 분야 중에서 사회정책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복지정책의 비중이 커지면서 국민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초조사 자료의 필요성과 그들을 이용한 다양한 분석결과 의 유용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조사는 2006년도 제1차 조사를 시작하여 2012년의 제 7차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국민의 복지 실태를 정태적으로뿐만 아니라 동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필수적인 지적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제공하는 복지정책 관련 정보의 깊이와 유용성 측면에서 국내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1~6차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층분석을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금년의 연구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자료 수요가 많은 동태적 소득이동의 현황 및 균등화지수에 대한 심층 분석 외에도 그 동안 본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소득분배의 분석모 형을 본원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소득이동 성 분석은 외부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연구주제이므로, 향후에도 지속 적으로 이에 대한 현황분석과 정책대응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 균등화척

도에 따라 빈곤이나 불평등 수준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향후의 연구에서는 가구원의 구성을 반영하는 척도를 사용하여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부분균형적 분석방법에 의한 정책대응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일반균형분석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빈곤 및 불평등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보며, 앞으로도 계속 이 모형을 발전시켜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상호 연구위원 책임 하에 경성대학교의 문석웅 교수와 본원의 이경진 연구원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데이터 정리 및 분석 과정, 보고서 작성 및 마무리 단계에서 보여준 모든 연구진의 노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아울러 본 보고서를 검토하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본원의 강신욱 사회보장연구실장, 염주희 부연구위원, 가톨릭대 김안나 교수, 그리고 여성정책연구원의 김영숙 박사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회정책분야의 모든 전문가의 노력과 관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한국복지패널』이 정책적·학술적 유용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 목 차

Abstract .....	1
요약 .....	3
<b>제1장 서론</b> .....	<b>15</b>
제1절 연구 목적 .....	15
제2절 연구 내용 .....	16
제3절 분석 방법 및 한계 .....	18
<b>제2장 한국복지패널 개관</b> .....	<b>23</b>
제1절 조사개요 .....	23
제2절 한국복지패널의 장점 및 한계 .....	31
<b>제3장 소득</b> .....	<b>37</b>
제1절 소득 범주의 구분 .....	37
제2절 소득관련 지표 분석결과 .....	39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	52
<b>제4장 소득분배</b> .....	<b>57</b>
제1절 소득분배 관련 지표 산출 방식 .....	57
제2절 소득분배 지표 산출결과와 추이 .....	61
<b>제5장 주거</b> .....	<b>77</b>
제1절 주거복지 지표 산출방식 .....	79
제2절 주거복지 지표 산출 결과와 추이 .....	84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	95

<b>제6장 보건의료</b> .....	99
제1절 보건의료 측정지표의 선정 및 측정도구 .....	99
제2절 보건의료지표 측정결과와 추이 .....	104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	130
<b>제7장 노동</b> .....	135
제1절 노동지표 산출 방식 .....	136
제2절 노동지표 산출 결과와 추이 .....	140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	170
<b>제8장 복지수급</b> .....	175
제1절 복지수급 지표 산출 방식 .....	176
제2절 복지수급 지표 산출 결과 .....	182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	196
<b>제9장 가구균등화지수가 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분석</b> .....	201
제1절 서론 .....	201
제2절 기존연구의 개관 .....	206
제3절 자료 및 분석방법 .....	210
제4절 분석결과 .....	218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	225

제10장 우리나라 소득이동성의 현황 분석 .....	231
제1절 서론 .....	231
제2절 연구 방법 .....	232
제3절 소득이동성 분석 .....	236
제4절 빈곤 진입과 탈출 .....	243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	244
제11장 CGE모형을 이용한 소득분배 구조 분석 .....	249
제1절 연구의 목적 .....	249
제2절 CGE 모형의 구조 .....	251
제3절 기본 데이터베이스와 SAM .....	259
제4절 산업분류와 시나리오의 설정 .....	265
제5절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결과 .....	267
제6절 결론 .....	281
참고문헌 .....	283
부록 .....	291

## 표 목차

〈표 2-1〉 한국복지패널 표본추출 개요 .....	24
〈표 2-2〉 패널가구 및 가구원의 원표본 유지율 .....	24
〈표 2-3〉 1차 대비 6차 조사완료 패널가구 및 가구원 수 .....	25
〈표 2-4〉 6차 조사 가구 및 가구원 조사대상 표본의 지역별 탈락률 비교 .....	26
〈표 2-5〉 조사표의 조사 대상·조사방법·응답대상 기간 및 시점(6차 조사) .....	28
〈표 2-6〉 패널조사 영역(6차 조사) .....	29
〈표 2-7〉 조사 주제별 구성 .....	30
〈표 2-8〉 한국복지패널의 각 자료별 원표본 유지율 비교 .....	31
〈표 3-1〉 소득분류와 구성요소 .....	38
〈표 3-2〉 5년간 명목소득 변화 추이 .....	39
〈표 3-3〉 5년간 실질소득 변화 추이(기준년도=2010년) .....	40
〈표 3-4〉 명목소득의 20~80분위수 .....	42
〈표 3-5〉 실질소득의 20~80분위수(기준년도=2010년) .....	43
〈표 3-6〉 지역별 가구명목소득 추이 .....	44
〈표 3-7〉 지역별 가구실질소득 추이(기준년도=2010년) .....	45
〈표 3-8〉 가구원수별 가구명목소득 추이 .....	47
〈표 3-9〉 가구원수별 가구실질소득 추이(기준년도=2010년) .....	49
〈표 3-10〉 노인·무노인 가구 명목소득 추이 .....	50
〈표 3-11〉 노인·무노인 가구 실질소득 추이(기준년도=2010년) .....	51
〈표 3-12〉 시장소득 계산 과정 .....	53
〈표 4-1〉 빈곤지표(최저생계비 기준) .....	62
〈표 4-2〉 아동 및 노인인구 빈곤지표(최저생계비 기준) .....	63
〈표 4-3〉 지역별 빈곤지표(최저생계비 기준) .....	64
〈표 4-4〉 행정구역별 빈곤율(최저생계비 기준) .....	65



〈표 4-5〉 상대빈곤율과 빈곤격차비율(중위소득 50% 기준) .....	67
〈표 4-6〉 아동, 노인인구의 빈곤지표(중위소득 50% 기준) .....	68
〈표 4-7〉 지역별 빈곤지표(중위소득 50% 기준) .....	69
〈표 4-8〉 행정구역별 빈곤지표(중위소득 50% 기준) .....	71
〈표 4-9〉 불평등지표 .....	73
〈표 5-1〉 주거복지 측정지표 .....	78
〈표 5-2〉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	83
〈표 5-3〉 점유형태별 가구비율 .....	84
〈표 5-4〉 지역별 자가 점유율 .....	84
〈표 5-5〉 소득 5분위별 자가 점유율 .....	85
〈표 5-6〉 지역별 1인당 주거면적 .....	86
〈표 5-7〉 소득 5분위별 1인당 주거면적 .....	86
〈표 5-8〉 점유형태별 1인당 주거면적 .....	87
〈표 5-9〉 지역별 방당 거주인 수 .....	88
〈표 5-10〉 소득 5분위별 방당 거주인 수 .....	88
〈표 5-11〉 점유형태별 방당 거주인 수 .....	89
〈표 5-12〉 가구원수별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3인 이상) .....	89
〈표 5-13〉 지역별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	90
〈표 5-14〉 지역별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	91
〈표 5-15〉 소득 5분위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	91
〈표 5-16〉 소득 5분위별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의 비율 .....	92
〈표 5-17〉 가구원수별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의 비율 .....	92
〈표 5-18〉 지역별 연소득 대비 자가주택가격(현시가기준) 비율 .....	93
〈표 5-19〉 소득 5분위별 연소득 대비 자가주택가격(현시가기준) 비율 .....	93
〈표 5-2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 추이 .....	94
〈표 6-1〉 건강 형평성 지표의 분류 .....	100

〈표 6-2〉 소득5분위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주) .....	105
〈표 6-3〉 소득5분위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원 전체) .....	105
〈표 6-4〉 지역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주) .....	106
〈표 6-5〉 지역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원 전체) .....	106
〈표 6-6〉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주) .....	107
〈표 6-7〉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원 전체) .....	107
〈표 6-8〉 주관적 건강상태에서의 보건의료지표 .....	108
〈표 6-9〉 소득 5분위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주) .....	108
〈표 6-10〉 소득 5분위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원 전체) .....	109
〈표 6-11〉 지역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주) .....	110
〈표 6-12〉 지역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원 전체) .....	110
〈표 6-13〉 성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주) .....	111
〈표 6-14〉 성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원 전체) .....	111
〈표 6-15〉 우울에서의 보건의료지표 .....	112
〈표 6-16〉 소득5분위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주) .....	113
〈표 6-17〉 소득5분위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원 전체) .....	114
〈표 6-18〉 지역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주) .....	115
〈표 6-19〉 지역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원 전체) .....	116
〈표 6-20〉 성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주) .....	117
〈표 6-21〉 성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원 전체) .....	118
〈표 6-22〉 흡연에서의 보건의료지표 .....	119
〈표 6-23〉 소득5분위별 간접흡연율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주) .....	120
〈표 6-24〉 소득5분위별 간접흡연율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원 전체) .....	120
〈표 6-25〉 지역별 간접흡연율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주) .....	121
〈표 6-26〉 지역별 간접흡연율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원 전체) .....	122
〈표 6-27〉 성별 간접흡연율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주) .....	122

〈표 6-28〉	성별 간접흡연율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원 전체)	123
〈표 6-29〉	간접흡연에서의 보건의료지표	123
〈표 6-30〉	소득5분위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가구주)	124
〈표 6-31〉	소득5분위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가구원 전체)	125
〈표 6-32〉	지역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가구주)	126
〈표 6-33〉	지역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가구원 전체	127
〈표 6-34〉	성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가구주)	128
〈표 6-35〉	성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가구원 전체)	129
〈표 6-36〉	음주에서의 보건의료지표	130
〈표 7-1〉	노동지표의 구성	135
〈표 7-2〉	가구주의 소득분위별 경제활동지표	140
〈표 7-3〉	가구원 전체의 소득분위별 경제활동지표	141
〈표 7-4〉	가구주의 지역별 경제활동지표	142
〈표 7-5〉	가구원 전체의 지역별 경제활동지표	143
〈표 7-6〉	가구주의 성별 경제활동지표	144
〈표 7-7〉	가구원 전체의 성별 경제활동지표	145
〈표 7-8〉	가구주의 학력별 경제활동지표	145
〈표 7-9〉	가구원 전체의 학력별 경제활동지표	146
〈표 7-10〉	가구주의 연령별 경제활동지표	147
〈표 7-11〉	가구원 전체의 연령별 경제활동지표	148
〈표 7-12〉	가구내 취업자수 비중의 연도별 추이	149
〈표 7-13〉	2010년 소득분위별 가구내 취업자수 비중	149
〈표 7-14〉	2010년 지역별 가구내 취업자수 비중	150
〈표 7-15〉	소득분위별 가구 취업자수	151
〈표 7-16〉	2009년 지역별 가구 취업자수	151
〈표 7-17〉	가구주의 소득분위별 연간 취업경험률	152

〈표 7-18〉 가구원 전체의 소득분위별 연간 취업경험률 .....	153
〈표 7-19〉 가구주의 지역별 연간 취업경험률 .....	153
〈표 7-20〉 가구원 전체의 지역별 연간 취업경험률 .....	154
〈표 7-21〉 가구주의 성별 연간 취업경험률 .....	155
〈표 7-22〉 가구원 전체의 성별 연간 취업경험률 .....	155
〈표 7-23〉 가구주의 학력별 연간 취업경험률 .....	156
〈표 7-24〉 가구원 전체의 학력별 연간 취업경험률 .....	157
〈표 7-25〉 가구주의 연령별 연간 취업경험률 .....	157
〈표 7-26〉 가구원 전체의 연령별 연간 취업경험률 .....	158
〈표 7-27〉 취업중인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비중 .....	159
〈표 7-28〉 취업중인 가구원 전체의 종사상지위 비중 .....	160
〈표 7-29〉 2010년 소득분위별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비중 .....	160
〈표 7-30〉 2010년 소득분위별 가구원 전체의 종사상지위 비중 .....	161
〈표 7-31〉 2010년 가구주 성별에 따른 종사상지위 비중 .....	161
〈표 7-32〉 2010년 가구원 전체의 성별에 따른 종사상지위 비중 .....	162
〈표 7-33〉 2010년 가구주의 연령별 종사상지위 비중 .....	162
〈표 7-34〉 2010년 가구원 전체의 연령별 종사상지위 비중 .....	163
〈표 7-35〉 소득분위별 일의 불규칙성 .....	164
〈표 7-36〉 성별 일의 불규칙성 .....	164
〈표 7-37〉 학력별 일의 불규칙성 .....	165
〈표 7-38〉 연령별 일의 불규칙성 .....	166
〈표 7-39〉 종사상 지위별 일의 불규칙성 .....	166
〈표 7-40〉 소득분위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	167
〈표 7-41〉 성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	168
〈표 7-42〉 학력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	169
〈표 7-43〉 연령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	170

〈표 8-1〉 복지수급 지표의 구성 .....	175
〈표 8-2〉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 .....	183
〈표 8-3〉 가구규모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 .....	183
〈표 8-4〉 가구형태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 .....	184
〈표 8-5〉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 .....	185
〈표 8-6〉 가구규모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 .....	185
〈표 8-7〉 가구형태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 .....	186
〈표 8-8〉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대비 보장수준 .....	187
〈표 8-9〉 가구규모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대비 보장수준 .....	187
〈표 8-10〉 가구형태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대비 보장수준 .....	188
〈표 8-11〉 분위별 공적연금 수급률 .....	189
〈표 8-12〉 분위별 국민연금 수급률 .....	189
〈표 8-13〉 지역별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 .....	190
〈표 8-14〉 가구규모별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 .....	191
〈표 8-15〉 가구형태별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 .....	191
〈표 8-16〉 지역별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률 .....	192
〈표 8-17〉 가구규모별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률 .....	192
〈표 8-18〉 가구형태별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률 .....	193
〈표 8-19〉 노인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	193
〈표 8-20〉 만 5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보육지원 서비스 이용경험률 .....	194
〈표 8-21〉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의 학비지원 서비스 이용경험률 .....	195
〈표 8-22〉 장애인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	195
〈표 8-23〉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	196
〈표 9-1〉 균등화 지수와 탄력성의 비교 .....	205
〈표 9-2〉 불평등지수 .....	219
〈표 9-3〉 상대 빈곤지수 .....	220

〈표 9-4〉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추이 .....	221
〈표 9-5〉 절대 빈곤지수 .....	222
〈표 9-6〉 가구원수별 불평등지수의 분해 .....	223
〈표 9-7〉 가구원수별 빈곤지수의 분해 .....	224
〈표 9-8〉 연령대별 빈곤지수의 분해 .....	225
〈표 10-1〉 가구수의 비교 (2005~2009) .....	233
〈표 10-2〉 빈곤율 현황(2005~2009) .....	234
〈표 10-3〉 상관계수의 비교 .....	237
〈표 10-4〉 회귀계수의 비교 .....	238
〈표 10-5〉 소득 5분위별 이행행렬(2005 vs. 2009) .....	239
〈표 10-6〉 소득이동성의 요약 .....	240
〈표 10-7〉 Shorrocks의 소득이동 경직성지수(immobility index) .....	242
〈표 10-8〉 빈곤진입률과 빈곤탈출률 추이 .....	244
〈표 11-1〉 Macro SAM (Basedata) .....	263
〈표 11-2〉 통합분류에 의한 30개 산업 .....	265
〈표 11-3〉 일반 거시변수(실질, 명목) .....	268
〈표 11-4〉 GDP증가에 대한 기여율 .....	269
〈표 11-5〉 교육 사회보장관련 산업의 위상 .....	271
〈표 11-6〉 산업별 고용에 대한 영향 .....	273
〈표 11-7〉 산업별 실질산출에 대한 영향 .....	274
〈표 11-8〉 소득분위별 직접세 부담 증가율 .....	275
〈표 11-9〉 소득분위별 직접세 부담금액 변동 .....	275
〈표 11-10〉 소득분위별 실질가처분소득 변동률 .....	277
〈표 11-11〉 소득분위별 정부 이전지출액 .....	278
〈표 11-12〉 소득 계층별 근로소득과 저축 .....	281

〈부표 9-1〉 가구원수별 기술통계량 .....	291
〈부표 10-1〉 가치분소득의 기술통계량 .....	292
〈부표 10-2〉 가치분소득의 기술통계량 .....	292
〈부표 B-1〉 시나리오 1 .....	318
〈부표 B-2〉 시나리오 2 .....	320
〈부표 B-3〉 시나리오 3 .....	322
〈부표 B-4〉 시나리오 4 .....	324

## 그림 목차

[그림 2-1] 원표본 가구 및 가구원 유지율 비교 .....	25
[그림 2-2] 조사표의 구성(5차 조사와 6차 조사의 비교) .....	28
[그림 3-1] 5년간 명목소득 변화 추이 .....	41
[그림 3-2] 5년간 실질소득 변화 추이(기준년도=2010년) .....	41
[그림 9-1] 균등화지수와 가구원수의 관계 .....	203
[그림 9-2] 균등화 지수의 비교 .....	205
[그림 9-3] 가구원수별 경상소득 분포 .....	211
[그림 9-4] 균등화된 경상소득의 분포 .....	212
[그림 9-5] 소득-연령의 산포도 .....	212
[그림 9-6] 로그 소득과 연령의 산포도 .....	213
[그림 10-1] 소득의 산포도 (2005 vs. 2009, 로그소득) .....	238
[그림 10-2] 소득분위별 소득이동 경직성의 비교 .....	243
[그림 11-1] 생산구조 .....	255
[그림 11-2] 투자재에 대한 수요 .....	257
[그림 11-3] 가계수요의 구조 .....	258
[그림 11-4]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요소 .....	260







# Abstract

## **Development of Social Indicators by Means of KOWEPS Data**

Among the policy areas in Korea, social policy is one of the highly recognized areas in the sense that its impact is so vast and important for the welfare of the Korean.

In order to investigate appropriate policy design, we need to hav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social welfare in many respects.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 jointly conducted by both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and Institute for Social Welfar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originally designed to satisfy such requirements. KOWEPS was first started in 2006 and just completed its seventh survey in 2012.

This report is initiated with the intention of fulfilling deeper analyses for the welfare status for the Korean. Several in-depth studies of welfare analysis are carried out in this report, such as effects of equivalent scales on poverty and inequality, analysis of income mobility, and developing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for the analysis of income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degree of poverty and/or inequality crucially

depends on the equivalent scale for the analysis of micro data such as household survey (e.g., KOWEPS). For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square root of household size is acceptable, but more information on gender or age composition will play an important role for the deeper analysis of welfare status.

Analysis of income dynamics (especially short-run and long-run income mobility) is very important for the design of anti-poverty policy. From now on, we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behavior of the entry and/or exit rate, and the effectiveness/efficiency of the anti-poverty policy based upon the in-depth analyses results of income dynamics.

Until now, partial equilibrium analysis is the main tool for the policy analysis. But this approach has severe drawbacks in the sense that it cannot take interactions of the important variables into account. Therefore, the policy implication from the partial equilibrium analysis has limitation in its nature. There has been a long wish for the tool that enables us to perform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and finally it came true. The CGE model developed here follows the well-known ORANI-G model of the Australian economy and modified to the Korean economy for the issues of income distribution in CGE settings. All the relevant databases, such as social Accounting matrices that entangle the input-output table, the national income accounts, and the household survey, are also prepared. This will be a starting point for the active use of CGE-type analysis for the social welfare in Korea.

# 요약

## 1. 연구의 목적 및 분석 방법

-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 발표하는 ‘한국복지패널(KOWEPS)’의 각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실태를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 방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 자료(2006년 조사)부터 6차 자료(2011년 조사)까지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사회지표를 산출함.
  - 분석에 필요한 각 사회지표의 정의 및 산출 방식을 제시하였으며,
  - 분석단위는 ‘개인(individual)’을 원칙으로 함.
    - 즉, 가구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값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음.

## 2. 주요 결과

- (가구소득 현황) 2010년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균등화된 실질 시장소득은 약 2,329만원이고, 실질 경상소득은 약 2,521만원, 실질 가처분소득은 약 2,317만원으로 나타났다.

-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실질 시장소득의 평균값과 중위값은 연평균 약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동 기간 중 (실질화된) 경상소득의 평균값은 3.1%, 중위값은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소득빈곤)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빈곤지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절대빈곤율은 소득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빈곤격차비율은 2005년에서 2009년까지 대체로 낮아졌다가 2010년에 다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아동 및 노인인구<sup>1)</sup>의 빈곤율 추이를 살펴보면 아동 및 노인빈곤율에서도 빈곤율의 저하경향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
- 5개의 지역구분을 다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재분류하여 각 지역별 절대 빈곤율과 빈곤격차비율을 산출한 결과, 중소도시의 절대빈곤율은 경상소득이나 가처분소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
  - 대도시와 농어촌의 시장소득 기준 절대빈곤율은 2005~2009년까지는 하락하다가 2010년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위소득 50%를 빈곤기준선으로 하여 계산한 상대빈곤율은 앞에서 살펴본 최저생계비 기준의 절대빈곤율의 변화 추이와 유사하였음.
  - 빈곤격차비율에서도 절대 및 상대빈곤율의 장기 추이와 마찬가지로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0년에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남.
  - 아동빈곤율과 노인빈곤율을 전체 인구집단의 빈곤율과 비교해 보면 아동빈곤율은 전체 인구집단의 빈곤율에 비해 낮은 반면, 노인빈곤율은 전체 인구집단의 빈곤율의 약 두 배에 이르고 있음.
- 전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빈곤율 추이를 살펴보면,

---

1) 여기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의미하며, 아동빈곤율은 전체 아동인구 가운데 빈곤선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을 의미함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율 분석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어촌’에서의 상대빈곤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주거) 2010년에 와서 3인 이상 가구의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면적기준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체가구의 1.8%로 과거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주거복지가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후 RIR)이 1분위에서 21.8%로 2분위(13.0%), 3분위(9.5%)에 비해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음.
    - 이는 월세(또는 보증부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해주며, 특히 RIR 30%초과(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의 비율이 1분위의 경우 19.4%로 2분위(4.7%), 3분위(0.3%)에 비해서 크게 높음.
    - 1분위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월세 지원 등 주거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는 2005년(19.5%)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2010년에는 12.8%까지 줄어들었음.
  
- (보건의료) ‘주관적 건강상태’는 전체적으로 2005년에 비하여 좋아졌고, 소득이 낮은 집단의 건강상태가 예전에 비해 좋아졌으며, 소득이 높은 집단은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음.
  - 하지만 소득이 낮은 집단의 건강상태가 소득이 높은 집단에 비하여 낮은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었음.
  - ‘우울’의 경우는 모든 집단에서 2005년에 비하여 우울지수가 낮아져 우울상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음.
    - 그럼에도 소득이 낮은 집단의 우울지수가 소득이 높은 집단에 비하여 높은 상태는 유지되어 건강지수나 우울 모두 소득이 낮을수록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흡연, 간접흡연의 경우 전체적으로 흡연을 하는 비율이 2005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으며, 집단그룹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음주율의 경우 2005년에 비하여 모든 집단이 음주비율이 줄었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음주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흡연율, 간접흡연율, 음주율이 저소득층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편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함.
  
- (노동)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게 나타났음.
  - 실업률의 경우 2005년 이래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청년층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청년층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좀 더 나아가서 저소득층과 여성,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더 나은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 가구 내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정보를 나타내는 가구 취업지수는 2005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가구 취업지수도 높았음.
    - 연간 취업경험률 또한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소득분위와 성별, 학력, 연령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연간 취업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음.
  -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비중을 살펴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2005년 이래로 점차 감소하는 반면, 임시직 임금근로자는 점차 증가하였으며, 그 밖의 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등은 200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비중을 소득분위별로 분석해본 결과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가 높은 반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일용직 및 임시직 임금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더 나아가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막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또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 (복지수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2005년 대비 약 10.2%p나 증가함.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제도를 생활비 및 소득 대비 보장수준을 살펴보면 보장 수준이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이 보장수준이 낮았으며, 가구형태별로는 노인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40% 내외의 낮은 보장수준을 보였으며, 모부자가구는 보장수준이 특히 낮게 나타났음.

-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해결방안 모색뿐만 아니라 국민기초 보장 수준의 다양화를 위한 급여체계를 개편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함을 시사함.

○ 공적연금 수급률과 국민연금 수급률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수급률이 낮았으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수급률이 높게 나타났음.

- 저소득층의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가입의 확대가 필요함.

○ 노인가구, 아동가구, 장애인가구를 모두 포괄하는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노인 복지서비스와 아동 복지서비스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이용률이 점차 증가한 반면,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음.

- 이는 장애인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동시에 노인 및 아동가구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가구균등화지수가 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소득분배를 연구할 때 분석단위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사회정책의 궁극적인 관심대상이 개인의 복지(welfare of the individual)에 있기 때문임.

○ 균등화척도(equivalence scale)란 소득과 가구특성 벡터로부터 조정된 소득을 구하는 함수를 말함

- 통상은 가구원수의 제곱근을 균등화지수로 이용하는데, 이 경우 가구의 성별 및 연령별 구성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분석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불평등지수 및 빈곤지수가 균등화척도에 따라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소득이동성의 현황 분석) 소득이동성이란 ‘사회의 개방도를 나타내는 척도’ 혹은 ‘기회균등을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임.

○ 빈곤의 동태적 지위 분석을 통하여 빈곤경험가구의 특성이나 빈곤지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 분석 등 빈곤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지난 5년 동안 절대 및 상대빈곤율은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소득이동성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음.
- 중간소득계층이나 상위소득계층에 비하여 저소득계층의 소득이동성이 낮다는 사실은 곧 항구적인 불평등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중간소득계층의 소득변화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Gini지수를 불평등 척도로 사용한 경우에서도 소득이동 경직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중간소득계층의 소득이동성이 하위소득계층이나 상위소득계층에 비하여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특정시기에 빈곤선 위에 있던 가구가 다음 기에 빈곤선 아래로 진입하게 될 확률을 빈곤진입률이라고 하고, 특정시기에 빈곤에 머무르던 가구가 다음 시



기에 빈곤에서 벗어나게 될 확률을 빈곤탈출률이라고 함.

- 빈곤진입률은 일정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빈곤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하는 비율은 점차로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반복빈곤 또는 장기빈곤으로 인한 빈곤의 고착화 가능성을 시사함.
- 경상소득의 경우 2007년을 제외하고는 빈곤탈출률이 2006년의 32.6%에 서부터 점차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 가처분소득의 경우도 경상소득의 경우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데, 2006년의 35.4%에서 점차로 낮아져 2008년 31.1%, 2009년의 31.3% 수준에 이르고 있음.

□ (CGE모형을 이용한 소득분배 구조 분석) 미시자료 및 거시자료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사회복지지출과 관련된 정책효과를 일반균형분석법을 이용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를 살펴보았음.

- 복지 관련 부문 3개 산업에 대한 정부지출을 5% 증가시키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하나로 소득 10분위 계층 중 상위 3분위 계층에 대하여만 소득세율을 5%p 증대시켜 본 결과,
  - 다른 대안적 시나리오에 비하여 GDP 증대 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 3. 정책적 시사점

□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주거와 관련하여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며, 흡연 및 음주에 관해서는 전 계층을 아우르는 보편적 접근이 필요함.
-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줄여나가도록 힘써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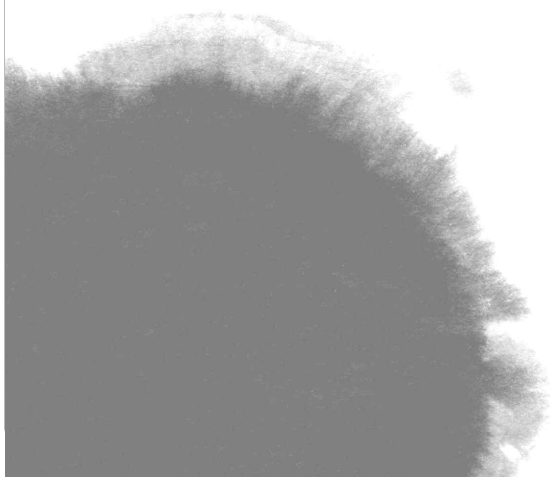
- 장애인, 노인, 이동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자원이 필요함.
- 좀 더 엄밀한 정책효과 분석을 위하여 가구원 수 뿐만 아니라, 가구원의 서별, 연령별 구성을 감안하여 균등화 소득을 계산하고, 그로부터 빈곤 및 불평등지표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가구의 급증, 저출산 및 만혼 또는 이혼으로 인한 1~2인가구의 급증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은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따라서 정부는 단순한 소득보조를 통한 일시적 빈곤탈출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빈곤가구가 장기적 소득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마련해 주는데 복지정책의 중심을 두어야 할 것임
    - ‘농어촌’ 지역 및 ‘노인가구’에 있어서 정부개입의 빈곤을 완화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향후에도 다양한 외부적 충격이 계속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빈곤율을 낮추고 빈곤의 고착화 가능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소득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복지정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임.
  -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어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지면 노동시장에서 나이 그 자체가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므로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임금피크제와 연계를 통한 정년연장 등의 제도 도입에도 노력해야 할 것임.
-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정책당국자들이 사회복지 관련 정부지출을 증대시키려 할 때 재원 조달방식에 따라서 소득 재분배와 산업 활동에 미치게 될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하여 세밀한 사전적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디자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1장

## 서론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목적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매년 공동으로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는 자료이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종 사회지표를 분석하여 우리 사회의 주요 모습과 국민들의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sup>1)</sup>

2006년에 조사된 1차 자료를 시작으로 2011년 6차 자료 데이터까지를 일반에게 무상으로 공개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종단면 조사이며, 기존 횡단면 조사나 종단면 조사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농어가와 읍면지역을 표본에 포함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높인 점에 조사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차 완료된 표본규모는 7,072가구이며, 원가구 기준으로 2차년도 6,511가구(원가구 표본유지율 92.1%), 3차년도 6,128가구(원가구 표본유지율 86.7%), 4차년도 5,935가구(원가구 표본유지율 83.9%), 5차년도 5,657가구(원가구 표본유지율 80.25%), 그리고 6차년도 5,336가구(원가구 표본유지율 75.5%)를 조사 완료함으로써 세계 주요 패널에 버금가는 원표본유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

1) 2009년까지 『00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라는 제목 하에 발간되던 보고서를 2010년부터는 『00년 한국복지패널-한국의 사회지표』라는 제목으로 발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활용하여 각 영역(소득분배, 주거, 건강 및 의료, 노동, 복지수급 등)에서 주요한 사회지표를 산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상을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둘째, 각 영역별 사회지표의 변화상을 보여줌으로써 한국복지패널자료의 정책적 활용도와 기여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제·사회정책은 그 나라의 재정과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밀하고 체계적인 자료에 바탕을 두고 수립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제·사회정책의 수립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분석된 결과들이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는 매우 방대한 변수를 담고 있는 만큼 자료의 구조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

## 제2절 연구 내용

이 연구는 모두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내용면에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은 분석의 자료가 되는 한국복지패널자료의 특성에 대해 개괄할 것이다. 즉 1차에서 6차에 이르는 한국복지패널자료의 연혁과 표본추출, 조사표의 구성과 내용, 조사 절차 등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제3장에서 제8장까지의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주요 사회지표를 분석하는 부분으로써, 전년도(연구2)에서 제시된 사회지표들을 일부

2) 강신욱 외(2011),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정하고 시계열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장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장 ‘소득’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6차 원자료를 활용하여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의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으로 20~80분위수, 집단별·연도별 소득추이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4장부터 제8장까지는 매년 생산하여 오던 주요 사회지표를 분야별로 산출하고 그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제4장 ‘분배’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6차 원자료를 활용하여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분배 관련 지표를 분석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기준 절대빈곤율, 경상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 지니계수 등의 불평등 지표를 인구학적 기준 -전체, 노인, 아동-과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제시하고 있다.

제5장 ‘주거’에서는 주거서비스 지표를 이용하여 연도별·지역별·계층별·점유형태별 주거특성 및 주거서비스 수준을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고 있는 주거 지표로는 자가 점유율, 1인당 주거면적, 3인 이상 단칸방 거주비율,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이다. 특히, 이러한 주거지표를 소득 5분위별로 제시함으로써 계층별 주거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6장 ‘보건의료’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로 분석 가능한 보건의료 관련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건강 부문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증 정도, 건강행태 부문에서 흡연과 음주실태를 소득 5분위별, 성별, 연령별로 분석하였다.

제7장 ‘노동’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활용하여 노동관련 지표를 분석하고 있다. 경제활동 참가 상태를 보여주는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등의 지표와 종사상의 지위, 비경제활동 사유, 유해환경 노출 비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관련 지표 역시 소득 5분위와 성별, 연령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제8장 ‘복지수급’에서는 사회복지 급여의 수급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공공부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그리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별 사회복지서비스와 주거, 교육, 의료 등 대상별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률과 수급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 번째 부분은 9장부터 11장까지이며, 몇 가지 주제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다루고 있다. 먼저 제9장에서는 균등화척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균등화 척도는 ‘가구원수의 제공근’인데, 이 척도는 가구원의 성별 및 연령별 구성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많은 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비교에서는 가장 단순한 척도를 이용하여 균등화 소득을 분석하는 것이 수용 가능하겠지만, 가구원의 성별 및 연령별 구성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내 패널조사에서조차 가구원수 정보만을 이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양한 균등화 척도를 이용하여 불평등과 빈곤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제10장은 소득에 관한 동태적 분석을 다루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소득이동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이 주제는 정책당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제11장에서는 연산가능 일반균형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회정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통상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으로 불리는 이 모형은 기존의 부분균형 모형에 비하여 변수간의 상호연관 관계를 모형 내에 명시적으로 감안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효과 분석이 가능하다는데 그 유용성이 있다.

### 제3절 분석 방법 및 한계

본 연구는 성격상 동일한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각 장에서 다루는 영역의 특성에 따라 사회지표를 산출하는 과정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분석이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복지패널의 각 년도 자료 가운데 가구용 데이터를 일차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가구원 정보와 가구 정보를 연결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구용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에도 분석은 개인단위의 분석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단위 가중치가 아닌 개인 단위 가중치를 사용하였으며, 개인단위 가중치는 각 년도별로 가구의 횡단면 표본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소득계층별 실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가구의 계층적 지위를 우선 판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예외적인 소득값을 갖는 가구(outlier)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소득을 보정하였다. 소득의 보정방법은 LIS(Luxemburg Income Study)의 방법과 유사하게 소득이 상위 99%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백분위가 99%인 가구의 소득으로 대체하였으며, 소득이 하위 1%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분위가 하위 1%인 가구의 소득을 이용하여 대체하였다.

사회지표를 가구원수별로 집단화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득범주는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균등화지수의 적용 방법은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주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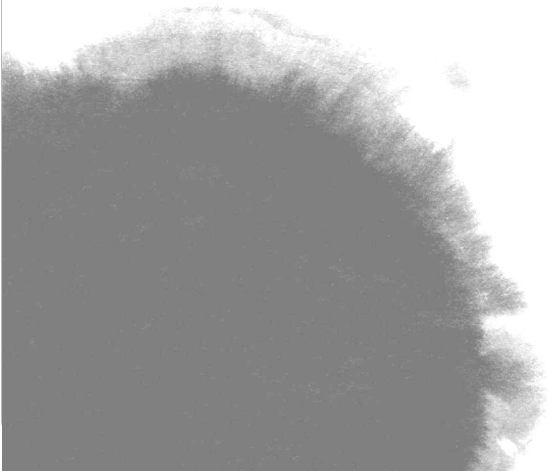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방법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장마다 분석의 특성상 상이한 방법을 적용한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장에서 별도로 분석방법을 밝히도록 하였다.

한편,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각 년도별 사회지표를 산출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패널조사 자료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표본에 대해 동일한 사항을 일정한 주기(주로 1년)로 반복 조사함으로써 얻어지는 자료인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표본의 일부가 탈락되는 것(attrition)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표본의 탈락이 확률적(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잔존표본의 구성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원래의 표본과는 다른 특징을 띠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이러한 패널자료를 이용한 사회지표는 본래부터 횡단면자료의 산출을 목적으로 조사된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사회지표와는 다른 경향성을 보일 수 있다. 예컨대 제3장이나 제4장에서 제시되는 저소득층의 평균소득 변화 양상이나 분배지표의 변화 양상은 이러한 경향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복지패널이 다른 통계자료가 제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복지욕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매년 동일한 사회지표를 반복적으로 생산할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이러한 제한점이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 2장

## 한국복지패널 개관





## 제2장 한국복지패널 개관

### 제1 절 조사개요<sup>3)</sup>

#### 1. 표본추출 및 조사완료율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또는 working poor) 및 차상위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게 되자 이들의 규모와 상태변화를 동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국복지패널(이하 KOWEPS) 조사는 소득계층별 경제활동 상태별, 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정책형성과 피드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전국 규모의 패널조사이다.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종단면 조사로서 읍면지역의 농어가까지 포함함으로써 대표성 높은 표본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1차 조사에서의 표본규모는 7,072가구이며,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표본가구에 속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제외한 15세 이상 가구원, 부가조사 대상으로 구분된다.

패널 원표본 7,072가구를 선정하기 위한 자료는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이용하였으며, 국민생활실태조사는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 90% 조사구에서 추출하

---

3) 본 장의 내용은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각년도)를 참고로 작성되었으며, 특히 전년도에 이어 새로 추가된 6차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4차 자료까지의 특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으로는 김미곤 외(2010), 5차자료에 대한 설명은 강산욱 외(2010), 그리고 6차자료에 대한 설명은 남상호 외(2011)을 참조할 수 있다.

였다.

〈표 2-1〉 한국복지패널 표본추출 개요

	인구주택 총조사(90%)	국민생활실태 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조사구	23만여 개 조사구	517개 조사구	446개 조사구
가구수	14백만 가구	30,000 가구	7,000가구
추출방법	-	2단계층화집락	층화집락계통
대표성	-	전국	전국

표본 배분은 복지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즉, 중위소득 60%(OECD 상대빈곤선) 미만의 저소득층을 3,500가구 추출하고, 중위소득 60%(OECD 상대빈곤선) 이상의 일반가구를 3,500가구 추출하였다.<sup>4)</sup>

한국복지패널 6차년도 조사에서는 먼저 5차년도에 조사되었던 원가구와 원가구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5차년도에 응답하지 않았던 1차년도 원가구 및 원가구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년도 원가구 및 원가구원으로서 6차년도에 조사 완료된 원가구 및 원가구원 원표본 유지율은 다음의 <표 2-2>와 같다.

〈표 2-2〉 패널가구 및 가구원의 원표본 유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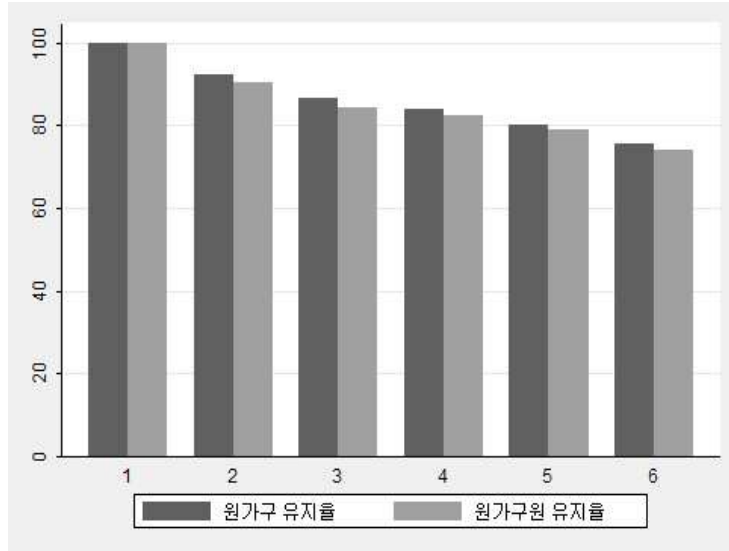
(단위: 가구, 명, %)

조사자료	가 구		가구원	
	표본수	유지율	표본수	유지율
1차 자료	7,072	100.00	14,463	100.00
2차 자료	6,511	92.06	13,083	90.46
3차 자료	6,128	86.65	12,191	84.29
4차 자료	5,935	83.92	11,909	82.34
5차 자료	5,675	80.25	11,400	78.82
6차 자료	5,332	75.40	10,459	72.30

4) 물론 최종적인 조사결과가 전국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그림 2-1] 원표본 가구 및 가구원 유지율 비교



6차 조사에 새롭게 진입한 표본가구는 원 표본가구에서 분가하여 새로운 가구를 형성한 경우로서 399가구이며(5차는 359), 가구원은 663명(5차는 864)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5차 웨이브에서 탈락했던 가구를 추적 조사하여 추가로 원 가구 및 원가구에 대한 패널관리를 함으로서 유지율을 높이고자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원 표본가구와 원표본가구원을 합한 6차 웨이브 표본가구 및 가구원수는 다음의 <표 2-3>과 같다. 즉, 1차 조사 대비 6차 조사완료 가구 및 가구원 비율을 살펴보면 가구는 81.09%(5차는 85.32%)의 완료율을 나타내며, 가구원은 80.26%(5차는 84.80%)의 완료율을 보이고 있다(남상호 외 2011, p. 38).

〈표 2-3〉 1차 대비 6차 조사완료 패널가구 및 가구원 수

(단위: 가구, 명, %)

구 분	가 구		가 구원	
	표본 수	비 율	표본 수	비 율
원표본	5,336	75.45	10,688	73.90
신규	399	5.64	920	6.36
계	5,735	81.09	11,608	80.26

주: 1차년도 완료가구수는 7,072, 완료가구원수는 14,463임.

6차 조사를 기준으로 16개 지역별 조사완료 가구 수와 가구원수의 분포를 파악해 보면 서울지역에서 가장 많은 932가구를, 그 다음으로 경기지역에서 897가구를 조사 완료하였다. 1차 대비 6차의 패널가구 탈락률(attrition rate)을 살펴보면, 가구의 경우 전국적으로 18.9%의 탈락률을 보이고 있고 가구원의 경우 19.7%로 나타나서 가구와 가구원의 탈락률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표 2-4> 참조).

다음으로 가구의 탈락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가장 높은 30.1%을 보이고, 다음으로 울산지역이 28.5%로 나타났다. 특별히 충남지역과 광주지역의 탈락률은 각각 0.3% 및 0.4%로 나타나 가장 낮은 탈락률을 보이고 있다. 광역단위 지역으로 구분하여 패널 가구의 탈락률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대도시지역에 속하는 광역시 지역의 탈락률이 평균 20.8%인 반면, 도지역의 탈락률 11.5%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

<표 2-4> 6차 조사 가구 및 가구원 조사대상 표본의 지역별 탈락률 비교

(단위: 가구, 명, %)

지역	가 구			가 구 원		
	1차	6차	탈락률	1차	6차	탈락률
전 국	7,072	5,735	18.9	14,463	11,608	19.7
서 울	1,335	932	30.1	2,847	1,964	31.0
부 산	528	397	24.8	1,090	789	27.6
대 구	422	337	20.1	873	677	22.5
인 천	437	337	22.8	914	686	24.9
광 주	244	235	0.4	519	488	6.0
대 전	208	176	15.3	435	363	16.6
울 산	203	145	28.5	424	336	20.8
경 기	1,130	897	20.6	2,324	1,883	19.0
강 원	236	206	12.7	465	406	12.7
충 북	221	197	10.8	457	394	13.8
충 남	321	320	0.3	662	667	-0.8
전 북	347	310	10.6	655	578	11.8
전 남	377	334	11.4	709	615	13.3
경 북	494	418	15.3	942	791	16.0
경 남	488	419	14.1	975	811	16.8
제 주	81	75	7.4	172	160	7.0

주: 가구원은 15세 이상 가구원 기준임.

5) 이는 탈락률의 단순평균인데, 탈락률의 가중평균을 구하면 가구는 24.2%, 가구원은 14.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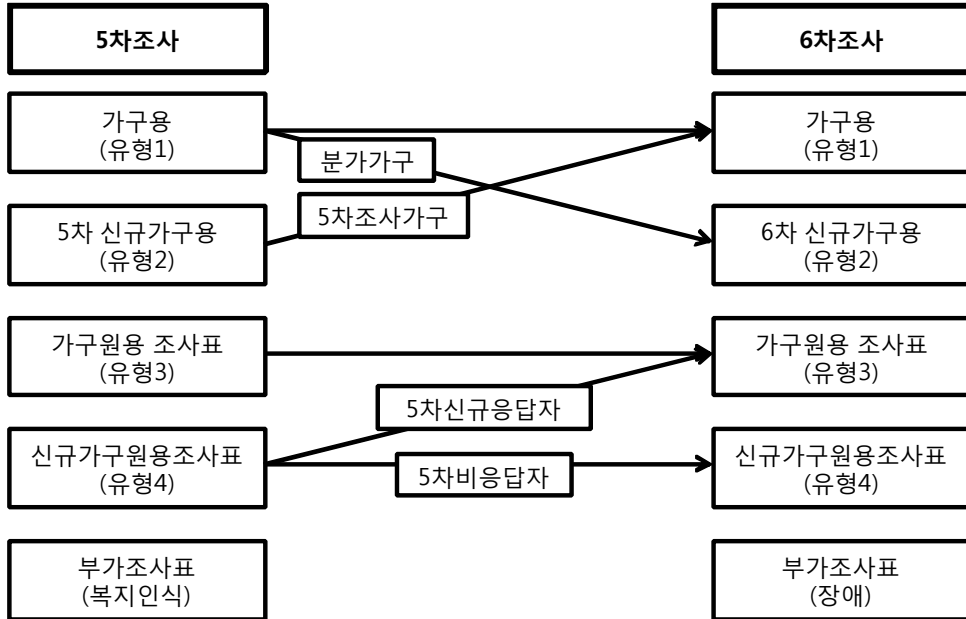
## 2. 조사표 구성 및 조사 내용

### 가. 조사표의 구성

각 년도의 자료는 크게 가구용 설문과 가구원용 설문, 부가조사 설문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조사 전년도 9월 이전에 분가, 결혼 등의 이유로 원가구(가구주 중심)로부터 분리된 가구에 대해서는 신규가구용 조사가 이루어진다. 또한 가구원용 설문의 경우 전년도에서 가구원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원을 조사하기 위해 신규가구원용 조사가 이루어진다. 또한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는 매년 부가조사가 이루어진다. 부가조사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3년 주기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5차년도에는 부가조사 설문은 2차년도에 부가조사된 바 있던 복지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6차년도에는 3차년도에 조사된 바 있는 장애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2008년 3차년도 장애인조사의 응답자이다. 가구용과 가구원용 조사표의 경우와는 달리, 부가조사의 조사기준 기간 및 시점은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가구용 설문은 표본대상 가구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응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로, 조사기준 기간은 조사가 행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1년, 기준 시점은 전년도 12월 31일로 하였다. 예를 들어 2011년에 이루어진 6차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은 2010년 1년간이며, 조사 대상 시점은 2010년 12월 31일이다. 가구원용 설문의 조사방법 및 조사 기준 기간과 시점은 가구용 설문과 동일하다.

[그림 2-2] 조사표의 구성(5차 조사와 6차 조사의 비교)



<표 2-5> 조사표의 조사 대상·조사방법·응답대상 기간 및 시점(6차 조사)

가구용 설문(유형1·2)	가구원용 설문(유형3·4)	부가조사 설문(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li> <li>• 조사대상 기간: 2010.1.1~12.31</li> <li>• 기준 응답시점: 2010.12.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신규 진입자 포함)</li> <li>2) 2010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li> </ol> </li> <li>• 조사대상 기간: 2010.1.1 ~12.31</li> <li>• 기준 응답시점: 2010.12.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 3차년도 부가조사 완료된 대상과 신규 선정된 가구주 및 배우자</li> <li>• 기준 응답시점: 조사일 현재</li> </ul>

## 나. 조사 내용

가구용(유형1·유형2), 가구원용(유형3·유형4), 부가조사용(아동) 각 설문문의 조사 영역은 다음 표와 같다. 가구용(유형1·유형2) 설문은 가장 많은 영역을 담고 있다. 가구일반사항, 가계수지, 경제활동상태, 사회복지제도와 관련한 1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원용(유형3·유형4) 설문 가구의 대표응답자가 응답하기에 부적절한 것을 가구원 개인만이 응답할 수 있는 영역(주로 의식 관련 영역)으로 7개 영역(단, ‘교육’과 ‘개인사’의 경우 6차 신규가구원용에만 해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가 조사 설문(장애인)은 ‘장애 원인 및 상황’과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6〉 패널조사 영역(6차 조사)

조사표 구분	조사 영역	
가구용 (유형1·유형2)	I. 가구일반사항 II. 건강 및 의료 A III. 경제활동상태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V. 의료 B VI. 주거 VII. 생활비 VIII. 소득 IX. 부채, 이자, 주관적 최저생계비	X. 재산 XI. 생활여건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XII-1. 근로장려세제 XII-2. 희망키움통장(근로소득장려금)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II. 가족
가구원용 (유형3·유형4)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B. 근로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F. 교육(유형4에만 포함됨) G. 개인사(유형4에만 포함됨)
장애인 부가조사	(공통I) 장애 원인 및 상황 (공통II) 일상생활 (개별I) 미취학아동 설문	(개별II) 학생(초등~고등학생)설문 (개별III) 성인(18~64세 미만)설문 (개별IV) 어르신(만65세 이상)설문

이상 3개 설문문의 영역들을 주제별로 분류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가구원의 인구 사회학적 배경 및 개인사 관련 문항은 문항 성격에 따라 가구용과 가구원용 설문에서 나뉘어져 있다. 가구여건 관련 문항은 가구용 조사 설문문의 해당 영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제도별 가입 및 수급실태는 문항의 적절한 응답대상자에 따라 가구용

과 가구원용 설문으로 구분되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각 영역에 배치되었다. 경제상황은 가구단위의 가계수지 및 재산 관련한 문항이므로 가구용 설문문에 삽입되었다. 근로 관련 문항은 개개인의 일자리 특성 및 경험을 다루고 있으므로 주요 문항들은 가구원용 설문문에 배치되었으며, 객관적인 근로능력정도 및 경제활동상태 관련한 문항들은 가구용 설문문에 삽입되었다. 기타 개인의 의식과 관련한 문항은 가구원용 설문, 부가조사 설문(장애인)에 배치되었다.

〈표 2-7〉 조사 주제별 구성

주제	세부주제	항목 포함 영역
1. 가구원 배경 및 개인사	1) 가구원일반사항	가구용 설문 I. 가구일반사항 가구원용 설문 F. 교육
	2) 부모세대	가구원용 설문 G. 개인사
	3) 개인사	가구원용 설문 G. 개인사
2. 가구여건 (복지욕구)	1) 보육, 교육	가구용 설문 XV. 아동
	2) 건강 및 의료	가구용 설문 II. 건강 및 의료A, V. 의료B
	3) 주거	가구용 설문 VI. 주거
	4) 기타	가구용 설문 XI. 생활여건
3. 사회복지 가입 및 수급	1) 사회보험	가구용 설문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가구원용 설문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2) 공공부조	가구용 설문 I. 가구일반사항(기초보장수급형태),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XII-1. 근로장려세제
	3) 사회복지서비스	가구용 설문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IV. 노인, XV. 아동, XVI. 장애인, XVII. 가족
4. 경제상황	1) 소득	가구용 설문 VIII. 소득
	2) 지출 및 저축	가구용 설문 VII. 생활비, X. 재산
	3) 자산 및 부채	가구용 설문 IX. 부채 및 이자, 주관적 최저생계비, X. 재산
5. 근로	1) 직업이력	가구원용 설문 G. 개인사
	2) 경제활동상태	가구용 설문 III. 경제활동상태 가구원용 설문 B. 근로
	3) 고용지원프로그램	가구원용 설문 B. 근로
6. 기타	1) 생활실태, 정신건강 등	가구원용 설문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2) 장애인	장애인 부가 설문

## 제2절 한국복지패널의 장점 및 한계

한국복지패널은 몇 가지 장점과 함께 일정정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가구단위 패널조사 중 한국의료패널조사 다음으로 규모가 큰 패널조사라는 점이다. 기존 국내의 가구단위 패널 조사의 경우 표본 규모는 5,000가구 내외이거나 미만이다. 하지만 『한국복지패널』의 표본 규모는 7,072가구이고, 2차년도 조사 완료된 가구는 6,580가구이고, 3차 조사 완료 가구 수는 6,314가구, 5차 조사 완료 가구 6,034가구, 그리고 6차 조사 완료 가구는 5,735가구였다(신규 생성가구 포함). 표본수가 많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는 표본오차가 적어지고, 현실적으로는 세부단위까지의 다양한 분석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둘째, 전국을 대표하는 패널조사라는 점이다. 통계청 가계조사의 경우 농어가가 제외되어 있고, 노동패널의 경우 표본이 도시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즉, 읍면동에 대한 자료가 없다. 하지만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조사 대상가구에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가구 유형으로는 농어를 포함함으로써 패널조사로는 유일하게 전국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패널이라는 점이다. 기존 국내 대부분의 패널은 패널 구축초기 소득수준이 통계청의 80% 내외이나, 한국복지패널은 소득 및 지출 수준이 통계청의 가계조사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예컨대, 저소득층은 통계청 조사결과보다 약간 높고, 중산층은 거의 유사하고, 고소득층은 통계청보다 약간 높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조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결과이다.

〈표 2-8〉 한국복지패널의 각 자료별 원표본 유지율 비교

(단위: %)

자료	한국복지패널	노동패널	대우패널	미국 PSID	영국 BHPS	독일 GSOEP
2차 자료	<b>92.1</b>	87.6	79.0	89.0	87.7	89.9
3차 자료	<b>86.7</b>	80.9	66.0	86.3	81.5	86.0
4차 자료	<b>83.9</b>	77.3	59.0	83.7	79.9	84.9
5차 자료	<b>80.3</b>	76.0	56.0	81.2	76.8	81.3
6차 자료	<b>75.4</b>	77.0	44.0	78.8	77.3	79.2

넷째, 2차·3차 자료 원가구 표본유지율이 다른 유수의 패널보다 높다.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2차 자료 원가구유지율 92.1%(7,072 원가구 중 6,511가구 완료)이고, 3차 자료 원가구 표본유지율 또한 86.7%(7,072 원가구 중 6,128가구 완료)로 나타나 국내 주요 패널의 원가구 표본 유지율보다 높다. 2010년 5차 자료의 원가구 표본유지율은 80.25%(7,072 원가구 중 5,675가구 완료)로서 이 또한 국내의 우수 패널의 유지율보다 높다.

다섯째, 저소득층 연구에 적합한 패널이다. 표본 추출 시 중위소득 60%미만 저소득층에 표본의 50%를 할당하였기 때문에 국내 패널조사 중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괄하고 있다.

여섯째, 학제간 연구가 가능한 패널조사이다. 한국복지패널은 다양한 영역의 설문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복지학, 경제학, 사회학, 가정학, 보건학 등 다양한 분야에 훌륭한 학제 간 연구의 장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장점과 더불어 한국복지패널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첫째, 조사시점이 종합소득세가 신고 되는 시점(5월)을 기준으로 전년도 내용을 조사하기 때문에 회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연초에 조사를 실시하면 회상의 문제는 줄일 수 있으나, 자영업자 등의 정확한 소득과약이 어렵다는 문제가 생긴다.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5월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이 파악되기 때문이다.

둘째, 시간의 부족이다. 매년 패널 조사를 실시하고 동 연도에 기초분석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연구진은 시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에러체킹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아직도 부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문항이 남아있을 수 있다. 경험적으로 양질의 조사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 자료에 남아있는 에러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미국 PSID의 경우 에러 체킹(error checking) 기간이 3년이라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사실 패널조사는 자료 입력 후 데이터 클리닝 과정에서 뿐 아니라, 조사과정과 분석과정에서 에러체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현지조사 단계에서의 에디팅, 조사 후 에디팅, 입력 후 에러체킹, 기초분석 과정에서의 에러체킹, 심층분석 과정에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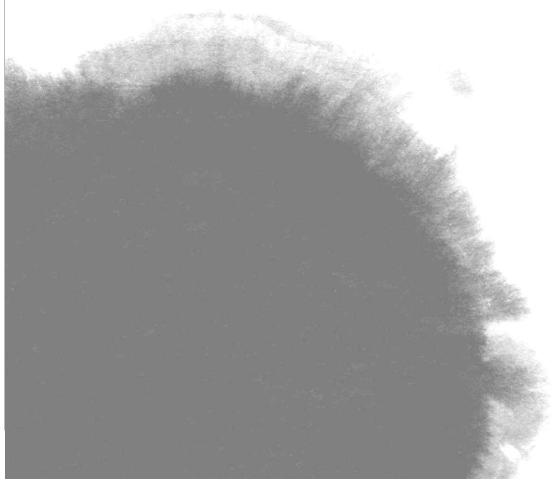


에러체킹, 다음 연도 조사 과정에서 에러체킹이 세밀하게 이루어지면서 양질의 조사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기초보고서에 제시된 수치들은 이후의 지속적인 에러체킹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 3장

## 소득





## 제3장 소득

본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6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지역별·계층별 소득 수준을 살펴본다. 먼저 소득을 5분위로 나누기 위해 소득의 20, 40, 60, 80백분위 (percentile)를 제시하며, 각 세분화된 소득계층에 대해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을 살펴 보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소득을 최대한 세분화하여 조사하였다는 점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이처럼 소득을 세분화하여 조사하게 되면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와 같이 좀 더 복잡하고 엄밀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득과 연관된 다양한 복지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세분화된 소득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제1절 소득 범주의 구분

<표 3-1>은 복지패널에서 조사하고 있는 소득개념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3-1>에서 제시한 소득 중에서 시장소득, 경상소득, 그리고 가처분소득을 이용하여 여러 집단별 소득수준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은 복지패널 자료 내에 변수로 포함되어 있지만 시장소득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sup>6)</sup>

이중에서 시장소득을 통해서는 개인의 사적소득 추이를 확인 할 수가 있으며, 경

상소득과의 비교를 통해서 국가의 보조와 같은 공적이전 소득을 통해 소득의 추세가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다. 또한 가처분소득을 통해 세후 소득의 변화를 알 수 있다.

<표 3-1> 소득분류와 구성요소

소득분류	구성요소(단위:연간)	한국복지패널의 세부화된 소득요소
1차소득	임금소득+사업소득+농어업소득 +기타근로소득+재산소득	임금소득 = 상용근로자소득+임시근로자소득 재산소득 = 이자·배당금+임대수입 + 기타
시장(민간부문) 소득	1차소득+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 개인연금+기타민간보험+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민간보조금
경상소득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 사회보험(공적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기타정부보조금(장애수당+경로연금+노인교통비+모부자가정수당+가정위탁금(소년소녀가장보호비)+영유아보육료지원+학비지원+국가유공자에대한보조금+농어업정부보조금+기타+진급복지지원금+바우처지원금+근로장려세제+한시생계비+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가처분소득	경상소득-(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 = (세금+사회보장부담금) × 12 (*소득은 연단위로,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은 월단위로 조사되었으므로 반드시 12를 곱해줘야 함.)
총소득	경상소득+비경상소득	비경상소득(기타소득) = 증여·상속 + 경조금 + 보상금 + 사교보험금 + 퇴직금·사회보험 일시금·보장성 보험계약금 + 기타 + 동산·부동산매매차익

주: 6차조사(2010년 소득) 기준임  
 자료: 여유진(2008), 「한국복지패널로 본 분배지표와 재분배효과」,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정리.

그리고 본 장에서는 명목소득 뿐 아니라 실질소득도 함께 제시하였다. 실질소득은 다음과 같이 명목소득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구한다.

$$\text{실질소득} = \frac{\text{명목소득}}{\text{소비자물가지수}} \times 100$$

6) 시장소득을 구하는 자세한 방법은 3장의 <표 3-12>에 제시되어 있다.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변수명은 각각 h06\_cin과 h06\_din이다.

실질소득을 구하는 식에서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2010년 기준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소득을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통하여 소득분포의 유추가 가능하다.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격차가 커진다는 것은 2분위로 나누어 하위50%의 소득과 상위50%의 소득의 격차가 커졌다는 뜻이다.

## 제2절 소득관련 지표 분석결과

### 1. 소득변화 추이

가장 먼저, 전체 가구의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소득추세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3-2>와 <표 3-3>에 정리되어 있다.

<표 3-2> 5년간 명목소득 변화 추이

(단위: 만원, %)

	시장소득		경상소득		기처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2005	1,718.7	1,451.0	1,817.1	1,530.0	1,658.2	1,428.4
2006	1,918.6	1,561.3	1,999.2	1,680.0	1,829.8	1,565.8
2007	2,007.9	1,698.5	2,150.1	1,820.5	1,952.4	1,686.5
2008	2,144.2	1,838.9	2,306.7	1,986.1	2,116.7	1,856.8
2009	2,291.3	1,944.0	2,461.8	2,109.3	2,270.5	1,976.5
2010	2,329.3	2,026.0	2,520.8	2,198.4	2,317.4	2,056.5
연평균증가율	6.2	6.9	6.8	7.5	6.9	7.6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표 3-2>는 5년 동안의 명목소득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의하면 모든 소득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시장소득의 경우 1,718.7만원에서 2,329.3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6.2%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경상소득은 1,817.1만원에서 2,520.8만원으로 증가하였으

며, 연평균 6.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가처분 소득은 1,658.2만원에서 2,317.4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6.9%로 나타났다.

중위소득의 경우에는 평균소득과의 격차가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증가율은 평균소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0년에는 2009년에 비하여 모든 소득에서 평균소득과의 격차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3>은 5년 동안 실질소득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명목소득과 가장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2009년까지는 소득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0년 들어서는 2009년에 비해서 소득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또한 물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소득의 연평균증가율은 명목소득의 약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5년간 실질소득 변화 추이(기준년도=2010년)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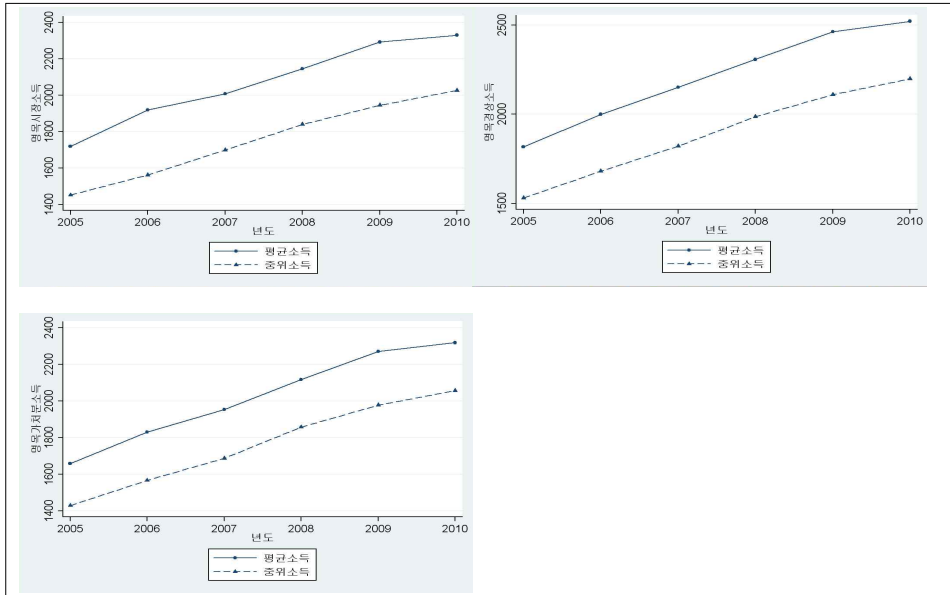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2005	1,995.3	1,684.5	2,109.5	1,776.2	1,925.0	1,658.2
2006	2,178.5	1,772.8	2,270.0	1,907.6	2,077.6	1,777.9
2007	2,223.6	1,880.9	2,381.0	2,016.0	2,162.1	1,867.6
2008	2,268.4	1,945.5	2,440.4	2,101.2	2,239.3	1,964.3
2009	2,359.0	2,001.5	2,534.6	2,171.6	2,337.6	2,034.9
2010	2,329.3	2,026.0	2,520.8	2,198.4	2,317.4	2,056.5
연평균증가율	3.1	3.7	3.6	4.4	3.8	4.4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그림 3-1] 5년간 명목소득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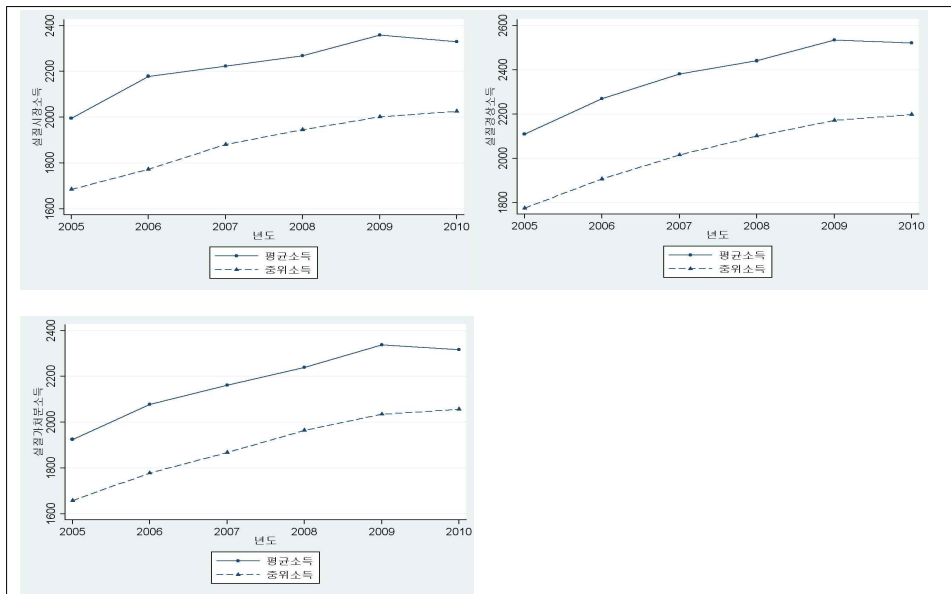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그림 3-2] 5년간 실질소득 변화 추이(기준년도=2010년)

(단위: 만원)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 2. 소득 분위 경계

<표 3-4>는 명목소득의 소득5분위를 나누는 소득의 20~80분위수이다. 20분위수 미만까지가 1분위이며 20분위수 초과 그리고 40분위수 미만까지가 2분위이다. 2~4분위의 경우 2005년에서 2010년으로 시간이 갈수록 분위수 값들은 점점 증가하였으나 20분위수의 경우는 2010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 하위분위가 상위분위보다 증가율 자체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80분위수가 20분위수에 비해서 소득의 증가가 더 커서 증가율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3-4〉 명목소득의 20~80분위수

(단위: 만원, %)

		20분위수	40분위수	60분위수	80분위수
시장	2005	568.0	1137.0	1787.5	2650.0
	2006	636.4	1258.9	1924.0	2973.4
	2007	683.6	1359.1	2045.0	3071.0
	2008	752.0	1501.0	2198.0	3210.0
	2009	854.9	1613.0	2331.9	3390.0
	2010	834.0	1633.3	2418.5	3445.0
	연평균증가율	8.0	7.5	6.2	5.4
경상	2005	744.0	1267.9	1849.5	2685.0
	2006	811.0	1404.7	2019.6	2977.4
	2007	889.5	1508.0	2168.0	3147.7
	2008	989.0	1657.6	2315.5	3290.0
	2009	1110.9	1784.9	2474.5	3479.0
	2010	1122.0	1847.0	2562.0	3586.4
	연평균증가율	8.6	7.8	6.7	6.0
가처분	2005	706.0	1184.7	1716.0	2450.7
	2006	779.9	1311.5	1869.6	2697.4
	2007	845.0	1421.2	1988.5	2857.5
	2008	943.0	1559.0	2154.6	3014.0
	2009	1068.0	1674.4	2297.8	3167.8
	2010	1079.6	1748.0	2373.1	3254.5
	연평균증가율	8.9	8.1	6.7	5.8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표 3-5>는 실질소득의 소득5분위를 나누는 20~80분위수의 소득이다. 실질소득에서도 명목소득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명목소득과 동일하게 하위분위율의 증가율이 상위분위율의 증가율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5> 실질소득의 20~80분위수(기준년도=2010년)

(단위: 만원, %)

		20분위수	40분위수	60분위수	80분위수
시장	2005	659.4	1320.0	2075.1	3076.4
	2006	722.6	1429.4	2184.6	3376.1
	2007	757.0	1505.0	2264.6	3400.8
	2008	795.6	1588.0	2325.3	3396.0
	2009	880.2	1660.7	2400.8	3490.2
	2010	834.0	1633.3	2418.5	3445.0
	연평균증가율	4.8	4.4	3.1	2.3
경상	2005	863.7	1471.9	2147.1	3117.1
	2006	920.9	1595.0	2293.1	3380.7
	2007	985.1	1670.0	2400.8	3485.8
	2008	1046.3	1753.6	2449.7	3480.6
	2009	1143.7	1837.6	2547.6	3581.8
	2010	1122.0	1847.0	2562.0	3586.4
	연평균증가율	5.4	4.6	3.6	2.8
가처분	2005	819.6	1375.4	1992.1	2845.1
	2006	885.5	1489.2	2122.8	3062.8
	2007	935.7	1573.9	2202.1	3164.4
	2008	997.6	1649.3	2279.4	3188.6
	2009	1099.6	1723.9	2365.7	3261.5
	2010	1079.6	1748.0	2373.1	3254.5
	연평균증가율	5.7	4.9	3.6	2.7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 3. 집단별 소득변화 추이

<표 3-6>은 가구의 지역별 명목소득추이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시장소득의 경우 2006년까지는 중소도시가 가장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대도시가 가장 높았으며, 2010년에는 다시 중소도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의 경우 시장소득이 2010년에는 감소하였으나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경우는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모든 도시에서의 중위소득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3-6> 지역별 가구명목소득 추이

(단위: 만원, %)

구 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평균 소득	중위 소득	평균 소득	중위 소득	평균 소득	중위 소득	평균 소득	중위 소득
시장 소득	2005	1,718.7	1,451.0	1,745.0	1,446.0	1,785.9	1,588.8	1,176.7	779.0
	2006	1,918.6	1,561.3	1,966.5	1,628.5	1,980.3	1,617.5	1,306.4	872.6
	2007	2,007.9	1,698.5	2,092.4	1,767.8	2,053.0	1,755.1	1,350.0	950.3
	2008	2,144.2	1,838.9	2,215.4	1,930.1	2,198.0	1,894.0	1,506.1	1,064.8
	2009	2,291.3	1,944.0	2,373.7	2,009.2	2,331.8	2,039.3	1,667.7	1,208.4
	2010	2,329.3	2,026.0	2,368.3	2,101.0	2,426.3	2,096.0	1,687.3	1,210.1
	연평균증가율	6.3	6.9	6.3	7.8	6.3	5.7	7.5	9.2
경상 소득	2005	1,817.1	1,530.0	1,852.4	1,556.3	1,867.5	1,615.0	1,313.7	982.9
	2006	1,999.2	1,680.0	2,039.3	1,733.8	2,058.7	1,715.0	1,443.1	1,051.5
	2007	2,150.1	1,820.5	2,236.3	1,889.4	2,188.8	1,874.7	1,514.8	1,138.5
	2008	2,306.7	1,986.1	2,385.8	2,077.5	2,346.3	2,032.5	1,699.3	1,303.0
	2009	2,461.8	2,109.3	2,539.3	2,181.8	2,498.0	2,153.0	1,884.8	1,416.0
	2010	2,520.8	2,198.4	2,558.3	2,280.0	2,612.9	2,244.1	1,908.4	1,450.0
	연평균증가율	6.8	7.5	6.7	7.9	6.9	6.8	7.8	8.1
가 처 분 소득	2005	1,658.2	1,428.4	1,687.4	1,434.1	1,703.4	1,509.0	1,222.1	926.1
	2006	1,829.8	1,565.8	1,867.0	1,624.0	1,880.5	1,607.0	1,338.7	1,012.9
	2007	1,952.4	1,686.5	2,029.0	1,757.0	1,982.1	1,723.0	1,410.9	1,091.0
	2008	2,116.7	1,856.8	2,185.0	1,928.0	2,150.1	1,881.6	1,595.6	1,259.2
	2009	2,270.5	1,976.5	2,339.1	2,019.6	2,301.7	2,017.4	1,763.5	1,357.5
	2010	2,317.4	2,056.5	2,355.9	2,124.0	2,391.2	2,087.7	1,786.5	1,421.3
	연평균증가율	6.9	7.6	6.9	8.2	7.0	6.7	7.9	8.9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경상소득의 경우는 2005, 2006년에는 중소도시가 대도시보다 소득이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대도시가 더 높았다가 2010년에는 다시 중소도시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공적이전소득이 감소한 시장소득부분을 보충하여 손실을 없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소득 중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은 가구의 지역별 실질소득 추이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시장소득의 경우 명목소득과 마찬가지로 2006년까지는 중소도시가 가장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대도시가 가장 높았으며, 2010년에는 다시 중소도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와 농어촌은 전체와 마찬가지로 2010년에 시장소득이 하락하였으나 중소도시는 계속 증가해온 것을 알 수 있다. 평균소득과는 다르게 중위소득은 대도시에서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0년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지역별 가구실질소득 추이(기준년도=2010년)

(단위: 만원, %)

구 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평균 소득	중위 소득	평균 소득	중위 소득	평균 소득	중위 소득	평균 소득	중위 소득
시 장 소 득	2005	1,995.3	1,684.5	2,025.7	1,678.7	2,073.2	1,809.7	1,366.1	904.4
	2006	2,178.5	1,772.8	2,232.9	1,849.1	2,248.5	1,836.6	1,483.3	990.8
	2007	2,223.6	1,880.9	2,317.1	1,957.7	2,273.5	1,943.6	1,495.0	1,052.4
	2008	2,268.4	1,945.5	2,343.8	2,041.9	2,325.4	2,003.7	1,593.3	1,126.5
	2009	2,359.0	2,001.5	2,443.8	2,068.6	2,400.7	2,099.6	1,717.0	1,244.1
	2010	2,329.3	2,026.0	2,368.3	2,101.0	2,426.3	2,096.0	1,687.3	1,210.1
	연평균증가율	3.1	3.8	3.2	4.6	3.2	3.0	4.3	6.0
경 상 소 득	2005	2,109.5	1,776.2	2,150.5	1,806.7	2,168.0	1,874.9	1,525.1	1,141.0
	2006	2,270.0	1,907.6	2,315.5	1,968.6	2,337.6	1,947.3	1,638.6	1,193.9
	2007	2,381.0	2,016.0	2,476.4	2,092.3	2,423.8	2,076.0	1,677.4	1,260.8
	2008	2,440.4	2,101.2	2,524.1	2,197.9	2,482.2	2,150.2	1,797.7	1,378.5
	2009	2,534.6	2,171.6	2,614.4	2,246.3	2,571.9	2,216.6	1,940.5	1,457.9
	2010	2,520.8	2,198.4	2,558.3	2,280.0	2,612.9	2,244.1	1,908.4	1,450.0
	연평균증가율	3.6	4.4	3.5	4.8	3.8	3.7	4.6	4.9
가 처 분 소 득	2005	1,925.0	1,658.2	1,959.0	1,664.9	1,977.5	1,751.8	1,418.8	1,075.1
	2006	2,077.6	1,777.9	2,119.9	1,844.0	2,135.2	1,824.7	1,520.1	1,150.2
	2007	2,162.1	1,867.6	2,246.9	1,945.7	2,195.0	1,908.0	1,562.4	1,208.1
	2008	2,239.3	1,964.3	2,311.6	2,039.7	2,274.7	1,990.6	1,688.0	1,332.2
	2009	2,337.6	2,034.9	2,408.2	2,079.3	2,369.8	2,077.0	1,815.6	1,397.6
	2010	2,317.4	2,056.5	2,355.9	2,124.0	2,391.2	2,087.7	1,786.5	1,421.3
	연평균증가율	3.8	4.4	3.8	5.0	3.9	3.6	4.7	5.7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경상소득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전체소득과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0년에 감소하였으며, 가처분소득의 경우 경상소득과 유사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은 가구원수별 명목 가구소득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소득이 가장 높은 가구는 4인 가구였으며 가장 소득이 낮은 가구는 1인 가구였다. 시장소득의 경우 2인 가구에서 2007년에 소득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1인 가구만 소득이 하락하였다. 반면에 중위소득은 전 가구에서 계속 상승하였으며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격차의 경우 2009년보다 2010년에 1, 2, 5인 이상 가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3, 4인 가구는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소득의 경우는 시장소득과 마찬가지로 2010년에 1인가구만 전년도보다 소득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의 경우는 모든 가구에서 6년간 소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 5인 가구의 소득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 가구가 증가폭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인 가구의 경우 시장소득의 연평균증가율이 6.2%이었으나 경상소득에서 7.2%로 1.0%p정도 증가하여 다른 가구보다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를 통해서 공적이전소득이 2인 가구에 더 많이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8〉 가구원수별 가구명목소득 추이

(단위: 만원, %)

구 분		전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이상	
시장 소득	평균 소득	2005	1,718.7	1,236.0	1,451.5	1,852.6	2,094.4	1,740.3
		2006	1,918.6	1,283.8	1,567.9	2,098.8	2,351.2	2,118.9
		2007	2,007.9	1,282.9	1,557.5	2,312.8	2,533.9	2,130.5
		2008	2,144.2	1,434.5	1,797.3	2,444.3	2,671.8	2,327.8
		2009	2,291.3	1,694.5	1,905.3	2,485.0	2,881.3	2,405.2
		2010	2,329.3	1,617.3	1,956.6	2,685.8	3,060.9	2,578.0
		평균증가율	6.3	5.5	6.2	7.7	7.9	8.2
	중위 소득	2005	1,451.0	720.0	1,004.8	1,606.8	1,896.0	1,506.2
		2006	1,561.3	723.0	1,077.6	1,795.0	2,048.0	1,750.8
		2007	1,698.5	752.0	1,115.1	1,941.1	2,243.0	1,815.7
		2008	1,838.9	865.0	1,382.4	2,096.9	2,398.0	1,996.4
		2009	1,944.0	1,083.0	1,401.5	2,154.7	2,596.0	2,107.4
		2010	2,026.0	1,102.0	1,470.8	2,312.3	2,719.5	2,291.1
		평균증가율	6.9	8.9	7.9	7.6	7.5	8.8
경상 소득	평균 소득	2005	1,817.1	1,353.3	1,615.4	1,955.3	2,132.9	1,811.1
		2006	1,999.2	1,391.5	1,752.9	2,177.7	2,354.6	2,134.8
		2007	2,150.1	1,430.4	1,823.9	2,426.1	2,594.9	2,259.6
		2008	2,306.7	1,621.9	2,070.5	2,580.6	2,749.8	2,469.8
		2009	2,461.8	1,878.3	2,211.3	2,629.9	2,954.2	2,552.4
		2010	2,520.8	1,815.8	2,289.3	2,840.6	3,144.4	2,721.8
		평균증가율	6.8	6.1	7.2	7.8	8.1	8.5
	중위 소득	2005	1,530.0	854.0	1,272.8	1,674.3	1,916.0	1,592.1
		2006	1,680.0	858.0	1,363.3	1,883.9	2,056.5	1,800.0
		2007	1,820.5	890.0	1,414.2	2,014.4	2,269.0	1,923.0
		2008	1,986.1	1,048.0	1,711.9	2,181.2	2,461.5	2,109.4
		2009	2,109.3	1,303.0	1,745.1	2,252.8	2,676.0	2,217.3
		2010	2,198.4	1,332.0	1,849.1	2,453.2	2,781.0	2,391.3
		평균증가율	7.5	9.3	7.8	7.9	7.7	8.5
가처분 소득	평균 소득	2005	1,658.2	1,267.5	1,483.2	1,789.5	1,920.1	1,644.0
		2006	1,829.8	1,303.9	1,628.8	1,990.1	2,121.2	1,953.5
		2007	1,952.4	1,327.3	1,688.8	2,195.4	2,316.1	2,060.0
		2008	2,116.7	1,511.2	1,926.2	2,361.3	2,488.9	2,266.6
		2009	2,270.5	1,765.9	2,058.3	2,417.1	2,687.4	2,360.1
		2010	2,317.4	1,700.8	2,133.8	2,596.1	2,843.6	2,493.2
		평균증가율	6.9	6.1	7.5	7.7	8.2	8.7
	중위 소득	2005	1,428.4	840.2	1,186.5	1,535.8	1,744.0	1,443.6
		2006	1,565.8	837.6	1,277.0	1,731.5	1,895.0	1,673.9
		2007	1,686.5	854.2	1,361.2	1,870.0	2,056.5	1,795.6
		2008	1,856.8	1,023.0	1,603.7	2,042.7	2,219.0	1,970.0
		2009	1,976.5	1,268.8	1,645.4	2,099.3	2,422.0	2,042.9
		2010	2,056.5	1,287.0	1,755.0	2,261.5	2,561.5	2,222.7
		평균증가율	7.6	8.9	8.1	8.0	8.0	9.0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표 3-9>는 가구원수별 실질가구소득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소득이 가장 높은 가구는 4인 가구였으며 1인 가구가 소득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소득에서 평균소득의 경우 1인, 2인가구가 2010년에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인 가구는 2008년까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다 2009년에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다시 증가하였다. 나머지 4인, 5인가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가 2006년, 2010년에 감소하였으며, 2인 가구도 2009, 2010년에 감소하였다. 2010년은 평균소득이 감소한 1인, 2인가구의 중위소득이 1인 가구는 감소하였으나 평균소득의 감소폭보다 적었으며 2인가구는 중위소득이 증가하여 격차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경상소득의 경우 1인 가구의 경우 2010년 평균소득이 감소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2006년, 2010년에, 2인 가구는 2009년에 감소하였다. 나머지는 전체추세와 동일한 모습을 보였고 가처분소득 역시 경상소득과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연평균증가율은 5인 가구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1인 가구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간 격차의 변화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가구원수별 가구실질소득 추이(기준년도=2010년)

(단위: 만원, %)

구 분		전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이상	
시장 소득	평균 소득	2005	1,995.3	1,434.9	1,685.1	2,150.7	2,431.4	2,020.4
		2006	2,178.5	1,457.8	1,780.3	2,383.1	2,669.7	2,405.9
		2007	2,223.6	1,420.6	1,724.7	2,561.2	2,806.0	2,359.3
		2008	2,268.4	1,517.7	1,901.4	2,586.0	2,826.6	2,462.7
		2009	2,359.0	1,744.6	1,961.6	2,558.5	2,966.5	2,476.3
		2010	2,329.3	1,617.3	1,956.6	2,685.8	3,060.9	2,578.0
		연평균증가율	3.1	2.4	3.0	4.5	4.7	5.0
	중위 소득	2005	1,684.5	835.9	1,166.5	1,865.3	2,201.1	1,748.6
		2006	1,772.8	820.9	1,223.6	2,038.1	2,325.4	1,988.0
		2007	1,880.9	832.8	1,234.9	2,149.5	2,483.9	2,010.7
		2008	1,945.5	915.1	1,462.5	2,218.4	2,536.9	2,112.0
		2009	2,001.5	1,115.0	1,442.9	2,218.4	2,672.7	2,169.7
		2010	2,026.0	1,102.0	1,470.8	2,312.3	2,719.5	2,291.1
		연평균증가율	3.8	5.7	4.7	4.4	4.3	5.6
경상 소득	평균 소득	2005	2,109.5	1,571.1	1,875.4	2,269.9	2,476.1	2,102.5
		2006	2,270.0	1,580.0	1,990.3	2,472.7	2,673.5	2,424.0
		2007	2,381.0	1,584.0	2,019.8	2,686.7	2,873.6	2,502.3
		2008	2,440.4	1,715.8	2,190.5	2,730.1	2,909.1	2,612.9
		2009	2,534.6	1,933.8	2,276.6	2,707.6	3,041.5	2,627.8
		2010	2,520.8	1,815.8	2,289.3	2,840.6	3,144.4	2,721.8
		연평균증가율	3.6	2.9	4.1	4.6	4.9	5.3
	중위 소득	2005	1,776.2	991.4	1,477.6	1,943.7	2,224.3	1,848.3
		2006	1,907.6	974.2	1,548.0	2,139.1	2,335.1	2,043.9
		2007	2,016.0	985.6	1,566.1	2,230.7	2,512.7	2,129.5
		2008	2,101.2	1,108.7	1,811.1	2,307.6	2,604.1	2,231.6
		2009	2,171.6	1,341.5	1,796.7	2,319.4	2,755.1	2,282.8
		2010	2,198.4	1,332.0	1,849.1	2,453.2	2,781.0	2,391.3
		연평균증가율	4.4	6.1	4.6	4.8	4.6	5.3
가처분 소득	평균 소득	2005	1,925.0	1,471.4	1,721.8	2,077.5	2,229.1	1,908.5
		2006	2,077.6	1,480.5	1,849.4	2,259.6	2,408.5	2,218.1
		2007	2,162.1	1,469.9	1,870.1	2,431.2	2,564.8	2,281.2
		2008	2,239.3	1,598.7	2,037.8	2,498.1	2,633.2	2,398.0
		2009	2,337.6	1,818.0	2,119.1	2,488.6	2,766.8	2,429.9
		2010	2,317.4	1,700.8	2,133.8	2,596.1	2,843.6	2,493.2
		연평균증가율	3.8	2.9	4.4	4.6	5.0	5.5
	중위 소득	2005	1,658.2	975.4	1,377.5	1,782.9	2,024.6	1,675.9
		2006	1,777.9	951.1	1,450.0	1,966.0	2,151.7	1,900.7
		2007	1,867.6	945.9	1,507.4	2,070.9	2,277.4	1,988.4
		2008	1,964.3	1,082.3	1,696.6	2,161.0	2,347.6	2,084.1
		2009	2,034.9	1,306.3	1,694.1	2,161.3	2,493.6	2,103.3
		2010	2,056.5	1,287.0	1,755.0	2,261.5	2,561.5	2,222.7
		연평균증가율	4.4	5.7	5.0	4.9	4.8	5.8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는 노인이 있는 가구와 노인이 없는 가구(이후 무노인 가구)의 소득추세를 살펴볼 것이다. <표 3-10>, <표 3-11>은 노인 가구과 무노인 가구의 명목, 실질 소득추세를 나타낸 표이다.

<표 3-10>의 분석결과 노인, 무노인 가구 모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소득이 증가해왔으며, 노인 가구의 경우 2010년에 시장소득의 중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연평균 증감률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노인·무노인 가구 명목소득 추이

(단위: 만원, %)

구 분		전체		무노인		노인		무노인/노인	
		평균 소득	중위 소득	평균 소득	중위 소득	평균 소득	중위 소득	평균 소득	중위 소득
시장 소득	2005	1,718.7	1,451.0	2,004.6	1,763.2	925.6	603.9	2.2	2.9
	2006	1,918.6	1,561.3	2,238.6	1,931.8	1,127.2	712.0	2.0	2.7
	2007	2,007.9	1,698.5	2,400.8	2,166.0	1,120.4	774.3	2.1	2.8
	2008	2,144.2	1,838.9	2,509.8	2,198.9	1,229.1	821.7	2.0	2.7
	2009	2,291.3	1,944.0	2,682.0	2,344.0	1,275.0	916.0	2.1	2.6
	2010	2,329.3	2,026.0	2,774.9	2,486.0	1,286.0	893.1	2.2	2.8
	연평균증감률	6.3	6.9	6.7	7.1	6.8	8.1	-0.1	-1.0
경상 소득	2005	1,817.1	1,530.0	2,062.9	1,801.3	1,136.1	839.0	1.8	2.1
	2006	1,999.2	1,680.0	2,284.1	1,990.1	1,295.0	920.7	1.8	2.2
	2007	2,150.1	1,820.5	2,490.0	2,170.5	1,381.6	998.6	1.8	2.2
	2008	2,306.7	1,986.1	2,616.1	2,269.1	1,531.5	1,120.8	1.7	2.0
	2009	2,461.8	2,109.3	2,785.4	2,430.1	1,620.4	1,245.0	1.7	2.0
	2010	2,520.8	2,198.4	2,882.8	2,554.8	1,673.8	1,252.3	1.7	2.0
	연평균증감률	6.8	7.5	6.9	7.2	8.1	8.3	-1.1	-1.0
가처분 소득	2005	1,658.2	1,428.4	1,872.5	1,668.0	1,064.6	812.3	1.8	2.1
	2006	1,829.8	1,565.8	2,076.2	1,833.6	1,220.9	896.9	1.7	2.0
	2007	1,952.4	1,686.5	2,242.7	1,982.5	1,296.2	953.0	1.7	2.1
	2008	2,116.7	1,856.8	2,387.1	2,119.2	1,439.2	1,083.3	1.7	2.0
	2009	2,270.5	1,976.5	2,553.0	2,252.0	1,535.8	1,196.4	1.7	1.9
	2010	2,317.4	2,056.5	2,629.9	2,365.0	1,586.4	1,205.5	1.7	2.0
	연평균증감률	6.9	7.6	7.0	7.2	8.3	8.2	-1.2	-0.9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노인 가구와 무노인 가구 사이의 소득격차가 시간에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무노인/노인의 결과를 우측에 제시하였다. 무노인/노인의 경

우 중위소득의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의 분석결과 시장소득의 경우 무노인 가구가 노인 가구에 비하여 약 두 배 정도의 소득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노인 가구의 경우 평균소득의 증가율이 3.7%이고 중위소득은 5.0%로 중위소득의 증가가 빨라서 점점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간 격차는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 가구의 경우 2010년에 시장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상 소득에서는 2010년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의 투입이 소득을 끌어올리는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다. 또한 증감율이 시장소득의 3.7%에서 경상소득은 4.9%로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가처분소득 역시 경상소득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노인/노인의 결과는 명목소득과 동일하다.

〈표 3-11〉 노인·무노인 가구 실질소득 추이(기준년도=2010년)

단위: 만원, %

구 분	연도	전체		무노인		노인		무노인/노인	
		평균 소득	중위 소득	평균 소득	중위 소득	평균 소득	중위 소득	평균 소득	중위 소득
시장 소득	2005	1,995.3	1,684.5	2,327.2	2,047.0	1,074.5	701.0	2.2	2.9
	2006	2,178.5	1,772.8	2,541.8	2,193.5	1,279.9	808.4	2.0	2.7
	2007	2,223.6	1,880.9	2,658.7	2,343.2	1,240.7	857.4	2.1	2.7
	2008	2,268.4	1,945.5	2,655.2	2,326.4	1,300.3	869.3	2.0	2.7
	2009	2,359.0	2,001.5	2,761.3	2,413.3	1,312.8	943.1	2.1	2.6
	2010	2,329.3	2,026.0	2,774.9	2,486.0	1,286.9	893.1	2.2	2.8
	연평균증감률	3.1	3.8	3.6	4.0	3.7	5.0	-0.1	-1.0
경상 소득	2005	2,109.5	1,776.2	2,394.4	2,091.2	1,319.1	971.1	1.8	2.2
	2006	2,270.0	1,907.6	2,593.7	2,265.2	1,469.2	1,045.4	1.8	2.2
	2007	2,381.0	2,016.0	2,757.6	2,403.6	1,530.1	1,107.4	1.8	2.2
	2008	2,440.4	2,101.2	2,767.8	2,400.6	1,620.9	1,185.7	1.7	2.0
	2009	2,534.6	2,171.6	2,867.7	2,501.9	1,668.2	1,281.8	1.7	2.0
	2010	2,520.8	2,198.4	2,882.8	2,554.8	1,673.8	1,252.3	1.7	2.0
	연평균증감률	3.6	4.4	3.8	4.1	4.9	5.2	-1.0	-1.1
가처분 소득	2005	1,925.0	1,658.2	2,173.3	1,936.4	1,236.1	939.9	1.8	2.1
	2006	2,077.6	1,777.9	2,357.6	2,083.0	1,385.2	1,018.0	1.7	2.0
	2007	2,162.1	1,867.6	2,483.7	2,197.1	1,435.5	1,055.3	1.7	2.1
	2008	2,239.3	1,964.3	2,525.5	2,243.9	1,523.1	1,148.3	1.7	2.0
	2009	2,337.6	2,034.9	2,628.4	2,318.6	1,581.2	1,231.8	1.7	1.9
	2010	2,317.4	2,056.5	2,629.9	2,365.0	1,586.4	1,205.5	1.7	2.0
	연평균증감률	3.8	4.4	3.9	4.1	5.1	5.1	-1.2	-1.0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이상으로 한국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득추세와 분위값을 확인해 보았다. 분석을 통하여 명목소득은 2005~20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질소득은 2010년에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소득 추세를 확인한 결과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소득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거나 농어촌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서 낮은 소득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증가율 부분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격차가 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원수별 소득의 경우는 2005~2010년 까지 5인 가구이상의 소득이 3인 가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인 가구라 함은 노인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자녀수가 3인 이상일 경우이다. 이들 노인 또는 다자녀가구의 소득이 가구원수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노인 가구의 시장소득은 비노인 가구의 소득의 5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로 인하여 경제활동인구에서의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노인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12〉 시장소득 계산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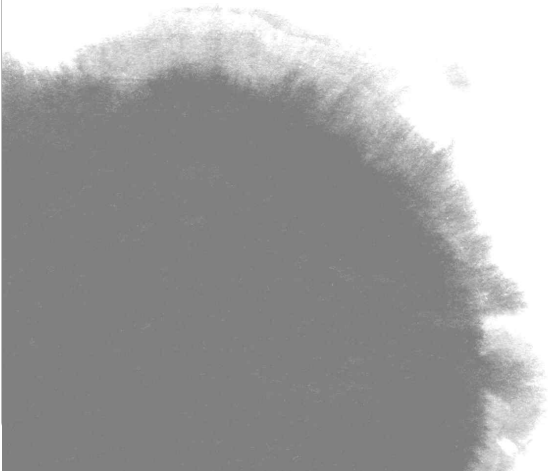
□ 근로소득
○ 상용근로자 임금소득 = h0608_114 + h0608_116 + h0608_118 + h0508_120 + h0608_3aq2 + h0608_4aq70 + h0608_4aq72 + h0608_4aq74 + h0608_4aq76
○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소득 = h0608_122 + h0608_124 + h0608_126 + h0608_128 + h0608_130 + h0608_4aq78 + h0608_4aq80 + h0608_4aq82 + h0608_4aq84
○ 근로소득 = 상용근로자 임금소득 +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소득
□ 사업 및 부업소득
○ 고용주·자영자 사업소득(순소득) = h0608_148 + h0608_150 + h0608_152 + h0608_154 + h0608_4aq86 + h0608_4aq88 + h0608_4aq90 + h0608_4aq92 + h0608_4aq94
○ 농림축산업소득(순소득) = h0608_164
○ 어업소득(순소득) = h0608_170
○ 기타근로소득 = h0608_172 + h0608_174 + h0608_176 + h0608_178 + h0608_4aq106 + h0608_4aq108 + h0608_4aq110 + h0608_4aq112 + h0608_4aq114
○ 사업 및 부업소득 = 자영자 및 사업주의 사업소득 + 농림수산업소득 + 어업소득 + 기타근로소득
□ 재산소득
○ 재산소득 = 이자 및 배당금(h0608_aq9) + 임대료(h0608_aq10) + 기타재산소득(h0608_aq11)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 부모(h0608_3aq6)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h0608_3aq7) + 개인연금(h0608_aq15) + 기타 민간보조금(h0608_aq34) + 퇴직연금(h0608_6aq1) + 주택연금(h0608_6aq2)
□ 시장소득
○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 및 부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주: 6차 자료의 예시임.



# 4장

## 소득분배







## 제4장 소득분배

이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6차 원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분배 와 관련된 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1 절에서는 소득분배 현황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대표적인 빈곤지표와 불평등지표를 간단히 소개하고, 제2 절부터는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빈곤지표와 불평등지표를 계산한 결과를 제시한다. 제2 절에서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이용한 절대빈곤 관련 지표를 살펴본 다음, 제3 절에서는 중위소득의 50%를 빈곤기준선으로 이용하여 계산한 상대빈곤 관련 지표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4 절에서는 지니계수와 분위수배율을 중심으로 하는 불평등지표를 살펴본다.

### 제1 절 소득분배 관련 지표 산출 방식

#### 1. 빈곤지표 산출 방식

본 연구에서는 빈곤지표로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두 가지 지표, 즉 빈곤율(HR: Headcount Ratio)과 빈곤격차비율(PGR: Poverty Gap Ratio)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빈곤율(HR)은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사람(혹은 가구)을 전체 인구(혹은 가구)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빈곤율 (HR)} = \frac{\text{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얻는 인구의 수 (q)}}{\text{전체 인구의 수 (n)}} \times 100(\%)$$

여기서 HR은 빈곤율, q는 소득(또는 지출)이 빈곤선 이하인 인구(혹은 가구)수, n은 전체 인구(혹은 가구)수, y는 개인(혹은 가구)의 소득(혹은 지출), z는 빈곤기준선(poverty line)을 나타낸다. 위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구한 빈곤율은 빈곤의 전체적인 수준을 표현하는데 좋은 지표이지만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의 정도, 즉 ‘빈곤의 심도(depth)’를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빈곤율과 더불어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빈곤지표로는 빈곤격차비율(PGR)이 있다. 빈곤격차(poverty gap)는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의 빈곤선과 개인(혹은 가구)의 소득(혹은 지출)과의 차이를 말한다. 즉, 개인(또는 가구) n 명으로 구성된 경제에서 빈곤층에 속한 개인(또는 가구) i의 빈곤격차는 빈곤선과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또는 가구)의 소득격차( $g_i = z - y_i$ )로 정의되며, 총빈곤격차는 빈곤층 전체의 빈곤격차를 합한  $\sum_{i \in z(y)} g_i = \sum_{i=1}^q (z - y_i)$  가 된다. 여기서 빈곤격차는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또는 가구)의 소득을 빈곤기준선까지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액수를 의미한다. 위에서 구한 총빈곤격차를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또는 가구)의 수에 빈곤선을 곱한 값으로 나누면 빈곤격차비율(poverty gap ratio)이 얻어지며, 수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GR = \frac{1}{q} \sum_{i=1}^q \left( \frac{z - y_i}{z} \right)_+$$

여기서 PGR은 빈곤격차비율, z는 빈곤선을 나타내며,  $y_i$ 는 빈곤선 이하에 속한 개인의 소득, 그리고 q는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의 수를 나타낸다. 빈곤율과는 달

리 빈곤격차비율은 ‘빈곤의 심도(depth)’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빈곤율과 빈곤격차비율을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빈곤율, 아동빈곤율 등은 각각 노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산출한 빈곤율이다. 구체적으로 노인빈곤율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가운데 빈곤한 가구에 속하는 노인의 비율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노인의 빈곤격차비율은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빈곤격차비율을 구한 것이다. 아동빈곤율 역시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18세 미만의 전체 아동 가운데 빈곤한 가구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을 의미한다. 아동의 빈곤격차비율은 아동인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빈곤격차비율을 말한다.

## 2. 불평등지표 산출 방식

불평등 지표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는 지니계수, 분위수 배율,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 앳킨슨지수 등이 있는데, 간편성 때문에 지니계수와 분위수 배율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지니계수는 절대적 평등선(사선)과 로렌즈곡선 간의 차이의 비율(ratio)-사선 아래쪽의 삼각형 지역-로서 측정된다. 지니계수를 정의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약간의 조작을 하면 모든 쌍의 소득들 간의 차이의 절대값의 산술평균으로 정의되는 상대평균차의 정확히 절반(1/2)이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G &= (1/2n^2\mu) \sum_{i=1}^n \sum_{j=1}^n |y_i - y_j| \\
 &= 1 - (1/n^2\mu) \sum_{i=1}^n \sum_{j=1}^n \text{Min}(y_i, y_j) \\
 &= 1 + (1/n) - (2/n^2\mu)[y_1 + 2y_2 + \dots + ny_n] \quad \text{for } y_1 \geq y_2 \geq \dots \geq y_n.
 \end{aligned}$$

소득분위배율은 하위 분위의 평균소득 대비 상위 분위의 평균소득의 비율을 말한다. 소득 10분위 배율은 전체 인구를 10개의 소득분위로 나눈 후, 최상위인 10분위의 소득합(또는 평균)을 최하위 분위의 소득합(또는 평균)으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 이 값이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전체 인구를 5개의 소득분위로 나눈 후, 최상위인 5분위가 최하위인 1분위에 비해 몇 배의 소득을 얻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이 값이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 3. 소득의 정의와 빈곤기준선

이 장에서의 소득 범주는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등 세 가지를 사용하는데, 각 소득범주의 개념은 제3장에서 소개된 바와 같다. 통상의 소득분배 분석에서는 균등화된 소득을 사용하고 있다. 균등화된 소득이란 가구소득을 균등화지수로 나눈 값을 말하며,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균등화지수가 이용된다. 여기서는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되는 가구원수의 제곱근을 균등화지수로 사용하였다.

통상적으로 빈곤 지표를 산출할 때에는 두 가지의 빈곤선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한 가지는 절대빈곤선이고, 다른 한 가지는 상대적 기준의 빈곤선이 그것이다. 먼저 2절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빈곤기준선으로 사용하며, 그 다음으로 3절에서는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사용한다.

빈곤율을 계산함에 있어 가구단위와 개인단위의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분석단위는 개인단위이다. 특히 국가간 비교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분석단위가 개인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여 각종 분배지표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가구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단위의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구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값을 가중치로 사용한다.

다음 절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절대 빈곤지표를 살펴본다. 먼저 전체적인 빈곤율 수준을 살펴본 다음, 인구특성별, 도시규모별 및 지역별 빈곤율과 빈곤격차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제2절 소득분배 지표 산출결과와 추이

### 1. 빈곤

#### 가.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지표

다음의 <표 4-1>은 소득유형별 절대빈곤율과 빈곤격차비율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빈곤기준선은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사용하였으며, 가구소득이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가의 여부를 통하여 빈곤 여부를 판단하였다.

모든 소득유형에 대하여 빈곤율은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시장소득의 경우 2005년의 15.56%에서 점차로 낮아져서 2010년에는 11.27%에 이르고 있다. 경상소득 빈곤율은 2005년 9.85%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2009년 4.85%, 2010년 4.40%에 이르렀다.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2005년의 11.07%에서 꾸준히 낮아져서 2009년 5.59%, 그리고 2010년에는 5.09%로 낮아지고 있다.

빈곤격차비율은 빈곤율의 변화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5~2009년 기간에는 꾸준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0년에 와서는 조금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격차 비율은 2005년의 8.03%에서 조금씩 낮아져서 2007년 6.75%, 2008년 7.44%, 2009년은 5.71%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이보다 조금 높아진 5.93%에 이르고 있다. 경상소득 기준 빈곤격차비율은 2005년 3.88%에서 다소의 기복을 보이면서 낮아져 2009년에는 1.93%, 그리고 2010년에는 1.91%로 낮아졌다. 가처분소득기준의 빈곤격차비율 또한 2005년의 8.92%에서 2009년까지 낮아져서 2.20%에 이르렀으나, 2010년에는 다시 반등하여 2.33%에 이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구한 절대빈곤율은 소득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빈곤격차비율은 2005년에서 2009년까지 대체로 낮아졌다가 2010년에 다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 빈곤지표(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

	빈곤율			빈곤격차비율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2005	15.56	9.85	11.07	8.03	3.88	8.92
2006	14.09	7.94	9.05	9.96	5.79	6.43
2007	12.71	6.76	7.87	6.75	2.72	3.39
2008	11.94	5.73	6.72	7.44	3.45	3.97
2009	11.25	4.85	5.59	5.71	1.93	2.20
2010	11.27	4.40	5.09	5.93	1.91	2.33

주: 가구 소득 자료에 개인가중치(=가구가중치\*가구원수)를 사용하였음.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다음의 <표 4-2>는 아동 및 노인인구의 빈곤율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의미하며, 아동빈곤율은 전체 아동인구 가운데 빈곤선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을 의미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빈곤율의 저하경향은 아동 및 노인빈곤율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아동빈곤율을 살펴보면 시장소득 기준의 아동빈곤율은 2005년의 10.77%에서 점진적으로 낮아져서 2009년 8.23%, 2010년 6.66%에 이르고 있다. 경상소득 기준의 아동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의 아동빈곤율보다 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5년 6.99%에서 2010년 2.25%까지 낮아지고 있다. 가처분소득 기준의 아동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과 경상소득 기준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데, 2005년의 8.24%에서 2010년의 3.14%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노인은 65세 이상의 인구를 말하는데,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노인빈곤율도 최근으로 올수록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곤격차비율 또한 2005~2009년 동안 장기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0년에 와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4-2〉 아동 및 노인인구 빈곤지표(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

	연도	빈곤율			빈곤격차비율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아동	2005	10.77	6.99	8.24	5.45	3.11	12.45
	2006	10.23	5.86	6.75	8.38	5.76	6.26
	2007	8.69	4.20	5.44	5.27	2.52	3.34
	2008	8.38	3.90	4.98	4.12	1.64	2.13
	2009	8.23	3.65	4.17	4.16	1.48	1.71
	2010	6.66	2.55	3.14	3.06	0.69	0.87
노인	2005	46.65	29.62	31.55	23.21	9.23	15.40
	2006	41.13	23.54	25.64	21.64	8.19	8.92
	2007	39.21	22.83	24.77	18.70	6.21	6.96
	2008	38.76	18.62	20.02	17.97	4.39	4.98
	2009	37.43	16.72	18.32	17.37	4.07	4.63
	2010	37.18	15.27	16.37	17.54	4.19	4.69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두 가지의 지역 구분 변수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는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등 5개의 구분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광역 행정자치단체를 묶어 7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아래의 <표 4-3>은 5개의 지역구분을 다시 대도시(서울과 광역시, 도농복합군), 중소도시(시), 농어촌(군)으로 재분류하여 각 지역별 절대 빈곤율과 빈곤격차비율을 산출한 것이고, <표 4-4>는 7개의 행정구역별로 빈곤율과 빈곤격차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대도시(서울과 광역시, 도농복합군), 중소도시(시), 농어촌(군)의 3개 지역 가운데에서 횡단면 기준으로 절대빈곤율과 빈곤격차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농어촌이고, 그 다음으로 대도시, 그리고 중소도시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절대 빈곤율 수준은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

세 지역 모두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절대 빈곤율이 감소하는 경향은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대도시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2005년 14.61%에서 2008년 10.34%, 2009년 9.65%로 감소하였다가 2010년에는 10.26%로 조금 높아졌다. 중소도시의 경우 2005년 13.97%에서 2008년 11.74%, 2009년 11.25%, 그리고 2010년에는

10.54%로 꾸준히 하락하였다. 농어촌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2005년 30.00%에서 2008년 21.27%, 2009년 19.34%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20.92%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경우 절대빈곤율이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시장소득 기준의 절대빈곤율은 도시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중소도시의 절대빈곤율은 경상소득이나 가처분소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나, 대도시와 농어촌의 시장소득 기준 절대빈곤율은 2005~2009년까지는 하락하다가 2010년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지역별 빈곤지표(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

지역	연도	빈곤율			빈곤격차비율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대도시	2005	14.61	8.74	9.67	7.24	2.81	3.43
	2006	13.18	6.92	8.00	6.66	2.36	2.71
	2007	12.07	6.18	7.21	6.68	2.56	2.98
	2008	10.34	4.85	5.86	5.25	1.49	1.86
	2009	9.65	3.99	4.65	4.55	1.02	1.23
	2010	10.26	3.45	4.36	4.71	0.78	1.39
중소도시	2005	13.97	8.97	10.54	6.75	3.40	3.86
	2006	12.96	7.58	8.74	6.03	2.42	2.98
	2007	12.67	7.39	8.59	6.23	2.69	3.06
	2008	11.74	5.68	6.73	5.35	1.59	2.12
	2009	11.25	4.79	5.64	4.92	1.32	1.59
	2010	10.54	4.46	4.93	6.20	2.50	2.73
농어촌	2005	30.00	21.27	22.24	13.23	6.79	7.41
	2006	25.77	15.59	16.61	10.74	4.54	4.96
	2007	23.68	14.01	15.12	10.75	4.90	5.34
	2008	21.27	10.55	11.17	9.03	2.90	3.24
	2009	19.34	9.50	10.15	7.90	2.13	2.39
	2010	20.92	9.35	10.09	11.24	5.04	5.39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표 4-4〉 행정구역별 빈곤율(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

지역	연도	빈곤율			빈곤격차비율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서울	2005	11.37	7.40	8.52	5.53	2.63	3.34
	2006	9.97	6.09	7.10	5.19	2.37	2.75
	2007	9.53	5.82	6.68	5.91	2.79	3.39
	2008	8.50	4.14	5.31	4.60	1.72	2.16
	2009	7.36	3.19	3.82	3.54	0.87	1.11
	2010	7.60	2.34	3.52	3.37	0.46	1.48
경기/ 인천	2005	13.40	8.90	10.56	6.45	3.19	3.75
	2006	11.33	5.93	7.02	5.22	1.68	2.19
	2007	10.49	5.75	6.93	5.39	2.46	2.78
	2008	8.90	4.20	5.58	3.84	1.12	1.73
	2009	8.33	2.82	3.75	3.56	0.77	0.97
	2010	8.75	3.27	4.02	4.74	1.81	2.12
부산/ 경남/ 울산	2005	14.28	7.95	8.44	6.66	2.30	2.71
	2006	14.44	7.59	8.31	7.48	2.70	3.11
	2007	12.93	6.40	6.94	6.45	2.27	2.47
	2008	11.15	5.05	5.31	5.29	1.07	1.25
	2009	12.34	6.07	6.70	5.65	1.60	1.82
	2010	11.17	4.17	4.56	5.68	0.87	1.05
대구/ 경북	2005	21.03	13.33	14.41	10.54	4.28	4.93
	2006	18.09	10.01	11.55	8.15	2.74	3.11
	2007	20.01	11.01	12.13	9.61	4.12	4.49
	2008	16.41	7.20	8.62	7.17	2.26	2.69
	2009	17.25	7.33	8.33	7.43	2.18	2.55
	2010	17.76	8.13	8.55	11.63	5.93	6.31
대전/ 충남	2005	16.05	7.98	9.94	7.72	2.86	3.26
	2006	14.71	8.68	10.51	7.80	3.35	3.96
	2007	14.69	9.49	11.22	7.19	3.11	3.57
	2008	14.90	6.76	7.44	7.55	2.13	2.36
	2009	11.62	5.24	5.79	5.54	1.33	1.64
	2010	12.41	8.13	8.55	11.63	5.93	6.31
강원/ 충북	2005	16.98	11.81	12.59	8.07	4.62	4.94
	2006	15.70	8.61	9.94	5.62	2.19	2.69
	2007	12.59	6.14	8.32	5.38	1.74	2.22
	2008	14.66	6.02	7.84	5.97	1.27	1.91
	2009	15.65	7.19	7.92	5.88	1.64	2.00
	2010	13.23	4.88	5.12	5.94	1.06	1.32
광주/ 전남/ 전북/ 제주	2005	25.78	17.34	18.68	12.43	6.09	6.69
	2006	23.76	14.39	15.40	10.80	4.54	5.02
	2007	21.55	11.96	13.20	10.63	3.75	4.21
	2008	19.78	11.33	11.46	9.77	3.13	3.53
	2009	16.50	7.77	8.25	7.71	1.63	1.81
	2010	16.66	7.71	8.32	8.85	3.36	3.54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표 4-4>는 7개 행정구역별 절대 빈곤율을 정리한 것이다. 세 가지 소득 모두에 대하여 2005~2009년의 기간에 대하여 절대빈곤율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2010년은 지역별로, 또 소득개념별로 차이가 있다. 서울은 시장소득에서, 그리고 ‘광주/전남/전북/제주’의 경우에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에서 절대 빈곤율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인천’, ‘대구/경북’, 그리고 ‘대전/충남’에서는 2010년에 세 가지 소득 모두에 있어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부산/경남/울산’과 ‘강원/충북’에서는 2005~2010년 전 기간에 걸쳐 절대빈곤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 현재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절대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경북’ 지역(17.76%)이고, 그 다음은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16.66%)이었으며, 빈곤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7.60%)이었다. 2010년의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절대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경북’(8.13%)과 ‘대전/충남’(8.13%)인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2.34%), 그리고 ‘경기/인천’(3.27%)이었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또한 경상소득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개입으로 인한 빈곤감소 효과는 ‘대구/경북’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광주/전남/전북/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중위소득 기준 빈곤지표

<표 4-5>에는 중위소득 50%를 빈곤기준선으로 보고 계산한 상대빈곤율이 정리되어 있다. 먼저 시장소득의 상대빈곤율을 살펴보면 2005년의 20.44%에서 점차로 낮아져서 2008년 19.62%, 2009년 18.39%에 이르렀다가 2010년 19.26%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상소득은 2005년 17.04%에서 2009년 14.33%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2010년 14.88%로 소폭 상승하였다. 가처분소득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상대빈곤율의 변화 추이는 앞에서 살펴 본 최저생계비 기준의 절대빈곤율의 변화 추이와 유사하며, 빈곤격차비율에서도 절대 및 상대 빈곤율의 장기 추이와 마찬가지로

로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0년에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표 4-5〉 상대빈곤율과 빈곤격차비율(중위소득 50% 기준)

(단위: %)

연도	빈곤율			빈곤격차비율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2005	20.44	17.04	16.43	10.33	6.51	10.40
2006	20.19	16.83	15.99	12.11	8.20	8.39
2007	19.57	16.22	15.45	9.75	5.93	5.93
2008	19.62	15.56	15.17	10.21	6.34	6.40
2009	18.39	14.33	13.47	8.64	4.75	4.54
2010	19.26	14.88	14.29	9.28	5.09	4.99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다음의 <표 4-6>은 상대빈곤선을 기준으로 아동빈곤율과 노인빈곤율을 정리한 것이다. 아동빈곤율과 노인빈곤율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빈곤선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산출된 중위소득의 50%를 빈곤기준선으로 이용하였다.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2010년의 아동빈곤율은 각각 11.64%, 8.76%, 8.33%이며, 이 값들은 전년에 비하여 소폭 낮아진 수준이다. 세 가지 소득에 대한 아동 빈곤격차비율 또한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 노인가구 상대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58.33%, 경상소득 기준 46.17%, 가처분소득 기준 44.1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09년까지 노인 상대빈곤율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0년은 전년에 비하여 소폭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동빈곤율과 노인빈곤율을 전체 인구집단의 빈곤율(<표 4-5> 참조)과 비교하여 보면, 아동빈곤율은 전체 인구집단의 빈곤율에 비해 낮은 반면 노인빈곤율은 전체 인구집단의 빈곤율의 약 두 배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빈곤율이 전체 인구집단의 빈곤율에 비해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노인을 위한 일자리가 많지 않은 까닭에 상당수의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소득이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낮게 분포하기 때문이다(제3장 참조). 반대로 아동빈곤율이 전체에 비하여 낮은 이유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동이 없는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소득빈곤율과 가처분소득빈곤율의 차이는 정부개입으로 인하여 빈곤율이 감소한 정도를 나타내는데, 아동의 경우 2005년 2.56%p이었으나 2010년에는 3.31%p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개입으로 인한 노인빈곤율 감소 효과 역시 2005년의 12.51%p에서 점차 높아져서 2010년에는 14.22%p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정부정책으로 인한 빈곤감소 효과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됨을 의미하며,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표 4-6〉 아동, 노인인구의 빈곤지표(중위소득 50% 기준)

(단위: %)

	연도	빈곤율			빈곤격차비율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아동	2005	14.28	12.18	11.72	6.44	4.29	12.39
	2006	14.14	12.27	11.11	9.12	36.62	6.86
	2007	13.20	11.09	10.07	6.61	3.88	4.27
	2008	13.50	10.85	10.66	5.74	3.36	3.48
	2009	12.85	9.84	9.12	5.70	2.98	2.86
	2010	11.64	8.76	8.33	4.64	2.24	2.15
노인	2005	60.14	49.13	47.63	32.31	19.63	22.56
	2006	57.78	48.43	46.52	30.76	19.11	18.09
	2007	57.00	48.10	45.71	29.58	18.50	17.16
	2008	58.11	47.15	46.45	29.66	17.17	15.93
	2009	56.37	44.60	42.14	28.62	15.66	14.41
	2010	58.33	46.17	44.11	29.66	16.40	15.09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다음의 <표 4-7>은 전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했을 때의 빈곤율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율 분석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어촌’에서의 상대빈곤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소득을 이용하여 구한 2010년의 상대빈곤율은 ‘농어촌’은 34.53%, ‘중소도시’ 18.09%, ‘대도시’는 17.69%의 순서로 나타났다.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으로부터 구한 상대빈곤율을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농어촌’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중소도시’, 그리고 ‘대도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 규모와 소득척도를 불문하고 2005~2009년까지 상대빈곤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다가 2010년에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지역별 빈곤지표(중위소득 50% 기준)

(단위: %)

지역	연도	빈곤율			빈곤격차비율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대도시	2005	19.33	15.60	15.08	9.42	5.33	5.35
	2006	19.01	15.88	14.93	9.16	5.23	5.08
	2007	17.73	14.56	13.61	8.64	4.72	4.63
	2008	17.03	13.48	13.18	7.86	4.35	4.32
	2009	16.62	12.72	12.26	7.31	3.70	3.52
	2010	17.69	13.94	13.44	7.91	3.96	4.01
중소도시	2005	18.68	15.87	15.29	8.90	5.82	5.70
	2006	18.77	15.35	14.67	8.57	5.34	5.33
	2007	18.57	15.27	14.88	8.58	5.28	5.10
	2008	19.33	15.20	14.98	8.59	4.97	4.96
	2009	17.64	13.71	12.73	7.91	4.16	3.93
	2010	18.09	13.32	12.82	9.09	5.09	4.95
농어촌	2005	36.75	32.03	30.71	18.50	12.77	12.13
	2006	35.09	30.24	29.15	16.62	10.98	10.26
	2007	34.26	29.87	28.02	16.41	10.90	10.06
	2008	34.64	28.16	26.45	15.62	9.60	8.78
	2009	31.33	25.18	23.35	13.98	8.04	7.36
	2010	34.53	28.72	27.15	17.99	11.39	10.70

주: 농어촌은 수준의 차이가 특히 현저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한편 시장소득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의 차이를 통하여 정부 개입(재정지출과 조세 및 사회보장부담금 부과)이 빈곤율을 얼마나 감소시켰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2010년의 경우 두 빈곤율의 차이(즉 빈곤감소 효과)는 살펴보면, ‘대도시’는 4.25%p, ‘중소도시’는 약 5.27%p, 그리고 ‘농어촌’은 약 7.38%p에 이르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 개입이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농어촌’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이고, ‘대도시’에서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4-8>은 전국을 ‘7개 행정구역’으로 구분했을 때의 상대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의 균등화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7개 행정구역의 비교하였을 때 상대빈곤율이 높은 지역은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28.65%), ‘대구/경북지역’(26.82%), ‘강원/충북’(22.60%)의 순서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 대구/경북지역의 시장소득 상대빈곤율은 전국평균에 비해 약 9%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는 반대로 상대빈곤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14.29%)과 ‘경기/인천’(15.69%)이었다. 2010년의 경우 시장소득 상대빈곤율은 ‘서울’이 14.29로 ‘경기/인천’보다 약간 낮았으나, 경상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서울’이 ‘경기/인천’보다 미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율 또한 경상소득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2010년을 기준으로 정부개입의 빈곤감소 효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그 효과가 가장 큰 지역은 ‘강원/충북’(7.18%p)이었고, ‘광주/전남/전북/제주’(7.10%p), ‘대구/경북’(6.41%p)이 그 다음을 이었다. 반대로 정부개입의 빈곤감소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지역은 ‘서울’(2.48%p) 및 ‘경기/인천’(4.27%p)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행정구역별 빈곤지표(중위소득 50% 기준)

(단위: %)

행정 구역	연도	빈곤율			빈곤격차비율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서울	2005	15.75	13.61	13.27	7.30	4.67	4.92
	2006	15.27	12.92	12.68	7.12	4.65	4.65
	2007	14.05	12.22	12.37	6.85	4.10	4.32
	2008	14.18	12.00	12.04	6.65	4.15	4.30
	2009	14.25	11.75	11.37	5.77	3.17	3.13
	2010	14.29	11.82	11.81	5.85	3.19	3.58
경기/ 인천	2005	18.36	15.85	15.39	8.60	5.67	5.62
	2006	16.55	13.86	13.11	7.49	4.31	4.32
	2007	15.71	12.72	12.72	7.10	4.20	4.08
	2008	15.86	12.83	12.48	6.34	3.77	3.86
	2009	14.32	10.92	10.23	5.89	2.96	2.80
	2010	15.69	11.78	11.42	7.35	4.11	4.07
부산/ 경남/ 울산	2005	18.06	13.60	13.37	8.83	4.73	4.56
	2006	19.19	15.97	14.42	9.93	5.53	5.35
	2007	18.19	14.14	12.99	8.78	4.71	4.30
	2008	19.19	14.18	13.54	8.49	4.41	4.09
	2009	18.95	13.90	13.34	8.93	4.75	4.43
	2010	18.66	13.09	12.84	9.10	4.20	3.89
대구/ 경북	2005	28.26	23.05	21.60	13.92	8.09	7.86
	2006	26.55	20.99	20.33	12.09	7.17	6.78
	2007	27.80	23.85	22.09	13.57	8.37	7.98
	2008	27.12	20.64	19.13	12.11	6.70	6.52
	2009	27.45	20.97	19.63	12.28	6.37	6.01
	2010	26.82	21.85	20.41	15.50	9.59	9.33
대전/ 충남	2005	21.10	17.41	16.72	10.18	5.58	5.39
	2006	22.18	17.50	16.49	10.82	6.55	6.59
	2007	22.41	18.92	17.39	10.39	6.63	6.29
	2008	21.84	17.89	18.21	11.00	6.25	5.96
	2009	17.99	14.37	13.63	8.71	4.48	4.26
	2010	20.39	15.22	14.82	9.51	4.91	4.76
강원/ 충북	2005	20.70	17.15	16.88	10.39	7.26	6.96
	2006	22.53	18.61	18.35	9.00	5.79	5.59
	2007	20.73	18.40	16.94	9.04	5.68	5.37
	2008	25.43	18.61	18.07	11.07	5.94	5.84
	2009	21.56	15.37	13.90	10.14	5.41	5.16
	2010	22.60	16.62	15.42	10.44	5.00	4.67
광주/ 전남 전북/ 제주	2005	31.62	26.98	25.40	16.38	10.65	10.22
	2006	32.33	27.98	26.53	15.63	10.08	9.56
	2007	31.09	25.26	23.15	15.46	9.09	8.55
	2008	28.54	23.27	23.03	14.54	8.56	8.05
	2009	26.19	21.67	20.06	12.49	6.62	6.01
	2010	28.65	23.21	21.55	14.11	8.23	7.70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 2. 불평등 지표

다음의 <표 4-9>는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와 소득 10분위배율 및 5분위배율을 2005~2010년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지니계수의 경우 세 가지 소득범주 모두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니계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불평등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의 완화 경향은 소득분위 배율(10분위, 5분위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변화를 보면 2005년 0.3784에서 2008년에는 0.3633으로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는 다시 0.3544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다소 반등하여 0.3657을 기록하였다. 시장소득 지니계수 및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역시 2005~2009년까지 점진적으로 줄어들었으나, 2010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뺀 값으로 부터 정부 개입에 의한 소득불평등의 완화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정부개입에 의한 불평등완화 효과의 크기는 2005년의 0.0435에서 2008년 0.0449, 2009년 0.0446, 그리고 2010년에는 0.049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에서는 분위수 배율을 정리하고 있다. 최하위 소득 1분위의 평균소득 대비 최상위 소득 10분위의 평균소득의 비율을 의미하는 10분위 배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시장소득의 10분위 배율은 23.71배였는데,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16.85배에 이르고, 2010년 18.66배로 소폭 반등하였다.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을 이용하여 측정한 소득 10분위 배율은 시장소득의 경우에서 보다 훨씬 작게 나타난다. 2010년의 경우 각각 약 9.56배 및 9.01배에 이르고 있다.



〈표 4-9〉 불평등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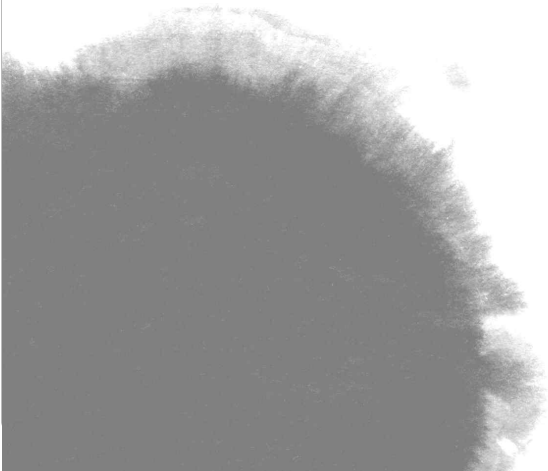
구분	연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치분소득
자니계수	2005	0.3784	0.3452	0.3349
	2006	0.3761	0.3422	0.3315
	2007	0.3711	0.3384	0.3257
	2008	0.3633	0.3290	0.3185
	2009	0.3544	0.3190	0.3098
	2010	0.3657	0.3269	0.3160
10분위배율	2005	23.71	11.58	11.18
	2006	21.84	10.95	10.47
	2007	21.00	10.66	9.93
	2008	19.31	9.86	9.39
	2009	16.85	8.99	8.48
	2010	18.66	9.56	9.01
5분위배율	2005	9.74	6.70	6.36
	2006	9.43	6.52	6.15
	2007	9.09	6.38	5.94
	2008	8.55	5.97	5.66
	2009	7.83	5.51	5.21
	2010	8.51	5.79	5.46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 5장

주거





## 제5장 주거

본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6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지역별·계층별<sup>7)</sup>·점유형태별 주거복지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복지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써 윤주현·김근용·박천규 외(2005) 및 최은희·홍형욱·지은영 외(2008)를 참고하였다. 이에 포함되는 세부지표는 한국복지패널자료로 분석이 가능한 몇 가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각 지표가 가지는 의미와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세부지표는 다음과 같다. 주거안정성 지표는 얼마나 안심하고 편안하게 주거소비를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가 점유율을 살펴보았다. 양적지표는 특정지역 거주가구의 주거소비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로 1인당 주거면적, 방당 거주인 수를 측정하였다. 질적지표는 개별가구의 주거소비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거밀도를 나타내는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을 구하였다. 주거비부담 지표는 소득에 대비한 개인 주거비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을 측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주택지불능력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연소득 대비 자가주택가격(현시가기준)비율을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거빈곤 주거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을 측정하였다.

---

7) 계층 중에 분위별로 나눈 표들은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분위값을 통하여 구분하였다.

〈표 5-1〉 주거복지 측정지표<sup>8)</sup>

구분	지표	의의	측정방법	분석 가능여부
주거 안정성 지표	자가점유율	주거안정성	$\frac{\text{자가거주가구수}}{\text{전체가구수}} \times 100$	○
	평균 거주기간	주거안정성	조사년도 - 이사년도 + 1	×
	강제이동 비율	주거안정성	“주거부담이 비싸서/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의 이사이유를 선택한 가구의 비율	×
양적 지표	주택보급률	주택재고의 절대부족 정도	$\frac{\text{주택수(소유권기준)}}{\text{보통가구수}} \times 100$	×
	1인당 주거면적	개인의 주거소비량, 주거밀도	$\frac{\text{가구전용면적}}{\text{가구원수}} \times 100$	○
	방당 거주인수	주거밀도	$\frac{\text{가구원수}}{\text{방수}} \times 100$	○
질적 지표	건축경과년수	주택의 물리적 노후도	조사년도 - 건축년도 + 1	×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조밀도	$\frac{\text{3인이상단칸방거주가구수}}{\text{3인이상가구수}} \times 100$	○
	주거만족도 (시설, 환경, 주변편의)	개별가구가 느끼고 있는 만족도	4점 척도	×
주거비 부담 지표	PIR(연소득대비주택 구입가격비율)	주택구입부담	$\frac{\text{주택구입가격}}{\text{연소득}}$	×
	RIR(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 정도	$\frac{\text{임대료}}{\text{월소득}} \times 100$	○
	PTI(월소득대비 상환액 비율)	주택자금대출의 상환능력 측정	$\frac{\text{월상환액}}{\text{월소득}} \times 100$	×
	LTV(주택가격대비 대출금액 비율)	주택구입의 초기부담정도 측정	$\frac{\text{대출금액}}{\text{주택구입가격}} \times 100$	×
주거 빈곤 지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주거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대상계층	최저주거기준을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시설·침실·면적)를 산정	○

8) 주거복지 지표는 윤주현 외(2005), 『지역간 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I): 주거서비스 지표의 개발 및 측정』, 국토연구원과, 최은희 외(2008) 『주거복지지수의 개발과 권리』, 주택도시연구원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 제1절 주거복지 지표 산출방식

### 1. 자가 점유율

자가 점유율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이는 내 집이라는 안정감과 자산 가치 상승기대, 그 사회의 주거안정성을 표시하는 지표로 사용된다(윤주현 외, 2005:53).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계층별(소득5분위별) 자가 점유율을 구하였다. 6차년도에서는 주거 점유형태(h0606\_3=1)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ext{자가점유율} = \frac{\text{자가거주가구수}}{\text{전체가구수}} \times 100(\%)$$

### 2. 1인당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은 개인의 주거 소비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주거밀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윤주현 외, 2005:53).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계층별(소득5분위별)·점유형태별 1인당 주거면적을 측정하였다. 6차년도에서는 주거면적(h0606\_5), 가구원수(h0601\_1)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윤주현 외(2005)의 선행연구에서는 주거면적을 전용면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복지패널자료에서 제시된 주거면적은 전용면적 기준과 분양면적 기준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산출된 지표는 타 전수조사 자료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9)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주거면적은 주거유형에 따라 일반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면적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1인당주거면적 = \frac{\text{가구전용면적}}{\text{가구원수}}$$

### 3. 방당 거주인 수

1인당 주거면적뿐만 아니라 방당 거주인 수를 통해서도 이를 통해 주거밀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계층별(소득5분위별)·점유형태별 방당 거주인 수를 측정하였다. 6차년도에서는 방수(h0606\_4), 가구원수(h0601\_1)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표는 가족이 필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가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지만, 가족 수, 가족원의 성별, 연령, 관계 등에 따라 필요한 주택공간의 양이 감안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최은희 외, 2008).

$$\text{방당 거주인 수} = \frac{\text{가구원수}}{\text{방수}}$$

### 4.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은 주거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조밀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여기서 3인 이상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1인 가구, 2인 가구의 증대에 따른 조밀도 완화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단칸방이라도 거주인원이 1~2인 경우 주거과밀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로 주거의 질을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윤주현 외, 2005:54).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원수별(3인 이상)·지역별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을 측정하였다. 6차년도에서는 방수



(h0606\_4=1), 가구원수(h0601\_1≥3)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ext{3인 이상 단칸방 거주 가구 비율} = \frac{\text{3인 이상 단칸방 거주 가구 수}}{\text{3인 이상 가구 수}} \times 100(\%)$$

## 5.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 RIR)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 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윤주현 외, 2005:55).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계층별(소득5분위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을 구하였다. 6차년도에서는 주택 월세액<sup>10)</sup>(h0607\_3aq3), 가처분 소득(h06\_din)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월소득의 경우 가처분소득을 월단위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text{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RIR)} = \frac{\text{임대료}}{\text{월소득}} \times 100(\%)$$

## 6. 연소득 대비 자가주택가격(현시가기준) 비율

연소득 대비 자가주택가격(현시가기준) 비율은 주택구입능력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하였다. 통상적으로 주택구입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비율(PIR)로 측정을 하지만 한국복지패널 조사에는 구입당시의 주택가격 변수가 없기 때문에 자가주택가격(현시가기준)으로 대체하여 분석하였음을 밝혀둔다.

10) 3차년도 이후 주택 월세액의 경우 1,2차년도와 시점 상 차이가 있다. 1,2차년도는 12월 31일 기준의 주택 월세액을 묻는 반면 3차년도 이후에는 1년 중 평균 월세액을 묻는 문항으로 바뀌었다.

$$\text{연소득대비자가주택가격비율} = \frac{\text{자가주택가격(현시가기준)}}{\text{연소득}}$$

##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최저주거기준이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의미하며, 주택법 제5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건설교통부<sup>11)</sup> 장관이 설정·공고한 기준을 말한다(김혜승, 2007:20)<sup>12)</sup>.

최저주거기준은 크게 시설기준, 침실기준, 면적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구조·성능·환경기준의 경우 관련요소의 법정기준 적합여부를 가 구별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자연재해의 위험과 주택상태(내열·내화·방열·방습) 및 환경(방음·환기·채광·난방 설비 구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 기준을 실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규모 추정 시 엄밀히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김혜승, 2007: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성능·환경기준을 제외한 시설·침실·면적 기준을 중심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시설기준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설비가 각 세부기준(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에 미달하는지를 확인하고, 이 중 하나라도 미달인 가구는 시설기준 미달가구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침실기준과 면적기준의 경우 최저주거기준 공고문(표 5-2 참조)을 바탕으로 미달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는 해당가구원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소 주거면적과 방수의 최대값을 나타낸 것으로 현재 주거상황이 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건교부가 제시한 가구원 수별 최소주거면적과 방수는 다음 표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시설·침실·면적 기준을 중심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6차년도를 중심으로 살펴보

11) 건설교통부는 2008년 3월 6일 국토해양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12) 김혜승(2007),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 연구」, 국토연구원.

면 시설기준 미달여부는 주거시설 사용형태\_부엌( $2 \leq h0605\_22 \leq 5$ ), 주거시설 사용형태\_화장실( $2 \leq h0606\_23 \leq 5$ ), 주거시설 사용형태\_목욕시설( $3 \leq h0606\_24 \leq 5$ ) 중 하나라도 미달인 가구는 시설기준 미달가구로 판단하였다. 침실 기준은 방수( $h0606\_4$ )와 가구원수( $h0601\_1$ ) 변수를 사용하여 <표 5-2>에서 제시된 가구원수별 방수 기준에서 미달인 가구를 선정하였다. 면적 기준은 주거면적( $h0606\_5$ )과 가구원수( $h0601\_1$ ) 변수를 사용하여 <표 5-2>에서 제시된 가구원수별 총 주거면적 기준에서 미달인 가구를 선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침실·면적기준에서는 표준가구구성에 따른 가구원수별 최소주거면적 및 방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가구원수별 최소주거면적 및 방수를 고려하였다<sup>13)</sup>.

<표 5-2>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수(인)	표준가구구성 <sup>1)</sup>	실(방)구성 <sup>2)</sup>	총 주거면적(m <sup>2</sup> )
1	1인 가구	1K	12(3.6평)
2	부부	1DK	20(6.1평)
3	부부+자녀1	2DK	29(8.8평)
4	부부+자녀2	3DK	37(11.2평)
5	부부+자녀3	3DK	41(12.4평)
6	노부모+부부+자녀2	4DK	49(14.8평)

주: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13) 예컨대, 3인 가구는 표준가구구성상 부부와 자녀 한 명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단순히 3명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 제2절 주거복지 지표 산출 결과와 추이

### 1. 자가 점유율

점유형태별 가구비율을 살펴보면 2005~2010년 기간 동안 자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09년 까지 줄어드는 추세였던 자가 비율이 2010년에 들어서면서 소량 증가하였다. 또한 전세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그 외 점유형태는 모두 증가하였다.

〈표 5-3〉 점유형태별 가구비율

(단위: %)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기타	계
2005	53.5	19.5	15.9	2.3	8.8	100.0
2006	54.9	19.3	15.4	2.5	8.0	100.0
2007	54.4	18.9	15.7	2.3	8.9	100.0
2008	53.8	19.7	15.4	2.3	8.8	100.0
2009	53.4	20.2	16.0	2.2	8.2	100.0
2010	53.8	19.2	16.5	2.3	8.2	100.0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표 5-4〉 지역별 자가 점유율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53.5	51.1	53.9	66.4
2006	54.9	52.2	55.1	69.4
2007	54.4	51.8	54.3	67.6
2008	53.8	50.8	54.5	65.7
2009	53.4	50.2	54.6	64.5
2010	53.8	50.0	55.0	66.3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자가 점유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5~2010년 기간 동안 농어촌의 자가 비율이 66.3%로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 지역이 50.0%로 가장 낮았다. 이는 농어촌 지

역이 대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계층별(소득 5분위별) 자가 점유율을 살펴보면, 2005년을 뺀 나머지에서 1분위가 가장 낮았으며 1분위, 3분위, 5분위의 자가 점유율은 점점 감소하다가 2010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분위, 4분위는 2009년과 비교해서 줄어들었다. 2005년에 12.5%p였던 1분위와 5분위의 자가점유율 차이가 2010년에는 20.8%p로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소득 5분위별 자가 점유율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53.5	46.9	45.9	56.1	59.4	59.4
2006	54.9	47.3	48.4	54.0	60.9	63.8
2007	54.4	46.7	48.2	55.3	58.8	62.8
2008	53.8	43.2	48.0	55.1	61.0	61.7
2009	53.4	43.1	49.2	53.8	60.6	60.5
2010	53.8	43.4	48.9	54.8	57.5	64.2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 2. 1인당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이 40.9㎡로 가장 넓었으며, 대도시가 32.6㎡로 가장 면적이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지역이 2005년에 비해 주거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지역별 1인당 주거면적

(단위: m<sup>2</sup>)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30.0	29.2	30.4	33.1
2006	29.9	29.1	30.1	33.7
2007	34.2	32.0	36.6	37.9
2008	32.0	30.2	32.7	37.2
2009	32.7	31.0	33.5	37.6
2010	34.9	32.6	36.0	40.9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소득계층별로 1인당 주거면적을 살펴보면, 1분위의 주거면적이 40.9m<sup>2</sup>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분위에 속한 1~2인 가구 비율이 다른 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sup>14)</sup>으로 보인다. 주거면적에서는 모든 분위에서 추세가 일정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으나 2005년에 비하여 모든 분위에서 면적이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소득 5분위별 1인당 주거면적

(단위: m<sup>2</sup>)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30.0	34.7	26.4	27.2	29.1	32.6
2006	29.9	34.7	28.5	25.9	28.2	32.2
2007	34.6	44.9	30.2	30.3	31.8	35.7
2008	32.0	38.7	30.2	27.8	28.8	34.4
2009	32.7	38.5	30.6	28.9	31.4	34.1
2010	34.9	40.9	33.8	29.9	34.1	36.0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점유형태별 1인당 주거면적을 살펴보면, ‘기타<sup>15)</sup>’를 제외하고 ‘자가’의 주거면적이 36.9m<sup>2</sup>로 가장 넓었으며, ‘월세’ ‘보증부월세’가 24.0m<sup>2</sup>, 28.0m<sup>2</sup>로 가장 작은 것

14) 예컨대, 2010년의 경우 1분위에 속한 1~2인 가구의 비율은 약 85%로 전체(5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1인 가구 48.6%, 2인 가구 36.9%).

15) 한국복지패널자료의 주거 점유형태 중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상으로 주택에 사는 경우, 둘째, 주택 명목이 가구원이 아닌 자로 된 경우, 셋째,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된 사택이나 관사에 사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모든 점유형태에서 2008년에 감소했다가 2008년부터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5-8〉 점유형태별 1인당 주거면적

(단위: m<sup>2</sup>)

	전체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기타
2005	30.0	32.9	26.0	24.4	19.5	34.4
2006	29.9	33.1	25.8	23.3	17.9	34.5
2007	34.2	38.2	29.4	25.1	21.4	39.9
2008	32.0	34.4	28.5	24.3	21.9	40.5
2009	32.7	34.7	29.4	25.9	23.4	44.2
2010	34.9	36.9	31.4	28.0	24.0	47.1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 3. 방당 거주인 수

사용방수를 묻는 문항에 대한 조사 지침사항이 변화하여<sup>16)</sup> 전체적으로 방 수가 2007년도 이전보다 많아졌다. 이로 인하여 2008년에 거주인 수가 크게 줄었으며, 이후로 2008~2009년에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0년에는 크게 낮아졌다.

지역별 방당 거주인 수를 보면 농어촌이 1이하로 평균적으로 각자 방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소량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2009년 이후에는 대도시가 수치가 더 높았다.

16) 2005~2007년에는 거실의 경우 침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만을 방수에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거실의 경우 미닫이문이 있어서 독립적인 공간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도 방수에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표 5-9〉 지역별 방당 거주인 수

(단위: 명)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1.18	1.18	1.20	1.05
2006	1.18	1.18	1.21	1.05
2007	1.17	1.17	1.19	1.01
2008	1.12	1.13	1.14	0.97
2009	1.12	1.14	1.13	0.98
2010	1.06	1.08	1.06	0.91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소득계층별로 방당 거주인 수를 살펴보면, 1분위가 1이하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1인당 주거면적과 마찬가지로 1분위에 속한 1~2인 가구 비율이 다른 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sup>17)</sup>으로 보인다. 또한 3분위가 가장 거주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모든 분위에서 점점 거주인 수가 줄어들었다.

〈표 5-10〉 소득 5분위별 방당 거주인 수

(단위: m)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1.18	0.98	1.31	1.26	1.22	1.14
2006	1.18	0.96	1.26	1.31	1.24	1.15
2007	1.17	0.91	1.24	1.30	1.23	1.15
2008	1.12	0.88	1.17	1.22	1.22	1.11
2009	1.12	0.89	1.19	1.22	1.17	1.12
2010	1.06	0.82	1.08	1.18	1.12	1.09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점유형태별 방당 거주인 수를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자가’의 수치가 가장 작았으며 가장 넓었다. 또한 ‘월세’ ‘보증부월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 예컨대, 2010년의 경우 1분위에 속한 1~2인 가구의 비율은 약 85%로 전체(5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1인 가구 48.6%, 2인 가구 36.9%).



〈표 5-11〉 점유형태별 방당 거주인 수

(단위: m)

	전체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기타
2005	1.18	1.13	1.25	1.30	1.42	1.06
2006	1.18	1.12	1.26	1.32	1.47	1.07
2007	1.17	1.11	1.24	1.33	1.38	1.03
2008	1.12	1.09	1.18	1.24	1.17	0.97
2009	1.12	1.09	1.17	1.24	1.29	0.92
2010	1.06	1.03	1.12	1.15	1.16	0.86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 4.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사용방수를 묻는 문항에 대한 조사 지침사항이 변화하여<sup>18)</sup> 전체적으로 방수가 2007년도 이전보다 많아졌다. 이로 인해 단칸방 가구 비율이 2008년부터는 2007년 이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다.

〈표 5-12〉 가구원수별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3인 이상)

(단위: %)

	전체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05	0.80	1.86	1.26	0.36	0.00
2006	0.92	2.20	1.31	0.66	0.00
2007	0.91	2.48	1.02	1.21	0.00
2008	0.30	0.84	0.43	0.13	0.00
2009	0.35	0.93	0.41	0.53	0.61
2010	0.22	1.00	0.04	0.00	0.00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2008년부터 2010년으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8) 앞의 각주 참조

가구원수별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3인 가구는 2009년에 비해서 소량 증가 하였으며 4인 가구는 감소하였다. 또한 5인 가구와 6인 가구의 비율이 0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3인 이상 가구 중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가 2008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가 전체년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적인 추세를 보면 2009년에 비해서 모든 지역에서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5-13〉 지역별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0.80	0.67	0.95	0.75
2006	0.92	0.68	1.18	0.83
2007	0.91	0.60	1.28	0.72
2008	0.30	0.16	0.42	0.45
2009	0.35	0.26	0.45	0.32
2010	0.22	0.14	0.32	0.17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 5.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 RIR)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전체적으로 2005년과 비교해서 감소하였다. 대체적으로 대도시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농어촌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2008년에는 농어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 지역별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17.0	17.0	17.1	15.1
2006	17.9	21.8	13.7	12.4
2007	15.6	18.4	12.7	10.4
2008	13.8	13.7	13.9	14.9
2009	14.7	16.2	13.2	9.5
2010	13.4	13.9	12.9	10.7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소득계층별(소득5분위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을 살펴보면 2005~2010년 기간 동안 1분위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5분위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도별로는 201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분위, 3분위의 수치가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분위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5〉 소득 5분위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17.0	33.5	15.0	12.5	10.6	7.9
2006	17.9	39.2	13.9	10.9	9.2	6.5
2007	15.6	36.3	12.5	10.2	7.7	4.5
2008	13.8	23.5	11.9	10.5	9.5	7.0
2009	14.7	27.3	11.6	10.3	8.0	6.9
2010	13.4	21.8	13.0	9.5	8.3	7.6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표 5-16>은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30%를 초과하는 가구를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로 보고, 소득계층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가구비율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5-16>에 따르면 2010년에 보증부월세 및 월세로 사는 세입자 중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의 비율이 1분위에서는 19.4%로 상당히 높게 나

타난 반면 3분위에서는 0.3%로, 4분위, 5분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상위 소득계층에서는 소득에 비해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비율이 낮은 반면, 하위소득계층에서는 소득에 비해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sup>19)</sup>.

〈표 5-16〉 소득 5분위별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의 비율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0	6.5	19.4	4.7	0.3	0.0	0.0

자료: 한국복지패널 6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 가구원수별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분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인가구와 2인가구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가구의 경우 RIR이 30%를 초과하는 비율이 12.5%로 2~5인 가구에 비해서 크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7〉 가구원수별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의 비율

(단위: %)

	전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10	6.5	12.5	3.9	1.6	0.0	1.6	0.0	0.0

자료: 한국복지패널 6차년도 원자료

19) 이 결과는 주거 점유형태가 ‘보증부 월세’ 혹은 ‘월세’인 가구들만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이기에 ‘보증부 월세’, ‘월세’ 및 ‘전세’인 가구는 월세로 환산하여 포함한 연구결과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6. 연소득 대비 자가주택가격(현시가기준) 비율<sup>20)</sup>

지역별 연소득 대비 자가주택가격(현시가기준)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도시의 경우 2010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지역구분에서는 대도시가 가장 높았으며, 7개 지역구분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인천/경기)이 가장 높았다. 이는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이 타 도시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18〉 지역별 연소득 대비 자가주택가격(현시가기준) 비율

(단위: 배)

	전체	3개 지역구분			7개 지역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서울	수도권 (인천/경기)	부산/ 경남/울산	대구/경북	대전/충남	강원/충북	광주/ 전남/전북 /제주도
2005	6.1	7.6	5.1	3.6	10.6	6.2	4.5	5.1	4.8	4.3	3.7
2006	6.0	7.3	5.2	3.4	10.8	6.5	4.3	4.9	4.5	3.9	3.1
2007	6.0	7.2	5.4	3.5	10.8	7.1	4.0	4.6	4.4	4.1	3.4
2008	5.6	6.9	4.9	2.9	10.5	6.4	3.7	3.8	4.0	4.1	3.2
2009	5.5	6.9	4.7	3.4	10.5	6.2	4.0	3.8	4.0	4.5	3.1
2010	5.5	6.9	4.7	3.3	10.1	6.3	4.5	3.9	4.1	3.9	3.3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표 5-19〉 소득 5분위별 연소득 대비 자가주택가격(현시가기준) 비율

(단위: 배)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6.1	10.8	7.6	5.2	4.3	4.3
2006	6.0	10.5	7.0	5.3	4.6	4.1
2007	6.0	10.2	6.9	5.6	4.7	4.2
2008	5.6	9.9	6.1	5.2	4.2	4.0
2009	5.5	8.9	6.4	5.1	4.4	4.2
2010	5.5	8.7	6.9	5.0	4.5	3.9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20) 연소득 대비 자가주택가격(현시가기준) 비율 전체의 분포상태를 고려하여 상·하위 1% 극단치를 제거한 후 분석하였다.

소득 5분위별 연소득 대비 자가주택가격(현시가기준) 비율을 살펴보면 RIR과 마찬가지로 1분위의 비율이 가장 크고 5분위가 가장 작아 소득과 반비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주택구입능력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낮은 것을 의미한다.

###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12.8%로 2006년부터 서서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5-2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 추이

(단위: 천 가구, %)

연도	미달요건 구성요소	시설 기준	침실 기준	면적 기준	시설&침실 기준	시설&면적 기준	침실&면적 기준	시설&침실 &면적기준	최저주거 기준 미달가구계
		2005	규모	1,259	1,812	499	95	168	273
	비율	7.9	11.4	3.2	0.6	1.1	1.7	0.3	19.5
2006	규모	1,349	1,871	507	101	181	264	52	3,234
	비율	8.4	11.6	3.2	0.6	1.1	1.6	0.3	20.1
2007	규모	1,008	1,843	437	91	132	233	42	2,875
	비율	6.2	11.3	2.7	0.6	0.8	1.4	0.3	17.6
2008	규모	1,025	1,452	440	70	153	174	26	2,546
	비율	6.2	8.7	2.7	0.4	0.9	1.0	0.2	15.3
2009	규모	799	1,499	330	54	110	170	24	2,318
	비율	4.7	8.9	2.0	0.3	0.7	1.0	0.1	13.7
2010	규모	899	1,296	303	37	148	116	17	2,213
	비율	5.2	7.5	1.8	0.2	0.9	0.7	0.1	12.8

주: 구성요소 합계와 우측 끝 총계 사이의 차이는 반올림으로 인한 오차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미달요건을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시설기준 미달가구의 경우 전체가구에서 시설기준 미달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5.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침실기준 미달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5~2010년 기간 동안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침실기준 미달가구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시설기준 미달가구, 면적기준 미달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지역별·계층별·점유형태별 주거복지 실태와 수준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 번째로 3인 이상 가구의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이 2010년에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전체 비율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경우도 면적기준에서 전체가구의 1.8%로 과거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주거복지가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후 RIR)이 1분위에서 21.8%로 2분위(13.0%), 3분위(9.5%)에 비해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월세(또는 보증부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해주며, 특히 RIR 30%초과(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의 비율이 1분위의 경우 19.4%로 2분위(4.7%), 3분위(0.3%)에 비해서 크게 높아 1분위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월세 지원 등 주거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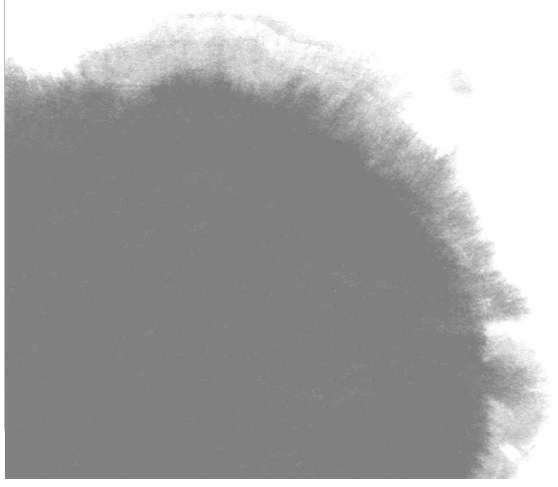
세 번째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가 2005년(19.5%)에 비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어 2010년에는 12.8%임을 알 수 있었다.





# 6장

## 보건의료





## 제6장 보건의료

본 절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자료로써 분석 가능한 보건의료지표를 선정하여, 해당지표와 관련된 변수값의 연도별 추이를 소득분위<sup>21)</sup>별·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영역별로 최고 건강수준집단과 최저 건강수준집단을 짝 비교(paired comparison)하여 절대차이(AD, absolute difference)와 상대차이(RD, relative difference) 지표를 산출하도록 한다.<sup>22)</sup>

### 제1 절 보건의료 측정지표의 선정 및 측정도구

보건의료와 관련된 측정지표를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sup>23)</sup>. 측정지표는 대부분료로서 건강수준, 건강형태 및 위험요인, 의료서비스에서의 보건의료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건강수준 영역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증, 건강형태 및 위험요인 영역에서 흡연과 음주에서의 지표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흡연, 음주에서의 보건의료지표를 중심으로

21) 소득분위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5분위로 구분하였다.

22) 건강불평등 측정도구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총불평등 측정도구, 사회집단 간 불평등 측정도구, 인구집단에 대한 영향 측정도구, 평균 불비례 정도 측정도구 등 다양하다. 이 중 어떤 측정도구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책 목적과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집단 간 건강수준이 한국복지패널이 구축된 5개년도 사이에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지 개략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본 절의 1차적 목적이므로, 여기에서는 건강수준의 크기를 비교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짝 비교를 통해 절대차이(AD) 및 상대차이(RD) 지표를 산출할 것이다.

23) 한국건강형평성학회, 『건강형평성 측정방법론』, 2007.

로 소득분위별·지역별·성별로 나누어 6개년도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표 6-1〉 건강 형평성 지표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분석 가능 여부	대분류	중분류	분석 가능 여부
건강 수준	기대여명(life expectancy)	×	건강 수준	혈압	×
	건강여명(health expectancy)	×		비만	×
	총사망(all-cause mortality)	×		B형 간염	×
	암 발생률, 암 생존율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
	주관적 건강상태	○	건강행태 및 위험요인	흡연	○
	우울증	○		식생활	v
	자살	×		음주	○
	손상	×		신체활동	×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	×		모유수유(breast-feeding)	×
	활동제한 및 장애	×		자궁경부암 검진	×
	치매	×	의료 서비스	예방접종	×
	저체중아 출산동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
	구강건강	×		보건의료재원	×
	결핵	×			

측정도구인 짝 비교는 두 집단 간의 건강 불평등 크기를 비교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여기에는 절대차이(AD)와 상대차이(RD) 지표가 있다. 먼저 절대차이와 상대차이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이때,  $r_1$  과  $r_2$  는 두 하위 사회집단의 건강 수준이다<sup>24)</sup>.

24)  $r_2$  의 경우 기준집단을 정하거나 또는 가장 건강한 집단을 사용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가장 건강한 집단을  $r_2$  로 사용하였으며, 가장 건강수준이 떨어지는 집단을  $r_1$  으로 사용하였다.

$$AD = r_1 - r_2 \quad (r_2: \text{기준집단 또는 가장 건강한 하위 사회집단의 건강수준})$$

$$RD = r_1/r_2 \quad (r_2: \text{기준집단 또는 가장 건강한 하위 사회집단의 건강수준})$$

절대차이는  $r_1$ ,  $r_2$ 와 같은 단위로 표시되며, ‘범위(range)’라는 통계량으로 이해된다. 반면 상대차이는 단위가 없는 비율 비(rate ratio)이다.<sup>25)</sup>

### 1. 주관적 건강상태에서의 보건의료지표 산출방식

주관적 건강상태(self-rated health)는 조사시점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건강상태를 5점 척도로 조사한 문항을 통해 가구주, 가구원 전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세부적으로 소득분위별, 지역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변수처리의 경우 복지패널 조사에서는 1에서 5로 갈수록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조사를 했으나 분석할 때에는 0에서 숫자가 높아질수록 건강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서 5에서 건강상태변수를 뺀 결과를 통해 건강상태를 분석하였다.

### 2. 우울증에서의 보건의료지표 산출방식

우울증(depression)은 각 년도 조사시점(매년 조사기간) 전 1주일 동안을 기준으로 우울감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11문항을 통해 가구주, 가구원 전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세부적으로 소득분위별, 지역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변수처리<sup>26)</sup>의 경우 해당변수를 리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증가하는 것

25) AD는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작은 것이고 RD는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작은 것이다.

26)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우울감 척도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역학연구용 우울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척도는 0~3점 척도, 20문항으로 구성되며, 우울증 판별을 위한 분할 점수(cutoff point)는 16점이다. 그런데 복지패널조사표 문항에는 1~4점 척도, 11문항으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1~4점에 걸친 변수값을 0~3점으로 처리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측정하는 2문항(비교적 잘 지냈다(p0105\_10, p0205\_10, p0305\_10, p0405\_10, p0505\_10, p0605\_10)와 불만없이 생활했다(p0105\_15, p0205\_15, p0305\_15, p0405\_15, p0505\_15), p0605\_15은 역으로 점수화하였다.

로 해석되도록 하였다.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우울점수} = (\text{점수화 한 11개의 우울지표 항목의 합}) \times \frac{20}{11}$$

또한 우울증을 측정하는 문항의 신뢰도를 알 수 있는 표준화된 크론바흐 알파 (Cronbach's  $\alpha$ ) 값은 1차년도 자료의 경우 0.89, 2차년도 자료의 경우 0.87, 3차년도 자료의 경우 0.86, 4차년도 자료의 경우 0.86, 5차년도 자료의 경우 0.86, 6차년도 자료의 경우 0.86로 나타나 문항의 내적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sup>27)</sup>.

### 3. 흡연에서의 보건의료지표 산출방식

#### 가. 흡연율

흡연율(smoking rate)은 1, 2차는 조사시점의 전년도 1년간 평균적인 흡연량을 5점 척도로 조사한 문항<sup>28)</sup>을 통해 가구주, 가구원 전체로 나누어 살펴보고, 3~6차는 조사시점이 조사일 현재로 변경되고, 문항도 1,2차에 조사한 것과 연계성이 있게 2개의 문항<sup>29)</sup>을 합쳐서 살펴보았다. 또한 세부적으로 소득분위별, 지역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편 흡연율은 통상적인 국제비교에서 15세 이상 남녀인구의 흡연자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통계청에서는 20세 이상 남녀인구의 흡연자 비율을 통계치로 발표하고

또한 총점에 20/11을 곱한 것은, 11문항의 총점(33점)을 20문항일 때의 총점(60점)으로 환산한 것이다.

27)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연구에서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본다.

28) “1년간 평균적으로 귀하는 흡연을 얼마나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하루에 반갑 이내”면 1, “하루에 한갑 이내”면 2, “하루에 두갑 이내”면 3, “하루에 두갑 이상”이면 4, “전혀 흡연하지 않는다”면 5로 응답하는 문항임.

29) “귀하께서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라는 질문과 “귀하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몇 개비입니까?”라는 질문임.”

있다(통계청, 2008 국제통계연감, p. 479). 따라서 통계청과 비교를 위해 20세 이상 인구에서의 흡연율을 구하였다.

변수처리의 경우 1, 2차는 해당변수에 1~4점으로 응답한 경우는 흡연, 5점으로 응답한 경우는 비흡연으로 구분하여 흡연여부를 더미처리 하였고 3~6차는 2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1점으로 응답한 경우는 흡연, 2점으로 응답한 경우는 비흡연으로 1, 2차와 동일하게 부여하였다.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흡연율} = \frac{\text{흡연인구}}{\text{20세이상인구}} \times 100(\%)$$

#### 나. 간접흡연율

간접흡연율(passive smoking rate)은 3~6차 조사시점의 하루 평균 간접흡연 시간을 조사한 문항<sup>30)</sup>을 통해 가구주, 가구원 전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세부적으로 소득분위별, 지역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변수처리의 경우 2~3으로 응답한 경우는 간접흡연, 1로 응답한 경우는 간접흡연이 없는 걸로 구분하여 간접흡연여부를 더미처리 하였고 그 산식은 흡연율과 같다.

$$\text{간접흡연율} = \frac{\text{간접흡연인구}}{\text{20세이상인구}} \times 100(\%)$$

30) “귀하께서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는 시간은 하루 몇 시간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0시간(없음)”이면 1, “1시간미만”이면 2, “1시간이상”이면 3로 응답하는 문항임.

#### 4. 음주에서의 보건의료지표 산출방식

음주율은 1~3차는 조사시점의 전년도 1년간 평균적인 음주횟수를 4점 척도로 조사한 문항<sup>31)</sup>을 통해 가구주, 가구원 전체로 나누어 살펴보고, 4~6차는 조사시점이 당해 연도로 변경되고, 문항도 1~3차에 조사한 것과 연계성이 있게 문항<sup>32)</sup>의 보기문항 값을 리코딩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세부적으로 소득분위별, 지역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음주하는 경우 평균 음주횟수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소득분위별, 지역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음주율 또한 흡연율과 마찬가지로 통계청과 비교를 위해 20세 이상 인구에서의 음주율을 구하였다.

변수처리의 경우 해당변수에 1~3점으로 응답한 경우는 음주, 4점으로 응답한 경우는 비음주로 구분하여 음주여부를 더미로 처리하였다.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음주율} = \frac{\text{음주인구}}{\text{20세이상인구}} \times 100(\%)$$

## 제2절 보건의료지표 측정결과와 추이

### 1. 주관적 건강상태

먼저 가구주의 소득5분위별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건강상태는 2005년에 2.55점이었는데 이후에 2006년 2.43점으로 감소한 뒤 2010년에는 2.66점으로 점점 좋아졌음을 알 수 있으며, 1분위 가구주의 건강상태가 가장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음을 알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

31) “1년간 평균적으로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주 1회 이하”면 1, “주 2~3회”면 2, “주 4회 이상”이면 3, “전혀 마시지 않는다”면 4로 응답하는 문항임.

32) “1년간 평균적으로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월 1회 이하”면 1, “월 2~4회”면 2, “주 2~3회”이면 3, “주 4회 이상”이면 4, “전혀 마시지 않는다”면 5로 응답하는 문항에서 1~3차 문항의 연계성을 위해 4차와 5차의 보기문항 1,2 → 1, 3 → 2, 4 → 3, 5 → 4로 리코딩함.



수록 낮은 분위의 건강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위 간 건강상태 차이가 매우 줄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2〉 소득5분위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주)

(단위: 점)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2.55	1.73	2.51	2.81	2.96	3.07
2006	2.43	1.75	2.44	2.68	2.76	2.84
2007	2.51	1.86	2.46	2.76	2.86	2.92
2008	2.62	2.00	2.63	2.84	2.92	2.96
2009	2.63	2.02	2.65	2.90	2.89	2.94
2010	2.66	2.00	2.72	2.83	2.96	3.05

주. 점수는 건강이 아주 안좋다(0점)-아주 건강하다(4점)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 가구원 전체의 소득5분위별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가구주와 마찬가지로 2005년 이후로 2006년에 감소한 뒤 점점 좋아졌음을 알 수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낮은 분위의 사람들의 건강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 분위 간 건강상태 격차가 매우 줄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3〉 소득5분위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원 전체)

(단위: 점)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2.80	2.12	2.75	2.91	3.07	3.13
2006	2.68	2.09	2.66	2.80	2.91	2.94
2007	2.73	2.18	2.68	2.88	2.94	2.98
2008	2.83	2.35	2.82	2.93	3.03	3.05
2009	2.84	2.32	2.83	3.02	2.98	3.03
2010	2.87	2.32	2.88	2.98	3.07	3.09

주. 점수는 건강이 아주 안좋다(0점)-아주 건강하다(4점)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가구주의 지역별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중소도시의 가구주가 2.70점으로 가장 건강상태가 좋았으며 농어촌의 가구주가 2.41점으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농어촌의 건강상태가 2005년 이후 계속해서 좋아졌으며 대도시, 중소도시의 경우도 2006년에 감소한 이후로는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도시 전체적으로 건강상태가 개선되었음을 확인 할 수가 있다.

〈표 6-4〉 지역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주)

(단위: 점)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2.55	2.58	2.60	2.11
2006	2.43	2.43	2.48	2.16
2007	2.51	2.50	2.57	2.18
2008	2.62	2.65	2.64	2.31
2009	2.63	2.63	2.67	2.40
2010	2.66	2.66	2.70	2.41

주: 점수는 건강이 아주 안좋다(0점)-아주 건강하다(4점)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가구원 전체의 지역별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2.89점인 중소도시가 가장 높았으며 농어촌이 가장 낮은 2.67점이었다. 연도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2006년 이후 꾸준히 건강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5〉 지역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원 전체)

(단위: 점)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2.80	2.83	2.82	2.44
2006	2.68	2.67	2.72	2.46
2007	2.73	2.73	2.78	2.47
2008	2.83	2.84	2.87	2.59
2009	2.84	2.85	2.86	2.64
2010	2.87	2.88	2.89	2.67

주: 점수는 건강이 아주 안좋다(0점)-아주 건강하다(4점)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가구주의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남성, 여성 모두 건강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가구원 전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6-6〉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주)

(단위: 점)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05	2.55	2.69	1.93
2006	2.43	2.57	1.84
2007	2.51	2.64	1.94
2008	2.62	2.73	2.10
2009	2.63	2.74	2.13
2010	2.66	2.77	2.16

주: 점수는 건강이 아주 안좋다(0점)-아주 건강하다(4점)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표 6-7〉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원 전체)

(단위: 점)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05	2.80	2.89	2.71
2006	2.68	2.78	2.58
2007	2.73	2.83	2.64
2008	2.83	2.91	2.76
2009	2.84	2.91	2.76
2010	2.87	2.94	2.80

주: 점수는 건강이 아주 안좋다(0점)-아주 건강하다(4점)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의 절대차이와 상대차이를 확인해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절대차이와 상대차이가 각각 0과 1에 가까워지고 있어 소득분위별, 지역별, 성별 모두 전년에 비해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주에 비해서 가구원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8〉 주관적 건강상태에서의 보건의료지표

(단위: 점, 비율비)

구분	가구주						가구원 전체					
	소득분위집단 간		지역집단 간		성별 간		소득분위집단 간		지역집단 간		성별 간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2005	-1.34	0.56	-0.49	0.81	-0.76	0.72	-1.01	0.68	0.39	1.16	-0.18	0.94
2006	-1.09	0.62	-0.32	0.87	-0.73	0.72	-0.85	0.71	0.26	1.11	-0.20	0.93
2007	-1.06	0.64	-0.32	0.87	-0.70	0.73	-0.80	0.73	0.31	1.13	-0.19	0.93
2008	-0.96	0.68	-0.34	0.87	-0.63	0.77	-0.70	0.77	0.28	1.11	-0.15	0.95
2009	-0.93	0.68	-0.27	0.90	-0.61	0.78	-0.71	0.77	0.22	1.08	-0.15	0.95
2010	-1.05	0.66	-0.29	0.89	-0.61	0.78	-0.77	0.75	0.22	1.08	-0.14	0.95

주: 점수는 건강이 아주 안좋다(0점)~아주 건강하다(4점)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 2. 우울증에서의 보건의료지표

가구주의 우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06년의 9.6점에서 2011년에는 6.1점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6-9〉 소득 5분위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주)

(단위: 점)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6	9.6	16.3	9.9	7.7	6.7	5.3
2007	9.3	15.2	9.5	7.6	6.4	5.5
2008	8.5	13.4	9.0	6.5	6.0	5.2
2009	7.9	12.6	8.3	6.5	5.5	5.0
2010	6.6	12.0	6.6	4.5	4.0	3.7
2011	6.1	11.7	5.5	4.6	3.6	3.0

주: 1) 극히 드물다=0점, 대부분 그렇다=3점  
 2) 우울점수=11문항 총점\*20/11한 값으로 최저 0점, 최고 60점  
 3)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함. 우울점수가 16점 이상이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음.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또한 가구주의 소득 5분위별 우울에 대한 인식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분위에서 2006년부터 서서히 우울지수가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1분위는 2006년에는 우울증이 의심되는 16점을 넘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1년에는 11.7점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가구원 우울에 대한 인식에서도 2006년의 9.4에서 2011년에는 5.8점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원의 경우도 가구주와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모든분위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0〉 소득 5분위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원 전체)

(단위: 점)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6	9.4	15.2	10.1	8.1	7.2	5.9
2007	9.1	14.5	10.0	8.0	6.9	6.1
2008	8.3	13.0	9.1	6.9	6.5	5.6
2009	7.8	11.9	8.4	7.3	5.9	5.4
2010	6.3	11.2	6.5	5.0	4.5	3.9
2011	5.8	10.5	5.8	4.9	4.1	3.4

주: 1) 극히 드물다=0점, 대부분 그렇다=3점

2) 우울점수=11문항 총점\*20/11항 값으로 최저 0점, 최고 60점

3)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함. 우울점수가 16점 이상이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음.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가구주의 지역별 우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농어촌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우울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하지만 모든 도시가 우울점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예전에 비해서 건강상태가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모습은 가구원 전체의 결과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표 6-11〉 지역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주)

(단위: 점)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6	9.6	9.7	9.4	10.4
2007	9.3	9.5	8.9	10.9
2008	8.5	8.7	8.0	9.8
2009	7.9	8.1	7.8	8.4
2010	6.6	6.7	6.3	8.3
2011	6.1	6.2	5.9	7.3

- 주: 1) 극히 드물다=0점, 대부분 그렇다=3점  
 2) 우울점수=11문항 총점\*20/11한 값으로 최저 0점, 최고 60점  
 3)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함. 우울점수가 16점 이상이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음.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표 6-12〉 지역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원 전체)

(단위: 점)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6	9.4	9.3	9.3	9.8
2007	9.1	9.3	8.7	10.6
2008	8.3	8.4	8.0	9.4
2009	7.8	7.9	7.6	8.3
2010	6.3	6.1	6.2	7.6
2011	5.8	5.7	5.6	6.7

- 주: 1) 극히 드물다=0점, 대부분 그렇다=3점  
 2) 우울점수=11문항 총점\*20/11한 값으로 최저 0점, 최고 60점  
 3)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함. 우울점수가 16점 이상이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음.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남녀 가구주의 우울을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가 우울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2006년에는 거의 16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여 우울증세가 있었음을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후로는 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2006년에 비해서 매우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다.

〈표 6-13〉 성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주)

(단위: 점)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06	9.6	8.2	16.0
2007	9.3	7.9	15.4
2008	8.5	7.2	13.9
2009	7.9	6.8	13.2
2010	6.6	5.3	12.6
2011	6.1	4.9	11.5

주: 1) 극히 드물다=0점, 대부분 그렇다=3점

2) 우울점수=11문항 총점\*20/11한 값으로 최저 0점, 최고 60점

3)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함. 우울점수가 16점 이상이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음.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남녀 가구원 전체의 경우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가구주 여성의 수치와 비교해서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 여성 가구주의 경우 가구주로서의 스트레스가 큰 것을 유추할 수가 있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는 가구주나 가구원이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표 6-14〉 성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원 전체)

(단위: 점)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06	9.4	8.2	10.4
2007	9.1	7.8	10.3
2008	8.3	7.3	9.2
2009	7.8	6.8	8.7
2010	6.3	5.1	7.4
2011	5.8	4.8	6.6

주: 1) 극히 드물다=0점, 대부분 그렇다=3점

2) 우울점수=11문항 총점\*20/11한 값으로 최저 0점, 최고 60점

3)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함. 우울점수가 16점 이상이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음.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점수의 절대차이와 상대차이를 확인해 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절대차이와 상대차이는 소득분위별, 지역별, 성별 모두 전년에 비해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이 되면서 그 차이가 다시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소득분위는 2011년에도 그 차이가 더 커졌다. 하지만 지역, 성별에서는 다시 개선되는 형태를 보였다.

〈표 6-15〉 우울에서의 보건의료지표

(단위: 점, 비율비)

구분	가구주						가구원 전체					
	소득분위집단 간		지역집단 간		성별 간		소득분위집단 간		지역집단 간		성별 간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2006	11.0	3.09	1.0	1.11	7.8	1.95	9.3	2.58	0.5	1.06	2.2	1.27
2007	9.8	2.79	1.9	1.22	7.5	1.95	8.5	2.39	1.9	1.22	2.4	1.31
2008	8.2	2.58	1.8	1.23	6.7	1.94	7.4	2.34	1.4	1.17	1.9	1.26
2009	7.6	2.53	0.7	1.08	6.3	1.93	6.5	2.21	0.7	1.09	1.9	1.27
2010	8.3	3.24	2.0	1.32	7.3	2.38	7.3	2.85	1.6	1.26	2.3	1.46
2011	8.6	3.86	1.5	1.25	6.6	2.35	7.1	3.06	1.0	1.18	1.8	1.38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 3. 흡연에서의 보건의료지표

#### 가. 흡연

가구주의 흡연율을 살펴보면 2005년에 43.4%에서 2011년 37.1%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으며, 흡연량에서는 여전히 ‘하루 한갑 이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5분위별 가구주의 흡연율, 흡연량을 살펴보면 년도에 상관없이 2분위와 3분위가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흡연비율에서도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6〉 소득5분위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주)

(단위: %)

구 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비 율	43.4	33.9	46.4	46.7	48.1	45.4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5.4	44.5	29.9	31.0	35.7	35.8	
		하루 한갑 이내	53.9	46.7	57.5	58.2	54.5	52.5	
		하루 두갑 이내	9.5	7.4	11.1	9.3	9.4	10.0	
		하루 두갑 이상	1.3	1.4	1.5	1.4	0.4	1.7	
2006	비 율	42.4	32.1	49.4	47.3	43.7	43.7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3.3	40.4	30.8	27.8	32.7	35.5	
		하루 한갑 이내	54.6	49.5	55.7	59.3	56.0	52.0	
		하루 두갑 이내	10.5	8.3	12.5	11.0	9.9	10.5	
		하루 두갑 이상	1.6	1.8	1.0	1.9	1.4	2.0	
2008	비 율	39.9	29.4	45.3	47.3	42.7	39.7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2.5	40.0	30.3	29.4	32.1	31.0	
		하루 한갑 이내	54.8	49.2	56.8	56.1	55.9	55.7	
		하루 두갑 이내	21~30	7.6	5.7	7.0	10.3	6.8	7.8
			31~40	4.6	4.4	5.8	3.9	4.0	4.7
		하루 두갑 이상	0.6	0.6	0.2	0.3	1.2	0.8	
2009	비 율	40.0	32.4	46.4	45.8	43.1	35.0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1.4	37.4	26.5	30.7	29.4	33.4	
		하루 한갑 이내	55.7	50.5	60.2	56.7	57.0	53.4	
		하루 두갑 이내	21~30	8.0	7.5	8.7	7.9	8.1	8.1
			31~40	4.5	4.5	4.5	4.3	5.0	4.0
하루 두갑 이상	0.5	0.2	0.1	0.5	0.5	1.1			
2010	비 율	39.5	30.5	46.2	47.1	39.3	38.0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4.0	38.3	32.2	33.3	29.1	37.3	
		하루 한갑 이내	54.8	50.0	57.4	55.0	61.2	50.4	
		하루 두갑 이내	21~30	7.7	7.7	7.7	9.3	6.2	7.4
			31~40	2.9	3.5	1.9	2.4	2.6	4.3
하루 두갑 이상	0.6	0.5	0.8	0.0	0.9	0.7			
2011	비 율	37.1	28.7	44.9	43.1	36.7	34.7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3.4	41.4	31.6	28.0	30.7	36.3	
		하루 한갑 이내	56.0	47.3	57.1	62.1	62.1	50.1	
		하루 두갑 이내	21~30	7.1	8.7	6.3	7.1	4.9	8.6
			31~40	3.3	2.2	4.4	2.9	2.1	5.0
하루 두갑 이상	0.2	0.4	0.6	0.0	0.2	0.0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흡연율임.

2) 3차년도 조사부터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7년은 누락되고, 보기분항을 변경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가구원의 흡연율을 살펴보면 2005년에 25.6%에서 2011년 22.7%로 소량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으며, 흡연량에서는 가구주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루 한갑 이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5분위별 가구원의 흡연율과 흡연량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2~5분위가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나 4분위, 5분위는

점차 감소하였으며 2분위, 3분위는 증가와 감소를 함께 보이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흡연량에서도 ‘하루 한 갑 이내’가 모든 분위에서 가장 많았다.

〈표 6-17〉 소득5분위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원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비율	25.6	23.9	26.9	25.9	26.3	25.4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8.3	46.2	33.8	34.2	38.8	38.2	
		하루 한갑 이내	52.3	46.0	55.7	56.3	52.7	51.1	
		하루 두갑 이내	8.3	6.8	9.3	8.4	7.9	9.4	
		하루 두갑 이상	1.1	1.1	1.3	1.2	0.5	1.3	
2006	비율	26.0	23.8	29.2	26.9	24.8	25.8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6.6	42.1	34.0	31.8	34.0	40.9	
		하루 한갑 이내	52.2	48.9	53.6	56.2	53.3	48.9	
		하루 두갑 이내	9.5	7.4	11.2	10.0	10.3	8.7	
		하루 두갑 이상	1.7	1.6	1.2	2.0	2.4	1.5	
2008	비율	24.5	22.3	26.6	26.6	24.6	22.7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7.4	42.7	34.1	35.3	36.6	38.5	
		하루 한갑 이내	51.6	47.3	54.1	52.0	53.0	51.4	
		하루 두갑 이내	21~30	6.7	5.4	6.9	9.3	5.7	6.1
			31~40	3.8	4.0	4.7	3.1	3.7	3.4
		하루 두갑 이상	0.5	0.6	0.1	0.3	1.1	0.7	
2009	비율	24.8	24.2	27.6	25.9	24.5	21.8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6.3	41.6	32.0	36.2	34.0	38.1	
		하루 한갑 이내	53.0	48.3	56.9	52.9	54.9	51.8	
		하루 두갑 이내	21~30	6.5	6.0	7.2	7.0	6.5	5.9
			31~40	3.8	4.0	3.9	3.3	4.2	3.4
하루 두갑 이상	0.4	0.2	0.1	0.6	0.4	0.8			
2010	비율	24.1	22.8	27.9	25.7	22.9	21.4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7.6	40.2	36.0	34.9	36.4	41.1	
		하루 한갑 이내	52.8	50.1	54.9	54.7	54.7	49.1	
		하루 두갑 이내	21~30	6.6	6.3	6.8	8.4	6.0	5.5
			31~40	2.5	3.0	1.7	2.1	2.3	3.7
하루 두갑 이상	0.4	0.4	0.6	0.0	0.6	0.5			
2011	비율	22.7	21.8	26.9	24.1	21.2	19.8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7.8	45.3	35.0	32.6	37.3	39.3	
		하루 한갑 이내	53.5	45.0	56.1	59.0	56.5	50.2	
		하루 두갑 이내	21~30	5.8	7.4	5.0	5.6	4.3	7.0
			31~40	2.7	2.0	3.5	2.8	1.9	3.6
		하루 두갑 이상	0.2	0.3	0.5	0.0	0.1	0.0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흡연율임.

2) 3차년도 조사부터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7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표 6-18〉 지역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주)

(단위: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흡연 =100	비율	43.4	42.7	45.2	37.7	
		하루 반갑 이내	35.4	37.1	33.4	36.5	
		하루 한갑 이내	53.9	52.7	55.7	49.9	
		하루 두갑 이내	9.5	8.7	9.8	12.2	
		하루 두갑 이상	1.3	1.4	1.1	1.4	
2006	흡연 =100	비율	42.4	41.7	44.2	36.8	
		하루 반갑 이내	33.3	34.3	32.1	35.1	
		하루 한갑 이내	54.6	53.2	56.0	54.5	
		하루 두갑 이내	10.5	11.0	10.1	9.5	
		하루 두갑 이상	1.6	1.5	1.9	0.9	
2008	흡연 =100	비율	39.9	38.5	42.2	35.6	
		하루 반갑 이내	32.5	34.1	31.4	30.1	
		하루 한갑 이내	54.8	54.5	54.6	57.6	
		하루	21~30	7.6	6.7	8.5	7.3
		두갑 이내	31~40	4.6	4.1	5.0	4.6
		하루 두갑 이상	0.6	0.7	0.5	0.4	
2009	흡연 =100	비율	40.0	39.9	41.0	35.1	
		하루 반갑 이내	31.4	32.0	31.1	29.6	
		하루 한갑 이내	55.7	55.2	55.8	57.8	
		하루	21~30	8.0	8.4	7.8	7.3
		두갑 이내	31~40	4.5	4.1	4.8	4.3
		하루 두갑 이상	0.5	0.3	0.5	1.0	
2010	흡연 =100	비율	39.5	38.9	40.9	35.8	
		하루 반갑 이내	34.0	36.3	32.5	30.0	
		하루 한갑 이내	54.8	52.3	56.1	61.1	
		하루	21~30	7.7	8.6	7.1	6.8
		두갑 이내	31~40	2.9	2.6	3.4	1.7
		하루 두갑 이상	0.6	0.3	0.9	0.4	
2011	흡연 =100	비율	37.1	38.1	36.4	35.7	
		하루 반갑 이내	33.4	37.0	30.4	29.3	
		하루 한갑 이내	56.0	53.2	57.5	63.0	
		하루	21~30	7.1	6.8	7.9	4.4
		두갑 이내	31~40	3.3	3.0	4.0	2.3
		하루 두갑 이상	0.2	0.1	0.2	1.1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흡연율임.

2) 3차년도 조사부터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7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지역별 가구주의 흡연율을 살펴보면 중소도시의 흡연율이 2010년까지 가장 높았으나 2011년에는 대도시의 흡연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서 2009년에 흡연율이 증가했으나 2009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모든 지역에서 흡연율이 2005년 이후 감소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흡연량의 경우 모든 도시에서 ‘하루

한갑 이내'가 가장 높았으며 2005년 이후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표 6-19〉 지역별 흡연을 및 흡연량(가구원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비율	25.6	25.6	26.2	22.3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8.3	40.0	36.1	39.9	
		하루 한갑 이내	52.3	51.2	54.1	48.5	
		하루 두갑 이내	8.3	7.6	8.8	10.4	
		하루 두갑 이상	1.1	1.1	1.0	1.2	
2006	비율	26.0	26.0	26.6	22.9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6.6	38.0	34.7	39.0	
		하루 한갑 이내	52.2	51.0	53.6	51.1	
		하루 두갑 이내	9.5	9.7	9.5	8.8	
		하루 두갑 이상	1.7	1.3	2.3	1.1	
2008	비율	24.5	24.3	25.2	21.4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7.4	39.4	36.1	32.2	
		하루 한갑 이내	51.6	51.0	51.6	55.5	
		하루 두갑 이내	21~30	6.7	5.8	7.6	7.6
			31~40	3.8	3.2	4.3	4.4
하루 두갑 이상		0.5	0.7	0.4	0.3		
2009	비율	24.8	25.0	25.0	22.2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6.3	36.3	36.8	33.4	
		하루 한갑 이내	53.0	53.3	52.3	55.2	
		하루 두갑 이내	21~30	6.5	6.5	6.6	6.3
			31~40	3.8	3.5	4.0	4.2
하루 두갑 이상		0.4	0.3	0.4	1.0		
2010	비율	24.1	24.2	24.2	22.2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7.6	40.9	35.2	31.9	
		하루 한갑 이내	52.8	49.5	55.3	59.0	
		하루 두갑 이내	21~30	6.6	7.3	5.9	6.7
			31~40	2.5	2.2	3.0	2.2
하루 두갑 이상		0.4	0.2	0.7	0.4		
2011	비율	22.7	23.6	22.0	21.5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7.8	41.4	34.8	31.9	
		하루 한갑 이내	53.5	51.4	54.6	60.5	
		하루 두갑 이내	21~30	5.8	4.9	7.1	4.3
			31~40	2.7	2.2	3.4	2.4
하루 두갑 이상		0.2	0.1	0.2	0.9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흡연율임.

2) 3차년도 조사부터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7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지역별 가구원의 흡연율을 살펴보면 중소도시의 흡연율이 가장 높았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대도시에 역전되는 현상을 보인다. 또한 가구주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

남에 따라 흡연율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흡연량의 경우 ‘하루 한갑 이내’가 가장 많았으며 2005년 이후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고 감소하기도 하고 증가하기도 하였다.

〈표 6-20〉 성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주)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05	비율	43.4	51.0	9.3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5.4	33.9	70.2	
		하루 한갑 이내	53.9	55.1	25.2	
		하루 두갑 이내	9.5	9.7	3.6	
		하루 두갑 이상	1.3	1.3	1.0	
2006	비율	42.4	49.7	10.4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3.3	32.1	59.2	
		하루 한갑 이내	54.6	55.5	35.5	
		하루 두갑 이내	10.5	10.7	4.9	
		하루 두갑 이상	1.6	1.7	0.5	
2008	비율	39.9	47.2	9.2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2.5	30.7	71.4	
		하루 한갑 이내	54.8	56.2	23.4	
		하루 두갑 이내	21~30	7.6	7.7	4.4
			31~40	4.6	4.7	0.9
		하루 두갑 이상	0.6	0.6	0.0	
2009	비율	40.0	46.6	8.6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1.4	29.8	71.3	
		하루 한갑 이내	55.7	56.8	26.4	
		하루 두갑 이내	21~30	8.0	8.3	1.8
			31~40	4.5	4.6	0.5
		하루 두갑 이상	0.5	0.5	0.0	
2010	비율	39.5	46.4	7.9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4.0	32.6	70.5	
		하루 한갑 이내	54.8	55.9	26.4	
		하루 두갑 이내	21~30	7.7	7.9	3.1
			31~40	2.9	3.0	0.0
		하루 두갑 이상	0.6	0.6	0.0	
2011	비율	37.1	43.6	8.3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3.4	31.8	69.8	
		하루 한갑 이내	56.0	57.3	26.3	
		하루 두갑 이내	21~30	7.1	7.2	3.9
			31~40	3.3	3.5	0.0
		하루 두갑 이상	0.2	0.3	0.0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흡연율임.

2) 3차년도 조사부터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7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성별 가구주의 흡연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흡연율이 크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여성의 경우 2006년 이후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1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1〉 성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원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05	비율		25.6	51.4	3.0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8.3	36.1	71.2	
		하루 한갑 이내	52.3	54.3	23.1	
		하루 두갑 이내	8.3	8.6	5.2	
		하루 두갑 이상	1.1	1.1	0.5	
2006	비율		26.0	50.1	4.7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6.6	34.4	57.0	
		하루 한갑 이내	52.2	54.1	34.2	
		하루 두갑 이내	9.5	10.2	3.7	
		하루 두갑 이상	1.7	1.4	5.2	
2008	비율		24.5	48.1	3.4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7.4	34.4	74.5	
		하루 한갑 이내	51.6	53.9	22.7	
		하루 두갑 이내	21~30	6.7	7.1	2.3
			31~40	3.8	4.1	0.5
하루 두갑 이상	0.5	0.6	0.0			
2009	비율		24.8	47.2	3.1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6.3	34.0	70.2	
		하루 한갑 이내	53.0	54.7	27.6	
		하루 두갑 이내	21~30	6.5	6.9	1.4
			31~40	3.8	4.0	0.8
하루 두갑 이상	0.4	0.4	0.0			
2010	비율		24.1	46.4	2.6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7.6	36.0	65.8	
		하루 한갑 이내	52.8	54.0	32.0	
		하루 두갑 이내	21~30	6.6	6.9	2.3
			31~40	2.5	2.7	0.0
하루 두갑 이상	0.4	0.5	0.0			
2011	비율		22.7	44.1	2.5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7.8	35.9	67.6	
		하루 한갑 이내	53.5	55.0	29.9	
		하루 두갑 이내	21~30	5.8	6.0	2.5
			31~40	2.7	2.9	0.0
하루 두갑 이상	0.2	0.2	0.0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흡연율임.

2) 3차년도 조사부터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7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흡연량의 경우도 남성의 경우는 하루 한갑 이내가 가장 많았으나 여성의 경우는 하루 반갑 이내로 남성에 비해서 흡연율이나 흡연량 모두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전반적으로는 가구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가구원의 경우는 여성의 흡연율이 2011년도에도 감소한 것이 가구주의 자료와는 차이를 보인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흡연율의 절대차이와 상대차이를 확인해 보면 소득분위집단 간의 경우는 가구주나 가구원 모두에서 차이의 변화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지역집단 간에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성별은 2006년에 큰 폭 감소했다가 다시 차이가 점점 더 커졌다. 하지만 2011년에는 다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22〉 흡연에서의 보건의료지표

(단위: 점, 비율비)

구분	가구주						가구원 전체					
	소득분위집단 간		지역집단 간		성별 간		소득분위집단 간		지역집단 간		성별 간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2005	14.2	1.42	7.5	1.2	41.7	5.48	3.0	1.13	3.9	1.18	48.4	17.26
2006	17.3	1.54	7.3	1.2	39.3	4.77	5.5	1.23	3.6	1.16	45.5	10.78
2008	17.9	1.61	6.6	1.19	38.0	5.14	4.4	1.2	3.8	1.18	44.7	14.19
2009	14.0	1.43	5.8	1.17	38.1	5.45	5.8	1.27	2.8	1.13	44.1	15.37
2010	16.5	1.54	5.0	1.14	38.5	5.87	6.6	1.31	2.0	1.09	43.7	17.63
2011	16.3	1.57	2.4	1.07	35.4	5.28	7.1	1.36	2.1	1.1	41.6	17.37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흡연율임.

2) 3차년도 조사부터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7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 나. 간접흡연

가구주의 간접흡연율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49.5%에서 31.2%로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간접흡연량에서도 ‘하루 1시간 미만’이 높아져서 간접흡연량도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위별로 확인하면 4분위가 가장 높았으며 모든 분위에서 2008년 이후 간접흡연이 감소하였다. 간접흡연량에서도 전체와 동일하게 ‘1시간 미만’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접흡연량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표 6-23〉 소득5분위별 간접흡연율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주)

(단위: %)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8	비율	49.5	33.8	55.3	53.8	57.8	54.6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64.4	69.6	59.6	66.3	61.8	65.5
		하루 1시간 이상	35.6	30.4	40.4	33.7	38.2	34.6
2009	비율	45.6	29.2	50.6	53.8	54.7	46.4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75.2	77.4	72.8	75.0	77.0	74.0
		하루 1시간 이상	24.8	22.6	27.2	25.0	23.0	26.0
2010	비율	38.2	25.4	41.6	43.5	45.3	40.5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82.3	80.7	83.3	81.7	84.2	81.0
		하루 1시간 이상	17.7	19.3	16.7	18.3	15.8	19.0
2011	비율	31.2	20.1	35.6	36.4	36.9	31.5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84.7	84.3	85.7	85.3	85.9	81.6
		하루 1시간 이상	15.3	15.7	14.3	14.7	14.1	18.4

주: 20세 이상 인구 중 간접흡연율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6차년도 원자료

가구원의 경우 간접흡연율 비율이 2008년 이후 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간접흡연량도 가구주와 마찬가지로 ‘하루 1시간 미만’이 높아져 가는 추세를 보였다.

〈표 6-24〉 소득5분위별 간접흡연율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원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8	비율	42.2	33.6	46.6	45.2	43.4	43.2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69.1	70.7	68.1	71.6	65.2	69.9
		하루 1시간 이상	30.9	29.3	31.9	28.4	34.8	30.1
2009	비율	38.6	28.9	40.6	41.7	43.7	38.4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77.2	77.7	74.5	78.3	78.3	77.0
		하루 1시간 이상	22.8	22.3	25.5	21.7	21.7	23.0
2010	비율	29.9	24.2	31.1	31.9	32.0	30.8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82.9	83.0	83.9	81.6	82.7	83.5
		하루 1시간 이상	17.1	17.1	16.1	18.4	17.3	16.6
2011	비율	26.0	19.9	27.5	27.8	28.2	27.0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85.8	83.8	87.0	87.3	85.9	84.6
		하루 1시간 이상	14.2	16.2	13.0	12.7	14.1	15.4

주: 20세 이상 인구 중 간접흡연율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6차년도 원자료



분위별 간접흡연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2분위가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부터는 4분위가 가장 높았다. 4분위의 경우 2009년 간접흡연 비율이 증가 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다시 감소하였고 다른 분위에서는 모두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 가구주의 간접흡연율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중소도시가 가장 높았으나 그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이며 나머지 년도에서는 대도시가 가장 높았다. 간접흡연율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간접흡연량에서도 흡연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의 경우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나 2011년에 중소도시가 간접흡연율이 가장 낮은 점은 가구주의 결과와 차이가 있다.

〈표 6-25〉 지역별 간접흡연율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주)

(단위: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8	비율	49.5	49.7	52.1	35.2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64.4	63.2	63.9	77.4
		하루 1시간 이상	35.6	36.8	36.1	22.6
2009	비율	45.6	49.2	44.8	31.8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75.2	75.4	74.2	80.1
		하루 1시간 이상	24.8	24.6	25.8	20.0
2010	비율	38.2	40.4	38.2	27.1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82.3	81.1	82.8	86.8
		하루 1시간 이상	17.7	18.9	17.2	13.2
2011	비율	31.2	33.8	29.1	29.0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84.7	82.6	85.9	90.8
		하루 1시간 이상	15.3	17.4	14.2	9.2

주: 20세 이상 인구 중 간접흡연율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6차년도 원자료

〈표 6-26〉 지역별 간접흡연율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원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8	비율	42.2	42.6	43.5	32.7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69.1	68.3	68.9	76.8
		하루 1시간 이상	30.9	31.8	31.2	23.2
2009	비율	38.6	41.5	37.1	30.5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77.2	78.1	75.4	82.7
		하루 1시간 이상	22.8	21.9	24.7	17.3
2010	비율	29.9	32.9	28.1	23.4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82.9	82.3	83.2	86.1
		하루 1시간 이상	17.1	17.7	16.8	14.0
2011	비율	26.0	28.2	23.6	26.6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85.8	84.1	86.9	90.6
		하루 1시간 이상	14.2	15.9	13.1	9.5

주: 20세 이상 인구 중 간접흡연율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6차년도 원자료

성별 가구주의 간접흡연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간접흡연량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2009년 이후에 ‘하루 1시간 이상’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적인 추세는 간접흡연율과 간접 흡연량 모두 2008년 이후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6-27〉 성별 간접흡연율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주)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08	비율	49.5	54.8	27.6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64.4	63.7	69.9
		하루 1시간 이상	35.6	36.3	30.1
2009	비율	45.6	50.6	22.8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75.2	75.8	69.1
		하루 1시간 이상	24.8	24.3	30.9
2010	비율	38.2	42.5	19.0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82.3	82.9	76.2
		하루 1시간 이상	17.7	17.1	23.8
2011	비율	31.2	35.6	12.7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84.7	85.3	77.8
		하루 1시간 이상	15.3	14.7	22.2

주: 20세 이상 인구 중 간접흡연율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6차년도 원자료

〈표 6-28〉 성별 간접흡연율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원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08	비율	42.2	55.6	30.5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69.1	64.8	75.8
		하루 1시간 이상	30.9	35.2	24.2
2009	비율	38.6	52.1	25.8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77.2	75.8	79.8
		하루 1시간 이상	22.8	24.2	20.2
2010	비율	29.9	42.9	17.7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82.9	82.8	83.2
		하루 1시간 이상	17.1	17.2	16.8
2011	비율	26.0	37.0	15.9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85.8	85.3	86.8
		하루 1시간 이상	14.2	14.7	13.2

주: 20세 이상 인구 중 간접흡연율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6차년도 원자료

성별 가구원의 간접흡연율을 살펴보면 가구주와 마찬가지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간접흡연량에서는 가구주와는 다르게 남성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적인 추세는 간접흡연율과 간접흡연량 모두 2008년 이후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접흡연율의 절대차이와 상대차이를 확인해 보면 절대차이의 경우는 소득분위집단이나 지역집단, 성별 모두 2011년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차이는 집단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9〉 간접흡연에서의 보건의료지표

(단위: 점, 비율비)

구분	가구주						가구원 전체					
	소득분위집단 간		지역집단 간		성별 간		소득분위집단 간		지역집단 간		성별 간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2008	24.0	1.71	16.9	1.48	27.2	1.99	13.0	1.39	10.7	1.33	25.1	1.82
2009	25.5	1.87	17.4	1.55	27.8	2.22	14.8	1.51	11.0	1.36	26.3	2.02
2010	19.9	1.79	13.4	1.49	23.5	2.24	7.8	1.32	9.5	1.4	25.1	2.42
2011	16.8	1.84	4.8	1.17	22.9	2.8	8.3	1.42	4.7	1.2	21.1	2.33

주: 20세 이상 인구 중 간접흡연율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6차년도 원자료

#### 4. 음주에서의 보건의료지표

가구주의 음주율을 살펴보면 2005년에 67.1%에서 2011년에는 70.6%로 상승한 것을 확인 할 수가 있다. 그 추세를 살펴보면 2007년까지는 음주량이 증가하다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또한 음주횟수를 확인하면 ‘주 1회 이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0부터는 감소하면서 음주횟수가 평균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위별로 확인하면 대체로 소득이 클수록 음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횟수는 모든 분위에서 ‘주 1회 이하’가 가장 많았다.

〈표 6-30〉 소득5분위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가구주)

(단위: %)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비율	67.1	47.0	67.2	72.1	75.0	81.3	
	음주 =100	주 1회 이하	44.8	46.0	44.3	43.8	42.6	47.3
		주 2~3회	35.7	28.4	35.0	37.5	39.2	37.2
		주 4회 이상	19.5	25.6	20.7	18.7	18.2	15.5
2006	비율	70.4	48.0	70.6	76.5	81.6	84.9	
	음주 =100	주 1회 이하	46.0	46.7	47.0	45.0	44.4	47.2
		주 2~3회	34.9	26.7	31.6	35.1	40.7	38.3
		주 4회 이상	19.1	26.5	21.5	19.9	14.9	14.5
2007	비율	74.0	52.7	74.2	80.1	85.2	88.0	
	음주 =100	주 1회 이하	47.3	48.3	47.9	45.3	45.2	49.7
		주 2~3회	34.3	27.4	32.1	37.0	37.9	36.5
		주 4회 이상	18.4	24.3	20.0	17.7	16.9	13.8
2009	비율	71.9	51.3	69.8	77.7	83.1	85.7	
	음주 =100	주 1회 이하	54.6	56.0	52.9	53.4	53.5	57.2
		주 2~3회	29.4	24.2	27.5	30.2	34.6	29.6
		주 4회 이상	16.0	19.8	19.7	16.4	11.9	13.2
2010	비율	72.1	52.9	71.8	80.0	79.3	84.2	
	음주 =100	주 1회 이하	50.5	53.4	49.9	48.9	46.3	53.9
		주 2~3회	30.8	23.9	26.7	34.5	37.1	31.1
		주 4회 이상	18.7	22.7	23.3	16.6	16.6	15.1
2011	비율	70.6	49.1	70.9	78.4	78.4	85.0	
	음주 =100	주 1회 이하	49.6	48.6	48.2	48.9	52.2	49.7
		주 2~3회	32.5	27.8	31.7	35.2	30.4	36.3
		주 4회 이상	18.0	23.6	20.1	15.9	17.4	14.0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음주율임.

2) 4차년도 조사부터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8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가구원의 음주율을 살펴보면 2005년에 53.0%에서 2011년에는 60.0%로 상승하였으며, 그 추세를 살펴보면 2007년까지는 음주량이 증가하다가 2009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횟수를 확인하면 ‘주 1회 이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0년부터는 감소하였다. 분위별로 확인하면 대체로 소득이 높은 가구가 음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횟수는 ‘주 4회 이상’의 비율이 분위가 올라갈수록 낮아져 소득이 낮은 가구의 음주횟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1〉 소득5분위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가구원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비율	53.0	39.2	51.6	56.6	59.0	59.5	
	음주 =100	주 1회 이하	57.8	55.4	56.8	57.2	59.0	59.6
		주 2~3회	28.9	25.1	28.5	30.0	29.9	29.9
		주 4회 이상	13.3	19.5	14.7	12.8	11.2	10.6
2006	비율	60.2	42.8	59.1	65.4	67.5	67.4	
	음주 =100	주 1회 이하	59.9	56.4	60.2	60.3	60.2	61.1
		주 2~3회	27.6	23.7	26.0	27.0	30.2	29.5
		주 4회 이상	12.5	19.9	13.8	12.8	9.6	9.4
2007	비율	65.9	48.8	63.4	70.6	74.1	73.9	
	음주 =100	주 1회 이하	61.8	59.5	61.6	60.6	61.0	65.6
		주 2~3회	26.5	23.2	25.2	28.3	28.7	26.0
		주 4회 이상	11.7	17.4	13.3	11.0	10.4	8.5
2009	비율	63.8	46.7	61.9	68.6	69.7	72.3	
	음주 =100	주 1회 이하	68.0	66.3	65.3	69.8	67.1	70.4
		주 2~3회	22.0	19.1	22.5	20.8	25.3	21.3
		주 4회 이상	10.1	14.6	12.2	9.4	7.7	8.3
2010	비율	61.5	45.7	60.0	67.6	67.2	67.2	
	음주 =100	주 1회 이하	62.9	60.7	63.4	62.3	60.9	66.3
		주 2~3회	24.9	21.8	21.0	27.5	28.4	24.6
		주 4회 이상	12.2	17.5	15.6	10.2	10.7	9.2
2011	비율	60.0	43.1	60.0	64.9	66.7	66.0	
	음주 =100	주 1회 이하	62.2	57.9	61.8	62.5	65.0	62.3
		주 2~3회	25.8	23.2	25.1	27.0	24.9	28.1
		주 4회 이상	11.9	18.9	13.1	10.6	10.1	9.5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음주율임.

2) 4차년도 조사부터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8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지역별 가구주의 음주율을 살펴보면 2005년과 비교해서 2011년에는 모든 지역에서 음주율이 상승하였으며 지역별로 2007년까지는 중소도시의 음주율이 가장 높았으나 2009년 이후는 대도시의 음주율이 가장 높았다. 음주횟수의 경우는 ‘주 1회 이하’의 비중이 대체적으로 모든도시에서 2009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0에 모든 도시에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2011년에도 농어촌을 제외한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도시지역의 음주량이 많아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6-32〉 지역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가구주)

(단위: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비율	67.1	64.5	70.2	59.9	
	음주 =100	주 1회 이하	44.8	48.3	43.1	33.0
		주 2~3회	35.7	35.7	35.2	39.1
		주 4회 이상	19.5	16.0	21.7	27.9
2006	비율	70.4	70.7	71.6	62.3	
	음주 =100	주 1회 이하	46.0	48.3	45.2	36.9
		주 2~3회	34.9	35.1	34.4	36.1
		주 4회 이상	19.1	16.7	20.4	27.0
2007	비율	74.0	74.2	75.3	65.7	
	음주 =100	주 1회 이하	47.3	48.4	47.1	41.2
		주 2~3회	34.3	35.3	33.8	31.2
		주 4회 이상	18.4	16.3	19.1	27.6
2009	비율	71.9	72.9	72.3	64.4	
	음주 =100	주 1회 이하	54.6	56.3	53.9	49.2
		주 2~3회	29.4	29.1	29.9	27.7
		주 4회 이상	16.0	14.6	16.2	23.1
2010	비율	72.1	73.3	72.3	65.1	
	음주 =100	주 1회 이하	50.5	50.7	50.8	47.9
		주 2~3회	30.8	31.6	30.2	29.8
		주 4회 이상	18.7	17.8	19.0	22.4
2011	비율	70.6	71.7	71.2	61.8	
	음주 =100	주 1회 이하	49.6	50.7	48.5	49.6
		주 2~3회	32.5	32.3	33.2	29.2
		주 4회 이상	18.0	17.1	18.3	21.3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음주율임.

2) 4차년도 조사부터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8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지역별 가구원의 음주율을 살펴보면 2005년과 비교해서 2011년에는 모든 도시에서 음주율이 상승하였으며 2005년을 제외하고는 대도시의 음주율이 가장 높았다. 모든 도시의 음주율이 2007년까지는 상승하다가 2009년부터는 감소하였으며 음주횟수의 경우는 ‘주 1회 이하’의 비중이 모든 도시에서 2009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0에 모든 도시에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2011년에도 대도시, 중소도시에서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도시지역의 음주량이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33〉 지역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가구원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비율	53.0	52.0	55.1	46.9	
	음주 =100	주 1회 이하	57.8	60.7	56.3	47.5
		주 2~3회	28.9	28.2	29.1	32.4
		주 4회 이상	13.3	11.2	14.6	20.1
2006	비율	60.2	61.2	60.6	51.7	
	음주 =100	주 1회 이하	59.9	61.7	58.9	52.6
		주 2~3회	27.6	27.1	27.9	29.4
		주 4회 이상	12.5	11.2	13.2	18.1
2007	비율	65.9	66.7	66.7	57.2	
	음주 =100	주 1회 이하	61.8	62.7	61.7	57.2
		주 2~3회	26.5	27.0	26.1	24.7
		주 4회 이상	11.7	10.3	12.2	18.1
2009	비율	63.8	65.1	64.0	55.0	
	음주 =100	주 1회 이하	68.0	68.8	67.8	64.0
		주 2~3회	22.0	22.2	22.0	20.1
		주 4회 이상	10.1	9.0	10.3	15.9
2010	비율	61.5	63.0	61.8	51.3	
	음주 =100	주 1회 이하	62.9	63.8	62.6	57.6
		주 2~3회	24.9	24.7	25.2	25.1
		주 4회 이상	12.2	11.5	12.2	17.3
2011	비율	60.0	61.9	59.8	51.2	
	음주 =100	주 1회 이하	62.2	63.8	61.0	59.4
		주 2~3회	25.8	25.3	26.6	24.8
		주 4회 이상	11.9	10.9	12.4	15.8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음주율임.

2) 4차년도 조사부터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8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성별 가구주의 음주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남녀모두 2007년 까지는 음주율이 증가하다가 2009년 이후로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다. 음주횟수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2005년에 비해서 ‘주 1회 이하’가 늘어나 횟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적인 추세를 보면 남성의 경우는 2009년까지 ‘주 1회 이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0년에는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여성의 경우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또한, 남성이 ‘주 2~3회’ 또는 ‘주 4회 이상’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 남성의 음주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34〉 성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가구주)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05	비율	67.1	74.5	33.9	
	음주 =100	주 1회 이하	44.8	42.2	70.8
		주 2~3회	35.7	37.0	22.7
		주 4회 이상	19.5	20.8	6.5
2006	비율	70.4	77.6	39.1	
	음주 =100	주 1회 이하	46.0	42.5	76.3
		주 2~3회	34.9	36.8	18.5
		주 4회 이상	19.1	20.7	5.2
2007	비율	74.0	81.6	41.9	
	음주 =100	주 1회 이하	47.3	43.9	75.2
		주 2~3회	34.3	36.3	18.7
		주 4회 이상	18.4	19.9	6.1
2009	비율	71.9	78.3	41.6	
	음주 =100	주 1회 이하	54.6	51.7	80.8
		주 2~3회	29.4	31.0	15.0
		주 4회 이상	16.0	17.3	4.2
2010	비율	72.1	78.6	42.2	
	음주 =100	주 1회 이하	50.5	47.1	79.2
		주 2~3회	30.8	32.5	16.6
		주 4회 이상	18.7	20.4	4.2
2011	비율	70.6	77.5	40.2	
	음주 =100	주 1회 이하	49.6	46.0	79.5
		주 2~3회	34.5	34.3	16.8
		주 4회 이상	18.0	19.7	3.8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음주율임.

2) 4차년도 조사부터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8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성별 가구원의 음주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2005년에 비해서 남녀모두 음주율이 증가하였다. 시간적인 추세를 보면 남녀모두 2007년까지는 음주율이 증가하다가 2009년 이후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음주횟수를 살펴보면 남성은 2005년 보다 ‘주 1회 이하’가 증가하였으나 여성은 감소하여 횟수가 더 빈번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적인 추세를 보면 남성의 경우는 2009년까지는 ‘주 1회 이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나 2010년에는 감소하였고 여성의 경우는 상승과 하락이 혼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5〉 성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가구원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05	비율	53.0	74.4	34.2	
	음주 =100	주 1회 이하	57.8	44.8	82.7
		주 2~3회	28.9	36.4	14.6
		주 4회 이상	13.3	18.9	2.7
2006	비율	60.2	77.7	44.7	
	음주 =100	주 1회 이하	59.9	45.8	81.6
		주 2~3회	27.6	35.5	15.4
		주 4회 이상	12.5	18.7	3.0
2007	비율	65.9	81.9	51.7	
	음주 =100	주 1회 이하	61.8	46.6	83.3
		주 2~3회	26.5	35.4	13.9
		주 4회 이상	11.7	18.0	2.8
2009	비율	63.8	79.0	49.1	
	음주 =100	주 1회 이하	68.0	56.3	86.1
		주 2~3회	22.0	28.9	11.2
		주 4회 이상	10.1	14.8	2.7
2010	비율	61.5	78.1	45.5	
	음주 =100	주 1회 이하	62.9	51.2	82.1
		주 2~3회	24.9	31.3	14.6
		주 4회 이상	12.2	17.6	3.3
2011	비율	60.0	76.9	44.2	
	음주 =100	주 1회 이하	62.2	50.2	82.0
		주 2~3회	25.8	32.7	14.6
		주 4회 이상	11.9	17.2	3.4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음주율임.

2) 4차년도 조사부터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8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음주율의 절대차이와 상대차이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가구주는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1년에는 다시 차이가 늘어났고 가구원은 모두 차이의 변화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6〉 음주에서의 보건의료지표

(단위: 점, 비율비)

구분	가구주						가구원 전체					
	소득분위집단 간		지역집단 간		성별 간		소득분위집단 간		지역집단 간		성별 간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2005	34.3	1.73	10.3	1.17	40.6	2.2	20.3	1.52	8.3	1.18	40.2	2.17
2006	36.9	1.77	9.4	1.15	38.5	1.98	24.7	1.58	9.5	1.18	33.0	1.74
2007	35.3	1.67	9.6	1.15	39.7	1.95	25.9	1.53	9.5	1.17	30.3	1.59
2009	34.4	1.67	8.5	1.13	36.7	1.88	25.6	1.55	10.1	1.18	29.9	1.61
2010	31.3	1.59	8.2	1.13	36.4	1.86	21.9	1.48	11.7	1.23	32.6	1.72
2011	35.9	1.73	9.9	1.16	37.3	1.93	23.6	1.55	10.7	1.21	32.8	1.74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음주율임.

2) 4차년도 조사부터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8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지역별·계층별·점유형태별 보건의료지표들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전체적으로 2005년에 비하여 좋아졌다. 소득이 낮은 집단의 건강상태가 예전에 비해 좋아졌으며, 소득이 높은 집단은 반대로 건강상태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소득이 낮은 집단의 건강상태가 소득이 높은 집단에 비하여 낮은 상태는 유지가 되었다.

우울의 경우는 모든 집단에서 2005년에 비하여 우울지수가 낮아져 우울상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소득이 낮은 집단의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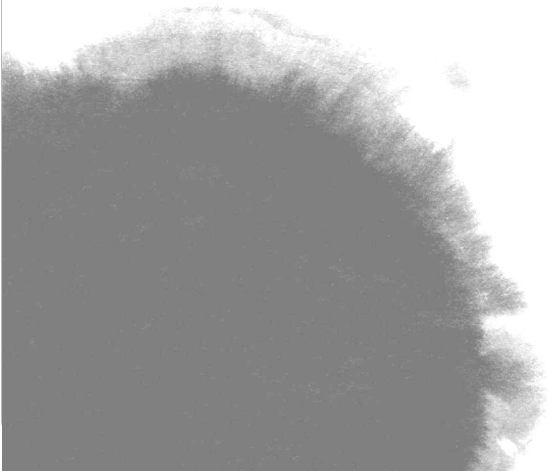
울지수가 소득이 높은 집단에 비하여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어 건강상태나 우울 모두 소득이 낮을수록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우울이나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이들의 소득과 같은 생활환경까지 바꿀 수 있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흡연, 간접흡연의 경우 전체적으로 흡연을 하는 비율이 2005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으며, 집단들 사이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음주율의 경우 2005년에 비하여 모든 집단이 음주비율이 줄었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음주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울, 건강상태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흡연율, 간접흡연율, 음주율이 저소득층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보편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7장

## 노동





## 제7장 노동

본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차~6차 원자료를 활용하여 노동관련 지표를 산출하고자 한다<sup>33)</sup>. 노동지표를 거시 고용지표, 가구 및 개인 고용지표, 노동 및 근로생활의 질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먼저, 거시 고용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을 살펴보고, 가구 및 개인 고용지표는 가구내 취업지수, 연간 취업경험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 및 근로생활의 질은 종사상 지위 비율, 일의 불규칙성, 유해환경 근로비율을 알아본다. 세부적으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도별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고, 소득분위별, 지역별, 성별, 학력별, 연령에 따른 지표의 변화를 가구주<sup>34)</sup>와 가구주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표 7-1〉 노동지표의 구성

분류	지표 구성
거시 고용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가구 및 개인 고용지표	가구내 취업지수 연간 취업경험률
노동 및 근로생활의 질	종사상 지위 비율 일의 불규칙성 유해환경 근로비율

33) 노동지표의 구성은 노동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고에서는 자료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 일부 지표만을 다루고자 한다.

34) 한국복지패널에서는 가구주의 개념을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 실상 생계를 책임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는 자로서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 제1절 노동지표 산출 방식

노동지표는 경제활동참가률, 실업률 및 고용률, 가구내 취업자수, 연간 취업경험률, 종사상 지위, 일의 불규칙성, 유해환경 근로비율을 산출하고자 한다. 각 지표별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및 고용률

거시 노동관련 지표로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가사, 학업 등의 사유로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비경제활동인구<sup>35)</sup>를 제외한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한편,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직활동<sup>36)</sup>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의 생산가능 인구<sup>37)</sup> 중 취업자수의 비중을 나타낸다. 세부적으로는 소득분위별, 지역별, 성별, 학력별, 연령에 따른 지표의 변화를 가구주와 가구주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으로 구분하여 연도별 지표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text{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15세 이상인구}} \times 100 (\%)$$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 수}}{\text{15세 이상인구}} \times 100 (\%)$$

35) 비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와 주된 활동 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집에서 통근하는 군 복무자(공익근무요원 등)를 의미한다.

36) 구직활동 기간 설정을 정의하는 것에 따라 실업률이 달라질 수 있다. 구직활동 기간의 정의를 ILO에서는 1주일, OECD에서는 4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37) 생산가능 인구의 연령을 통계청에서는 만 15세 이상 인구로, OECD에서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한국복지패널에서는 통계청에 기준에 준하여 만 15세 이상의 인구로 정의한다.



## 2. 가구내 취업자수

다음으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별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구내 취업자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인별 취업상태를 파악하여 가구별로 합산하여 가구내 취업자수를 산출하고, 2005년부터 2010년의 가구내 취업자수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2010년의 소득분위와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다. 한편, 소득분위가 낮은 가구의 경우 가구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 또는 단순근로미약자인 경우가 많아 가구내 취업자수가 과소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구원 전체와 근로무능력 가구원을 제외한 근로능력 가구원<sup>38)</sup>만을 산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가구내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가구 취업자수를 산출하고자 한다. 이는 가구내 15세 이상 근로가능자(근로가능자+단순근로가능자)<sup>39)</sup> 중 가구내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0에서 1의 값을 갖는다. 근로무능력 가구원을 제외하였으므로 분모는 1명 이상의 값을 가지며 분자는 0명 이상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0일 경우는 가구내 근로능력자가 1명 이상이나 취업자수는 0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1일 경우는 가구내 근로능력 가능한 사람이 모두 취업한 경우를 의미한다. 가구취업자수를 소득분위와 지역별로 구분하여 평균값을 살펴보고자 한다.

$$\text{가구 취업자수} = \frac{\text{가구내 취업자수}}{\text{가구내 15세 이상 근로능력자수}}$$

38) 근로능력가구는 가구원 중에서 1명이라도 근로능력 가능자가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39) 가구내 가구원의 근로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근로능력상태 변수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개인의 심신능력상 근로능력정도를 ① 근로가능 ② 단순근로 가능(집안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 ③ 단순근로미약자(집안 일반 가능) ④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집안일도 불가능)으로 구분된다. 본 지표에서 근로가능자는 ① 근로가능자와 ② 단순근로가능자를 포함한다.

### 3. 연간 취업경험률

연간 취업경험률은 미취업자를 포함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연간 경제활동 참여 경험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다. 이를 위해 가구용 조사표의 소득 조사에서 경제활동 해당여부 변수를 활용하였다. 경제활동 해당여부 변수의 한 항목 이상에서 응답 하였으면 연간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였다. 단,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비경제활동 인구와 함께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경제활동 소득변수를 통해 취업경험 인구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할 경우 연간 취업경험 인구의 과소추정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제활동 상태가 무급가족종사자일 경우에 연간 취업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가구주와 가구원 전체를 분석함에 있어서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취업경험률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지표를 산출하였다.

$$\text{연간 취업경험률} = \frac{\text{연간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text{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times 100 (\%)$$

### 4. 종사상 지위

종사상 지위(또는 고용 지위)는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노동의 질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경제활동상태 영역에 대한 조사가 있어 중·고생이 아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에게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조사한다. 조사대상자는 임금근로자(상용직·임시직·일용직·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응답하게 된다. 미취업자를 제외한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의 비중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변화<sup>40)</sup>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2010년의 경우 종사상 지위 비중을 소득분위별,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았다. 종사상 지위 비중 역시 가구주와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경우를 모두 살펴보았다.

## 5. 일의 불규칙성

근로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는 일의 불규칙성 비율은 12월 31일 기준 취업자 중에서 일을 불규칙적으로 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모든 취업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묻는 문항에서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또는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두 문항 중 하나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text{일의 불규칙성 비율} = \frac{\text{불규칙적으로 일한 사람}}{\text{근로경험이 있는 사람}} \times 100 (\%)$$

## 6. 유해환경 근로비율

유해환경 근로 비율은 지난 1년간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안전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작업장 오염 등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text{유해환경근로비율} = \frac{\text{유해환경에서 일한 경험 있는 사람}}{\text{근로경험이 있는 사람}} \times 100 (\%)$$

40) 경제활동 참여상태의 경우 2005년 데이터에서 임시직 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 초기 데이터 구축에 있어서 불안정성으로 간주해 이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 제2절 노동지표 산출 결과와 추이

본 절에서는 주요 기준변수인 소득 및 지역, 성별, 학력, 연령 등에 따라 지표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와 가구주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 1.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및 고용률<sup>41)</sup>

〈표 7-2〉 가구주의 소득분위별 경제활동지표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경제활동 참가율	2005	79.2	51.0	81.5	87.6	91.9	94.4
	2006	78.0	49.1	81.6	88.4	91.5	92.5
	2007	76.8	47.4	80.0	87.6	90.4	92.7
	2008	79.0	48.6	83.0	88.9	92.0	94.9
	2009	78.7	49.1	81.5	90.5	90.7	94.1
	2010	79.2	49.9	81.4	90.2	93.4	93.8
실업률	2005	4.5	12.8	5.5	2.9	2.3	1.0
	2006	4.4	14.7	4.8	2.3	1.4	0.9
	2007	3.6	10.8	4.7	1.7	1.7	1.0
	2008	3.1	9.8	4.2	1.9	0.8	0.6
	2009	1.2	4.0	1.4	0.6	0.4	0.3
	2010	1.7	4.3	1.9	1.0	0.9	1.1
고용률	2005	75.6	44.5	77.1	85.1	89.7	93.4
	2006	74.6	41.9	77.6	86.4	90.2	91.7
	2007	74.0	42.3	76.2	86.1	88.9	91.8
	2008	76.5	43.8	79.5	87.2	91.3	94.3
	2009	77.7	47.2	80.4	90.0	90.3	93.8
	2010	77.9	47.8	79.9	89.3	92.5	92.8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41) 한국복지패널의 경제활동 참여상태에 대한 기준시점은 전년도 12월 31일이다. 따라서 1차 조사 시 통계청의 지표보다 높은 실업률 수치를 보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2차 조사부터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일용직 임금근로자, 농업종사자 등을 미취업자로 파악되었던 것을 취업인구로 파악하여 조사하였다. 3차 조사에서는 이와 함께 '소득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아르바이트 포함)을 한 경우 비경제활동 인구가 아닌 취업인구'로 파악하여 조사하였다. 4차 조사부터는 일용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12월 중 하루라도 일을 한 경우에만 취업자로 간주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79.2%에서 2010년에는 79.2%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소득분위별로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0년 소득 1분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9%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낸 반면, 소득 5분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3.8%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실업률은 2005년 이래로 점차 감소추세였으나 2010년에는 1.7%로 2009년의 1.2%보다 증가하였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77.9%를 나타냈으며, 분위별로는 경제활동참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와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7-2 참조).

가구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가구원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57.4%에서 2010년 61.4%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분위별로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7-3〉 가구원 전체의 소득분위별 경제활동지표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경제활동 참가율	2005	57.4	43.6	56.4	57.8	63.8	66.6
	2006	57.1	42.1	57.0	60.2	63.2	63.9
	2007	58.4	42.2	56.8	62.8	65.4	65.9
	2008	60.6	41.5	60.4	64.7	67.8	68.9
	2009	60.8	42.9	59.5	65.3	68.0	68.8
	2010	61.4	42.2	60.2	65.7	70.6	68.7
실업률	2005	8.1	16.9	11.1	7.6	5.2	2.8
	2006	6.7	15.6	9.1	5.5	4.5	1.7
	2007	5.6	13.1	8.1	4.7	3.2	1.8
	2008	5.2	12.3	6.6	4.2	2.7	2.9
	2009	2.4	5.0	2.7	1.8	2.4	1.1
	2010	2.1	5.3	2.5	1.5	1.4	0.8
고용률	2005	52.8	36.2	50.1	53.4	60.4	64.7
	2006	53.3	35.5	51.8	56.9	60.4	62.8
	2007	55.1	36.7	52.2	59.8	63.3	64.7
	2008	57.5	36.5	56.4	62.1	66.0	66.8
	2009	59.4	40.8	57.9	64.2	66.3	68.0
	2010	60.1	39.9	58.7	64.8	69.6	68.2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가구원 전체의 실업률은 2005년 이래로 꾸준히 감소하였고, 특히 2008년 5.2%에서 2009년 2.4%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 4분위의 실업률은 소득 3분위와 소득 5분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이전년도와는 다른 추이를 보였다. 가구원 전체의 고용률은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60.1%를 나타냈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고용률도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고용률도 낮았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경제활동지표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대도시에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2010년까지는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중소도시, 농어촌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감소하다가 이후부터는 증가하여 2010년에는 각각 81.5%, 76.7%로 분석되었다. 한편, 실업률은 2009년까지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중소도시가 2010년 8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도시, 농어촌 순으로 나타났다.

〈표 7-4〉 가구주의 지역별 경제활동지표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경제활동 참가율	2005	79.2	76.9	82.0	76.2
	2006	78.0	75.8	80.9	75.0
	2007	76.8	75.3	78.9	73.8
	2008	79.0	78.6	80.2	74.4
	2009	78.7	76.9	81.2	75.0
	2010	79.2	77.5	81.5	76.7
실업률	2005	4.5	5.8	3.6	2.1
	2006	4.4	5.3	3.8	2.3
	2007	3.6	5.2	2.5	1.3
	2008	3.1	3.9	2.7	1.1
	2009	1.2	1.5	1.1	0.6
	2010	1.7	2.4	1.4	0.0
고용률	2005	75.6	72.5	79.1	74.6
	2006	74.6	71.8	77.9	73.2
	2007	74.0	71.4	76.9	72.9
	2008	76.5	75.5	78.1	73.6
	2009	77.7	75.8	80.3	74.6
	2010	77.9	75.6	80.4	76.7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는 가구원 전체의 지역별 경제활동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가구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0년 기준 62.2%로 가장 높았다. 실업률도 또한 2010년 기준 중소도시가 가장 높았고, 농어촌이 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구원 전체의 고용률은 가구원 전체 경제활동참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2005년 이래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농어촌의 고용률이 가장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중소도시의 고용률이 농어촌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7-5〉 가구원 전체의 지역별 경제활동지표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경제활동 참가율	2005	57.4	55.9	58.6	60.9
	2006	57.1	55.2	58.5	60.7
	2007	58.4	56.6	59.9	61.2
	2008	60.6	60.4	60.9	60.2
	2009	60.8	60.3	61.4	60.4
	2010	61.4	60.5	62.2	61.3
실업률	2005	8.1	9.8	7.2	3.4
	2006	6.7	7.6	6.4	3.0
	2007	5.6	6.9	5.0	2.1
	2008	5.2	5.9	5.0	1.8
	2009	2.4	2.4	2.5	1.2
	2010	2.1	2.9	1.5	0.5
고용률	2005	52.8	50.4	54.3	58.8
	2006	53.3	51.0	54.7	58.9
	2007	55.1	52.7	56.9	59.9
	2008	57.5	56.9	57.8	59.1
	2009	59.4	58.9	59.8	59.7
	2010	60.1	58.8	61.3	61.0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가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남성 가구가 여성 가구주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7-6〉 가구주의 성별 경제활동지표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2005	79.2	84.4	55.3
	2006	78.0	84.0	52.2
	2007	76.8	82.1	50.1
	2008	79.0	84.1	54.8
	2009	78.7	83.7	55.5
	2010	79.2	85.0	54.0
실업률	2005	4.5	4.0	7.7
	2006	4.4	3.9	7.4
	2007	3.6	3.5	4.9
	2008	3.1	2.8	5.1
	2009	1.2	1.1	1.9
	2010	1.7	1.7	1.6
고용률	2005	75.6	81.0	51.0
	2006	74.6	80.7	48.4
	2007	74.0	80.2	47.7
	2008	76.5	81.7	52.1
	2009	77.7	82.8	54.5
	2010	77.9	83.5	53.1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구체적으로 남성 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80%를 상회한 반면, 여성 가구주는 약 55%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한편, 2010년 실업률은 남성 가구주와 여성 가구주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 여성 가구주의 실업률은 7.7%에서 2010년 1.6%로 남성 가구주보다는 여성 가구주의 실업률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7-6 참조)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경제활동지표를 성별로 살펴보면, 2010년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2.7%,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5%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한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한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실업률은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의 감소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와 비슷하게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큰 변화가 있었다. 즉, 2010년 여성의 실업률은 1.2%로 2005년 10.1%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도별 변화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7〉 가구원 전체의 성별 경제활동지표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2005	57.4	73.5	43.2
	2006	57.1	72.1	43.6
	2007	58.4	72.4	45.7
	2008	60.6	73.1	48.4
	2009	60.8	72.4	49.4
	2010	61.4	72.7	50.5
실업률	2005	8.1	6.8	10.1
	2006	6.7	5.6	8.3
	2007	5.6	5.1	6.4
	2008	5.2	5.2	5.1
	2009	2.4	2.5	2.2
	2010	2.1	2.7	1.2
고용률	2005	52.8	68.5	38.8
	2006	53.3	68.1	39.9
	2007	55.1	68.7	42.8
	2008	57.5	69.3	45.9
	2009	59.4	70.6	48.4
	2010	60.1	70.7	50.0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표 7-8〉 가구주의 학력별 경제활동지표

(단위: %)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2005	79.2	58.9	86.2	94.3	90.0
	2006	78.0	57.0	86.3	95.0	88.9
	2007	76.8	55.1	85.9	93.1	88.2
	2008	79.0	56.8	86.2	93.8	89.3
	2009	78.7	56.9	85.2	92.6	88.8
	2010	79.2	56.3	86.1	94.8	88.9
실업률	2005	4.5	6.6	4.9	3.9	2.5
	2006	4.4	6.2	4.1	4.3	3.2
	2007	3.6	4.7	4.1	2.3	2.6
	2008	3.1	3.4	3.1	2.6	3.1
	2009	1.2	1.7	0.9	1.7	1.2
	2010	1.7	0.4	2.5	1.3	1.8
고용률	2005	75.6	55.1	81.9	90.6	87.7
	2006	74.6	53.4	82.8	91.0	86.0
	2007	74.0	52.5	82.3	90.9	86.0
	2008	76.5	54.9	83.5	91.4	86.6
	2009	77.7	56.0	84.4	91.1	87.8
	2010	77.9	56.0	84.0	93.6	87.3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은 가구주의 학력별로 차이를 보였다. 먼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전문대 졸업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이하 졸업한 가구주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실업률은 2005년에는 대학교 이상 졸업한 가구주의 실업률이 가장 낮았으나 2010년에는 중졸 이하 가구주의 실업률이 0.4%로 가장 낮았다.

가구원 전체의 학력별 경제활동지표는 가구주의 학력별 경제활동지표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즉,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전문대학 졸업자가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이하 졸업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실업률은 전문대학 졸업자가 2010년 2.9%로 가장 높은 반면 중학교 이하 졸업자는 2010년 0.5%로 가장 낮았다(표 7-9 참조)

〈표 7-9〉 가구원 전체의 학력별 경제활동지표

(단위: %)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2005	57.4	44.4	58.8	70.8	65.6
	2006	57.1	45.7	58.6	70.7	64.2
	2007	58.4	44.5	60.0	71.0	68.4
	2008	60.6	46.9	60.0	73.5	69.0
	2009	60.8	46.8	59.5	73.8	69.6
	2010	61.4	46.3	61.4	75.4	68.2
실업률	2005	8.1	7.7	9.0	9.1	6.9
	2006	6.7	6.6	7.1	9.6	5.1
	2007	5.6	4.4	6.6	7.2	4.8
	2008	5.2	3.4	5.3	7.2	5.2
	2009	2.4	1.3	1.7	4.0	3.1
	2010	2.1	0.5	2.7	2.9	1.9
고용률	2005	52.8	41.9	53.5	64.4	61.1
	2006	53.3	42.7	54.5	63.9	60.9
	2007	55.1	42.6	56.0	65.9	65.1
	2008	57.5	45.3	56.8	68.2	65.4
	2009	59.4	46.1	58.5	70.9	67.4
	2010	60.1	46.1	59.8	73.2	66.9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높게 나타났고 실업률은 55~64세인 고령층의 가구주가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15~29세인 청년층 가구주와 30~54세인 중장년층의 가구주는 대부분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65세 이상인 초고령층인 가구주는 2010년 34.0%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30~54세, 55~64세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인 초고령층은 2005년 8.0%에서 2010년 1.0%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가구주의 고용률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비슷하게 나타났다(표 7-10 참조)

〈표 7-10〉 가구주의 연령별 경제활동지표

		(단위: %)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2005	79.2	95.8	95.0	68.3	33.6
	2006	78.0	95.2	95.1	68.8	33.9
	2007	76.8	95.1	94.7	69.9	35.2
	2008	79.0	93.7	93.2	69.2	35.8
	2009	78.7	94.9	92.9	72.3	33.8
	2010	79.2	92.7	94.5	74.9	34.0
실업률	2005	4.5	2.4	3.4	9.5	8.0
	2006	4.4	3.3	3.7	6.1	7.9
	2007	3.6	2.7	2.9	6.8	5.2
	2008	3.1	1.6	3.2	3.5	2.8
	2009	1.2	0.9	1.0	2.2	1.9
	2010	1.7	0.3	1.4	4.0	1.0
고용률	2005	75.6	93.6	91.8	61.8	30.9
	2006	74.6	92.1	91.7	64.6	31.2
	2007	74.0	92.5	92.0	65.2	33.4
	2008	76.5	92.2	90.3	66.7	34.8
	2009	77.7	94.0	92.0	70.7	33.2
	2010	77.9	92.4	93.2	71.9	33.6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가구원 전체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30~54세인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인 초고령층이 가장 낮았다. 가구원 전체 실업률은 15~29세인 청년층이 가장 높았으며 65세 이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30~54세인 중장년층에서 2010년 77.7%로 고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5~64세인 고령층이 59.6%, 15~29세인 청년층이 42.1%, 65세 이상인 초고령층이 29.2% 순으로 나타났다.

〈표 7-11〉 가구원 전체의 연령별 경제활동지표

(단위: %)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2005	57.4	42.1	74.7	52.7	26.3
	2006	57.1	37.8	76.0	55.1	27.4
	2007	58.4	41.6	77.5	55.6	29.1
	2008	60.6	46.4	76.9	57.7	29.5
	2009	60.8	46.0	77.1	59.4	29.1
	2010	61.4	43.6	79.0	61.4	29.4
실업률	2005	8.1	14.9	6.2	9.9	7.6
	2006	6.7	11.1	5.7	6.7	6.5
	2007	5.6	9.5	4.9	5.5	4.4
	2008	5.2	9.9	4.2	3.7	2.3
	2009	2.4	5.6	1.6	1.8	1.5
	2010	2.1	3.4	1.7	2.9	0.7
고용률	2005	52.8	35.8	70.1	47.5	24.3
	2006	53.3	33.6	71.6	51.4	25.7
	2007	55.1	37.6	73.7	52.6	27.8
	2008	57.5	41.8	73.7	55.6	28.9
	2009	59.4	43.5	75.9	58.4	28.7
	2010	60.1	42.1	77.7	59.6	29.2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 2. 가구 취업 지표

### 가. 가구내 취업자수 추이

본 절에서는 가구내 취업자수의 비중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구내 취업자수가 1명인 가구는 2005년 47.5%에서 2010년 40.6%로 감소한 반면, 2명 가구원은 2005년 29.2%에서 31.4%로 증가하였다. 3인과 4인 가구원도 2005년에 비해 2010년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무능력 가구원을 제외한 가구내 취업자수 비중은 가구원 전체 연도별 추이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원만 취업한 경우는 2005년 51.5%에서 2010년 42.6%로 감소하였으나, 2인 가구원이 취업한 경우는 2005년 31.7%에서 2010년 33.0%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의 근로무능력 가구원을 제외한 가구내 취업자수가 3명 또는 4명인 경우도 2005년 이래로 증가하였다.

〈표 7-12〉 가구내 취업자수 비중의 연도별 추이

(단위: %)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전체
전체	2005	18.7	47.5	29.2	3.6	0.91	0.07	0.05	100.0
	2006	19.2	45.1	30.4	4.2	0.97	0.14	0.02	100.0
	2007	18.9	42.1	32.1	5.6	1.14	0.15	0.00	100.0
	2008	19.2	41.1	32.5	5.8	1.34	0.10	0.00	100.0
	2009	17.0	41.9	32.0	7.4	1.68	0.04	0.03	100.0
	2010	19.3	40.6	31.4	6.8	1.79	0.04	0.00	100.0
근로무능력 가구원 제외	2005	11.7	51.5	31.7	4.0	0.99	0.08	0.05	100.0
	2006	13.6	48.2	32.5	4.5	1.04	0.15	0.03	100.0
	2007	13.4	44.9	34.3	6.0	1.22	0.16	0.00	100.0
	2008	13.9	43.8	34.6	6.2	1.43	0.10	0.00	100.0
	2009	13.3	43.7	33.5	7.7	1.75	0.05	0.03	100.0
	2010	15.4	42.6	33.0	7.2	1.87	0.05	0.00	100.0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 나. 2010년 주요 기준별 가구내 취업자수

〈표 7-13〉 2010년 소득분위별 가구내 취업자수 비중

(단위: %)

취업자수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총합
전체	1	59.3	29.4	10.2	1.1	0.00	0.00	0.0	100.0
	2	20.4	52.9	23.3	3.1	0.38	0.00	0.0	100.0
	3	8.2	44.4	37.7	7.8	1.87	0.06	0.0	100.0
	4	5.4	40.8	39.2	11.6	2.75	0.14	0.0	100.0
	5	3.1	35.7	46.7	10.6	3.93	0.01	0.0	100.0
	전체	19.3	40.6	31.4	6.8	1.79	0.04	0.0	100.0
	근로무능력 가구원 제외	1	51.0	35.3	12.3	1.4	0.00	0.00	0.0
2		17.7	54.6	24.2	3.2	0.39	0.00	0.0	100.0
3		6.9	45.1	38.2	7.9	1.90	0.06	0.0	100.0
4		4.1	41.4	39.8	11.8	2.79	0.14	0.0	100.0
5		3.1	35.7	46.8	10.6	3.93	0.01	0.0	100.0
전체		15.4	42.6	33.0	7.2	1.87	0.05	0.0	100.0

자료: 한국복지패널 6차년도 원자료

2010년 소득분위별 가구내 취업자수 비중을 살펴보면, 소득 1분위에서는 59.3%가 가구내 취업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명 가구원만 취업한 경우는

29.4%, 2명 가구원만 취업한 경우는 10.2%를 보였다. 반면에 소득 5분위에서는 가구내 2명이 취업한 경우가 46.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인만이 취업한 경우는 35.7%로 나타났다. 가구내 근로무능력 가구원을 제외한 경우도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1명 가구원만 취업한 경우가 더 많았으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2명 가구원이 취업한 경우가 더 많이 차지하였다.

2010년 지역별 가구내 취업지수를 살펴보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에서 1명 가구원이 취업한 경우가 각각 41.6%, 40.9%, 34.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근로무능력 가구원을 제외한 경우도 전체 가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표 7-14〉 2010년 지역별 가구내 취업지수 비중

(단위: %)

지역		취업지수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총합
전체	대도시	19.8	41.6	29.4	7.2	2.08	0.00	0.0	100.0
	중소도시	17.7	40.9	33.0	6.6	1.74	0.09	0.0	100.0
	농어촌	24.6	34.7	33.9	6.3	0.54	0.03	0.0	100.0
	전체	19.3	40.6	31.4	6.8	1.79	0.04	0.0	100.0
근로무능력 가구원 제외	대도시	15.5	43.8	31.0	7.5	2.20	0.00	0.0	100.0
	중소도시	14.6	42.4	34.3	6.9	1.81	0.09	0.0	100.0
	농어촌	18.6	37.4	36.6	6.8	0.58	0.03	0.0	100.0
	전체	15.4	42.6	33.0	7.2	1.87	0.05	0.0	100.0

자료: 한국복지패널 6차년도 원자료

#### 다. 주요기준별 가구 취업지수

가구내 근로능력 가구원 수 중 취업가구원 수의 비율을 나타낸 가구 취업지수를 소득분위별 평균값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2005년에는 0.62명에서 2010년에는 0.64명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가구 취업지수가 낮고,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가구 취업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소득 1분위에서는 2005년 0.51명에서 2010년 0.40명으로 감소한 반면, 소득 3분위, 4분위는 2005년에 비해 2010년에는 높아졌고 소득 5분위에서는 2005년과 2010년에는 각각 0.72명, 0.73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 7-15〉 소득분위별 가구 취업지수

(단위: 명)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근로능력 가구	2005	0.62	0.51	0.58	0.60	0.66	0.72
	2006	0.61	0.43	0.58	0.63	0.65	0.71
	2007	0.62	0.44	0.59	0.64	0.68	0.71
	2008	0.62	0.41	0.58	0.65	0.71	0.72
	2009	0.64	0.42	0.61	0.68	0.70	0.73
	2010	0.64	0.40	0.58	0.68	0.74	0.73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2010년 지역별 가구 취업지수를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2005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농어촌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도시는 2005년 0.59명에서 2010년 0.62명으로 증가하였고 중소도시도 2005년 0.64명에서 2010년 0.65명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농어촌은 2005년 0.73명에서 2010년 0.66명으로 감소하였다.

〈표 7-16〉 2009년 지역별 가구 취업지수

(단위: 명)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근로능력 가구	2005	0.62	0.59	0.64	0.73
	2006	0.61	0.58	0.62	0.70
	2007	0.62	0.59	0.64	0.69
	2008	0.62	0.61	0.63	0.67
	2009	0.64	0.62	0.65	0.66
	2010	0.64	0.62	0.65	0.66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 3. 연간 취업경험률

다음으로는 전체 인구 중 연중 소득을 목적으로 취업한 경험이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연간 취업경험률 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근로무능력 가구주를 포함한 전체 가구주에서는 2005년 79.1%에서 2010년 83.6%로 증가하였다. 다만 2007년에는

79.2%로 다소 떨어지기도 하였다. 소득분위별로는 2010년 소득 1분위에서는 58.8%가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득 5분위에서는 96.0%로 나타나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가구주의 연간 취업경험률도 높았다.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주만을 살펴본 결과로는 2005년 87.8%에서 2010년 87.6%로 다소 하락하였으며, 시간적인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득분위별로도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근로능력 가구주의 연간 취업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7-17〉 가구주의 소득분위별 연간 취업경험률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구주	2005	79.1	51.2	81.6	86.8	91.7	94.7
	2006	80.4	53.6	83.6	90.7	92.5	93.4
	2007	79.2	52.2	82.2	89.3	92.0	93.4
	2008	82.1	54.1	86.5	91.6	93.8	96.0
	2009	83.3	57.6	87.2	93.3	92.7	96.5
	2010	83.6	58.8	86.5	92.5	94.6	96.0
근로능력 가구주	2005	87.8	69.7	88.1	90.3	93.5	96.5
	2006	88.3	69.6	89.5	94.1	94.8	95.0
	2007	86.8	67.4	88.0	92.4	94.2	94.6
	2008	88.3	67.5	91.2	93.4	95.2	96.5
	2009	88.3	68.9	90.9	95.0	93.4	96.9
	2010	87.6	67.4	89.1	94.0	96.2	96.2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연간 취업경험률은 2005년 55.9%에서 2010년 67.2%로 상승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만을 살펴보면 2005년이래로 연간 취업경험률은 상승하였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가구원의 연간 취업경험률은 낮고,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가구원의 연간 취업경험률은 높았다. 구체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만의 연간 취업경험률에서 2010년에는 소득 1분위에서 57.7%만이 취업을 경험하였으나, 소득 5분위에서는 73.3%가 취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8〉 가구원 전체의 소득분위별 연간 취업경험률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2005	55.9	41.4	54.5	56.0	62.4	66.2
	2006	61.0	46.3	60.5	63.7	67.4	67.9
	2007	61.2	45.7	59.6	65.6	68.5	67.7
	2008	64.9	47.2	64.2	69.9	72.7	71.1
	2009	66.4	50.8	66.5	70.6	72.2	72.6
	2010	67.2	51.1	67.9	70.8	74.9	72.2
근로능력 가구원	2005	62.0	54.0	59.8	59.9	65.6	68.7
	2006	66.8	59.3	65.4	67.3	69.9	70.7
	2007	66.6	57.4	64.5	68.5	71.1	69.9
	2008	69.1	56.6	67.9	72.1	74.4	72.6
	2009	70.1	59.4	70.1	72.2	73.4	73.8
	2010	70.4	57.7	70.8	72.7	76.6	73.3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가구의 지역별 연간 취업경험률을 살펴보면, 중소도시의 연간 취업경험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농어촌, 대도시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주 전체 2010년 기준으로 대도시는 81.8%, 중소도시는 85.3%, 농어촌은 83.8%로 나타났다.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주만을 살펴보면, 농어촌에서 88.9%가 취업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소도시는 88.7%, 대도시 86.3% 순으로 나타났다.

〈표 7-19〉 가구주의 지역별 연간 취업경험률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가구주 전체	2005	79.1	75.9	82.5	79.9
	2006	80.4	77.5	83.1	82.0
	2007	79.2	76.5	81.8	80.4
	2008	82.1	80.9	83.9	79.0
	2009	83.3	81.4	85.5	82.1
	2010	83.6	81.8	85.3	83.8
근로능력 가구주	2005	87.8	84.9	90.4	91.4
	2006	88.3	85.7	90.2	92.3
	2007	86.8	84.1	89.1	90.0
	2008	88.3	86.5	89.8	89.6
	2009	88.3	86.0	90.6	88.7
	2010	87.6	86.3	88.7	88.9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가구원 전체의 지역별 연간 취업경험률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가구원 전체의 연간 취업경험률이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농어촌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소도시, 대도시 순이었다. 2010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구원 전체는 농어촌이 68.3%, 중소도시가 67.8%, 대도시가 66.5%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은 농어촌이 72.7%, 중소도시가 70.6%, 대도시가 69.8% 이었다.

〈표 7-20〉 가구원 전체의 지역별 연간 취업경험률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가구원 전체	2005	55.9	53.5	57.5	62.3
	2006	61.0	58.7	62.3	67.7
	2007	61.2	59.1	62.7	65.6
	2008	64.9	64.1	65.6	66.3
	2009	66.4	66.1	66.6	67.5
	2010	67.2	66.5	67.8	68.3
근로능력 가구원	2005	62.0	59.6	63.4	70.1
	2006	66.8	64.7	67.5	75.8
	2007	66.6	64.7	67.7	72.2
	2008	69.1	67.9	69.6	73.3
	2009	70.1	69.4	70.3	72.4
	2010	70.4	69.8	70.6	72.7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가구의 연간 취업 경험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에는 가구주 전체 중 남성 가구주가 취업을 경험한 비율이 83.5%에서 2010년 87.9%로 증가하였다. 여성 가구주의 경우 2005년 59.0%에서 2010년 64.6%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능력 가구주의 연간 취업경험률은 남성 가구주가 2005년에서 89.8%에서 2010년 90.6%로 증가한 반면, 여성 가구주는 2005년 76.5%에서 2010년 73.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1〉 가구주의 성별 연간 취업경험률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전체	2005	79.1	83.5	59.0
	2006	80.4	84.8	61.3
	2007	79.2	84.3	57.9
	2008	82.1	86.2	62.9
	2009	83.3	87.5	63.9
	2010	83.6	87.9	64.6
근로능력 가구주	2005	87.8	89.8	76.5
	2006	88.3	90.4	76.6
	2007	86.8	89.5	72.8
	2008	88.3	90.6	75.6
	2009	88.3	90.9	74.9
	2010	87.6	90.6	73.1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가구원 전체의 연간 취업경험률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구원 전체 중 남성은 2005년 71.5%에서 2010년 77.3%로, 여성은 2005년 42.0%에서 2010년 57.6%로 증가하였다.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전체도 남성과 여성 모두 2005년 이래로 증가하였다. 즉, 2005년 남성과 여성의 취업경험률이 각각 76.8%, 47.8%에서 2010년에는 각각 80.1%, 60.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2〉 가구원 전체의 성별 연간 취업경험률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가구원 전체	2005	55.9	71.5	42.0
	2006	61.0	74.7	48.7
	2007	61.2	74.2	49.5
	2008	64.9	76.2	53.9
	2009	66.4	77.3	55.9
	2010	67.2	77.3	57.6
근로능력 가구원 전체	2005	62.0	76.8	47.8
	2006	66.8	79.6	54.6
	2007	66.6	78.8	54.9
	2008	69.1	79.8	58.2
	2009	70.1	80.5	59.6
	2010	70.4	80.1	60.9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표 7-23〉 가구주의 학력별 연간 취업경험률

(단위: %)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	대학이상
가구주	2005	79.1	60.7	85.3	92.4	89.3
	2006	80.4	62.5	87.7	94.0	89.5
	2007	79.2	60.4	87.2	94.8	88.6
	2008	82.1	63.9	88.4	95.1	89.9
	2009	83.3	65.8	88.8	95.5	90.8
	2010	83.6	65.3	89.8	95.7	90.4
근로능력 가구주	2005	87.8	77.9	89.8	94.3	92.3
	2006	88.3	78.2	91.3	95.3	92.4
	2007	86.8	75.0	91.0	96.0	91.1
	2008	88.3	77.3	91.5	96.1	91.6
	2009	88.3	76.7	91.2	96.5	92.5
	2010	87.6	74.3	91.6	95.8	92.0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가구주의 학력별로 연간 취업경험률을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경험률도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중학교 이하 졸업한 가구주는 2005년 60.7%에서 2010년 65.3%, 고등학교 이하 졸업한 가구주는 2005년 85.3%에서 2010년 89.8%, 전문대학 졸업 가구주는 2005년 92.4%에서 2010년 95.7%, 대학 이상 졸업 가구주는 2005년 89.3%에서 2010년 90.4%로 모두 증가하였다.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주의 연간 취업경험률은 전문대학 졸업 가구주가 2010년 95.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학 이상 졸업자 가구주가 92.0%, 고등학교 이하 졸업 가구주가 91.6%, 중학교 이하 졸업 가구주는 74.3%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전체의 학력별 연간 취업경험률은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전문대 졸업자의 연간 취업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교 이상 졸업자,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 중학교 이하 졸업 가구주 순으로 분석되었다. 연도별로는 가구원 전체는 중학교 이하 졸업자는 2005년 45.4%에서 2010년 53.3%,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는 2005년 56.2%에서 66.3%, 전문대학 졸업자는 2005년 65.9%에서 2010년 81.4%, 대학 이상 졸업자는 2005년 64.9%에서 2010년 74.3%로 분석되었다. 근로능력 가구원 전체의 학력별 연간 취업경험률은 전문대학 졸업자는 82.2%, 대학 이상 졸업자는 75.2%,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는 67.7%, 중학교 이하 졸업자는

61.5% 순으로 나타났다.

〈표 7-24〉 가구원 전체의 학력별 연간 취업경험률

(단위: %)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	대학이상
가구원 전체	2005	55.9	45.4	56.2	65.9	64.9
	2006	61.0	49.4	61.1	74.7	70.4
	2007	61.2	48.4	61.7	76.7	70.3
	2008	64.9	52.4	64.0	76.5	73.3
	2009	66.4	53.4	64.4	79.5	75.3
	2010	67.2	53.3	66.3	81.4	74.3
근로능력 가구원 전체	2005	62.0	60.7	58.7	66.9	66.3
	2006	66.8	63.9	63.1	75.6	71.8
	2007	66.6	61.2	63.8	77.4	71.4
	2008	69.1	63.8	65.7	77.2	74.2
	2009	70.1	62.8	66.1	80.3	76.1
	2010	70.4	61.5	67.7	82.2	75.2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가구주의 연령별 연간 취업경험률은 15~29세인 청년층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0~64세인 중장년층, 55~64세인 고령층, 65세 이상인 초고령층 순으로 나타났다.

〈표 7-25〉 가구주의 연령별 연간 취업경험률

(단위: %)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 이상
가구주	2005	79.1	96.9	94.0	66.3	37.7
	2006	80.4	97.0	95.2	72.8	41.4
	2007	79.2	97.7	95.3	72.9	41.6
	2008	82.1	97.9	94.8	74.8	41.8
	2009	83.3	97.5	95.5	79.1	43.6
	2010	83.6	96.8	96.7	80.0	44.1
근로능력 가구주	2005	87.8	97.3	95.7	73.3	57.5
	2006	88.3	97.5	96.4	79.6	59.5
	2007	86.8	98.3	96.6	77.9	57.8
	2008	88.3	97.9	95.9	79.9	57.1
	2009	88.3	97.5	96.7	82.9	55.5
	2010	87.6	96.8	97.1	82.7	53.9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15~29세의 청년층과 30~64세인 중장년층은 95% 이상이 취업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65세 이상인 초고령층은 절반도 못 미치는 44.1%가 취업경험을 하였다.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주만 살펴보면 가구주 전체보다 전반적으로 취업경험률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2010년 기준 15~29세인 청년층은 96.8%, 30~64세인 중장년층은 97.1%, 55~64세인 고령층은 82.7%, 65세 이상인 초고령층은 53.9%로 나타났다.

가구원 전체 연령별 연간 취업경험률은 전 연령층에서 2005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5~29세인 청년층은 2005년 41.2%에서 2010년 53.4%, 30~54세인 중장년층 2005년 71.7%에서 2010년 82.5%, 55~64세인 고령층은 2005년 50.6%에서 2010년 66.4%, 65세 이상인 초고령층은 2005년 29.1%에서 2010년 37.7%로 증가하였다. 근로능력 가구원만의 연령별 연간 취업경험률은 65세 이상인 초고령층을 제외한 다른 연령층에서는 2005년부터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였다. 65세 이상인 초고령층의 경우는 2005년 52.8%에서 2006년에는 다소 증가하였다가 2007년 51.1%, 2008년 50.3%, 2009년 50.1%, 2010년 49.4%로 점차 감소하였다.

〈표 7-26〉 가구원 전체의 연령별 연간 취업경험률

(단위: %)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 이상
가구원 전체	2005	55.9	41.2	71.7	50.6	29.1
	2006	61.0	47.7	76.9	57.9	33.3
	2007	61.2	46.6	78.4	58.8	33.9
	2008	64.9	53.2	79.8	62.5	34.6
	2009	66.4	53.5	81.2	65.5	36.8
	2010	67.2	53.4	82.5	66.4	37.7
근로능력 가구원 전체	2005	62.0	41.6	73.5	57.4	52.8
	2006	66.8	47.9	78.2	65.0	53.4
	2007	66.6	46.7	79.7	64.7	51.1
	2008	69.1	53.4	81.1	67.3	50.3
	2009	70.1	53.9	82.3	69.5	50.1
	2010	70.4	53.8	83.2	69.3	49.4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 4. 종사상 지위의 비중

##### 가. 종사상 지위 비중의 추이

〈표 7-27〉 취업중인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비중

(단위: %)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자활 및 공공근로				
2006	54.2	7.2	10.0	0.63	5.6	21.7	0.68	100.0
2007	53.0	7.2	10.7	0.62	5.8	22.0	0.66	100.0
2008	49.0	12.9	9.4	0.60	6.1	21.7	0.39	100.0
2009	47.8	13.6	9.6	0.85	5.2	22.6	0.47	100.0
2010	48.1	14.0	9.1	0.95	5.9	21.3	0.66	100.0

자료: 한국복지패널 2~6차년도 원자료

취업중인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비중을 살펴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2006년 54.2%에서 2010년 48.1%로 감소하였으며, 임시직 임금근로자는 2006년 7.2%에서 2010년 14.0%로 증가하였다.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2006년 10.0%에서 2010년 9.1%로 감소하였다. 자활 및 공공근로는 2006년 0.63%에서 2010년 0.95%로 다소 증가하였고, 고용주는 2006년 5.6%에서 2009년 5.2%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5.9%로 다시 증가하였다. 자영업자는 2006년 21.7%에서 2010년 21.3%로, 무급가족 종사자는 2006년 0.68%에서 2010년 0.66%로 다소 감소하였다.

한편, 취업중인 가구원 전체의 종사상 지위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2006년이래로 계속 감소하였다. 반면,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자활 및 공공근로자는 2006년부터 점차 증가하였다. 한편, 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7-28〉 취업중인 가구원 전체의 종사상지위 비중

(단위: %)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자활 및 공공근로				
2006	51.4	10.7	9.6	0.59	4.2	16.7	6.7	100.0
2007	49.9	10.8	11.7	0.54	4.4	16.6	6.1	100.0
2008	45.1	18.5	10.3	0.52	4.2	15.9	5.5	100.0
2009	42.8	20.0	11.0	0.86	3.6	16.4	5.3	100.0
2010	42.7	21.3	10.2	0.88	4.0	15.6	5.4	100.0

자료: 한국복지패널 2~6차년도 원자료

#### 나. 2010년 주요 기준별 종사상지위 비중

2010년 소득분위별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비중을 살펴보면, 소득 1분위에서는 자영업자가 38.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21.7%, 임시직 임금근로자는 18.1% 순으로 나타났다.

〈표 7-29〉 2010년 소득분위별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비중

(단위: %)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자활 및 공공근로				
가구주	1분위	13.9	18.1	21.7	4.50	2.3	38.3	1.21	100.0
	2분위	38.8	20.3	14.0	0.72	2.7	22.6	0.82	100.0
	3분위	52.4	15.3	7.7	0.22	3.5	20.7	0.23	100.0
	4분위	59.7	12.8	4.6	0.17	4.4	17.9	0.54	100.0
	5분위	66.6	4.8	1.3	0.00	15.6	11.1	0.65	100.0
	전체	48.1	14.0	9.1	0.95	5.9	21.3	0.66	100.0

자료: 한국복지패널 6차년도 원자료

반면에 소득 5분위에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66.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자영업자가 11.1%였다. 그러므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상용직 임금 근로자와 고용주의 비중은 증가하고, 임시직, 일용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소득분위별 가구원 전체의 종사상지위 비중을 살펴보면, 소득 1분위에서는 자영업자가 28.1%로 가장 많았으며, 일용직 임금근로자 21.7%, 임시직 임금근로자 19.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 5분위에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60.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임시직 임금근로자가 12.8%, 고용주가 9.4%로 나타났다. 즉,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자영업자의 비중과 임시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상용직 임금근로자와 고용주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0〉 2010년 소득분위별 가구원 전체의 종사상지위 비중

(단위: %)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자활 및 공공근로				
가구원 전체	1분위	12.5	19.3	21.7	4.72	1.9	28.1	12.0	100.0
	2분위	32.8	26.7	14.8	0.72	1.9	17.5	5.6	100.0
	3분위	42.8	24.3	10.3	0.22	2.4	15.7	4.3	100.0
	4분위	50.5	23.7	6.6	0.12	3.2	12.7	3.2	100.0
	5분위	60.9	12.8	3.2	0.05	9.4	9.2	4.4	100.0
	전체	42.7	21.3	10.2	0.88	4.0	15.6	5.4	100.0

자료: 한국복지패널 6차년도 원자료

2010년 가구주 성별에 따른 종사상지위 비중을 살펴보면, 남성 가구주중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51.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영업자가 21.4%, 임시직 임금근로자는 11.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 가구주 중 임시직 임금근로자는 29.1%로 가장 높았으며,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28.1%, 자영업자는 2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7-31〉 2010년 가구주 성별에 따른 종사상지위 비중

(단위: %)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자활 및 공공근로				
가구주	남성	51.0	11.8	8.3	0.45	6.4	21.4	0.70	100.0
	여성	28.1	29.1	15.0	4.39	2.8	20.2	0.40	100.0
	전체	48.1	14.0	9.1	0.95	5.9	21.3	0.66	100.0

자료: 한국복지패널 6차년도 원자료

2010년 가구원 전체의 종사상지위 비중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상용직 임금근로자 49.7%로 가장 높았으며, 자영업자는 18.4%, 임시직 임금근로자는 15.6% 순으로 나타났다.

〈표 7-32〉 2010년 가구원 전체의 성별에 따른 종사상지위 비중

(단위: %)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자활 및 공공근로				
가구원 전체	남성	49.7	15.6	9.1	0.49	5.5	18.4	1.2	100.0
	여성	33.2	28.9	11.8	1.39	2.0	11.7	11.0	100.0
	전체	42.7	21.3	10.2	0.88	4.0	15.6	5.4	100.0

자료: 한국복지패널 6차년도 원자료

여성은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33.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임시직 임금근로자가 28.9%, 일용직 임금근로자가 11.8%로 나타났다.

2010년 가구의 종사상지위 비중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5~29세 사이의 청년층은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70.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임시직 임금근로자가 21.1%를 차지하였다. 30~54세 중장년층은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5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자영업자는 15.1%로 나타났다. 55~64세 사이의 고령층에서는 자영업자가 33.2%로 가장 높았으며,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25.8%, 임시직 임금근로자가 19.4% 순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초고령층은 자영업자가 61.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임시직 임금근로자가 15.7%, 일용직 임금근로자가 11.1%로 나타났다.

〈표 7-33〉 2010년 가구의 연령별 종사상지위 비중

(단위: %)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자활 및 공공근로				
가구주	15~29세	70.6	21.1	3.9	0.00	1.1	3.4	0.00	100.0
	30~54세	56.8	12.0	8.2	0.48	7.0	15.1	0.52	100.0
	55~64세	25.8	19.4	14.2	1.63	4.8	33.2	1.07	100.0
	65세 이상	3.5	15.7	11.1	4.17	2.2	61.9	1.47	100.0
	전체	48.1	14.0	9.1	0.95	5.9	21.3	0.66	100.0

자료: 한국복지패널 6차년도 원자료

2010년 가구원 전체 연령별 종사상 지위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29세 청년층은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50.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임시직 임금근로자 34.0%, 일용직 임금근로자가 10.8%를 보였다. 30~54세 중장년층에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49.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임시직 임금근로자가 18.4%, 자영업자가 13.1%로 나타났다. 한편 55~64세의 고령층에서는 자영업자가 28.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임시직 임금근로자가 21.5%,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21.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자영업자가 48.2%가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무급가족종사자가 16.5%, 임시직 임금근로자가 14.8%로 나타났다.

〈표 7-34〉 2010년 가구원 전체의 연령별 종사상지위 비중

(단위: %)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자활 및 공공근로				
가구원 전체	15~29세	50.3	34.0	10.8	0.00	0.4	2.9	1.6	100.0
	30~54세	49.0	18.4	9.3	0.6	5.3	13.1	4.3	100.0
	55~64세	21.1	21.5	13.6	1.77	3.7	28.1	10.2	100.0
	65세 이상	3.0	14.8	11.5	4.11	1.9	48.2	16.5	100.0
	전체	42.7	21.3	10.2	0.88	4.0	15.6	5.4	100.0

자료: 한국복지패널 6차년도 원자료

## 5. 일의 불규칙성<sup>42)</sup>

본 절에서는 일의 불규칙성을 소득분위별, 성별, 학력, 연령별 및 종사상지위 비중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가구주와 가구원전체로 구분지어 분석하였다. 우선, 가구주의 일의 불규칙성은 2007년 19.2%에서 2008년 16.0%로 감소하였다가 이후로는 다시 증가하여

42) 한국복지패널 2005년 1차 조사 결과는 문항변경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연속성에서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간주하여 본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2006년 2차 조사에서는 주당 평균근로시간 문항을 '12월 한 달 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으로 조사되어 이를 연간자료라고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분석에서는 3차 조사 이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0년에는 19.4%로 나타났다. 가구원 전체도 2007년 19.3%에서 2008년 15.5%로 감소하였다가 2009년 이후로 다시 증가하였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일의 불규칙성이 높았으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일의 불규칙성이 낮게 나타났다.

〈표 7-35〉 소득분위별 일의 불규칙성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구주	2007	19.2	53.4	25.0	14.0	10.8	3.7
	2008	16.0	42.1	20.7	13.3	9.2	3.7
	2009	18.2	41.4	22.6	12.6	11.8	9.4
	2010	19.4	44.3	22.1	17.0	12.0	8.0
가구원 전체	2007	19.3	52.6	26.5	15.0	12.6	4.3
	2008	15.5	42.5	21.2	12.5	9.0	5.1
	2009	17.3	40.0	21.2	14.0	12.0	8.7
	2010	18.0	43.0	21.4	15.4	12.7	8.1

자료: 한국복지패널 3~6차년도 원자료

일의 불규칙성을 성별로 살펴보면, 우선 여성이 남성보다 일의 불규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 가구주의 경우는 2010년 18.4%가 불규칙적으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가구주는 2010년 26.0%가 불규칙적으로 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원 전체의 경우로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일의 불규칙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7-36〉 성별 일의 불규칙성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가구주	2007	19.2	18.2	26.3
	2008	16.0	15.4	20.0
	2009	18.2	17.7	22.0
	2010	19.4	18.4	26.0
가구원 전체	2007	19.3	18.0	21.1
	2008	15.5	14.5	16.9
	2009	17.3	17.2	17.5
	2010	18.0	17.8	18.4

자료: 한국복지패널 3~6차년도 원자료

한편, 일의 불규칙성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가구주가 중학교 이하 졸업자인 경우는 2007년 47.3%에서 2010년 44.7%로 감소한 반면, 그 외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는 2007년보다 2010년에는 일의 불규칙성이 증가하였다. 가구주 전체를 보아도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구원은 일의 불규칙성은 감소하고, 그 외의 학력을 가진 가구원은 일의 불규칙성이 증가하였다.

〈표 7-37〉 학력별 일의 불규칙성

(단위: %)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하	대졸이상
가구주	2007	19.2	47.3	17.1	3.9	4.3
	2008	16.0	42.0	15.1	3.3	3.4
	2009	18.2	45.1	17.2	5.5	6.1
	2010	19.4	44.7	20.5	6.0	6.8
가구원 전체	2007	19.3	48.1	15.0	6.2	6.3
	2008	15.5	42.2	13.4	3.9	5.2
	2009	17.3	43.2	16.0	7.1	7.3
	2010	18.0	43.1	18.5	7.6	7.6

자료: 한국복지패널 3~6차년도 원자료

일의 불규칙성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일의 불규칙성이 낮은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일의 불규칙성은 높았다.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60%에 가까워 일의 불규칙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가구주의 연령이 15~29세 인 경우는 2007년 2.5%에서 2010년 3.6%로 증가하였으며, 30~54세 가구주는 2007년 11.6%에서 2010년 13.4%로 증가, 55~64세의 가구주는 2007년 33.0%에서 2010년 29.8%로, 65세 이상은 2007년 60.0%에서 2010년 59.9%로 감소하였다.

〈표 7-38〉 연령별 일의 불규칙성

(단위: %)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 이상
가구주	2007	19.2	2.5	11.6	33.0	60.0
	2008	16.0	5.3	9.8	26.6	60.7
	2009	18.2	1.8	12.7	29.6	60.1
	2010	19.4	3.6	13.4	29.8	59.9
가구원 전체	2007	19.3	8.9	12.4	36.6	63.6
	2008	15.5	7.0	10.3	30.8	63.9
	2009	17.3	7.6	13.1	31.3	62.0
	2010	18.0	7.3	13.7	31.9	61.7

자료: 한국복지패널 3~6차년도 원자료

〈표 7-39〉 종사상 지위별 일의 불규칙성

(단위: %)

		전체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임시	일용	자활 및 공공근로			
가구주	2007	19.2	0.7	9.0	74.5	9.2	5.6	43.6	36.3
	2008	16.0	0.3	3.6	54.3	20.1	7.8	44.2	19.8
	2009	18.2	1.6	7.2	64.8	2.4	12.4	42.3	20.1
	2010	19.4	1.5	10.7	58.2	9.0	14.9	49.8	46.0
가구원 전체	2007	19.3	1.0	6.8	65.6	9.2	4.3	41.2	55.3
	2008	15.5	0.4	4.5	47.8	13.9	6.3	39.9	51.5
	2009	17.3	1.9	7.2	52.8	2.0	11.7	37.4	51.4
	2010	18.0	1.9	8.2	46.2	6.1	15.9	45.7	55.2

자료: 한국복지패널 3~6차년도 원자료

종사상 지위별 일의 불규칙성을 살펴보면, 가구주는 2010년 일용직 임금근로자가 58.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영업자가 49.8%, 무급가족 종사자가 46.0%로 나타나 무급종사자의 경우 2009년 보다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전체의 종사상 지위별 일의 불규칙성도 가구주와 동일하게 일용직 임금근로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6. 유해환경 근로비율

본 절에서는 유해환경 근로 비율을 소득분위별, 성별, 학력별, 연령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가구주의 유해환경 근로 비율은 2005년 14.2%에서 2007년까지 증가하다가 2008년부터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0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가구원 전체도 가구주와 비슷한 시간적 추세를 보였다. 분위별로 가구주의 유해환경 근로비율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소득 3분위에 있는 가구주가 유해환경에서 근로한 비율이 19.0%로 다른 분위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득 2분위에서 17.7%, 소득 1분위에서 15.2%를 보였다. 반면, 2010년에는 대체적으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유해환경에서 근로하는 비율이 높았고,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유해환경에서 근로하는 비율이 낮았다. 가구원 전체도 가구주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표 7-40〉 소득분위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구주	2005	14.2	15.2	17.7	19.0	12.4	8.1
	2006	15.3	18.3	21.7	16.0	13.1	8.2
	2007	17.4	18.9	26.4	17.9	16.4	8.3
	2008	16.3	19.6	21.9	18.3	15.6	7.4
	2009	13.9	17.7	16.3	16.2	13.7	6.3
	2010	14.1	18.7	20.8	14.5	10.8	6.3
가구원 전체	2005	12.2	14.7	15.0	15.4	11.1	7.4
	2006	12.5	15.8	16.9	13.0	11.1	7.3
	2007	13.1	15.7	20.2	13.4	12.2	6.3
	2008	12.1	16.1	17.1	12.8	10.1	6.5
	2009	10.0	14.3	12.1	11.6	8.9	4.9
	2010	11.0	15.4	15.4	11.5	8.7	6.0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유해환경 근로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유해환경에서 근로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남성 가구주는 2005년 15.0%가 유해환경에서 근로하였으며, 2010년

에는 15.0%로 비율이 동일한 반면, 여성 가구주는 2005년 8.4%에서 2010년 8.5%로 증가하였다. 가구원 전체로는 남성은 2010년 유해환경 근로 비율이 14.5%, 여성은 6.6%로 큰 차이를 보였다(표 7-41 참조).

〈표 7-41〉 성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가구주	2005	14.2	15.0	8.4
	2006	15.3	16.4	8.2
	2007	17.4	18.7	8.9
	2008	16.3	17.8	7.3
	2009	13.9	15.2	5.1
	2010	14.1	15.0	8.5
가구원 전체	2005	12.2	14.7	7.6
	2006	12.5	16.2	7.4
	2007	13.1	17.8	6.9
	2008	12.1	16.4	6.2
	2009	10.0	14.2	4.4
	2010	11.0	14.5	6.6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학력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은 전문대학 졸업한 가구주와 대학 이상 졸업한 가구주는 2005년에 비해 2010년에 감소한 반면, 중학교 이하 졸업자와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는 2005년에 비해 2010년에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2010년 기준 중학교 이하 졸업한 가구주가 2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이하 졸업한 가구주가 18.8%, 전문대학 졸업한 가주가 9.0%, 대학교 이상 졸업한 가구주가 4.0%로 학력이 높을수록 유해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비율이 낮았다. 가구원 전체의 유해환경 근로 비율도 가구주와 마찬가지로 학력이 낮을수록 유해환경에서 근로하는 비율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유해환경에서 근로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7-42〉 학력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단위: %)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하	대졸이상
가구주	2005	14.2	20.3	16.9	12.8	6.8
	2006	15.3	20.1	20.6	9.5	6.0
	2007	17.4	23.9	22.4	11.2	7.1
	2008	16.3	24.2	21.1	14.5	5.3
	2009	13.9	20.9	18.2	9.3	5.2
	2010	14.1	23.3	18.8	9.0	4.0
가구원 전체	2005	12.2	18.6	14.2	9.8	6.0
	2006	12.5	17.3	16.6	7.7	5.0
	2007	13.1	19.1	17.0	7.7	5.5
	2008	12.1	19.2	16.2	9.3	3.8
	2009	10.0	16.4	13.8	5.9	3.9
	2010	11.0	20.0	15.1	7.1	3.1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연령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을 살펴보면, 55세에서 64세 이하인 가구주 및 가구원이 유해환경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30세에서 54세 이하, 65세 이상 초고령층, 15~29세인 청년층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가구주의 연령이 15~29세인 청년층은 2005년 10.5%에서 2010년 10.4%로 비슷했으며, 30~54세인 중장년층은 2005년 15.3%에서 2010년 13.8%로 감소하였다.

55~64세인 고령층에서는 2005년 14.4%에서 2007년 21.4%까지 유해환경 근로 비율이 증가하였다가 2009년에는 14.5%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다시 17.0%로 상승하였다. 6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2005년 6.9%에서 2010년 13.5%로 증가하였다. 가구원 전체도 가구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표 7-43〉 연령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단위: %)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 이상
가구주	2005	14.2	10.5	15.3	14.4	6.9
	2006	15.3	11.1	16.0	17.7	9.6
	2007	17.4	8.9	17.7	21.4	14.6
	2008	16.3	9.8	17.1	19.4	10.9
	2009	13.9	7.2	14.8	14.5	10.2
	2010	14.1	10.4	13.8	17.0	13.5
가구원 전체	2005	12.2	8.7	13.1	13.3	8.7
	2006	12.5	7.6	13.6	15.1	10.1
	2007	13.1	6.2	14.1	17.9	13.1
	2008	12.1	6.6	13.5	16.1	10.3
	2009	10.0	4.6	11.4	12.3	9.7
	2010	11.0	5.7	11.5	15.8	13.3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본 장을 통해 거시적인 노동 경제지표와 가구 및 개인의 고용지표, 노동 및 근로 생활의 질에 대한 지표를 살펴보았다. 먼저,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게 나타났다. 실업률의 경우 2005년 이래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청년층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청년층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저소득층과 여성,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더 나은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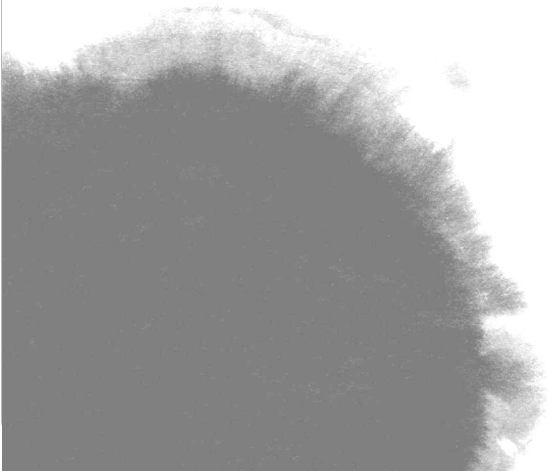
가구내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정보를 나타내는 가구 취업지수는 2005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가구 취업지수도 높았다. 또한 연간 취업경험률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소득분위와 성별, 학력, 연령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연간 취업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비중을 살펴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2005년 이래로 점차 감소하는 반면, 임시직 임금근로자는 점차 증가하였다. 그 밖의 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등은 2005년부터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비중을 소득분위별로 분석해본 결과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일용직 및 임시직 임금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더 나아가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막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 8장

## 복지수급





## 제8장 복지수급

본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6차 원자료를 활용하여 복지수급지표를 산출하고자 한다. 크게 공공부조제도 수급률, 공적연금제도 수급률, 주거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조제도 수급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욕구 대비 수급률과 보장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며, 공적연금제도 수급은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의 수급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은 주거지원 프로그램,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 아동 대상 복지서비스,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노인, 아동,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8-1〉 복지수급 지표의 구성

분류	지표 구성
공공부조제도 수급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 수준
공적연금제도 수급률	공적연금 수급률 국민연금 수급률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경험률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아동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 제1절 복지수급 지표 산출 방식

복지수급 지표는 공공부조제도, 공적연금제도,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를 대상으로 산출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각 제도별 수급지표 산출 방식을 살펴본다.

### 1. 공공부조제도 수급 지표 산출방식

공공부조제도 수급 지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심으로 수요에 대한 제도의 양적 및 질적인 수급률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양적인 수급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욕구 대비 수급률로 분석하고 질적인 수급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생활비 및 소득 대비 보장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

욕구 대비 수급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빈곤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빈곤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수급하기 전 소득<sup>43)</sup>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로 정의한다. 여기서 빈곤선은 절대빈곤선인 정부가 발표한 해당년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였다.

$$\text{욕구 대비 수급률} = \frac{\text{기초보장수급가구}}{\text{소득빈곤가구}} \times 100 (\%)$$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수준 지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가 빈곤가

43) 소득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수급하기 전 소득으로 정의하는 이유는 욕구를 가진 가구라는 개념에서 소득을 산출할 때 공적이전을 받기 전의 소득을 사용한다.



구의 최저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급가구에 지원되는 급여의 수준이 해당 가구의 욕구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지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가 실제 지출한 총 생활비 중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한 경상소득에서의 비중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 지표는 급여의 최저생활보장수준을 살펴보는 지표이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은 해당 가구의 필요 최소 소비액 중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가 어느 정도를 보장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가구가 빈곤가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 최소 소비액을 실제 지출한 총 생활비라고 전제한다.

$$\text{생활비 대비 보장수준} = \frac{\text{현금급여액}}{\text{총생활비}} \times 100 (\%)$$

소득 대비 보장수준은 해당 가구의 경제적 능력 중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가 어느 정도를 보장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해당 가구의 정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경상소득을 사용한다.

$$\text{소득 대비 보장수준} = \frac{\text{현금급여액}}{\text{경상소득}} \times 100 (\%)$$

## 2. 공적연금제도 수급 지표 산출방식

공적연금제도 수급 지표는 공적연금 수급률과 국민연금 수급률 두 가지를 분석한다. 공적연금 수급률은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포괄하여 분석한 지표이며, 이

중 국민연금 수급률을 별도로 분석한다. 수급률은 현재 시점에서 제도의 수요가 있는 대상 중 어느 정도 비율이 혜택을 받는지를 의미한다.

### 가. 공적연금 수급률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에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전체 공적연금의 수급률을 산출한다. 공적연금 수급률은 노령연금의 수급 대상이 되는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실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공적연금 급여는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 대상의 연금 고유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급여 즉,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등의 수급자는 제외한다.

$$\text{공적연금수급률} = \frac{\text{노령연금수급자}}{\text{만 60세 이상 노인}} \times 100 (\%)$$

### 나. 국민연금 수급률

국민연금 수급률은 노령연금의 수급 대상이 되는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만 60세 이상 노인 중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제외되며, 국민연금 급여 중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 수급자의 비율을 산출한다.

$$\text{국민연금수급률} = \frac{\text{노령연금수급자}}{\text{만 60세 이상 노인}} \times 100 (\%)$$

### 3.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수급 지표 산출방식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지표를 산출한다. 한국복지패널 설문지의 주거 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수급여부는 해당 년도 1년간 해당 프로그램 이용 경험을 묻고 있다. 그러므로 특정시점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수급률이 아닌 연간 이용경험률을 산출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중 영구임대주택,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범주별 프로그램들의 종합적인 이용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경험률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경험률은 전체 가구 중 해당년도 1년간 영구임대주택과 공공(국민)임대 주택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을 산출하는 지표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과 공공(국민)임대 주택 이용경험률을 각각 분석하고자 한다.

$$\text{주거지원프로그램이용경험률} = \frac{\text{이용경험이 있는가구}}{\text{전체가구}} \times 100 (\%)$$

#### 나.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은 전체 노인 가구 중 공공부문의 재원이 들어간 노인 대상 프로그램 이용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을 산출하는 지표이다. 우선 노인 가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하며,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는 공공부문의 재원이 들어간 기초노령연금(경로연금), 의료비 지원, 노인 무료급식, 물품지원, 가정봉사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방문 가정 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 이동편의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사회교육 서비스의 프로

그램을 포함한다. 본 지표에서는 공공부문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민간부문 재원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단, 민간부문의 전달체계를 활용하더라도 공공부문의 지원이 들어간 경우는 분석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노인 가구는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는 이용경험은 해당년도 1년간 상기 프로그램 중 하나라도 이용한 경우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text{노인가구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 = \frac{\text{이용경험이있는노인가구}}{\text{전체노인가구}} \times 100 (\%)$$

#### 다. 아동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아동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은 보육지원서비스 이용경험률과 학비지원서비스 이용경험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보육지원서비스 이용경험률은 만 5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보육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보육지원 서비스는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를 의미한다. 이용경험률은 해당 년도 1년간 아동 대상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text{보육지원서비스이용경험률} = \frac{\text{이용경험이있는만5세미만아동가구}}{\text{만5세미만아동가구}} \times 100 (\%)$$

한편, 학비지원서비스 이용경험률은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 중 학비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학비지원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구 대상 학비지원과 모부자가정 대상 학비지원 등 공공재원으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비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용경험은 해당 년도 1년간 이용한 경험 여부를 의미한다.

$$\text{학비지원서비스이용경험률} = \frac{\text{이용경험이있는학생가구}}{\text{전체학생가구}} \times 100 (\%)$$

#### 라.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은 전체 장애인 가구 중 공공부문의 재원이 들어간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이용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을 산출하는 지표이다. 장애인 가구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등록장애인을 포함한다.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는 공공부문의 재원이 들어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서비스,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의료 재활서비스, 가정봉사 서비스, 방문 가정간호 혹은 간병서비스, 이동편의 서비스, 주택관련 서비스,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 서비스, 장애이동 보육비 및 장애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자녀 관련 프로그램(학습지원 서비스 등), 자동차 관련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용경험은 해당년도 1년간 상기 프로그램 중 하나라도 이용한 경우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text{장애인가구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 = \frac{\text{이용경험이있는장애인가구}}{\text{전체장애인가구}} \times 100 (\%)$$

#### 마.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은 전체 가구 중 취약 가구원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상기 분석한 노인·아동·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중 하나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을 산출하며, 해당 년도 1년간 취약 가구원 대상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으면 경험이 있음으로 간주한다.

$$\text{취약계층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 = \frac{\text{이용경험이있는가구}}{\text{전체가구}} \times 100 (\%)$$

## 제2절 복지수급 지표 산출 결과

본 절에서는 공공부조제도 수급률 및 보장수준,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의 수급률,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을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형태별, 소득분위별 등에 따라 지표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지표는 빈곤 및 공공부조 제도 분석에서 의미있는 범주로 간주되는 지역, 가구규모, 가구형태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

소득빈곤가구 중 기초보장수급가구의 수급률을 나타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5년에는 29.3%이었던 수급률이 2010년에는 49.5%로 수급률이 증가하였다. 지역적으로는 대도시가 수급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중소도시, 농어촌 순이다. 연도별로는 대도시는 2005년에 비해 2010년에는 24.3%p 증가하여 57.4%, 중소도시는 18.6%p 증가하여 46.1%를, 농어촌은 13.6%p 증가하여 37.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29.3	33.1	27.5	23.4
2006	39.0	44.4	36.7	30.4
2007	41.5	49.9	37.8	30.2
2008	44.4	49.6	43.2	33.3
2009	46.8	53.0	44.7	35.5
2010	49.5	57.4	46.1	37.0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을 가구규모별로 살펴보면, 1인과 2인 가구는 욕구대비 수급률이 2005년 이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3인 가구 이상부터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등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는 2005년에 37.0%에서 2010년에는 56.1%로 증가, 2인 가구는 2005년 23.2%에서 2010년 40.3%로 증가하였다.

〈표 8-3〉 가구규모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

(단위: %)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2005	29.3	37.0	23.2	29.4	29.1	21.0	26.2
2006	39.0	46.0	32.3	41.2	35.5	37.7	33.8
2007	41.5	46.5	32.3	48.1	40.1	63.0	34.5
2008	44.4	50.6	35.4	47.8	38.7	47.9	43.1
2009	46.8	53.4	36.1	52.4	37.8	60.9	34.4
2010	49.5	56.1	40.3	47.6	47.7	45.0	32.7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가구형태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노인 가구는 2005년 26.1%에서 2010년 41.8%로 15.7%p 증가하여 40%를 넘어섰으며, 여성가구는 2010년 52.0%로 절반정도가 수급을 받고 있다. 모부자 가구는 2010년 7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8-4〉 가구형태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

(단위: %)

	전체	노인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모부자 가구
2005	29.3	26.1	39.3	60.1
2006	39.0	35.0	51.0	84.3
2007	41.5	36.0	50.9	84.5
2008	44.4	37.6	50.6	67.7
2009	46.8	39.0	52.7	85.5
2010	49.5	41.8	52.0	75.0

주: 1) 노인 가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2) 모부자가구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만 17세 이하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의미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가구에 지원되는 급여 수준이 해당 가구의 욕구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sup>44)</sup>. 우선, 전체적으로는 2005년 47.5%에서 2008년 39.7%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하여 2010년 41.6%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2005년보다 보장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가 가장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농어촌, 중소도시 순이다. 연도별로는 대도시는 2005년 48.7%에서 2010년 43.7%로, 중소도시는 2005년 46.5%에서 2010년 39.0%로, 농어촌은 2005년 45.6%에서 2010년 41.6%로 모두 감소하였다.

4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을 해석할 때, 현금급여의 보장수준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현물로 제공되는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급여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의 총생활비 변수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물급여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총생활비 대비 보장수준이 과소추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표 8-5〉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47.5	48.7	46.5	45.6
2006	49.6	49.1	50.3	49.9
2007	42.2	42.5	41.2	44.1
2008	39.7	43.0	36.2	40.0
2009	41.1	42.8	39.6	39.7
2010	41.6	43.7	39.0	41.6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을 가구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구 규모가 작을수록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이 높고, 가구 규모가 클수록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이 낮았다. 1인 가구는 2010년 기준 52.0%, 2인 가구는 41.1%인 것에 비해 5인 가구는 23.4%, 6인 이상은 17.7%만이 생활비 대비 보장을 받고 있었다. 연도별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이 감소하다가 2009년 이후 다소 증가한 추세로 나타났다.

〈표 8-6〉 가구규모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

(단위: %)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2005	47.5	66.0	47.4	30.5	34.5	22.5	21.1
2006	49.6	70.9	48.8	33.9	32.1	21.5	17.2
2007	42.2	57.8	43.4	30.7	23.2	24.2	15.7
2008	39.7	51.5	40.6	27.8	21.2	23.4	26.2
2009	41.1	53.6	42.7	31.0	24.8	23.5	21.9
2010	41.6	52.0	41.1	29.9	24.6	23.4	17.7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을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인 가구는 2005년이래도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이 감소하고 있다. 2005년에는 55.0%로 절반이상이 생활비 대비 보장을 받고 있었지만, 2010년에는 42.9%로 보장수준 비율이 낮아졌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도 노인 가구와 비슷하게 2005년 50.9%로 절반 정도가 생활비 대비 보장을 받고 있었지만, 2010년

41.9%만이 보장수준의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에 모부자 가구는 2005년에도 34.3%에서 2006년 36.7%로 다소 증가하다가 이후 33.9%까지 감소하였으나 2010년 36.1%로 다시 증가하였다.

〈표 8-7〉 가구형태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

(단위: %)

	전체	노인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모부자 가구
2005	47.5	55.0	50.9	34.3
2006	49.6	58.3	53.8	37.0
2007	42.2	49.5	44.9	33.6
2008	39.7	43.2	41.0	35.5
2009	41.1	42.2	43.6	33.9
2010	41.6	42.9	41.9	36.1

주: 1) 노인 가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2) 모부자가구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만 17세 이하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의미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는 수급 가구의 경제적 능력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금급여가 어느 정도 보장하는가를 나타내기 위해 소득 대비 보장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적으로는 2005년 42.1%에서 2006년에는 44.0%로 다소 증가하였다가 2008년 38.9%로 감소, 이후 증가하여 2010년에는 41.2%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2005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즉, 2010년 수급가구의 경상소득 중 현금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가장 보장수준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농어촌, 중소도시순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도시는 2005년 43.1%에서 2010년 44.1%로, 농어촌은 2005년 40.8%에서 2010년 38.2%로, 중소도시는 2005년 41.7%에서 2010년 40.2%로 대도시외의 지역에서는 하락하였다.

〈표 8-8〉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대비 보장수준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42.1	43.1	40.8	41.7
2006	44.0	44.5	43.5	43.2
2007	42.3	43.5	40.6	42.8
2008	38.9	42.0	36.0	37.2
2009	40.3	42.1	39.0	37.6
2010	41.2	44.1	38.2	40.2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가구규모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대비 보장수준을 살펴보면, 가구 규모가 작을수록 소득 대비 보장수준이 높고 가구 규모가 클수록 소득 대비 보장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즉, 1인 가구는 2010년 52.0%로 절반정도가 소득 대비 보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6인 이상 가구는 18.4%만이 소득 대비 보장을 받고 있었다.

〈표 8-9〉 가구규모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대비 보장수준

(단위: %)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2005	42.1	55.2	44.2	28.1	32.7	22.4	21.2
2006	44.0	58.4	46.3	32.9	29.8	21.0	16.7
2007	42.3	56.1	43.0	33.6	24.1	27.5	16.5
2008	38.9	49.6	39.5	27.9	22.4	24.0	27.7
2009	40.3	52.6	41.1	30.6	25.2	22.7	21.5
2010	41.2	52.0	39.5	29.6	24.7	24.1	18.4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대비 보장수준을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노인 가구는 2005년 47.0%에서 2006년 49.5%로 소득 대비 보장수준이 증가했다가 2009년까지 40.2%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41.5%로 다시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도 2005년 44.0%에서 2006년 47.8%로 증가, 2010년에는 41.5%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모부자 가구는 2005년 31.1%에서 2006년과 2007년에는 36.5%로 증가하였다가 2009

년 32.3%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35.3%로 다시 증가하여 2005년에 비해 소득 대비 보장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0〉 가구형태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대비 보장수준

(단위: %)

	전체	노인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모부자 가구
2005	42.1	47.0	44.0	31.1
2006	44.0	49.5	47.8	36.5
2007	42.3	48.0	44.8	36.5
2008	38.9	40.6	40.2	35.7
2009	40.3	40.2	42.2	32.3
2010	41.2	41.5	41.5	35.3

주: 1) 노인 가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2) 모부자가구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만 17세 이하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의미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 2. 공적연금제도

본 절에서는 특수직연금과 국민연금을 포괄하는 공적연금 수급률과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 수급률을 별도로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소득 분위별로도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가. 공적연금 수급률

만 60세 이상 노인중 노령연금 수급비율을 살펴본 공적연금 수급률은 전체적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하였다. 즉, 2005년에는 20.2%에서 2010년에는 30.5%로 약 30%가 공적연금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위별로는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공적연금 수급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소득 1분위에서는 2010년 20.3%, 소득 2분위에서는 35.1%이었으나, 소득 3분위 이상 부터는 약 4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8-11〉 분위별 공적연금 수급률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20.2	14.0	20.5	30.1	31.6	25.2
2006	23.6	15.5	24.4	34.1	35.4	36.6
2007	25.7	16.9	27.8	35.1	36.8	41.0
2008	27.6	19.0	29.5	37.5	42.6	39.5
2009	29.4	20.8	30.8	36.6	45.3	45.9
2010	30.5	20.3	35.1	43.0	42.6	44.4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 나. 국민연금 수급률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05년 15.9%에서 2010년 24.8%로 증가하였다. 분위별로는 중간분위(2분위, 3분위, 4분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분위가 31.1%로 가장 높았으며, 3분위가 30.4%로 두 번째로 높았다. 그리고 1분위가 19.6%로 가장 낮았다.

〈표 8-12〉 분위별 국민연금 수급률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15.9	13.8	17.0	19.9	19.7	15.0
2006	18.8	15.0	21.1	22.7	25.4	21.0
2007	20.4	16.4	24.1	24.9	19.7	27.2
2008	22.4	18.5	25.7	26.5	28.6	23.5
2009	24.1	20.2	26.6	25.3	30.9	30.9
2010	24.8	19.6	31.1	30.4	30.0	25.6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 3.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본 절에서는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경험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경험률은 저소득층 대상 프로그램의 이용경험을 나타내며, 지역, 가구규모별, 가구형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 아동, 장

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서비스와 각 취약계층 대상별 프로그램을 포괄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 가.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경험률

주거지원 프로그램 중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2005년 2.20%에서 2006년 1.45%로 감소하였다가 2010년까지 2.42%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5년에 비해 2010년에는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소도시, 농어촌 순이다. 구체적으로는 대都市는 2005년 3.15%에서 2010년 3.62%로, 중소도시는 2005년 1.55%에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어촌은 2005년과 2006년에는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이 전혀 없었지만, 2007년에 0.09%, 2010년 0.65%로 나타났다.

〈표 8-13〉 지역별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2.20	3.15	1.55	0.00
2006	1.45	2.89	0.19	0.00
2007	1.80	3.20	0.69	0.09
2008	2.39	3.20	2.02	0.00
2009	2.53	3.65	1.68	1.02
2010	2.42	3.62	1.55	0.65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가구규모별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가구 규모가 작을수록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이 높고, 가구 규모가 클수록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이 낮았다.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는 2010년 4.82%가 이용경험이 있었지만 6인 이상 가구에서는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이 있는 가구가 없었다.

〈표 8-14〉 가구규모별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

(단위: %)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2005	2.20	2.83	2.67	2.50	1.62	1.08	0.00
2006	1.45	2.68	2.05	1.06	0.81	0.57	1.56
2007	1.80	3.90	2.05	1.67	0.84	0.90	0.00
2008	2.39	4.73	2.52	2.00	1.23	1.51	0.00
2009	2.53	4.71	2.60	1.94	1.41	2.62	0.71
2010	2.42	4.82	2.20	1.93	0.93	1.72	0.00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을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 가구는 2005년 2.53%에서 2007년에는 1.87%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하여 2010년 2.73%로 나타났다. 여성가구주 가구는 2005년 4.31%에서 2006년 3.69%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2007년부터 증가하여 2010년에는 5.55%로 확인되어 2005년보다 다소 높아졌다. 한편, 모부자 가구는 2005년 6.05%에서 2007년 4.11%로 감소했다가 2010년에 13.55%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8-15〉 가구형태별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

(단위: %)

	전체	노인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모부자 가구
2005	2.20	2.53	4.31	6.05
2006	1.45	1.89	3.69	4.59
2007	1.80	1.87	4.12	4.11
2008	2.39	2.61	4.53	8.48
2009	2.53	2.66	5.09	6.89
2010	2.42	2.73	5.55	13.55

주: 1) 노인 가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2) 모부자가구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만 17세 이하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의미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가 가장 이용경험률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농어촌, 대도시 순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도시는 2005년 0.66%에서 2010년 1.14%로, 중소도시는 2005년 1.61%에서 2010년 2.32%로, 농어촌은 2006년 0.35%에서 2010년 1.17%로 나타났다.

〈표 8-16〉 지역별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률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1.03	0.66	1.61	0.00
2006	1.25	1.83	0.81	0.35
2007	1.39	0.75	2.16	0.83
2008	1.62	0.86	2.38	1.80
2009	1.36	1.02	1.78	1.09
2010	1.67	1.14	2.32	1.17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가구규모별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률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1인가구와, 2인 가구는 각각 1.88%, 1.91%로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3인 가구가 1.8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이용경험률이 낮은 가구규모는 6인 가구로 0.66% 수준이었다.

〈표 8-17〉 가구규모별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률

(단위: %)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2005	1.03	0.53	1.32	1.13	0.89	1.69	0.00
2006	1.25	0.78	1.69	1.42	1.01	1.54	0.56
2007	1.39	0.76	1.53	1.72	1.13	2.53	0.52
2008	1.62	0.84	1.59	1.92	1.83	2.54	0.70
2009	1.36	0.92	1.35	1.92	1.22	1.58	1.34
2010	1.67	1.88	1.91	1.84	1.30	0.98	0.66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률을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인 가구는 2005년 1.07%에서 2006년 0.88%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0년까지 1.74%로 증가하였다. 여성가구주 가구는 2005년 0.77%에서 2010년 2.05%로 1.28%p 증가하였다. 한편, 모부자 가구는 2005년 3.39%에서 2010년 2.7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8〉 가구형태별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률

(단위: %)

	전체	노인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모부자 가구
2005	1.03	1.07	0.77	3.39
2006	1.25	0.88	1.83	6.23
2007	1.39	0.98	1.74	7.65
2008	1.62	1.34	1.58	6.94
2009	1.36	1.15	2.22	9.78
2010	1.67	1.74	2.05	2.77

주: 1) 노인 가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2) 모부자가구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만 17세 이하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의미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 나.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중에서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의 이용경험률을 살펴본 결과, 2005년 19.1%에서 2010년 78.4%로 이용경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이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게 된 것은 기초노령연금 시행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2009년에는 그 혜택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살펴볼 수 있다.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1개 이용한 이용률은 2010년 37.3%, 2개 프로그램 이용률은 20.7%로 나타났다.

〈표 8-19〉 노인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단위: %)

	이용경험 있음	이용 서비스수		
		1개	2개	3개 이상
2005	19.1	8.3	4.1	6.8
2006	21.9	9.8	3.1	9.0
2007	24.6	11.7	3.8	9.1
2008	66.4	43.9	11.4	11.1
2009	81.0	40.0	25.9	15.1
2010	78.4	37.3	20.7	20.4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 다. 아동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만 5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2005년 26.5%가 보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53.8%가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아동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만 5세 미만 아동이 1명이 있는 가구 중에서 51.5%가 보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2명 이상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66.8%가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보육지원 서비스 이용경험률이 급격하게 증가된 이유는 2009년부터는 양육수당을 포함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8-20〉 만 5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보육지원 서비스 이용경험률

(단위: %)

	이용경험 있음	만 5세 미만 아동 수	
		1명	2명 이상
2005	26.5	25.2	32.1
2006	31.1	29.0	39.7
2007	37.3	34.5	47.5
2008	39.5	36.4	52.5
2009	52.3	50.6	60.5
2010	53.8	51.5	66.8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중고생이 있는 가구의 1년간 학비지원 서비스 이용경험률은 2005년 12.5%에서 2010년 26.5%로 서비스 이용경험률이 증가하였다. 중고등학생이 1명이 있는 가구에서는 2010년 25.4%가 서비스 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명 이상의 중고생이 있는 가구에서의 학비지원 서비스 이용경험률은 28.8%로 분석되었다.

〈표 8-21〉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의 학비지원 서비스 이용경험률

(단위: %)

	이용경험 있음	중고등학생 수	
		1명	2명 이상
2005	12.5	10.5	15.8
2006	18.4	16.8	21.2
2007	20.4	17.6	25.2
2008	19.8	16.2	26.1
2009	23.8	23.4	24.7
2010	26.5	25.4	28.8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 라.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은 2005년 28.1%에서 2010년 43.6%로 증가하였다.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중 1개의 프로그램만 이용한 사람은 2010년 33.5%, 2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은 6.4%, 3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은 3.73%로 나타났다.

〈표 8-22〉 장애인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단위: %)

	이용경험 있음	이용 서비스 수		
		1개	2개	3개 이상
2005	28.1	25.4	2.5	0.22
2006	33.3	29.4	3.8	0.19
2007	31.4	26.9	3.8	0.69
2008	37.7	31.8	4.1	1.81
2009	41.8	34.8	4.4	2.63
2010	43.6	33.5	6.4	3.73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 마.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다음으로는 노인 가구, 아동 가구, 장애인 가구를 모두 포괄하는 취약계층의 복지 서비스 이용경험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8-23〉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단위: %)

	이용경험 있음	이용 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2005	15.5	5.1	18.3	3.8
2006	19.8	6.3	22.8	5.1
2007	21.6	7.6	25.6	5.1
2008	31.9	19.0	26.2	6.1
2009	37.0	22.5	31.0	6.9
2010	37.5	23.5	33.8	7.3

자료: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원자료

우선, 취약계층의 전체적으로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은 2005년 15.5%에서 2010년 37.5%로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는 2005년 5.1%에서 2010년 23.5%로 증가하였으며, 아동복지서비스는 2005년 18.3%에서 2010년 33.8%로, 장애인복지서비스는 2005년 3.8%에서 2010년 7.3%로 증가하였다.

##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본 장을 통해 공공부조제도 수급률, 공적연금제도 수급률,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경험률에 대한 지표를 살펴보았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2005년에 비해 약 1.7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제도를 생활비 및 소득 대비 보장수준을 살펴보면 보장 수준이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지역이 보장수준이 낮았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40% 내외의 보장수준을 보였으며, 모부자가구는 보장수준이 특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해결방안 모색뿐만 아니라 국민기초 보장 수준의 다양화를 위한 급

여체계를 개편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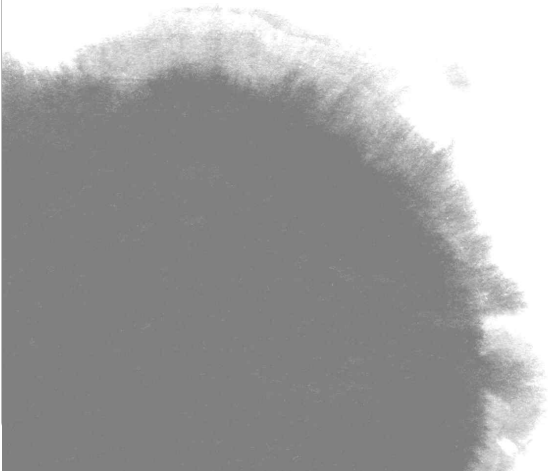
공적연금 수급률과 국민연금 수급률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수급률이 낮았으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수급률이 높게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의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가입의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인 가구, 이동 가구, 장애인 가구를 모두 포괄하는 취약계층의 복지 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서비스와 이동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이용률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절반 정도의 취약계층만이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좀 더 서비스가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9장

## 가구균등화지수가 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제9장 가구균등화지수가 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제1절 서론

### 1. 연구의 목적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같은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 복지(economic well-being)를 연구하고자 하는 경우, 욕구를 반영하여 소득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생긴다. 동등화척도(equivalence scales)를 이용하면 욕구에 영향을 주는 가구특성을 반영하여 조정된 소득을 얻을 수 있다.<sup>45)</sup> 오래 전에는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가구원 1인당 소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 경우에는 가구소비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가구원수 외에도 거주지역, 가구형태, 주거유형, 가구를 구성하는 성인 및 아동의 연령대 등도 중요한 가구 특성이 된다. 많은 경우 가구원수만을 이용하여 동등화 척도를 계산하기도 하며, 성인 및 자녀의 수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가구의 욕구는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 커진다. 그러나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반드시 비례적이지는 않다. 가령, 주거공간이나 전기사용량의 경우 가구원수에 비례하지는 않는다. 추가적인 구성원의 증가에 따른 욕구의 증가분을 나타내는 지표가 동등화척도인데, 가구원수와 가구원들의 연령별 구성(성인 또는 자녀의 수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상당히 다양한 동등화척도가 개발되었으며, Atkinson, et al. (1995)에서는 이들간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다. 탄력성의 값

---

45) 동등화척도를 균등화척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이들을 구별없이 혼용하기로 한다.

이 작을수록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는 더 크게 나타난다.

동등화지수를 적용하면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의 소득이 가구원수가 적은 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어들게 된다(집중효과). 동등화지수는 동일한 가구유형 내에서는 모든 가구의 소득을 동일한 비율로 변화시키므로 중립적이며,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얻은 결과의 차이는 주로 가구유형별 차이에 기인한다. 그런데 동등화지수로 인하여 소득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생긴다. 동등화지수의 효과는 소득집중효과와 소득순위재설정효과의 합으로 나타난다.

동등화척도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욕구를 계산함에 있어 가구원이 한 사람씩 추가될 때 얼마만큼의 욕구를 더해주는가 하는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한 극단적인 예로, 조정을 하지 않고 가구소득을 그대로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이와는 정반대로 규모의 경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가구원 1인당 소득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현재 주로 사용되는 균등화척도는 대부분 이들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연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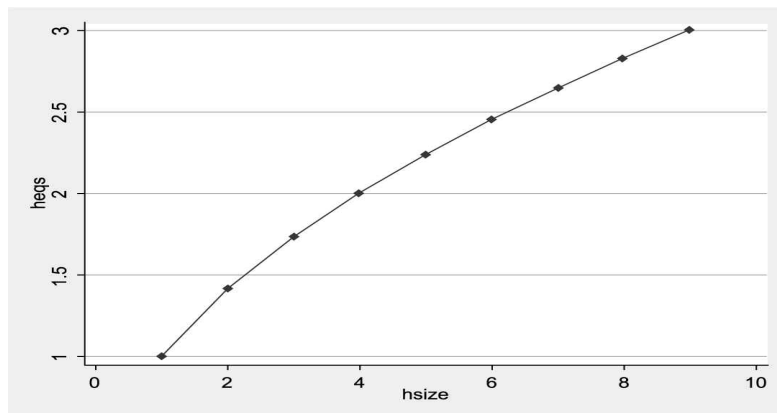
소득분배를 연구할 때 분석단위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이유는 궁극적인 관심대상은 개인의 복지(welfare of the individual)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연구에서는 개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어린이나 가사에 종사하는 전업 주부들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소득은 없지만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을 함께 사용하면서 높은 생활수준을 향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개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기 보다는 가구를 하나의 분석단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초창기의 연구에서는 가구 총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값인 가구원 1인당 소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대부분의 소득분배 연구에 있어서 균등화지수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균등화척도(equivalence scale)란 소득과 가구특성 벡터로부터 조정된 소득을 구하는 함수를 말한다. 균등화지수의 일반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W = D/S^E$$

여기서  $W$ 는 균등화된 소득,  $D$ 는 가구소득,  $S$ 는 가구 규모, 그리고  $E$ 는 균등화 탄력성을 각각 나타낸다. 균등화탄력성은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E$ 값이 클수록 규모의 경제는 작아지게 된다. 규모의 경제가 완전한 경우에는 균등화탄력성( $E$ )의 값이 0이 되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이 된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완전한 경우에는 조정된 소득은 곧 가구의 소득이 되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된 소득은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값과 같아진다.

동등화지수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김우철 외(2006, p. 23)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유를 소개하고 있다. 첫째는 소비재 중 일부는 공공재(public goods)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측면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에서는 대량구매로 인한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동등화지수는 가구원수에 대해 오목한(concave) 함수의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가령, 균등화지수가 가구원수의 제곱근인 경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9-1] 균등화지수와 가구원수의 관계



이처럼 균등화 척도에 따라 조정된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분석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LIS(Luxembourg Income Study)의 경우 균등화탄력성 값으로 0.5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1인 가구 소득은 2인 가구 소득의 70%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또 달리 말하면, 2인 가구는 1인 가구 소득의 140%를 가질 때 동등하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국제비교의 경우 균등화지수에 따라 연구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ECD에서 사용하는 균등화지수는 두 가지인데, Original scale과 Modified scale이 그것이다. OECD Original scale은 첫 번째 성인은 1을 부여하고 두 번째 성인부터는 0.7, 그리고 14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0.5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척도는 Oxford scal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Modified OECD scale이란 첫 번째 성인에게는 1, 두 번째 성인부터는 0.5, 그리고 14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0.3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text{OECD Original eq. Scale} = 1 + 0.7*(na-1) + 0.5*nc14$$

$$\text{OECD Modified eq. Scale} = 1 + 0.5*(na-1) + 0.3*nc14$$

여기서 na는 성인의 수, 그리고 nc14는 14세 이하의 어린이 수를 나타낸다.

다음의 <표 9-1>은 대표적인 균등화척도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1열은 성인 및 아동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2열의 Full share는 규모의 경제가 완전한 경우를 나타내는데, 이 경우 가구소득이 곧 균등화소득이 된다. 3열은 LIS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곱근 형태의 동등화척도이고, 4열은 수정된 OECD scale, 그리고 Oxford scale은 OLD OECD scale을 말한다. 마지막 열의 No share는 규모의 경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 경우의 균등화된 소득은 가구원 1인당 소득과 같다.

<표 9-1>의 마지막 행은 각 척도로부터 도출된 동등화탄력성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완전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탄력성이 0이 되며, 제곱근 형태의 경우에는 탄력성이 0.5가 되어 동등화 탄력성의 크기와 규모의 경제 파라미터가 같아진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등화탄력성의 크기가 1이 된다.

〈표 9-1〉 균등화 지수와 탄력성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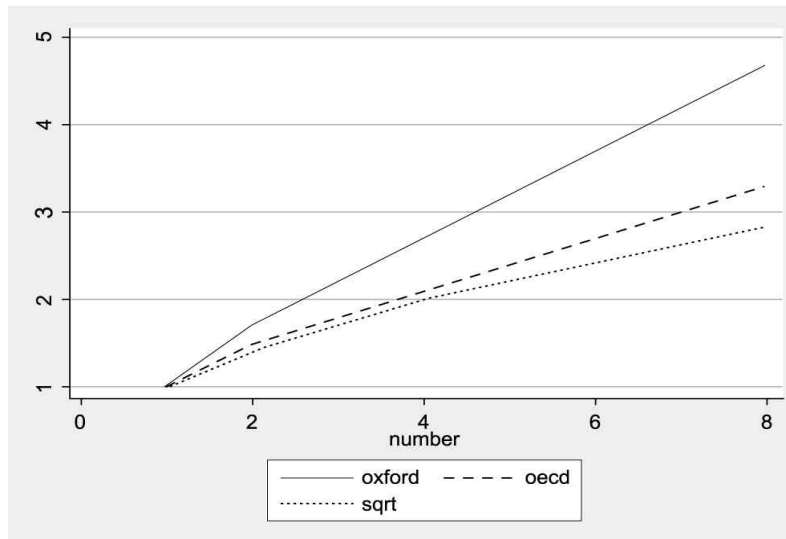
(A, C)	Full Share	square root	OECD Modified	Oxford	No share (Per capita)
(1, 0)	1	1.000	1.0	1.0	1
(2, 0)	1	1.414	1.5	1.7	2
(2, 1)	1	1.732	1.8	2.2	3
(2, 2)	1	2.000	2.1	2.7	4
(2, 3)	1	2.236	2.4	3.2	5
(2, 4)	1	2.449	2.7	3.7	6
(2, 5)	1	2.646	3.0	4.2	7
(2, 6)	1	3.000	3.3	4.7	8
탄력성	0	0.500	0.557	0.733	1.00

주: 1) (A, C)는 (성인수, 아동수)임

2) OECD Modified scale, Oxford scale의 탄력성은 근사값임.

[그림 9-2]는 이들 균등화지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장 위에 위치한 것이 Oxford scale, 가운데가 Modified OECD scale, 그리고 맨 밑이 LIS의 가구원수 제공근이다. 그리고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Full share인 경우는 1에서 수평선이 되며, No share인 경우는 1에서 출발하는 우상향의 45도 선이 된다.

[그림 9-2] 균등화 지수의 비교



주: oxford는 Old-OECD scale, oecd는 Modified OECD scale, sqrt은 (가구원수)<sup>0.5</sup>임.

과거에는 국가간 비교의 관점에서 동등화척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나, 한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 가령 빈곤을 분석함에 있어서 어떤 균등화 척도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빈곤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동등화지수는 불평등도를 분석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득불평등도란 결국 후생수준의 불평등도를 의미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실증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보다는 가구단위의 소비지출을 대상으로 후생수준을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소비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동일한 소득을 가진 가구라고 하더라도 가구원수나 가구의 구성에 따라 후생수준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가구별 특성을 종합한 정보집합인 동등화지수를 이용하여 불평등 정도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분석에 사용된 균등화척도에 따라 빈곤과 불평등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살펴보고자하는데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음 절에서 균등화척도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3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할 균등화 척도의 종류와 미시자료의 특징을 소개한다. 제 4절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마지막 절에서는 요약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기존연구의 개관

Buhmann, et al. (1988)에서는 Luxembourg Income Study (LIS)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OECD국가들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정도가 동등화지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여러 국가들에서 사용중인 동등화지수를 수집한 다음, 이를 가구원수의 함수로 변환하여 탄력성을 계산하였다. 이렇게 구한 탄력성의 값이 1에 가까우면 가구 구성원의 증가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작고, 반대로 탄력성의 값이 0에 가까우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들에 따르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탄력성의 값은 0.25, 0.36, 0.55, 0.72로 상당히 범위가 넓으며,

동등화최도의 선택과 빈곤 및 불평등도와는 체계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간 빈곤 및 불평등도의 비교 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Coulter, et al. (1992)에서는 가구원수의 함수로 표시한 동등화지수의 탄력성 값을 이용하여 영국 가계지출조사(BHPS)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탄력성의 값이 점차로 높아질수록 지니계수는 처음에는 점차 낮아지다가 다시 상승하는 U자 형태를 나타냄을 발견하였는데, 이러한 효과는 집중효과와 순위재설정효과의 합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지적하고 있다.

효용최대화 모형으로부터 도출되는 수요함수체계를 통하여 엔겔곡선을 추정하려는 시도는 Muellbauer (1976)의 PIGLOG 모형, Deaton and Muellbauer (1980)의 준이상형 수요체계, 그리고 Jorgenson, et al. (1982)의 translog 모형으로 발전하였다. Banks, et al., (1997)은 2차식 형태의 이상형수요함수체계(Quadratic Almost Ideal Demand System)을 이용하여 엔겔곡선을 추정하였다. 이들은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영국에 있어서의 간접세 개편이 가져오는 후생 이득(welfare gain)을 측정하였다.

동등화지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연구로는 김광석·김대영(1979), 구성열(1982) 등을 들 수 있다. 김광석·김대영(1979)은 Prais-Houthakker 반복추정법을 적용하여 가구규모의 차이에 따른 소비지출의 차이(소비율의 성별 및 연령대별 차이)를 추정하고자 하였으나, 추정결과와 불안정성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소비지출 항목별로는 상당한 변화를 보이던 소비지출이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규모에 대한 탄력성과 소비율이 1에 가까운 값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구성열(1982)은 1978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표본특성을 분석하여 얻은 초기치를 이용하여 김광석·김대영(1979)에서와 같이 반복추정방법을 시도하였다. log-log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전품목에 대한 규모의 탄력성은 0.711이었으며, 품목별로 살펴보면 주거비 0.489, 광열비 0.530, 식료품 0.655, 잡비가 1.1로 나타났다.

유종구·주학중(1986)에서는 Jorgenson-Slesnick (1984)이 소개한 trans-log 형태의 간접효용함수(indirect utility function)가 각 가구의 선호를 대표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동등화지수를 도출하였다. 이들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도시가계연보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인가구를 기준가구로 보고 총지출 및 품목별 동등화지수를 도출하였다. 품목별 소비지출의 경우 ‘음식료품’, ‘주거 및 집기’, ‘광열 및 수도’, ‘의류 및 신발’, 그리고 ‘기타 지출’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들은 또 취업형태별 및 가구주 연령대별 동등화지수를 계산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이 20대 후반인 가구와 봉급생활자가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소비지출을 하고 있으며,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규모의 경제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지출항목별로는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품목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며, 기본적인 도시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25~29세인 2인가구인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도시의 2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국적인 대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분석에 사용된 자료 또한 개별 가구에 대한 관찰치가 아니고 관심대상 계층별 평균치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동등화단위를 추정함에 있어 가구원수별, 가구주 연령대별 등의 특성이 동시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유종구·주학중(1987)에서는 유종구·주학중(1986)에서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되 가격에 대한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하여 1984년 한 해의 횡단자료에 1965~1984년간 시계열자료를 추가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가구 특성으로는 가구주 직업, 가구규모, 가구주 연령대를 통하여 파악하였으며, 가구원수가 2인이고 가구주 연령대가 25~29세인 경우를 기준가구로 삼았다.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품목별 가구동등화단위를 살펴보면 일용근로자-자영업자-봉급생활자의 순서로 높아지고 있다. 둘째 가구원수의 경우 3인에서 4인으로 증가할 때 균등화지수가 급등하고 있었다. 셋째,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24세 이하 가구에 비하여 25~29세 및 그 이상 연령대의 가구가 더 큰 균등화지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광열 및 수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품목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고 있었다. 다섯



째, 전체 소비지출에 대하여 살펴보다라도 첫째와 둘째의 특징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욱(2000)에서는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에 음식료품비 비중에 바탕을 둔 Engel 접근법과 확장된 선형지출방정식 체계(Extended Linear Expenditure System, ELES)를 적용하여 소비지출을 10개 품목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엔겔 접근법과는 달리 ELES에 의한 동등화 소비단위는 기준이 되는 가계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교육비를 제외한 주거비,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등의 지출은 가구 원수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지출의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일 때 가장 큰 규모의 경제가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김진욱(2003)에서는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수준을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으로 구분하고 각 소득 계층별 동등화 소비단위를 계산하였다. 소득수준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중위소득의 50%이하는 빈곤층, 그리고 중위소득의 150% 이상은 부유층으로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은 부유층의 경우 선진국의 동등화 소비단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 내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을 위해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등화 소비단위는 현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김우철·민희철·박상원(2006)은 수요함수접근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식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차식 형태의 準이상적 수요함수체계(Quadratic Almost Ideal Demand System, QUAIDS)를 채택하였다. 이 방법은 모형의 선형성 한계를 극복하고, 지출독립성과 같은 식별조건을 충족시키는 분석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1999~2004년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 연령이 20~59세이며 성인 2명과 자녀 2명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기준가구로 설정하고 동등화지수를 추정하였다. 準이상적 수요함수체계에 의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엔겔 접근법에 비하여 동등화지수의 추정치가 1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을 발견하였으며, LIS의 동등화지수는 자녀수의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는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하는 반면, 성인수 증가에 따르는 규모의 경제 효과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생계비 지원정책에 활용하는 동등화지수는 자녀수의 추가에 대한 소요비용을 상대적

으로 과대평가하고 있어서 소자녀 가구나 성인이 많은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진·송헌재(2010)는 노동패널의 설문항목인 만족도 자료를 이용하여 주관적 동등화지수를 추정하였다. 소비자선택이론에서 얻어지는 기존의 동등화지수와는 달리 가계의 주관적인 만족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동등화지수의 탄력성 값은 0.6828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행 최저생계비 계산에서 얻어지는 탄력성의 크기와 매우 유사하며, 이를 이용한 최저생계비는 정부 최저생계비와 유사함을 발견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미시자료를 소개하고 분석에 사용된 불평등 및 빈곤 척도를 살펴본다.

### 제3절 자료 및 분석방법

#### 1. 자료에 대한 설명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2006년도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sup>46)</sup> 2006년의 최초 표본 규모는 7,072가구이고, 2010년의 5차 년도 조사에서 조사가 완료된 가구는 6,034 가구로서 85.3%의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가계조사의 경우는 농어가가 제외되어 있고, 노동패널의 경우는 표본이 도시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KOWEPS의 경우 조사대상 가구에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가구유형으로는 농가구를 포함하고 있어 전국대표성을 가진다.

한국복지패널은 신뢰성이 높은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패널조사이다. 기존 국내 대부분의 패널은 패널 구축 초기 소득수준이 통계청의 80% 내외이나, KOWEPS는 소득 및 지출 수준이 통계청의 가계조사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거나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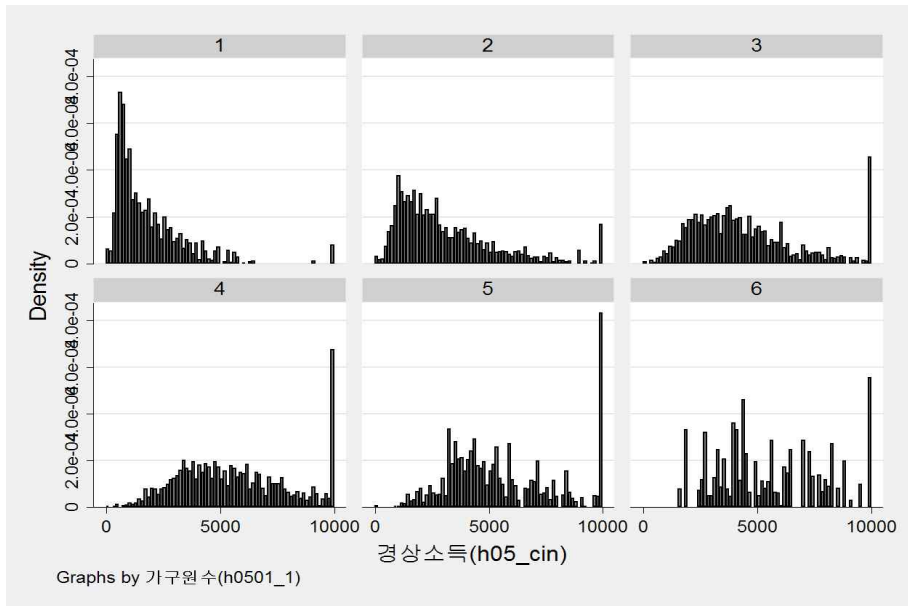
---

46) 자세한 내용은 한국복지패널조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주소는 <http://www.koweps.re.kr>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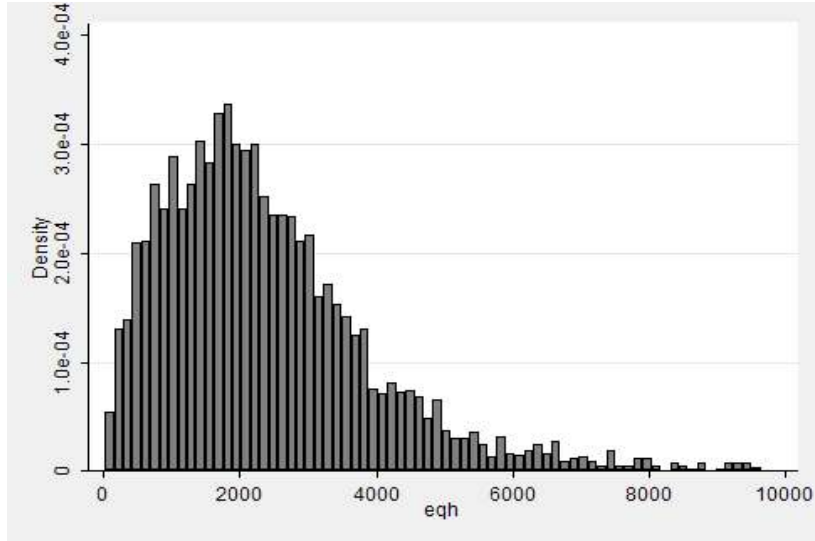
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타 패널조사에 비해 원가구 유지율이 매우 높은 패널로서, 2차 92.1%, 3차 86.7%, 4차 83.9%, 그리고 5차 80.3%의 원표본유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 KOWEPS는 저소득층 연구에 적합한 패널조사인데, 표본 추출 시 중위소득 60%미만 저소득층에 표본의 50%를 할당하였기 때문에 국내 패널조사 중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괄하고 있다(강신욱 외, 2011).

[그림 9-3]은 가구원수별 경상소득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9-4]는 가구원수의 제공근으로 균등화한 경상소득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9-3] 가구원수별 경상소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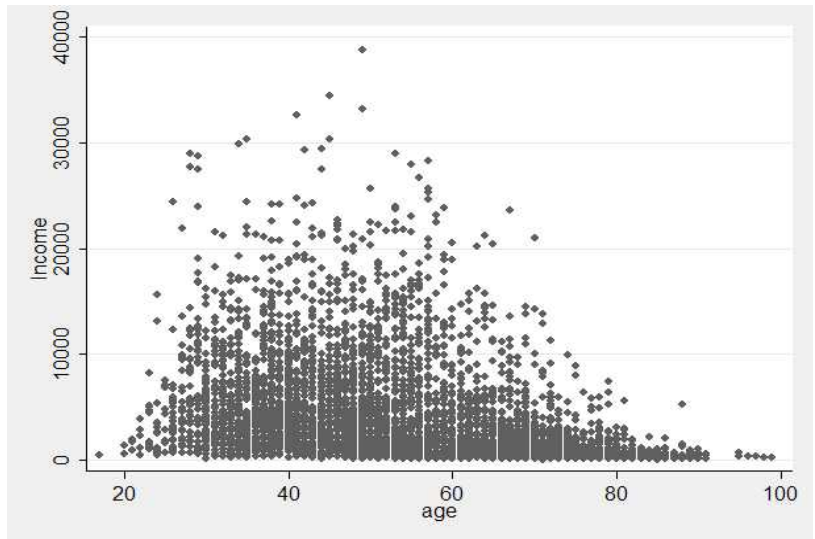
[그림 9-4] 균등화된 경상소득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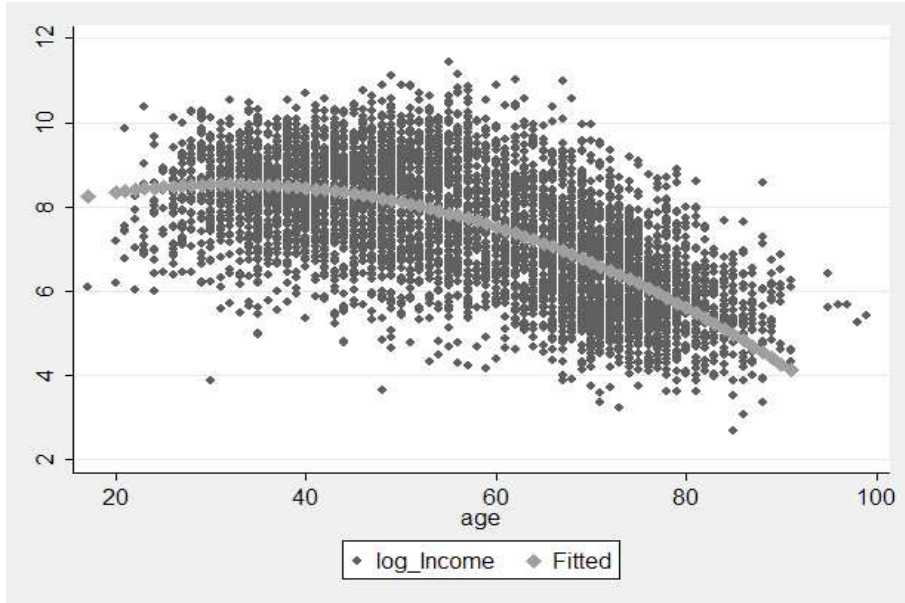
주: 균등화 척도로 가구원수의 제곱근을 사용하였음.

다음의 [그림 9-5]는 소득과 연령의 산포도를 나타낸 것인데, 대수변환한 소득과 연령의 산포도는 [그림 9-6]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9-5] 소득연령의 산포도



[그림 9-6] 로그 소득과 연령의 산포도



주: 회색선은 중위회귀 (quantile regression) 방법으로 구한 2차식 추세를 나타낸다.

## 2. 분석방법

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5차 조사 자료의 가처분소득에 Luxemburg Income Study에서 채택하고 있는 top-/bottom-coding 방식을 수정하여 적용하였다.<sup>47)</sup> 여기서 가처분소득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경상소득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고, 외국의 연구에서 경상소득보다는 가처분소득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우선 음(-)의 소득은 0으로 대체한 다음, 평균을 구한 뒤 평균값의 1% 이하는 1%에 해당하는 경계값으로 대체(bottom-coding)하였다. 다음으로 다시 평균을 구한 뒤 중위값의 10배를 넘는 값은 다시 그 경계값으로 대체(top-coding)하였다.

47) LIS에서는 0 또는 그 이하는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가. 불평등 지수

지니계수로 대표되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는 일반적으로 다음 다섯 가지 공리에 기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 공리체계란 익명성(anonymity), 소득동차성(income homogeneity), 인구동차성(population homogeneity), 이전원칙(transfer principle), 그리고 분해가능성(decomposability)의 다섯 가지를 말한다. 익명성은 대칭성(symmetry)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사회구성원이 동일할 때 그들의 소득만 바뀌는 경우 소득불평등도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소득동차성은 규모비의존성(scale independence)이라고도 하며 구성원의 소득이 모두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소득불평등도에는 변화가 없음을 뜻한다.<sup>48)</sup> 인구동차성은 인구비의존성이라고도 하는데, 기존 사회구성원들의 소득분포와 동일한 소득분포를 가지는 구성원들이 복제되어 두 소득분포가 합해지더라도 소득불평등도에는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전원칙은 피구-달톤의 이전원칙(Pigou-Dalton's principle of transfer)이라고도 하는데, 사회 구성원의 전체 평균소득은 변화하지 않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소득을 이전한다면(mean-preserving income transfer) 사회 전체의 소득불평등은 감소함을 의미한다. 분해성은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분 집단의 불평등도가 변하는 경우 전체의 불평등도 또한 같은 방향으로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일반화된 엔트로피(generalized entropy) 지수는 불평등도에 관한 다섯 가지의 공리체계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well, 2000). 이들 일반화된 엔트로피 부류의 지수들은 그룹내(within group) 및 그룹간(between group) 불평등도로 쉽게 분해되고, 분해된 각 불평등도의 합은 전체 불평등도와 일치한다는 특징이 있다.

가구소득 불평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여기서는 지니계수와 엔트로피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실증분석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지니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48)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규모비의존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또 절대적 지니계수(absolute Gini coefficient) 역시 이 원칙에 위배된다.

$$\text{Gini} = \frac{1}{\mu n^2} \sum_{i=1}^N \sum_{j=1}^N w_i |y_i - y_j| \quad (1)$$

여기서  $\mu$ 는  $y$ 의 산술평균( $\mu \equiv \frac{1}{n} \sum y_i$ ),  $y_i$  및  $y_j$ 는  $i$ 번째 및  $j$ 번째 가구의 소득,  $w_i$ 는 가구가중치, 그리고  $N$ 은 표본의 크기를 의미하는데, 가구가중치의 합은 1이다( $\sum w_i = 1$ ).

불평등 요인별 분해에 많이 쓰이는 일반화된 엔트로피(Generalized Entropy; GE) 지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ext{GE}(\alpha) = \frac{1}{\alpha(\alpha-1)} \left[ \frac{1}{N} \sum_{i=1}^N w_i \left( \frac{y_i}{\mu} \right)^\alpha - 1 \right] \quad (2)$$

GE값의 범위는 0에서부터 무한대( $\infty$ )까지인데, 모든 자산이 동일하여 분배상태가 완전히 균등한 경우에 최소치 0을 가지며, 분배상태가 불평등할수록 그 값은 커진다. 또  $\alpha$  값이 작을수록 하위계층의 소득변화에 민감하며,  $\alpha$  값이 클수록 상위계층의 소득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alpha$  값으로는 0, 1, 2를 주로 사용한다.  $\alpha = 0$ 인 경우 Theil의 L index 또는 로그편차평균(mean log deviation, MLD)이라고 부른다.

$$\text{GE}(0) = \frac{1}{N} \sum_{i=1}^N w_i \log \left( \frac{\mu}{y_i} \right) \quad (3)$$

또  $\alpha = 1$ 인 경우에는 Theil의 T index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구한다.

$$\text{GE}(1) = \frac{1}{N} \sum_{i=1}^N w_i \left( \frac{y_i}{\mu} \right) \log \left( \frac{y_i}{\mu} \right) \quad (4)$$

다음으로 GE지수의 불평등도 요인 분해 공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그룹(population group)에 대한 구성그룹별 요인분해는 모그룹을 인구학적 속성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전체 불평등도를 그룹간(between-group) 불평등도와 그룹내(within-group) 불평등도로 분해할 수 있다.

$$GE(\alpha) = \sum_{k=1}^K v_k \lambda_k GE_k(\alpha) + \overline{GE}(\alpha) \quad (5)$$

여기서  $GE_k(\alpha)$ 는 그룹  $k$ 의 불평등 척도,  $v_k$ 는 그룹  $k$ 가 모그룹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 ( $\equiv n_k/n$ ),  $\lambda_k$ 는  $k$ 번째 그룹 평균값의 모그룹 평균값에 대한 비율 ( $\equiv \mu_k/\mu$ ),  $\overline{GE}(\alpha)$ 는 각 개별그룹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 그룹별 평균값을 배정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모집단 불평등 척도이다. 위 식에서 좌변은 모그룹 전체 불평등도, 우변의 첫째 항은 개별 그룹내 불평등도의 가중평균, 그리고 우변의 둘째 항은 그룹간 불평등도를 각각 나타낸다.

소득불평등도(inequality)·빈곤(poverty)·후생(welfare)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인데, 소득불평등도는 빈곤보다는 좀 더 폭넓은 개념이다. 빈곤기준선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가구(또는 개인)의 비율로 나타나는 빈곤율은 분포의 아래 부분에만 관심을 두는 반면 불평등도는 분포의 중간과 윗부분에도 의미를 둔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후생이라는 개념은 불평등도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쓰인다. 양자 모두 전체적인 분포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불평등도는 분포의 분산에 관심을 두는 반면 후생은 평균도 동시에 감안하기 때문이다.

### 3. 빈곤지수

빈곤 연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빈곤 척도는 FGT(Foster-Greer-Thorbecke) 지수인데, 그 이유는 파라미터( $\alpha$ ) 값에 따라 다양한 빈곤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FGT 지수는 한 경제 내의 빈곤을 측정하는 일반적 척도이며, 이 지표를 이용



하면 빈곤의 규모, 빈곤의 심도, 그리고 불평등 정도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괄할 수 있다. 수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GT(\alpha) = \frac{1}{N} \sum_{i=1}^H \left(1 - \frac{y_i}{z}\right)^\alpha \quad (6)$$

여기서  $z$ 는 주어진 빈곤선,  $N$ 은 표본의 크기,  $H$ 는 소득이  $z$ 보다 아래인 사람들의 수, 그리고  $y_i$ 는 개개인의 소득을 각각 나타낸다.  $\alpha$ 는 민감도 파라미터인데, 이 값이 작을수록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과 위의 사람들의 빈곤이 동일하게 반영되고, 이 값이 클수록 빈곤선 아래의 사람들에 대해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그리고 FGT 지수 값이 클수록 빈곤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FGT 지수의 가장 큰 특징은  $\alpha$  값에 따라 다양한 빈곤지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alpha = 0$ 인 경우에는 빈곤율(headcount ratio, HCR), 즉 빈곤선 아래에 있는 인구비율을 나타낸다.

$$FGT(0) = \frac{H}{N} \quad (7)$$

$\alpha = 1$ 인 경우에는 평균 빈곤갭을 나타낸다.

$$FGT(1) = \frac{1}{N} \sum_{i=1}^H \left(1 - \frac{y_i}{z}\right) \quad (8)$$

이 값은 빈곤인구를 퇴치하기 위해 각 개인이 지불해야하는 평균적인 부담의 크기이다.

$\alpha = 2$ 인 경우의 FGT지수는 다음과 같다.

$$FGT(2) = \frac{1}{N} \sum_{i=1}^H \left(1 - \frac{y_i}{z}\right)^2 \quad (9)$$

이 경우 빈곤과 불평등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FGT(2)$  지수는 아래와 같이 분해 형식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FGT(2) = H\mu^2 + (1 - \mu^2)C_v^2 \quad (10)$$

여기서  $C_v$ 는 빈곤선 이하인 사람들 소득의 변동계수를 나타낸다. 멕시코에서는  $FGT(2)$ 를 정부의 공식적인 빈곤지표로 삼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동등화지수를 이용하여 균등화된 소득을 구한 다음, 불평등 및 빈곤 척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본다.

## 제4절 분석결과

### 1. 불평등 지표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증분석에서 다양한 동등화척도가 이용가능하며, 각각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각각의 동등화 척도를 이용하여 구한 불평등지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9-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니계수는 0.3308부터 0.4024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균등화탄력성이 0인(즉 규모의 경제가 완전한) 경우의 지니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 다른 극단적인 균등화탄력성이 1인 경우의 지니계수는 0.3420인데, Modified OECD scale을 사용한 경우의 지니계수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Full share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균등화척도로부터 얻어진 지니계수는 그 크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

GE(0)에 해당하는 로그 편차 평균(MLD)의 경우에는 Full share에서 최대값(0.3128), 그리고 Oxford scale에서 최소값(0.1939)을 나타내고 있다. GE(1)은

Theil's T에 해당하는데, 최대값은 Full share(0.2834)에서, 그리고 최소값은 Modified OECD scale(0.2005)에서 나타나고 있다. GE(2)는 변동계수 제곱의 절반인데, No share에서 가장 큰 값(0.4006)을, 그리고 Square root(0.2865)에서 가장 작은 값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Full share인 경우와 No share인 경우가 가장 큰 불평등지수 값을 보이고, 최소값은 각 scale에 있어서 골고루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불평등척도의 경우 최소값이 양 극단이 아닌 중간 정도의 탄력성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표 9-2〉 불평등지수

(단위: p)

	Full Share	Square root	Modified OECD	Oxford	No Share
지니계수	0.4024	0.3338	0.3308	0.3322	0.3420
MLD	0.3128	0.1999	0.1948	0.1939	0.2026
Theil 엔트로피	0.2834	0.2011	0.2005	0.2054	0.2229
0.5CV <sup>2</sup>	0.3776	0.2865	0.3004	0.3292	0.4006

주: 1)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GE(0) = MLD (Mean Log Deviation), GE(1) = Theil's Entropy, GE(2) = 0.5\*(Coefficient of Variation)<sup>2</sup>.

## 2. 빈곤지표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동등화지수가 빈곤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본 불평등척도의 경우에서의와 마찬가지로 <표 9-3>은 각 척도별 빈곤지수를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살펴보는 빈곤기준은 상대빈곤이며, 균등화된 중위소득의 50%를 빈곤기준선으로 설정하였다. 상대빈곤기준선은 사용된 균등화척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Full share인 경우의 빈곤선이 가장 높아서 1,776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No share (per capita)인 경우가 가장 낮은 616만원으로 나타났다.

FGT(0)는 빈곤율(headcount ratio)을 나타내는 척도인데, 균등화된 소득이 빈곤

기준선 미만인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Full share(0.2296)이고, 가장 낮은 경우는 No share(0.1191)이다. FGT(1)은 평균 빈곤 갭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빈곤인구의 소득을 모두 빈곤선 위로 올리는데 필요한 금액을 총인구로 나눈 값이다. 평균 빈곤갭 역시 Full share(0.0951)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No share(0.0305)인 경우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FGT(2)는 빈곤뿐만 아니라 빈곤선 이하인 사람들의 소득불평등 정보를 함께 담고 있는데,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Full share인 경우가 가장 큰 값(0.0522)을, 그리고 No share인 경우가 가장 작은 값(0.0127)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빈곤지수의 경우에는 사용된 균등화척도(또는 균등화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일정한 규칙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Full share인 경우(즉 균등화탄력성이 0인 경우) 빈곤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균등화탄력성의 값이 커질수록 상대빈곤의 정도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3〉 상대 빈곤지수

(단위: p, 만원)

	Full Share	Square root	Modified OECD	Oxford	No Share
FGT(0)	0.2296	0.1429	0.1376	0.1273	0.1191
FGT(1)	0.0951	0.0429	0.0393	0.0347	0.0305
FGT(2)	0.0522	0.0192	0.0170	0.0145	0.0127
상대빈곤 기준선	1,776.0	1,133.5	1,008.5	820.9	616.0

주: 1)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FGT(0) = 빈곤율 (Headcount ratio), FGT(1) = 평균 빈곤갭(Poverty Gap)

이제 균등화척도가 절대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절대빈곤선이 주어지면 균등화척도에 따라 절대빈곤지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절대빈곤 기준선을 정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생계비란 ‘한 개인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비를 3년마다 실제로 계측하고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에 대해서는 동등화지수를 이용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고 있다.<sup>49)</sup> 실제측을 하지 않는 중간년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과 생활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다.

다음의 <표 9-4>는 2000년 이후의 최저생계비를 나타낸 것이다.

<표 9-4>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추이

(단위: 만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00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132.6680
2001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136.6480
2002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141.4307
2003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145.6738
2004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150.7723
2005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165.2682
2006	41.8309	70.0489	93.9314	117.0422	135.3242	154.2382	173.1522
2007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181.3848
2008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193.6494
2009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206.2877
2010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211.9607
2011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6

주: 최저생계비 실 계측년도는 1999, 2004, 2007, 2010년임.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표 9-5>는 절대빈곤선을 이용하여 빈곤지표를 추정한 결과이다. 빈곤율은 No share인 경우가 가장 높은 0.1045를 보이고 있으며, Square root인 경우가 가장 낮은 값(0.0279)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 빈곤갭에 있어서도 No share가 가장 높고 (0.0268), Square root가 가장 낮은 값(0.0078)을 보이고 있고, FGT(2)의 경우에도 동일한 패턴이 관찰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포괄적이고 엄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절대빈곤의

49) 이처럼 기준가구와 비교가구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지출수준의 비율이 균등화지수가 된다.

경우 No share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Square root의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나다고 잠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9-5〉 절대 빈곤지수

(단위: p, 만원)

	Full Share	Square root	Modified OECD	Oxford	No Share
FGT(0)	0.0374	0.0279	0.0331	0.0540	0.1045
FGT(1)	0.0099	0.0078	0.0090	0.0133	0.0268
FGT(2)	0.0049	0.0039	0.0043	0.0059	0.0112
절대빈곤 기준선	589.0	589.0	589.0	589.0	589.0

주: 1)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FGT(0) = 빈곤율 (Headcount ratio), FGT(1) = 평균 빈곤갭(Poverty Gap)

3) 절대빈곤 기준선은 2009년의 1인 가구 연간 최저생계비임(49.0845\*12=589.014).

### 3. 불평등지수의 요인분해

다음의 <표 9-6>는 불평등지수인 GE(0)를 가구원수별로 분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가구원수별로 구분해서 보더라도 Modified OECD scale 또는 Oxford scale에서 불평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반면, 균등화 탄력성의 값이 아주 크거나 혹은 아주 작은 경우에는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균등화탄력성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불평등도가 전체적으로 U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6〉 가구원수별 불평등지수의 분해

(단위: %, p)

	(구성비)	Full Share	Square root	Modified OECD	Oxford	No Share
1인 가구	1.0	0.3981	0.3981	0.3981	0.3981	0.3981
2인 가구	13.0	0.2789	0.2789	0.2778	0.2779	0.2789
3인 가구	22.7	0.1763	0.1763	0.1764	0.1762	0.1763
4인 가구	24.7	0.1501	0.1501	0.1474	0.1474	0.1501
5인 가구	17.5	0.1428	0.1428	0.1312	0.1333	0.1428
6인 가구	14.2	0.1165	0.1165	0.1086	0.1100	0.1165
7인 가구	6.0	0.0538	0.0507	0.0461	0.0465	0.0490
전체	0.9	0.3128	0.1999	0.1948	0.1939	0.2026

주: 1)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에 포함시켰음.

#### 4. 빈곤지수의 요인분해

다음은 상대빈곤지수를 가구원수별로 분해한 결과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적용된 균등화 척도와는 상관없이 1인 및 2인 가구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3인, 4인 및 5인 가구에서는 평균 이하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으며, Modified OECD, Oxford 그리고 No share의 경우 6인 이상 가구에서 평균 보다 더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극단에 해당하는 Full share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모두에 있어서 4인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원수가 주어진 경우 동등화탄력성에 따른 빈곤정도는 다양한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 우선 1인 및 2인 가구는 전체 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등화탄력성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빈곤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4인부터 7인 가구의 경우는 동등화탄력성의 값이 커짐에 따라 빈곤정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이하게도 3인 가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높아지다가 다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Modified OECD(탄력성=0.557)에서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표 9-7〉 가구원수별 빈곤지수의 분해

(단위: %, p, 만원)

FGT(0)	(구성비)	Full Share	Square root	Modified OECD	Oxford	No Share
1인 가구	20.2	0.6188	0.4531	0.4073	0.3058	0.1747
2인 가구	22.9	0.3377	0.2906	0.2583	0.2259	0.1814
3인 가구	21.0	0.0866	0.1228	0.1247	0.1168	0.1002
4인 가구	26.7	0.0278	0.0611	0.0633	0.0666	0.0756
5인 가구	7.3	0.0221	0.0653	0.0717	0.0849	0.1094
6인 가구	1.7	0.0125	0.1271	0.1548	0.1714	0.2602
7인 가구	0.3	0.0000	0.1296	0.1499	0.2002	0.5231
전체	100.0	0.2296	0.1429	0.1376	0.1273	0.1191
상대빈곤 기준선		1,776.0	1,133.5	1,008.5	820.9	616.0

주: 1)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에 포함시켰음.

다음은 빈곤지수를 연령대별로 분해한 것이다. 연령대별 빈곤지수의 분해결과에 따르면 25-34세의 경우 Oxford scale에서 최소값(0.0262)을 가지고, 35-44세의 경우 Modified OECD scale에서 최소값(0.0820)을 가지며, 45-54세는 Oxford에서, 55-64세, 65-74세 및 85세 이상은 No share에서 가장 낮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Full share, Square root 및 Modified OECD scale에서 25세 미만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있으나, 25세 미만의 전체 표본에서 1% 이내에 불과하므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65세 이상 연령대에 있어서는 평균 이상의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어서 노인빈곤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노인빈곤 문제는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에 전개될 고령 사회와 관련하여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연령대가 주어진 경우 동등화탄력성의 크기에 따른 빈곤정도를 살펴보면 25-34세, 35-44세, 45-54세 그룹에서는 Modified OECE 또는 Oxford scale에서 가장 낮은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55-64세,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그룹에 있어



서는 탄력성의 값이 가장 큰 No share인 경우에서 빈곤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8〉 연령대별 빈곤지수의 분해

(단위: %, p, 만원)

FGT(0)	(구성비)	Full Share	Square root	Modified OECD	Oxford	No Share
25세 미만	1.0	0.4067	0.1777	0.1387	0.0555	0.0555
25-34세	13.0	0.0895	0.0301	0.0280	0.0262	0.0310
35-44세	22.7	0.0801	0.0886	0.0820	0.0843	0.0991
45-54세	24.7	0.1234	0.0936	0.0989	0.0948	0.0983
55-64세	17.5	0.2079	0.1258	0.1218	0.1086	0.0925
65-74세	14.2	0.5295	0.3707	0.3428	0.2984	0.2402
75-84세	6.0	0.7610	0.6273	0.6016	0.5456	0.4210
85세 이상	0.9	0.9349	0.8846	0.8687	0.7617	0.5977
전체	100.0	0.2296	0.1429	0.1376	0.1273	0.1191
상대빈곤 기준선		1,776.0	1,133.5	1,008.5	820.9	616.0

주: 1)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평등의 경우 균등화지수의 탄력성이 증가함에 따라 불평등도가 U자 형태로 나타났으나, 빈곤의 경우는 혼재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시사점을 정리한다.

##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가구균등화지수란 다양한 가구 특성(즉, 가구원수, 연령구성, 주거형태, 거주지역 등)에 따른 소비지출 수준을 각 가구의 욕구(needs)에 맞추어 조정해주는 디플레이터를 말한다. 소비지수요 분석이나 소득(재)분배 및 빈곤 분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가구균등화지수는 Engel에 의해 처음 소개된 지 벌써 1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균등화지수는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동등화척도에 따라 불평등과 빈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살펴 보았다. 불평등지표로는 지니계수와 일반화된 엔트로피, 그리고 빈곤지표로는 Foster-Grier-Thorbecke(FGT) 지수를 이용하였다. 지니계수나 일반화된 엔트로피와 같은 불평등척도가 동등화탄력성의 값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본 결과, 최소값이 양 극단이 아닌 중간 정도의 탄력성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빈곤지수의 경우에는 사용된 균등화척도(또는 균등화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ull share인 경우(즉 균등화탄력성이 0인 경우) 빈곤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균등화탄력성의 값이 커질수록 상대빈곤의 정도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인 가구의 연간 최저생계비를 절대빈곤선으로 설정하고 동등화탄력성의 크기에 따른 절대빈곤 수준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No share의 경우가 절대빈곤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Square root의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불평등의 그룹별 분해에서는 균등화지수의 탄력성이 증가함에 따라 불평등도가 U자 형태로 나타났으나, 빈곤의 그룹별 분해에서는 다양한 경우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2004년 실계측 이후 OECD동등화지수와 유사하게 최저생계비 동등화지수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가장 최근의 동등화지수는 Oxford scale (Old OECD scale)과 유사한 탄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일정 가구원 수 이상부터는 고정된 금액을 더하는 현행 최저생계비 산정방식은 규모의 경제에 바탕을 둔 균등화지수의 개념과는 좀 더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적 소비수준은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며,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서도 변화하지만, 최근 우리의 논의는 가구원수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가구의 다양한 인구학적·사회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동등화지수를 구하고, 그에 기초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고 소득보장정책의 수혜대상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향후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김진욱(2000)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소득계층별 구분을 통하여 빈곤층에서는 가구원수의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수년간 1인 및 2인가구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1인 및 2인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빈곤층에 특화된 균등화지수는 이들에 대한 최저생계비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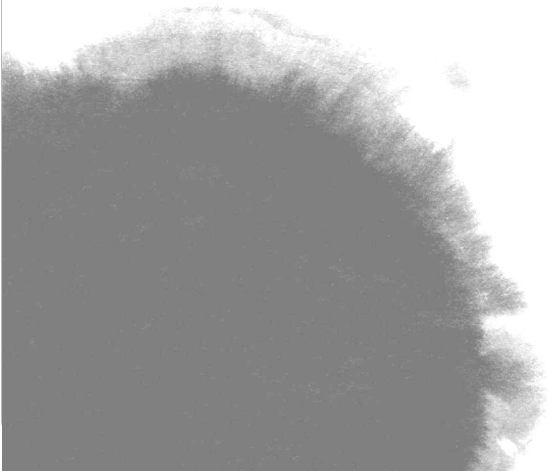
가구원수 외에도 가구원의 구성, 연령대별, 거주지역별, 주거형태별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동등화적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가구동등화단위는 좀 더 엄밀한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미시자료로부터 추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소비자선택이론과 후생분석에 근거하지 않은 연구결과의 경우 그로부터 얻어지는 이론적, 현실적 함의와 유용성은 제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이론모형의 개발과 더불어 최신 분석기법의 적용 등을 통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동등화지수를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등화지수에 따라 양극화나 소비지출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또한 앞으로 유익한 연구주제가 될 것으로 본다.



# 10장

## 소득이동성의 현황 분석





## 제10장 소득이동성의 현황 분석

### 제1 절 서론

최근 들어 선거와 관련하여 소득분배에 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분배구조의 악화(불평등 및 빈곤의 심화), 양극화의 진전 그리고 빈곤의 대물림 등에 대한 논의가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을 재조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이동성 중에서도 특히 중요성을 갖는 것은 소득이동성이다. 소득이동성(income mobility)의 정도는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과제와 관련이 있지만,<sup>50)</sup> 이에 대한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소득이동성이란 ‘사회의 개방도를 나타내는 척도’ 혹은 ‘기회균등을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라고 보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한 사회의 소득이동성이 높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동일한 소득불평등도를 가진 두 사회에 있어서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하여 소득이동성이 더 높다면 구성원들은 소득이동성이 높은 사회를 선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소득이동성을 ‘경기변동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소득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보는 것인데, 이 경우 소득이동성이 높다는 것은 정부의 경제안정화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첫 번째 견해의 연장선상에서 한국복지패널 1~5차 자료를 이용하여

---

50) 가령, 소득이동성은 고령연금과 같은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설계나, 빈곤정책의 효과성 분석 등과 같은 사회정책의 핵심과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소득빈곤의 동태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빈곤의 동태적 지위 분석을 통하여 빈곤경험기구의 특성이나 빈곤지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 분석 등 빈곤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 사회의 빈곤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떤 분석단위(가구 또는 개인)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떤 소득개념(시장소득 또는 가처분소득 등)을 이용할 것인지, 어떤 빈곤개념(절대빈곤 또는 상대빈곤)을 이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그 선택에 따라 분석결과에 조금씩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여기서는 복지패널의 가구자료를 이용하며,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을 중심으로 빈곤의 동태적 특징을 분석한다.

## 제2절 연구 방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 제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11년 6차 조사가 완료되었으나, 2012년 6월 1일 현재 이용가능한 자료는 1~5차까지 조사된 자료이다. 2006년의 1차 조사년도에 7,072가구를 원표본으로 출발하여 5차 년도까지 5년 동안 해마다 계속하여 조사가 완료된 가구수는 5,637가구이며, 본 연구에서도 1~5차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sup>51)</sup>

---

51) 조사시점과 조사대상연도에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지패널의 경우 1차 조사는 2006년에 이루어졌는데, 2005년의 소득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조사대상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2005년으로 표기한 수치는 2006년에 이루어진 1차 조사를 의미한다.



〈표 10-1〉 가구수의 비교 (2005~2009)

	1	2	3	4	5	합계
2005	534	394	214	293	5,637	7,072
2006	9	398	210	326	5,637	6,580
2007	12	18	319	328	5,637	6,314
2008	14	99	114	343	5,637	6,207
2009	110	91	106	90	5,637	6,034
계	679	1,000	963	1,380	28,185	32,207

자료: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가구원수에 따라 필요소득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가구원수를 이용하여 가구소득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가구원수의 제공근으로 소득을 나누어서 균등화된 소득을 계산하였으며, 패널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5차년도 가중치를 이용하였다.<sup>52)</sup>

빈곤분석을 위해서는 시장소득(market income)과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각 소득간의 포괄범위는 다음과 같다.

-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 및 부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시장소득 = 경상소득 - 공적이전
-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
- 총소득 = 경상소득 + 비경상소득(퇴직금, 경조비 등)

빈곤율은 전체 가구에 대한 빈곤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빈곤가구란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빈곤기준선(poverty line)으로는 최저생계비(minimum cost of living, MCL) 수준이나 중위소득의 40%, 50%, 또는 60%를 주로 사용한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절대빈곤, 그리고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상대빈곤이라고 한다.

52) 대부분의 경우 미시자료들은 분석에 앞서 특이항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를 한다. 여기서는 소득이 음수인 경우 0.01만원으로 대체하고, 평균의 10배가 넘는 경우는 평균값으로 대체하였으며, 균등화된 소득변수에 적합한 가구가중치를 이용하여 통계량을 계산하였다.

빈곤탈출률은 ‘특정 시기에 빈곤선 이하였던 가구가 그 다음 시기에 빈곤선 위로 이동할 확률’을 말한다. 이와는 반대로 빈곤진입률은 ‘특정 시기에 빈곤선 위에 있던 가구가 그 다음 기에 빈곤선 아래로 이동할 확률’로 정의할 수 있다. 보통 빈곤진입률이 빈곤탈출률보다 낮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각 정의식에서 사용되는 분모의 값에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빈곤진입률과 빈곤탈출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기간 이상의 서로 연결된 패널자료가 필요하다.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빈곤진입률과 빈곤탈출률이 함께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소득이동성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고 해석한다.

다음의 <표 10-2>는 복지패널 1~5차 연결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우리나라의 절대 및 상대빈곤율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0-2> 빈곤율 현황(2005~2009)

	2005	2006	2007	2008	2009
가구수	5,637	5,637	5,637	5,637	5,637
상대빈곤율(0.5*Med)					
- 경상소득	20.7	20.2	20.0	19.1	18.5
(기준선)	757.0	848.5	935.9	992.4	927.0
- 가처분소득	20.3	19.7	19.3	18.6	17.5
(기준선)	708.5	793.0	869.8	927.0	968.3
절대빈곤율(최저생계비)					
- 경상소득	13.2	10.3	8.9	8.1	7.4
- 가처분소득	14.4	11.5	9.9	9.1	8.2

주: 1) 복지패널 1~5차 연결자료에서 얻어진 결과이며, 가중치는 5차년도 가구가중치를 이용하였음.

2) 상대빈곤율의 기준선은 중위소득의 50%를 사용하였음.

자료: 강신욱 외(2011), 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기서는 중위소득의 50%를 빈곤기준선으로 사용하였고, 절대빈곤기준선은 최저생계비를 사용하였다. 이 표에 의하면 균등화된 가구 가처분소득이 절대빈곤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2005년의 20.3%에서부터 완만하게 낮아져 2009년에는 17.5%에 이르고 있다. 또 균등화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2005년 14.4%, 2006년 11.5%에서 점차 낮아져서 2009년 8.2%임을 알 수 있다.

빈곤은 지속기간에 따라 단기빈곤과 장기빈곤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빈곤은 당해연도에만 빈곤선 이하에 위치한 경우를 말하고, 장기빈곤은 두 기간 이상 연속하여 빈곤가구에 잔류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단기빈곤가구와 장기빈곤가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sup>53)</sup>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빈곤의 지속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소득의 상대적 위치나 절대기준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년에 빈곤선 이하에 위치한 가구가 내년도도 반드시 빈곤가구가 되리라고 확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장기빈곤과 단기빈곤의 개념적인 구분은 일관성 있는 빈곤정책의 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빈곤가구에서 벗어나는 경우와 새로이 빈곤가구로 진입하는 경우를 통칭하여 소득이동성(income mobility)이라고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분석대상기간이 길어질수록 빈곤가구가 장기빈곤 가구에 속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빈곤정책의 수혜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단기적인 정보만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주로 장기빈곤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빈곤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또한 각 시점에서의 가구소득 등을 기준으로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빈곤정책은 빈곤가구에 대하여 빈곤기준선에 미달하는 만큼의 소득을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처방으로 사용되는데, 이 경우 소득분산이 낮아져서 빈곤율이 낮아지게 된다. 반면 소득이동성을 제고하는 방법은 장기빈곤 대책이 될 수 있다.

다음에서는 다양한 소득이동성(또는 소득이동 경직성)지표를 살펴보고, 이를 이용하여 우리의 소득이동성 정도를 측정해 본다.

53) 장기빈곤율은 단기빈곤율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제3절 소득이동성 분석

### 1. 상관분석

소득이동성의 정도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 중 가장 단순한 것은 기준년과 비교년의 소득이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실제 계산에서는 두 기간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 가구소득만을 대상으로 Pearson 상관계수를 살펴보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얻어진 상관계수 값의 범위는 0과 1 사이인데, 그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동성이 크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동성이 작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다음의 <표 10-3>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주대각선 위쪽의 수치는 기준년과 비교년 모두 소득이 관찰된 가구로부터 얻어진 소득의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2005년과 2008년의 소득을 이용하여 상관계수를 구하면 0.580이 되고, 2006년과 2009년 소득의 상관계수는 0.650이다. 인접한 두 해를 비교하였을 때 소득의 상관계수는 0.646~0.748의 값을 나타낸다. 2005~2006년에서의 소득이동성이 가장 크고, 2007~2008년에서의 소득이동성이 가장 작게 나타나고 있다.

2년의 차이를 두고 측정된 이동성을 살펴보면 2005~2007년이 가장 높고, 2007~2009년이 가장 이동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 최근으로 올수록 소득이동성의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의 차이를 두고 측정한 이동성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표 10-3〉 상관계수의 비교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	1.000	0.646	0.622	0.580	0.580
2006	-	1.000	0.710	0.679	0.650
2007	-	-	1.000	0.748	0.721
2008	-	-	-	1.000	0.841
2009	-	-	-	-	1.000

## 2. 회귀분석

다른 방법으로는 비교년의 로그소득과 기준년의 로그소득을 이용하여 scatter plot 을 그려볼 수 있다.  $\log y_{t+1}$  의  $\log y_t$  에 대한 회귀식의 기울기가 소득이동성의 척도가 되며, 만일 기울기가 0에 가깝다면 소득이동성이 큰 것으로 해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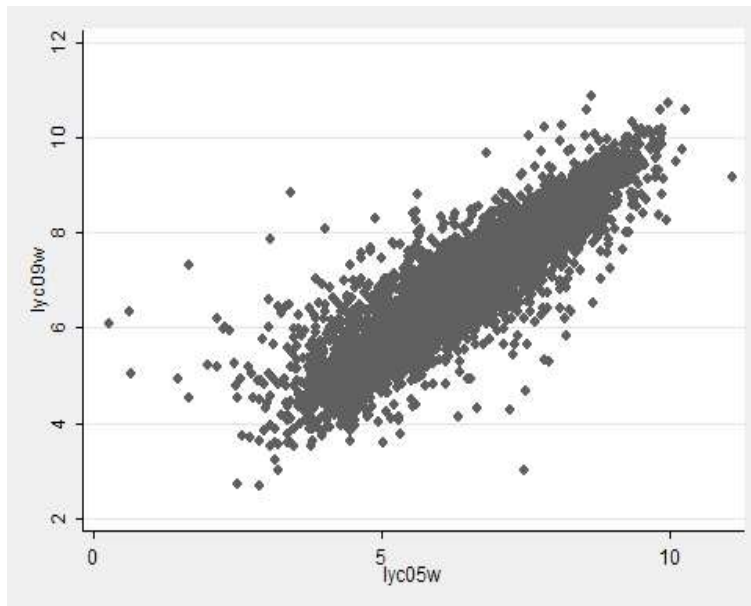
<표 10-4>의 주 대각선 아래의 수치는 회귀식의 기울기 추정치를 나타낸다. 인접한 두 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기울기를 비교해 보면 2005~2006년은 0.701, 2006~2007년은 0.746, 2007~2008년은 0.817, 그리고 2008~2009년은 0.849로 나타나, 최근으로 올수록 회귀선의 기울기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최근년으로 올수록 소득이동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5~2007년 및 2006~2008년의 경우에는 인접한 연도(2005~2006년 및 2006~2007년)의 추정치에 비하여 회귀식의 추정치가 더 높아지고 있으나, 2007~2009년의 경우에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의 경우 시점간 격차가 커질수록 회귀계수의 추정치는 단조적으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sup>54)</sup>

54) 예외적으로 2005년을 시작점으로 하는 경우에만 시점간 격차가 커질수록 회귀계수의 추정치가 단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좀 더 자료가 축적되면 시점간 격차와 이동성 간의 관계에 대하여 좀 더 강건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표 10-4〉 회귀계수의 비교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	1.000	-	-	-	-
2006	0.701	1.000	-	-	-
2007	0.710	0.746	1.000	-	-
2008	0.722	0.779	0.817	1.000	-
2009	0.730	0.753	0.795	0.849	1.000

[그림 10-1] 소득의 산포도 (2005 vs. 2009, 로그소득)



주: 소득이 0에 가까운 경우는 제외함.

자료: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 3. 이행행렬 분석

소득이동성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소득이행행렬(income transition matrix)을 통하여 상대적인 이동성 패턴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기준년과 비교년의 소득을 그룹별로 5분위(또는 10분위)로 구분한 다음, 기준년의 각 분위에서 비교년

도의 각 분위로 얼마나 이동하였는가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두 기간에 있어서 동일한 소득분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을수록, 또 최초의 소득분위에서 더 먼 소득분위로 이동한 사람들의 비율이 많을수록 소득이동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다음의 <표 10-5>는 이행행렬(transition matrix)을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소득이동을 살펴본 것이다. 동일한 소득분위에 머물러 있는 비율은 소득5분위가 가장 높고(79.9%), 1분위가 그 다음(73.0%)을 이었다. 동일 소득분위에 머무르는 비율이 가장 낮은 분위는 소득 2분위와 3분위인데, 절반을 조금 넘는 54.5%와 54.9%에 불과하였다.

소득분위가 하락한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소득분위는 4분위인데, 25%에 해당하는 282가구가 1~3분위로 하방 이동하였다. 이들 282가구 중에서도 대부분에 해당하는 245가구(86.9%)는 소득 3분위로 이동하였고, 28가구(9.9%)는 소득 2분위로 이동하였다. 2~4분위에 속하는 소득계층이 하방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23.1~25.0%에 이르며, 이들 계층 또한 인접한 소득분위로 하방 이동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0-5> 소득 5분위별 이행행렬(2005 vs. 2009)

2005 \ 2009	I	II	III	IV	V	전체	불변	하락	상승
I (소득하위)	824 (73.0)	236 (20.9)	45 (4.0)	17 (1.5)	6 (0.5)	1,128 (100)	824 (73.0)	-	304 (27.0)
II	273 (24.2)	615 (54.5)	200 (17.7)	34 (3.0)	6 (0.5)	1,127 (100)	615 (54.6)	273 (24.2)	240 (21.3)
III	19 (1.7)	242 (21.5)	619 (54.9)	228 (20.2)	20 (1.8)	1,128 (100)	619 (54.9)	261 (23.1)	248 (22.0)
IV	9 (0.8)	28 (2.5)	245 (21.7)	650 (57.6)	195 (17.3)	1,127 (100)	650 (57.7)	282 (25.0)	195 (17.3)
V (소득상위)	3 (0.3)	6 (0.5)	19 (1.7)	198 (17.6)	901 (79.9)	1,127 (100)	901 (79.9)	226 (20.1)	-
계	1,128 (20.0)	1,127 (20.0)	1,127 (20.0)	1,127 (20.0)	1,127 (20.0)	5,637 (100)	3,609 (64.0)	1,042 (28.9)	987 (94.7)

주: 상단 수치는 가구수, 하단 수치는 가로 비율임.

소득 1분위에서 상방으로 이동한 가구의 비율은 27.0%(304가구)이며, 이동한 가구의 약 77.6%인 236가구는 소득 2분위로 이동하였다. 소득 2분위 및 3분위 가구 중 상방 이동한 비율은 21.3%와 22.0%이며, 대부분이 바로 위의 소득분위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 4분위에서 5분위로 이동한 가구의 비율은 17.3%에 이른다.

〈표 10-6〉 소득이동성의 요약

	제자리 + 인접이동	제자리	인접이동	인접이동		그 이외 이동
				상방이동	하방이동	
I	94.0	73.0	20.9	20.9	-	6.0
II	96.5	54.5	41.9	17.7	24.2	3.5
III	96.5	54.9	41.7	20.2	21.5	3.5
IV	96.6	57.6	39.0	17.3	21.7	3.4
V	97.4	79.9	17.6	-	17.6	2.6

#### 4. Shorrocks의 소득이동성지수

소득이동성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Shorrocks의 소득이동성지수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장기에 걸친 소득의 균등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이며, 장기간에 걸친 평균적인 불평등도와 기중평균한 특정시점의 불평등도를 비교하여 소득이동성의 정도를 측정하게 된다.

$$M = 1 - \frac{I(\sum_{t=1}^T y_t)}{\sum_{t=1}^T w_t I(y_t)} \quad \text{여기서} \quad w_t = \frac{\bar{\mu}_t}{T^{-1} \sum_{t=1}^T \bar{\mu}_t}$$

여기서  $I(\cdot)$ 는 불평등지수,  $y$ 는 가구소득, 그리고  $\mu$ 는 평균소득을 각각 나타낸다. Shorrocks의 소득이동지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우면 이동성이



작고, 1에 가까우면 이동성이 크다고 본다.

불평등지수  $I(\cdot)$ 로는 일반화된 엔트로피(generalized entropy, GE) 지수가 주로 쓰이는데, 산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alpha) = \frac{1}{\alpha(\alpha-1)} \left[ \frac{1}{n} \sum_{i=1}^N w_i \left( \frac{y_i}{\mu} \right)^\alpha - 1 \right] \quad \alpha \neq 0, 1.$$

$\alpha = 0$ 인 경우

$$I(0) = \frac{1}{N} \sum_{i=1}^N w_i \left( \frac{X_i}{X} \right) \ln \left( \frac{X_i}{X} \right),$$

$\alpha = 1$ 인 경우

$$I(1) = - \frac{1}{N} \sum_{i=1}^N w_i \ln \left( \frac{X_i}{X} \right).$$

GE값의 범위는 0에서부터 무한대( $\infty$ )까지인데, 모든 소득이 동일하여 분배상태가 완전히 균등한 경우에 최소치 0을 가지며, 분배상태가 불평등할수록 그 값은 커진다. 또  $\alpha$ 의 값이 작을수록 하위계층의 소득변화에 민감하며,  $\alpha$  값이 클수록 상위계층의 소득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Shorrocks(1999)은 시간간격의 증대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소득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소득이동성과 소득이 균등화되는 속도를 연계시켰다. 소득이동의 경직성을 나타내는 척도  $R(m)$ 은 장기간의 불평등도와 기중평균 된 특정시점의 불평등도와의 비교를 통해 소득이동 정도를 측정한다. 경직성지수  $R(m)$ 은 시간간격( $m$ )이 커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m$ 기간에 걸친 평균을 구하는 과정에서 불규칙적인 소득성분이 상쇄되고 항구적인 소득격차를 나타내

는 극한 값으로 이 척도가 수렴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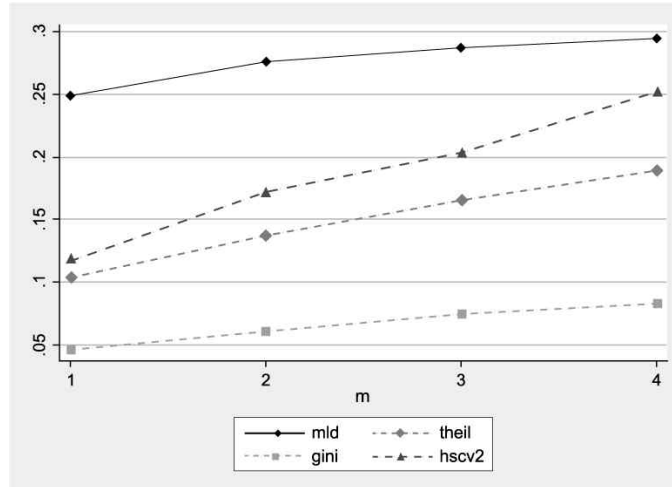
다음의 표는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를 이용하여 Shorrocks의 소득이동 경직성지수를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시간간격(m)이 커질수록 불평등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소득하위계층의 소득변화를 가장 잘 반영하는 로그편차의 평균(MLD)이 가장 빨리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직성지수는 중간계층의 소득변화에 민감한 Theil지수( $\alpha = 1$ )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저소득층의 소득변화에 민감한 MLD지수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m = 4$ 인 경우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변화를 종합하고 있는데, 중간소득계층의 소득변화에 민감한 Theil지수는 0.190으로 가장 낮고, 하위소득계층의 소득변화에 민감한 대수편차의 평균(MLD)은 0.294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4년에 걸친 종합적인 변화를 두고 본다면 중간소득계층에서의 소득이동성이 가장 크고, 하위소득계층에서의 소득이동성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10-7〉 Shorrocks의 소득이동 경직성지수(immobility index)

분석기간	m	MLD 지수 ( $\alpha = 0$ )	Theil 지수 ( $\alpha = 1$ )	$0.5CV^2$ ( $\alpha = 2$ )	Gini 지수
1년(2005~2006)	1	0.249	0.104	0.118	0.046
2년(2005~2007)	2	0.275	0.138	0.171	0.061
3년(2005~2008)	3	0.287	0.166	0.203	0.074
4년(2005~2009)	4	0.294	0.190	0.251	0.083

중간소득계층이나 상위소득계층에 비하여 저소득계층의 소득이동성이 낮다는 사실은 곧 항구적인 불평등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중간소득계층의 소득변화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Gini 지수를 불평등 척도로 사용한 경우에서도 소득이동 경직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중간소득계층의 소득이동성이 하위소득계층이나 상위소득계층에 비하여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2] 소득분위별 소득이동 경직성의 비교



#### 제4절 빈곤 진입과 탈출

특정시기에 빈곤에 머무르던 가구가 다음 시기에 빈곤에서 벗어나게 될 확률을 빈곤탈출률이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특정시기에 빈곤선 위에 있던 가구가 다음 기에 빈곤선 아래로 진입하게 될 확률을 빈곤진입률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중위수의 50%를 빈곤기준선으로 보고 빈곤진입률과 빈곤탈출률 추이를 살펴본다.<sup>55)</sup>

55) 빈곤기준선을 낮게 책정할수록 빈곤탈출률이 높게 나타난다.

〈표 10-8〉 빈곤진입률과 빈곤탈출률 추이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빈곤진입률				
- 경상소득 기준	7.3	6.5	7.0	6.7
- 가처분소득 기준	7.7	6.9	7.3	6.7
빈곤탈출률				
- 경상소득 기준	32.6	44.0	29.3	28.8
- 가처분소득 기준	35.4	33.2	31.1	31.3

주: 중위소득의 50%를 빈곤기준선으로 한 결과임.

자료: 강신욱 외(2011).

경상소득으로부터 구해진 빈곤진입률은 2006년 7.3%, 2007년 6.5%, 2008년 7.0%, 그리고 2009년 6.7%로 나타나, 6.5%~7.3% 구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진입률은 경상소득의 경우보다 조금 더 높으며, 6.7~7.7% 구간에서 경상소득 기준의 빈곤진입률에서와 마찬가지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다음으로 빈곤탈출률을 살펴보면 경상소득의 경우 2007년을 제외하고는 빈곤탈출률이 2006년의 32.6%에서부터 점차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가처분소득의 경우도 경상소득의 경우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데, 2006년의 35.4%에서 점차로 낮아져 2008년 31.1%, 2009년의 31.3%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빈곤그룹으로의 진입가능성은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빈곤그룹에서 비빈곤그룹으로의 탈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다양한 지표를 통하여 소득이동성(또는 소득이동 경직성)의 추이를 살펴 보았다. 복지패널 조사가 이루어진 지난 5년 동안 절대 및 상대 빈곤율은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소득이동성 또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빈곤진입률은 일정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빈곤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하는 비율은 점차로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반복빈곤 또는 장기빈곤으로 인한 빈곤의 고착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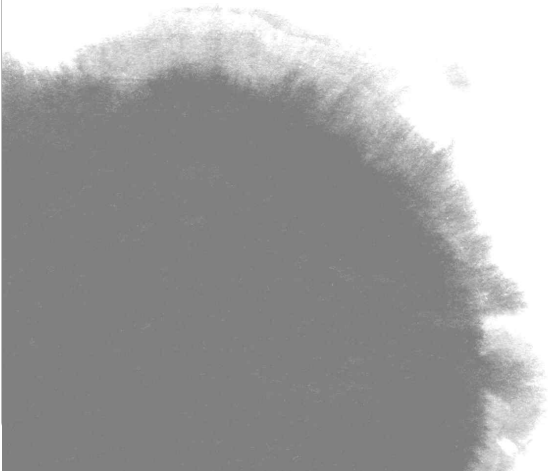
향후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가구의 급증, 저출산 및 만혼 또는 이혼으로 인한 1~2인가구의 급증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은 우리사회의 빈곤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향후 정책당국이 빈곤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한 소득보조를 통한 일시적 빈곤탈출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빈곤가구가 장기적 소득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마련해 주는데 복지정책의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향후에도 다양한 외부적 충격이 계속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빈곤율을 낮추고 빈곤의 고착화 가능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소득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복지정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어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지면 노동시장에서 나이 그 자체가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므로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임금피크제와 연계를 통한 정년연장 등의 제도 도입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 11장

## CGE모형을 이용한 소득분배 구조 분석







# 제11장 CGE모형을 이용한 소득분배 구조 분석

## 제1 절 연구의 목적

일반균형모형은 경제주체별 최적화 행동에 관한 내용을 모형 내에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별 이질성(heterogeneity)을 감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 개인(representative agent) 모형과 차별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 Monash University에서 개발된 연산가능일반균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인 ORANI-G 모형에 소득분배와 관련된 내용을 새로 추가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적용하여 사회지출 확대와 관련된 정책효과 분석을 시도한다.

지금까지 국내의 연구에서는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소득재분배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노용환·남상호 2006, 남상호 2007). 그 이유는 호주방식의 CGE 모형을 도입하기에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는 점 외에도 사회회계행렬 체계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sup>56)</sup> 일단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이는 보건·사회·재정 등 다른 연구분야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CGE모형을 이용한 연구의 인프라에 가까운 특징을 가진다.

CGE 모형에 의한 분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에 있어서 산업연관 분석의 접근방식을 보완하고 있다.

---

56) CGE 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Gempack과 GAMS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에서 개발한 Gempack software를 이용하여 일반균형모형을 분석한다.

- ◆ 산업연관 분석은 경제시스템 안에서 투입물과 자원의 공급에 제한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서 현실적인 자원제약 조건을 무시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과대 계상할 수 있다.
- ◆ 또한 자원의 투입과 산출의 관계, 노동투입과 산출, 부가가치와 산출의 비율이 고정적이다. 투입요소 사이에 상대가격이 변동하여 투입요소의 대체가 이루어지거나, 대체재의 개발이나 기술변화에 의해서 투입요소의 비율이 변동하거나, 혹은 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의 투입이 경제의 다른 부분에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의 산출은 정태적 상황에만 적용된다.
- ◆ 경제시스템 안에서 가격 변동의 효과는 중립적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한 부문에서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 또는 임금의 상승이 있게 되면 산출과 고용에 대한 순 파급효과가 추정치 보다 작아진다. 가격의 상승은 경제 확장을 제한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부문에서는 오히려 위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정부의 재정활동에 의한 효과도 중립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경제가 확장 되면 조세수입이 증가하고, 정부의 재정활동도 변동하게 된다. 즉 정부지출을 증대시키거나, 다른 항목의 조세를 감소시키거나, 차입규모를 줄이거나 또는 이런 정책 변동의 조합에 의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달라진다.

CGE 모형에 의한 분석은 이상과 같은 결점들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의의가 있다.<sup>57)</sup>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최근의 산업연관분석표를 이용하여 CGE모형에 활용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다. 둘째는 가계부문을 세분화하여 소득분배 구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지출과 관련된 정책효과를 일반균형분석법을 이용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연산일반균형모형의 일반적인 구조를 살펴본다.

57) 상세한 내용은 Dwyer, et al.(2005) 참조

## 제2절 CGE 모형의 구조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CGE모형의 원형은 ORANI(Dixon et al. 1978)모형이며, ORANI에 동태적 요소를 부가하여 발전시킨 ORANI-F(Horridge et al.1993) 모형을 한국의 투입산출표 구조에 맞도록 변수들을 가감하였다. 특히 공급함수를 수출주도형의 한국경제 특징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여러 가지 함수들의 수평 또는 수직이동을 나타내는 전이변수들과 자본축적 방정식은 ORANI-G(Horridge, 2001) 모형에서 부분적으로 취하여 시뮬레이션을 더욱 신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58)</sup>

모형에서 주요 골격을 형성하는 민간부문의 수요·공급방정식들은 이윤극대화 또는 비용최소화, 효용극대화 등 최적화문제들의 해(解)에서 도출되며, 전통적인 신고전학과 미시경제학의 기본가정을 따른다. 경제주체들은 가격수용자들이며, 생산자들은 순수이윤의 획득이 불가능한 경쟁적 시장에 있다. 이러한 정태적 요소들에 덧붙여 기업의 자본재, 순대의부채와 같은 스톡(stock)의 값들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투자, 감가상각 그리고 무역수지 등의 플로(flow)와 연결되는 축적관계를 포함시켜서 모형을 이용한 업데이트시뮬레이션과 예측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요약하면 우리의 모형은 일정기간에 대하여 다음 사항들을 설명하는 방정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 중간투입재와 본원적 생산요소에 대한 생산자들의 수요
- 생산자들의 공급
- 자본형성에 대한 수요
- 가계수요
- 수출수요

58) 이 모형의 주요 기본 구조는 이전의 한국경제연구에 적용했던 모형에 기반을 둔 따라서 모형의 구조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문석웅·김건홍(1996), Kim and Moon(2001), 문석웅(2000; 2004), 김상열 외(2008), 문석웅 외(2010), Lee, et al.(2010) 참조

- 정부수요
- 생산비 및 구매자가격과 기본가격과의 관계
- 상품 및 본원적 요소에 대한 시장균형 조건
- 매크로 변수들과 가격지수 등

이하에서는 생산 및 투입구조와 관련되는 방정식들 중 일부만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 1. 생산구조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는 1산업 1상품 가정 하에 작성되어 있으나, 본 모형에서는 1산업 2상품 생산체제를 가정하고 있다. 즉, 산업별 생산재화는 국내재와 수출재 2가지의 CET(constant elasticity of transformation) 함수가 된다. 각 산업은 CET 생산함수의 제약아래 복합재생산(commodity composites, 국내판매용+수출용)의 총 수입을 극대화하도록 생산물을 구성하게 된다. CET생산함수는 생산변환 파라미터가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함수의 대체파라미터와 비교할 때 그 부호가 정반대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점에서 동일하다. 즉 국내재와 수출재 중에서 가격이 복합재의 평균 인상률보다 더 많이 오른 쪽으로 생산물의 구성을 변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각 산업이 복합재의 생산라인에서 국내재와 수출재에 생산능력을 배분하는 공급함수를 선형함수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으며, 소문자로 된 부호는 모두 퍼센트변동율을 나타낸다.<sup>59)</sup>

---

59) 본고에서 모형은 기술의 편의상 변수들의 퍼센트 변화를 의미하는 일련의 선형 방정식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입력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퍼센트 변동률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또한 대부분의 변수들이 2차원 내지는 4차원공간에 속하는 벡터변수들이므로 선형방식에 의한 묘사가 편리하고 경제적임. 방정식의 경제적 의미전달도 훨씬 명확해지며, 모형의 해(解)를 구함에 있어서도 Johansen(1960)의 방식을 따르는 선형방정식체계는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음. 과거 이 방식의 중요결함으로 지적되었던 계산의 부정확도 문제는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완전히 해소되었음. 자세한 논의는 Harrison와(2000), 및 Horridge(2001) 참조

$$q_i^h = xtoti + \text{SIGMA}0i * (\mu_i^d - ptoti) + fq_i^d \quad i=1, 2, \dots; N \quad (1)$$

$$q_i^e = xtoti + \text{SIGMA}0i * (pei - ptoti) + fq_i^e \quad (2)$$

$$\text{SHi} * fq_i^d + (1 - \text{SHi}) * fq_i^e = 0 \quad (3)$$

상기식에서  $q_i^h$ 는  $i$ 산업의 국내시장용 산출량,  $xtoti$ 는 복합재의 산출량,  $\text{SIGMA}0i$ 는  $i$ 산업의 생산변환탄력 파라미터,  $\mu_i^d$ 는 국내재 가격,  $ptoti$ 는 복합재의 평균가격,  $fq_i^d$ 는 기타요인에 의한 국내재 공급곡선의 이동,  $q_i^e$ 는 수출용 산출량,  $pei$ 는 수출재 가격,  $fq_i^e$ 는 기타요인에 의한 수출재 공급곡선의 이동,  $\text{SHi}$ 는  $i$ 산업에서 국내용 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식 (1)과 (2)의 의미는 국내시장용(수출용) 공급의 증가율은 해당산업의 복합재 산출량변동율과 가격이의 다른 요인에 의한 국내재(수출재) 공급곡선의 이동, 그리고 생산변환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생산변환의 크기는 생산변환탄력도와 국내재(수출재)의 복합재에 대한 가격변동비율에 의하여 결정되며, 식 (3)은 기타요인에 의한 국내용과 수출용간의 자원배분이 주어진 생산변환곡선상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제약조건을 나타낸다.

한편 투입 쪽에서 보면 각 산업은 여러 가지 중간투입재들과, 본원요소들, 간접세 등이 일정 비율로 결합되는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투입요소별로 보면 중간투입재는 국내재 그리고 국내재와 대체가능한 수입재화로 구성되는 CES함수이다. 요소수요 역시 여러 가지 본원적 요소들에 대한 결합수요로서 토지, 자본 그리고 노동의 CES집계함수이다.<sup>60)</sup> 모든 산업들이 이처럼 공통적인 생산구조를 갖고 있지만 요소간 결합비율과 행태 파라미터들은 산업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중간재 투입에 대한 수요를 설명한다.

60) 각 산업별 생산변환탄력도는 일률적으로 0.5의 값을 부여하고, 산업별 노동/자본의 대체탄력성 값은 호주의 산업별 자료를 참고로 하여 설정하였음.

## 2. 중간재투입에 대한 수요

중간재투입에 대한 수요는 수입재가 국내재와 불완전 대체관계에 있다는 아밍턴(Armington, 1969) 가정을 따르며, 각 산업은 수입재와 국내재의 복합투입 총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다음에 설명하는 방정식들은 중간투입재와 노동·자본에 대한 수요결정을 나타낸다.

$$x1\_sci - (a1\_sci + a1toti) = xtoti \quad (4)$$

식(4)는 산업의 중간재로 쓰이는 복합재(국산+수입) C에 대한 수요( $x1\_sci$ )의 증가율은 각 산업의 복합재( $xtoti$ , 내수용+수출용)의 산출증가율에 비례하고 재화 C를 활용하는 기술변화율( $a1\_sci$ )과 산업의 자원생산성증가율( $a1toti$ )에 의존함을 나타낸다.

$$x1primi - (a1primi + a1prim\_i + a1toti) = xtoti \quad (5)$$

식(5)는 산업의 노동·자본의 본원요소에 대한 수요 역시 각 산업의 복합재( $xtoti$ )의 산출증가율에 비례하고, 해당 산업의 본원요소 생산성( $a1primi$ ),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본원요소 생산성( $a1prim\_i$ ), 그리고 그 산업의 자원생산성증가율( $a1toti$ )에 의존함을 나타낸다.

중간재 수요에서 수입재·국내재 구성의 결정은 방정식 (6)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x1_{ij}^s - a1_{ij}^s = x1_{sij} - \text{SIGMA}1j * (p1_{ij}^s + a1_{ij}^s - p1_{sij}),$$

$$i, j = 1, 2, \dots, N. \quad s = s1, s2. \quad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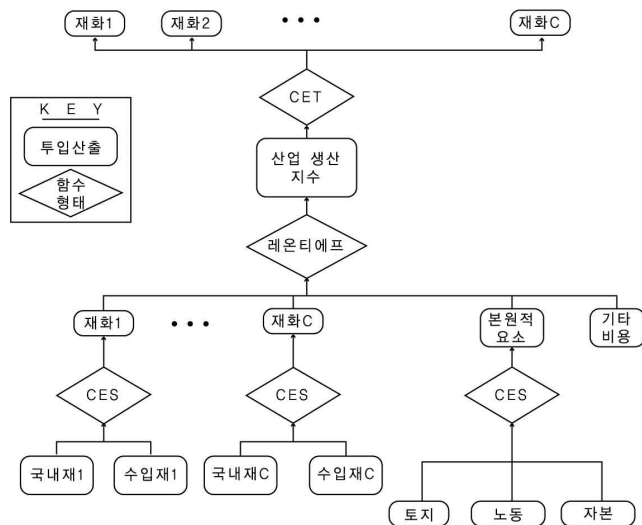
식(6)에서  $x1_{ij}^s$ 는 i산업의 j상품에 대한 원천별(s1=국내조달, s2=수입) 중간재수요,  $x1_{sij}$ 는 i산업의 j복합재에 대한 중간재수요, SIGMA1j는 중간재의 국내재·수입재 대체탄력성,  $p1_{ij}^s$ 는 각 중간투입재가격이다.

$a1_{ij}^s$ 는 투입요소이용의 기술상의 변화 혹은 대체재 개발이나 수입에 관련된 제도변화에 따르는 기호변동 등으로 인한 수요의 변동을 반영하는 전이변수이며,  $p1_{sij}$ 는 복합재가격의 퍼센트 변화로서 개별상품에 대한 지출이 구매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중치로 하는 동시에 기술 또는 기호변화를 반영시킨 실효 평균가격의 인덱스이다.

따라서 각 중간투입재의 실효수요의 변동은 복합재수요의 변동율과 국내재·수입재간 대체의 크기에 비례한다. 따라서 이 식은 복합재 평균가격의 변동율( $p1_{sij}$ )에 비교해서 어느 한쪽 재화의 실효가격이 더욱 하락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한 재화로 대체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림 11-1]은 이상에서 설명한 생산구조를 요약하고 있다.

[그림 11-1] 생산구조



### 3. 투자재에 대한 수요

자본재는 국내재와 수입재를 투입하여 생산한다고 가정하며, 중간투입재에 적용되었던 것과 같은 연결구조를 갖는다. 자본형성에 본원적 요소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투자가의 두 단계의 비용극소화 문제의 해로부터 투자수요 방정식을 얻는다. <그림 11-2>의 아래쪽 부분은 CES 생산함수의 제약 속에서 수입재와 국내재의 총비용을 극소화시킴을 나타낸다.

투자재에 대한 수요식은 다음과 같다.

$$x2\_sij - (a2\_sij + a2toti) = x2toti \quad (7)$$

$x2\_sij$ 는  $i$ 산업의  $j$ 복합투자재에 대한 수요,  $x2toti$ 는  $i$ 산업의 총투자이다.  $a2toti$ 와  $a2\_sij$ 는 총투자와 복합투자재의 수요와 관련하여 기술상의 변화 등에 의한 수요의 변동을 반영하는 전이변수이다. 구체적으로 원천(국내, 수입)별 투자재에 대한 수요는 다음과 같은 선형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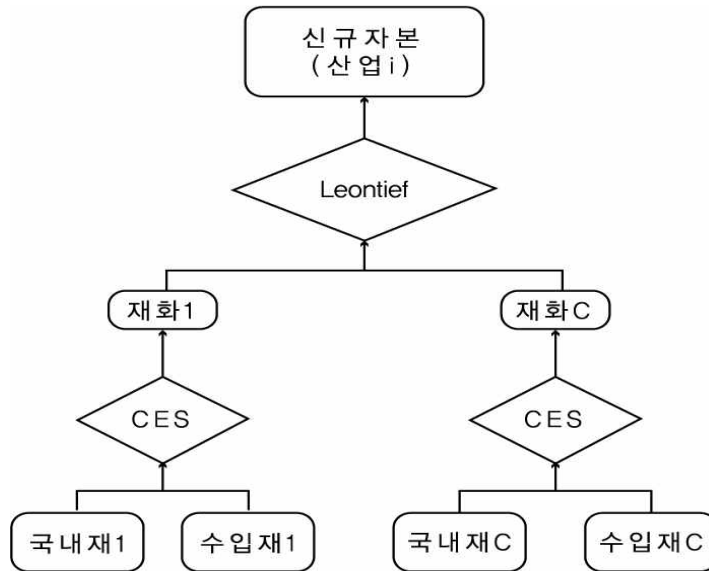
$$x2_{ij}^s - a2_{ij}^s = x2\_sij - \text{SIGMA}2i * (p2_{ij}^s + a2_{ij}^s - p2\_sij) \quad (8)$$

$x2_{ij}^s$ 는  $i$ 산업의  $j$ 투자재에 대한 원천별 수요,  $a2_{ij}^s$ 는 전이변수,  $\text{SIGMA}2i$ 는 투자재의 국내재/수입재 대체탄력성,  $p2_{ij}^s =$  각 투자재의 가격,  $p2\_sij$ 는 각 복합투자재의 가격이다.

투자재의 원천별 수요는 CES 생산함수의 제약하에서 각 복합재투입의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원칙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림 11-2] 투자재에 대한 수요



#### 4. 가계 수요

가계수요에 관한 연결구조는 투자수요에 대한 것과 거의 동일하며, 유일한 차이점은 해당상품들을 레온티에프함수 보다는 클라인·루빈(Klein·Rubin)함수로서 집계하기 때문에 선형지출함수가 된다는 점이다.

클라인·루빈 효용함수를 분석하는 데는 각 상품의 총소비를 여유적 지출부분과,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 지출부분으로 분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x3\_s(c) = B3LUX(c)*x3lux(c) + [1-B3LUX(c)]*x3sub(c) \quad (9)$$

가계부문의 상품별(국내재+수입재) 수요( $x3\_s(c)$ )는 여유적 지출( $x3lux(c)$ )과 생계적 지출( $x3sub(c)$ )에 비례한다. B3LUX는 총지출에서 여유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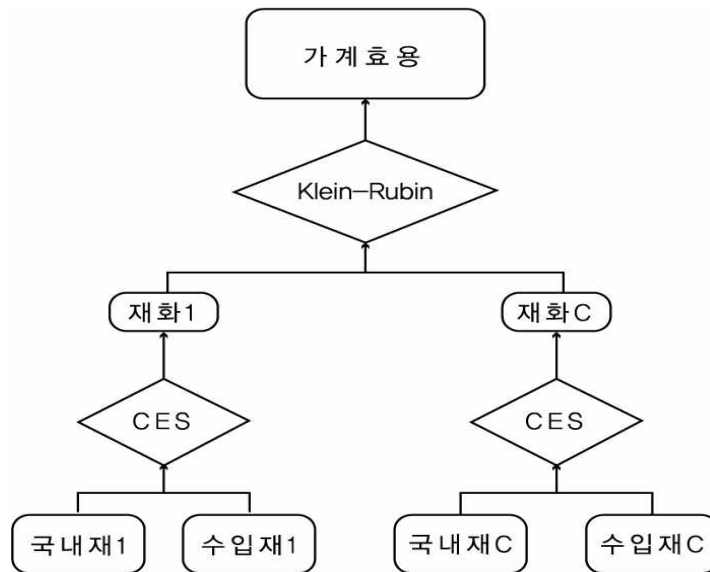
$$x_{3sub}(c) = q + a_{3sub}(c) \tag{10}$$

$$x_{3lux}(c) + p_{3\_s}(c) = w_{3lux} + a_{3lux}(c) \tag{11}$$

실질 생계적 지출은 가계수  $q$ 와 기호변화(taste change)를 나타내는 전이변수  $(a_{3sub}(c))$ 에 비례하며, 실질 여유적지출( $x_{3lux}(c)$ )은 복합소비재가격의 증가율  $(p_{3\_s}(c))$ , 여유적지출 금액( $w_{3lux}$ ), 그리고 전이변수( $a_{3lux}(c)$ )에 의존한다.

가계당 효용함수에는 단지 여유적지출 부분만이 포함되는데, 가계의 가구당 효용함수는 콥·더글라스 형태를 취한다.<sup>61)</sup>

[그림 11-3] 가계수요의 구조



61) Utility =  $1/Q \sum X_{3LUX}(c)S_{3LUX}(c)$  단  $\sum S_{3LUX}(c) = 1$ , 본 모형의 보다 상세한 설명은 Horridge(2001) 참조

상기 효용구조 하에서 가계부문의 상품별 원천별(국내 또는 수입) 수요식은 다음과 같다.

$$x3_j^s - a3_j^s = x3\_sj - \text{SIGMA}3j * (p3_j^s + a3_j^s - p3\_sj) \quad (12)$$

$x3_j^s$ 는 j상품에 대한 원천별 가계수요,  $a3_j^s$ 는 전이변수,  $x3\_sj$ 는 j복합재에 대한 가계수요,  $\text{SIGMA}3j$ 는 민간수요 대체탄력성,  $p3_j^s$ 는 j상품의 원천별 가격,  $p3\_sj$ 는 j복합재 가격이다. 다음 절에서는 기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살펴보고, 사회회계행렬의 체계를 소개한다.

### 제3절 기본 데이터베이스와 SAM

#### 1.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요소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의 바탕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는 2009년도의 산업연관표 연장표(한국은행, 2011)의 기초가격평가표이며, 생산자가격평가표와 기초가격평가표를 이용하여 조세표를 별도로 구성하였다. [그림 11-4]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구성요소를 요약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해서는 상기의 기본적인 모형과 데이터구조에 추가하여 SAM(Social Accounting Matrices) 데이터와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정식체계가 추가되어서 사회전체의 가치흐름이 통합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로 확장되어야 한다.<sup>62)</sup>

이하에서는 SAM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모형의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방정식체계는 <부록 A>에, SAM 데이터베이스와 시뮬레이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SAM계정의 변동을 나타내는 표는 <부록 B>에 각각 첨부하기로 한다.

62) 기존 CGE 모형에 SAM체계를 부가하여 확장하는 모형은 Corong and Horridge(2012) 참조

[그림 11-4]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요소

		압습션(Absorption) 매트릭스					
		1	2	3	4	5	6
		생산자	투자자	가계	수출	공공부문	재고변동
		← 1 →	← 1 →	← 1 →	← 1 →	← 1 →	← 1 →
기본 가액	↑ C×S ↓	V1BAS	V2BAS	V3BAS	V4BAS	V5BAS	V6BAS
조세	↑ C×S ↓	V1TAX	V2TAX	V3TAX	V4TAX	V5TAX	재고가액조 세포함
노동	↑ O ↓	V1LAB	C = 30(국내, 수출)상품종류 I = 30 산업의 종류 S = 2 : 국내재와 수입재 O = 2 : 산업별 숙련/비숙련 노동 투자세(V2TAX)와 재고부문은 연구의 편의상 제로로 설정함으로써 간접세를 기본가액에 포함시킴. 수출세(V4TAX)와 정부지출세 (V5TAX)는 원래 제로 값임.				
자본	↑ 1 ↓	V1CAP					
기타 생산세	↑ 1 ↓	V1PTX					
기타 비용	↑ 1 ↓	V1OCT					

종류	결합 생산 행렬	종류	수입 관세
	← 1 →		← 1 →
↑ C ↓	MAKE	↑ C ↓	V0TAR

## 2. SAM의 구조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은 한 나라의 모든 경제주체의 상호 거래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기록한 database 시스템을 말한다. 여기서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 및 국민계정(System of National Accounts) 자료와 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가공하여 우리나라의 2009년 기준 사회회계행렬을 구축하게 된다.

SAM은 일반균형이론의 관점에서 산업연관표를 근간으로 국민계정, 가계소득 및 지출자료, 정부결산자료 등을 통합하여 구축된 행렬체계로서 동일한 계정이 행과 열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며, 행(row)은 해당 계정의 수입(receipt) 측면을 나타내고, 열(column)은 해당 계정의 지출(expenditure) 측면을 나타낸다.

SAM은 경제내의 모든 흐름은 반드시 어떤 경제주체에서 다른 경제주체로 흘러 가게 되어 있다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방행렬(square matrix)의 형태로 작성되고 있으며, 각 계정의 행(row)의 합과 열(column)의 합은 항상 일치(수입=지출)하게 된다. SAM의 주요계정은 생산, 소비, 자본축적 및 대외계정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주요 계정들은 연구의 목적과 이용가능한 통계자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sup>63)</sup>

다음에 제시된 표는 본 연구를 위하여 작성된 우리나라 2009년도 사회회계행렬이다. 각 계정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 1 Firm - 기업
- 2 DomCom - 국내상품
- 3 ImpCom - 수입상품
- 4 Labor - 노동투입
- 5 Capital - 자본투입

63) SAM 작성 방법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노용환·남상호(2005)와 남상호(2007)을 참고하기 바란다.

- 6 ProdTax - 생산세
- 7 ComTax - 상품세
- 8 Tariff - 관세
- 9 DirTax - 직접세
- 10 Households - 가계부문
- 11 Enterprises - 기업부문
- 12 GovCurrent - 정부 경상거래
- 13 GovInvest - 정부 투자지출
- 14 PrvInvest - 민간 투자
- 15 Stocks - 재고변화
- 16 ROW - 해외부문

다음의 <표 11-1>은 CGE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회계행렬의 기본적인 골격을 보여주는 기본 데이터베이스이다.<sup>64)</sup>

---

64) 정책효과분석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표 11-1〉 Macro SAM (Basedata)

(단위: 10억원)

SAM	1 Firms	2 DomCom	3 ImpCom	4 Labour	5 Capital	6 ProdTax	7 ComTax	8 Tariff	9 DirTax
1 Firms	0	2,774,977	0	0	0	0	0	0	0
2 DomCom	1,272,122	0	0	0	0	0	0	0	0
3 ImpCom	417,579	0	0	0	0	0	0	0	0
4 Labour	493,686	0	0	0	0	0	0	0	0
5 Capital	452,698	0	0	0	0	0	0	0	0
6 ProdTax	101,522	0	0	0	0	0	0	0	0
7 ComTax	37,370	0	0	0	0	0	0	0	0
8 Tariff	0	0	9,062	0	0	0	0	0	0
9 DirTax	0	0	0	0	0	0	0	0	0
10 Households	0	0	0	493,686	167,195	0	0	0	0
11 Enterprises	0	0	0	0	244,928	0	0	0	0
12 GovCurrent	0	0	0	0	56,389	101,522	77,578	9,062	85,293
13 GovInvest	0	0	0	0	0	0	0	0	0
14 PrvInvest	0	0	0	0	0	0	0	0	0
15 Stocks	0	0	0	0	0	0	0	0	0
16 ROW	0	0	488,166	0	0	0	0	0	0
Total	2,774,977	2,774,977	497,229	493,686	468,512	101,522	77,578	9,062	85,293

〈표 11-1〉 (계속)

(단위: 10억원)

SAM	10 Households	11 Enterprises	12 GovCurrent	13 GovInvest	14 PrvInvest	15 Stocks	16 ROW	Total
1 Firms	0	0	0	0	0	0	0	2,774,977
2 DomCom	488,122	0	170,325	8,426	262,873	39,036	534,074	2,774,977
3 ImpCom	47,641	0	0	1,807	37,898	-7,697	0	497,229
4 Labour	0	0	0	0	0	0	0	493,686
5 Capital	0	0	15,814	0	0	0	0	468,512
6 ProdTax	0	0	0	0	0	0	0	101,522
7 ComTax	40,208	0	0	0	0	0	0	77,578
8 Tariff	0	0	0	0	0	0	0	9,062
9 DirTax	45,826	39,467	0	0	0	0	0	85,293
10 Households	0	14,696	114,147	0	0	0	14,098	803,823
11 Enterprises	15,807	0	0	0	0	0	684	261,419
12 GovCurrent	81,363	38,079	0	0	0	0	195	449,483
13 GovInvest	0	0	10,234	0	0	0	0	10,234
14 PrvInvest	68,761	125,213	137,025	0	0	0	1,111	332,110
15 Stocks	0	0	0	0	31,339	0	0	31,339
16 ROW	16,095	43,964	1,938	0	0	0	0	550,163
Total	803,823	261,419	449,483	10,234	332,110	31,339	550,163	9,721,408



## 제4절 산업분류와 시나리오의 설정

### 1. 산업분류

〈표 11-2〉 통합분류에 의한 30개 산업

구분	
C1. 농림수산물	작물, 축산 및 양잠, 농업서비스, 임산물, 수산물
C2. 석탄 원유 천연가스 광산물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금속광석, 비금속광물
C3. 음식료품	육류 및 낙농품, 수산가공품, 정곡 및 제분, 제당, 빵·과자 및 국수류, 기타 식료품, 음료품, 담배
C4. 섬유·가죽제품	섬유사, 섬유직물, 섬유제품, 의복 및 장신구, 가죽 및 모피제품
C5. 목재·종이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목재가구, 펄프 및 종이
C6. 인쇄,출판 및 복제	신문, 출판, 인쇄, 기록매체 출판 및 복제
C7. 석탄·석유 제품	석탄제품, 나프타, 연료유, 기타 석유제품
C8. 화학제품	유기화학 기초·중간제품, 무기화학 기초제품, 화학 비료 및 영양 화학섬유, 의약품 및 화장품,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기타 화학제품
C9. 비금속광물제품	유리 및 도자기, 시멘트 및 콘크리트제품, 기타 요업 및 토석제품
C10. 철강1차제품 및 기타	철강1차제품, 비철금속괴 및 1차 제품, 선철 및 조강
C11. 금속제품	건설용 금속제품, 금속제 용기, 공구 및 철선 제품
C12. 일반기계	엔진 및 터빈, 일반목적용 기계 부품, 산업용 운반기계, 공조 및 냉온장비
C13. 전기·전자기기	발전기, 전동기, 전기변환장치, 기타 전기장치, 전자표시장치, 반도체, 기타 전자부분품, 음향기기, 방송장비,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사무용 기기
C14. 정밀기기	의료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시계
C15. 수송장비	자동차, 기타 수송기계
C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가구, 장난감 및 운동용품, 기타 제조업제품
C17. 전력, 가스 및 수도	전력 도시가스, 증기 및 온수 공급업, 수도
C18. 건설	건축 및 건축보수, 토목건설
C19. 도소매	도소매
C20. 음식점 및 숙박	음식점, 숙박
C21. 운송	철도, 도로, 택배 서비스, 수상 및 항공운송, 운수보조서비스 등
C22. 통신 및 방송	우편, 전신·전화, 부가통신, 비영리 방송, 산업방송
C23. 금융 및 보험	금융 및 보험
C24. 부동산 사업서비스	부동산, 사업관련 서비스, 연구기관, 컴퓨터관련 서비스, 인력공급 등
C25. 공공행정 및 국방	공공행정 및 국방
C26. 교육 및 위생	교육 및 연구, 위생서비스
C27. 의료 및 보건	의료·보건
C28. 사회보장 서비스	사회보장 서비스
C29. 사회 및 기타 서비스	사회서비스, 문화 오락 기타서비스
C30. 기타	사무용품, 가계의 소비지출, 분류불명

산업연관표의 통합대분류에 의하면 산업을 28개로 분류하고 26번 산업에 교육 및 보건을 배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목적을 위하여 26번 산업을 교육 및 위생(26번), 의료 및 보건(27번), 사회보장 서비스(28번)의 세 가지 산업으로 세분하여 전체 산업분류를 30개로 확장하면서 산업연관표의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성하였다.

## 2. 시나리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복지 분야 지출증대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기타 주요 변수들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다. 시나리오 구분의 주요 기준은 복지지출의 증가가 정부재정의 실질균형을 유지하는 조건과 적자의 증가를 허용하는 두 가지 범주에서 제시하고, 각 시나리오별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시나리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나리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직접세율 결정 방정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본 모형에서 가구별 소득세와 기업에 대한 직접세의 결정 방정식은 부록의 Excerpt 46과 44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요점만 소개하면 각기 다음과 같다.

$$wtaxhou(h) = winchou(h) + f\_inctaxrate(h) + f\_inctaxrate\_h \quad (13)$$

$$wtaxent = ftaxent + went \quad (14)$$

상기 식 (13)에서  $wtaxhou(h)$ 는 소득 분위별 가구에 대한 직접세율의 부담 변동률로서 이는  $winchou(h)$ (가계소득의 증가율)과  $f\_inctaxrate(h)$  (소득분위별로 부과되는 소득세의 변동률), 그리고  $f\_inctaxrate\_h$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공히 적용되는 세율의 인상률)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한편  $wtaxent$ 는 기업의 직접세 부담증가율은  $ftaxent$ (기업의 직접세율)과  $went$ (기업의 소득 증가율)에 의해서 결정됨을 의미한다.

**(1) 시나리오 1.**

복지 관련 부문 3개 산업에 대한 정부지출을 5% 증가시키기 위한 재원조달의 방안으로서 소득 10분위 계층 중에서 상위 3분위 계층에 대하여만 소득세의 부과율을 5% 증대시킨다. 이 경우에 정부의 실질재정수지를 이전대로 유지하는 제약조건을 부여한다. 즉, 실질재정수지를 외생화 하고,  $f\_inctaxrate\_h$ 를 내생화한다.

**(2) 시나리오 2.**

시나리오 1과 다른 점은 일종의 부유세부과 대신, 기업에 부과하는 증가세율을 2%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즉, 실질재정수지를 외생화 하고,  $ftaxent$ 를 내생화한다.

**(3) 시나리오 3.**

가계에 대한 조세율을 외생화 하여 세율의 인상이나 재조정 없이 복지 지출을 5% 증대시키되, 기업의 직접세율을 내생화하고 재정의 균형을 저해하지 않는 제약을 부여한다. 그리고 소득분위별로 부과되는 소득세의 변동률( $f\_inctaxrate(h)$ )과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공히 적용되는 세율의 인상률( $f\_inctaxrate\_h$ )을 외생화 한다.

**(4) 시나리오 4.**

시나리오 3과 비교하여 가계와 기업에 대한 조세율을 모두 외생화 하여, 특정 경제 주체에 대한 조세율의 인상이나 재조정 없이 복지 지출을 5% 증대시키고, 재정의 적자증가를 허용한다는 조건이다. 즉 정부의 실질 재정수지를 내생화 한 것이다.

**제5절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결과**

본 장에서는 시나리오별로 실험한 결과를 주요 거시 변수와 산업별 변수, 기타 SAM 계정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하여 검토한다.

## 1. 거시변수의 분석

<표 11-3>에서는 시뮬레이션결과를 일반 거시변수(실질과 명목)에 미친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요약하여 나타내 보이고 있으며, 표에서 값이 0으로 된 변수는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외생화 된 것을 의미한다<sup>65)</sup>. <표 11-4>는 실질GDP의 증가에 대하여 최종수요부문이 기여한 정도를 분해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각 요소별 기여율의 합계가 실질GDP의 변화율이 된다.

<표 11-3> 일반 거시변수(실질, 명목)

(단위: %)

실질변수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총생산증가율	0.233	0.182	0.242	0.233
수입물량(cif)	0.114	0.024	0.130	0.114
실질투자지출	0.000	0.000	0.000	0.000
(명목투자지출)	0.209	0.024	0.242	0.209
민간소비지출	0.274	-0.210	0.360	0.274
수출물량	-0.382	-0.049	-0.441	-0.382
정부지출	2.148	2.146	2.148	2.148
환율	0.000	0.000	0.000	0.000
GDP디플레이터	0.384	0.070	0.441	0.384
재정수지	0.000	0.000	0.000	-2.578
(명목재정수지)	0.384	0.070	0.441	-2.204
실질임금	0.000	0.000	0.000	0.000
(명목임금)	0.831	0.471	0.895	0.831
총조세율	1.257	1.313	1.535	-0.034
재정흑자/GDP	-0.006	-0.002	-0.006	-0.009
총고용	0.485	0.418	0.497	0.485
가구전체에 공히 적용하는 소득세율	3.642	6.756	0.000	0.000
기업부담 직접세(증가세)	0.000	2.000	10.816	0.000

65) 실질변수에서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 명목변수는 변동될 수 있다. 예컨대, 실질투자는 제로의 값이 되지 만, 명목투자는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

<표 11-4>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값들은 모두 퍼센트 변동률을 나타낸다. 투자와 재고는 외생적으로 고정시킨 결과 변동이 없으며, 시나리오 구성의 당연한 결과로서 정부지출 증가(2.416%~2.418%)가 실질GDP의 증가를 견인하였다. 실질총생산(0.242%)과 고용(0.497%)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경우는 시나리오3이며, 이는 재정지출로 인하여 민간소비(0.36%)가 다른 경우보다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복지지출의 증대를 위한 재원으로 기업에 대한 직접세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실질GDP(0.182%)와 고용(0.418%)의 증가율이 가장 낮다. 이는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고용증가율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고, 재정수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구전체에 대한 소득세율의 증가(6.756%)도 수반되어 민간소비도 감소하게 되어 정부지출 확대효과를 비교적 많이 상쇄하기 때문이다. 만일 속의 크기를 2% 보다도 더욱 높이면 민간 소비의 감소 정도는 줄어들게 된다.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4는 정부의 조세율, 재정수지와 관련된 변수들과 다음 장에서 설명될 소득재분배효과를 나타내는 섹터별 변수이외에서는 동일한 영향을 가져온다.

〈표 11-4〉 GDP증가에 대한 기여율

(단위: %)

최종수요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1 민간소비	0.139	-0.107	0.183	0.139
2 투자	0	0	0	0
3 정부지출	0.323	0.322	0.323	0.323
4 재고	0	0	0	0
5 수출	-0.179	-0.023	-0.207	-0.179
6 수입	-0.049	-0.01	-0.056	-0.049
실질GDP증가율	0.233	0.182	0.242	0.233

<표 11-3>에서 재정수지와 관련된 영향을 보면, 시나리오4의 경우 실질 총조세율이 0.034% 감소함으로써 실질 재정수지는 -2.578% 만큼 악화되고, 재정흑자/GDP의 비율도 0.009% 하락한다. 시나리오3에서는 가계부문에 대한 소득세율의 추가부담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복지지출을 증대하는 동시에 재정수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접세를 포함하는 총조세율을 가장 많이 인상해야함을 의미한다(1.535%). 이 경우에 결국 시나리오2의 경우보다도 기업들에게 더욱 큰 부담을 지우게 되고(기업의 직접세율의 10.816% 인상), 시나리오3에서 기업부담이 더욱 증가되지만 실질 GDP 증가율이 시나리오2 보다도 높은 것은 민간소비지출이 0.57% 포인트만큼 증대되기 때문이다.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3의 비교에서 주는 시사점은 복지지출의 재원으로서 부유세 이외의 방식을 택하고, 재정수지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기업부문과 가계부문 사이에 부담의 크기를 두고 선택과 절충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가계부문이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은 가구전체에 비차별적인 영향을 끼쳐서 소득재분배 효과는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 2. 산업별 변수의 분석

〈표 11-5〉 교육 사회보장관련 산업의 위상

(단위: 백만원, %)

산업	산출액	총산출 대비비중	고용	총고용 대비비중
1 농림수산물	51,047,744	1.84	1,666,100	8.92
2 광산물	3,726,594	0.13	16,896	0.09
3 음식료품	93,875,464	3.38	278,093	1.49
4 섬유 및 가죽	46,386,248	1.67	318,228	1.70
5 목재 종이제품	25,204,556	0.91	98,085	0.53
6 인쇄 및 복제	8,086,906	0.29	73,960	0.40
7 석유 석탄제품	106,507,880	3.84	17,645	0.09
8 화학제품	188,104,240	6.78	372,121	1.99
9 비금속광물제품	33,208,844	1.20	105,301	0.56
10 제1차금속제품	176,563,088	6.36	135,129	0.72
11 금속제품	66,648,528	2.40	333,872	1.79
12 일반기계	96,105,208	3.46	371,814	1.99
13 전기 전자기기	268,917,856	9.69	587,477	3.15
14 정밀기기	15,234,025	0.55	85,708	0.46
15 수송장비	182,090,080	6.56	435,079	2.33
16 기타제조업	17,595,756	0.63	111,639	0.60
17 전력가스 및 수도	64,691,416	2.33	70,668	0.38
18 건설	188,450,352	6.79	1,622,768	8.69
19 도소매	136,823,552	4.93	3,201,709	17.15
20 음식점 및 숙박	76,994,384	2.77	1,587,235	8.50
21 운수	101,594,832	3.66	995,960	5.33
22 통신 및 방송	57,504,468	2.07	154,102	0.83
23 금융 및 보험	124,068,584	4.47	646,101	3.46
24 부동산 사업서비스	258,838,576	9.33	2,077,381	11.13
25 공공행정 및 국방	93,388,088	3.37	828,743	4.44
26 교육 및 위생	90,782,360	3.27	1,404,649	7.52
27 의료보건서비스	67,616,640	2.44	629,984	3.37
28 사회보장사업	10,287,863	0.37	351,543	1.88
29 사회 및 기타서비스	73,685,008	2.66	90,570	0.49
30 기타	50,947,748	1.84	13	0.00
합계	2,774,976,888	100	18,668,573	100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2009년 산업연관표에 의거하여 분석대상이 되는 교육복지관련 산업의 한국경제 내 위상을 산출과 고용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 11-5>은 각 산업별로 총산출과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시하고 있

다. 복지지출 증대로 인하여 산업별로 고용, 실질산출, 실질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표 11-6>~<표 11-7>에 나타나 있다.

<표 11-5>에서 총산출 중 2009년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전기전자기기산업으로서 9.69%이다. 이어서 부동산 사업서비스(9.33%), 건설(6.79%), 화학제품(6.78%) 등이 따르고 있다. 종사자 인원에서는 도소매가 17.15%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부동산 사업서비스(11.13%), 농수산물(8.92%), 건설(8.69%)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교육 사회보장관련 3개 산업의 비중을 모두 합쳐서 보면 총산출에서는 6.08%, 종사자 인원에서는 12.77%로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련 3개 산업 안에서 보면, 산출에서는 교육위생(3.27%), 의료 보건서비스(2.44%), 사회보장(0.37%)의 순서이며, 종사자 면에서도 같은 순서로 각기 7.52%, 3.37%, 1.88%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복지관련 산업의 비중이 산출 면에서도 6%가 넘고, 특히 종사자 수에서 12%를 넘는다는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의 증대가 초래할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별 고용과 실질산출에 대한 영향은 정부지출의 증가가 복지관련 3개 산업에 대한 지출만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 3개 산업의 실질 산출과 고용의 증가가 함께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나머지 산업들의 수치는 그로 인한 파급효과이다.

고용효과를 보면 의료 보건 서비스부문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으며 (3.53%~3.83%), 교육 및 위생이 2.33%~2.65%인 반면에 사회보장 사업부문의 증가율은 1.05%~1.49%로서 비교적 낮다. 이러한 결과는 3개 산업의 실질산출 증가율 비교에서도 같이 적용된다. 즉, 의료 보건서비스(2.420%~2.647%), 교육 및 보건(1.941~2.197%), 사회보장사업은 0.989~1.497%로 비교적 낮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관련 정부지출의 증가를 시행할 경우에 3개 부문 사이에서 우선순위와 비중의 조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표 11-6〉 산업별 고용에 대한 영향

(단위: %)

산업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1 농림수산물	0.35	-0.20	0.45	0.35
2 광산품	-0.23	0.00	-0.27	-0.23
3 음식료품	-0.01	-0.09	0.00	-0.01
4 섬유 및 가죽	-0.41	-0.10	-0.47	-0.41
5 목재 및 종이제품	-0.21	0.00	-0.25	-0.21
6 인쇄 및 복제	0.42	0.36	0.43	0.42
7 석유 및 석탄제품	-0.06	0.05	-0.08	-0.06
8 화학제품	-0.23	0.21	-0.30	-0.23
9 비금속광물제품	-0.29	-0.03	-0.34	-0.29
10 제1차금속제품	-0.62	-0.09	-0.72	-0.62
11 금속제품	-0.35	-0.05	-0.41	-0.35
12 일반기계	-0.49	-0.08	-0.57	-0.49
13 전기 및 전자기기	-0.59	-0.09	-0.68	-0.59
14 정밀기기	-0.20	0.26	-0.28	-0.20
15 수송장비	-0.51	-0.11	-0.58	-0.51
16 기타제조업제품	0.03	0.09	0.02	0.03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49	0.23	0.54	0.49
18 건설	0.01	-0.01	0.02	0.01
19 도소매	0.10	-0.14	0.14	0.10
20 음식점 및 숙박	0.26	-0.05	0.32	0.26
21 운수	-0.22	-0.09	-0.24	-0.22
22 통신 및 방송	0.10	0.05	0.11	0.10
23 금융 및 보험	0.38	-0.11	0.47	0.38
24 부동산 사업서비스	0.18	-0.09	0.23	0.18
25 공공행정 및 국방	0.00	0.00	0.00	0.00
26 교육 및 위생	2.60	2.33	2.65	2.60
27 의료보건서비스	3.83	3.53	3.88	3.83
28 사회보장사업	1.42	1.05	1.49	1.42
29 사회 및 기타서비스	0.31	-0.14	0.39	0.31
30 기타 <sup>66)</sup>	84.02	23.82	93.33	84.02

66) 산업연관표상으로 기타부문의 고용은 제로 값으로 주어져 있다. 제로 값으로는 연산결과 값을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값을 임의적으로 주어써 결과적으로 아주 큰 값이 도출되었을 따름이다.

〈표 11-7〉 산업별 실질산출에 대한 영향

(단위: %)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1 농림수산물	0.046	-0.026	0.059	0.046
2 광산물	-0.084	0.000	-0.099	-0.084
3 음식료품	-0.005	-0.040	0.002	-0.005
4 섬유 및 가죽	-0.223	-0.052	-0.254	-0.223
5 목재 및 종이제품	-0.108	-0.002	-0.128	-0.108
6 인쇄 및 복제	0.199	0.172	0.204	0.199
7 석유 및 석탄제품	-0.020	0.016	-0.027	-0.020
8 화학제품	-0.102	0.095	-0.137	-0.102
9 비금속광물제품	-0.116	-0.013	-0.134	-0.116
10 제1차금속제품	-0.236	-0.034	-0.272	-0.236
11 금속제품	-0.185	-0.026	-0.213	-0.185
12 일반기계	-0.303	-0.047	-0.348	-0.303
13 전기 및 전자기기	-0.244	-0.035	-0.282	-0.244
14 정밀기기	-0.125	0.164	-0.177	-0.125
15 수송장비	-0.265	-0.058	-0.302	-0.265
16 기타제조업제품	0.021	0.060	0.014	0.021
17 전력, 가스 수도	0.179	0.085	0.196	0.179
18 건설	0.010	-0.008	0.013	0.010
19 도소매	0.042	-0.057	0.059	0.042
20 음식점 및 숙박	0.166	-0.032	0.201	0.166
21 운수	-0.124	-0.050	-0.137	-0.124
22 통신 및 방송	0.043	0.021	0.046	0.043
23 금융 및 보험	0.160	-0.046	0.197	0.160
24 부동산 사업서비스	0.071	-0.036	0.090	0.071
25 공공행정 및 국방	0.002	-0.001	0.003	0.002
26 교육 및 위생	2.159	1.941	2.197	2.159
27 의료보건서비스	2.613	2.420	2.647	2.613
28 사회보장사업	1.335	0.989	1.397	1.335
29 사회 기타서비스	0.193	-0.087	0.243	0.193
30 기타	0.322	0.257	0.333	0.322

## 3. 소득재분배 효과의 분석

〈표 11-8〉 소득분위별 직접세 부담 증가율

(단위: %, 퍼센트포인트 증가가 아님)

소득분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1분위	4.291	7.01	0.675	0.626
2분위	4.328	7.045	0.697	0.662
3분위	4.353	7.069	0.719	0.686
4분위	4.396	7.112	0.757	0.727
5분위	4.411	7.126	0.769	0.742
6분위	4.419	7.134	0.777	0.749
7분위	4.417	7.132	0.773	0.748
8분위	9.643	7.138	0.782	0.753
9분위	9.635	7.129	0.772	0.745
10분위	9.601	7.096	0.743	0.714
기업의 직접세 부담의 증가율	0.496	2.114	11.441	0.496

〈표 11-9〉 소득분위별 직접세 부담금액 변동

(단위: 백만원)

소득분위	베이스데이터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1분위	346,118	360,970	370,382	348,455	348,285
2분위	434,057	452,847	464,637	437,084	436,931
3분위	669,963	699,127	717,322	674,783	674,560
4분위	1,111,406	1,160,263	1,190,447	1,119,822	1,119,490
5분위	1,586,266	1,656,237	1,699,310	1,598,469	1,598,035
6분위	2,144,903	2,239,683	2,297,927	2,161,575	2,160,977
7분위	3,802,299	3,970,263	4,073,492	3,831,707	3,830,744
8분위	5,290,752	5,800,908	5,668,384	5,332,135	5,330,568
9분위	8,944,404	9,806,204	9,582,074	9,013,445	9,011,073
10분위	21,495,932	23,559,722	23,021,244	21,655,546	21,649,352
합계	45,826,099	49,706,223	49,085,218	46,173,020	46,160,015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소득분위별로 직접세 부담의 증가 비율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본다. 상위 3개 층에 대한 세율의 증가는 설정된 정책구조의 당연한 결과로서 시나리오 1에서 9.6%대의 요율인상이 이루어지지만, 그 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4% 수준의 인상률 추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분배효과가 가장 클 것임을 알 수 있다.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에서 상위 3개 층에 대하여 5%의 소득세 추가요율 인상을 설정하였으나, 실질재정의 수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소득계층에 대하여 3.64% 만큼의 추가인상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상위 3개 층에 대한 인상요율은 9.6%에 달하였다.

시나리오2에서는 소득세율의 인상률이 전 계층에 대하여 비교적 유사한 7% 수준에 이른다. 이는 정부의 실질재정수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에 명시적으로 추가부담을 지우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 재정수지를 위하여 전 가계에 대한 세율인상이 수반되고, 중상위계층에 대해서나,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인상률에서 큰 차이가 없거나 낮아서 소득재분배 효과는 별로 개선되지 못할 것이다. 이 경우에 기업에 대한 부담의 크기를 더욱 늘리면 가계의 추가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욱 나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시나리오 3의 경우, 가계에 대한 직접세 부담의 인상을 회피하는 동시에 기업에 사전적으로 직접세율의 인상률을 정하지 않고, 실질재정수지를 유지하면서 복지지출을 증대하려할 경우 대부분의 부담이 기업에 돌아간다. 기업의 직접세 부담 인상률이 11.4%에 이르게 되는 동시에 가계별 소득 재분배는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시나리오 4의 경우 재원의 조달이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로 다음 세대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가계의 추가 부담은 가장 작게 증가하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나리오 3과 같다.

〈표 11-10〉 소득분위별 실질가처분소득 변동률

(단위: %)

소득분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1분위	0.255	0.153	0.278	0.281
2분위	0.286	0.177	0.3	0.317
3분위	0.294	0.172	0.322	0.341
4분위	0.306	0.162	0.36	0.382
5분위	0.291	0.122	0.372	0.397
6분위	0.273	0.082	0.38	0.404
7분위	0.18	-0.089	0.376	0.403
8분위	-0.208	-0.141	0.385	0.407
9분위	-0.595	-0.439	0.374	0.4
10분위	-0.982	-0.744	0.345	0.369

시나리오별 소득재분배 효과는 소득분위별 실질가처분 소득의 변동률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시나리오 1에서는 상위 3개 계층의 실질가처분 소득이 각기 0.982%, 0.595%, 0.208% 감소하고 제 7분위 계층의 실질가처분 소득은 0.18% 증가에 그치지만 그 이하 계층에서는 0.255%~0.306% 증가한다.

시나리오 2의 경우는 시나리오 1에 비하여 상위 계층의 감소율은 작고, 하위계층의 증가율도 작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는 시나리오 1보다 못하게 된다. 시나리오 3과 4의 경우에는 하위계층의 증가율이 중상위 계층의 증가율보다도 낮아서 재분배 효과는 악화될 것이다.

〈표 11-11〉 소득분위별 정부 이전지출액

(단위: 백만원)

소득분위	베이스데이터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1분위	33,471,160	33,678,180	33,555,372	33,700,200	33,678,180
2분위	24,941,974	25,096,240	25,004,726	25,112,654	25,096,240
3분위	15,627,777	15,724,438	15,667,095	15,734,722	15,724,438
4분위	11,179,327	11,248,473	11,207,453	11,255,829	11,248,473
5분위	7,655,903	7,703,256	7,675,165	7,708,294	7,703,256
6분위	6,161,398	6,199,508	6,176,900	6,203,562	6,199,508
7분위	5,737,821	5,773,311	5,752,257	5,777,086	5,773,311
8분위	3,046,255	3,065,097	3,053,919	3,067,101	3,065,097
9분위	2,275,249	2,289,322	2,280,973	2,290,819	2,289,322
10분위	4,050,236	4,075,288	4,060,426	4,077,952	4,075,288
합계	114,147,100	114,853,113	114,434,285	114,928,217	114,853,113
증가율(%)		0.619	0.252	0.684	0.619

정부의 이전지출 금액의 증가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나리오 3의 경우가 가장 크게 이루어지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 측면에서는 기대에 아주 못 미치게 된다. 시나리오 전체에 있어서 정부의 이전지출액이 제4분위에서부터 제1분위까지 순차적으로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지만, 제10분위에 대한 이전 금액이 제8분위와 제9분위 보다 많은 것은 2009년 베이스데이터의 구조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제 부합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 4. SAM 데이터의 시뮬레이션 효과 분석

CGE 모형에 의한 시뮬레이션은 모든 내생 변수에 대한 결과 값을 도출하여 산업연관표를 업데이트해 줄뿐만 아니라, SAM의 각 계정별 거래 금액도 업데이트 시켜서 제시해 준다. 별첨한 파일에 나타나 있는 자료는 SAM의 2009년 베이스데이

터와 각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 한 이후에 생성된 SAM의 각 계정별 이전지출 거래금액의 증감 금액을 계산해 보이고 있다. SAM은 베이스데이터와 시뮬레이션 이후 업데이트 데이터에서 모두 계정의 주체별로 수입(가로)과 지출(세로)의 금액이 일치하여야 한다.

시나리오 1에 의하면 정부의 수입은 영업잉여를 비롯하여, 생산세, 상품간접세, 관세, 직접세, 가계, 기업, 해외 계정으로부터 총 5,813,027(백만원) 증가하였는데 그 중에서 직접세에 의한 세입 증가가 4,075,800(백만원)으로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 수입을 국내상품의 구매, 기업에 대한 국공채 이자 지불, 가계에 대한 이전, 정부투자, 민간투자에 대한 지원, 해외지출 등에 배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정부는 그 증가분의 77% 정도를 국내 상품 구매에 더 지출하고, 가계에 대한 이전지출은 706,016(백만원 이하 단위 백만원) 증가하여 정부수입 증가분의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암시하는 것은 정부의 수입 증대분을 국내상품 구매에 더 지출하는 것과 하위계층에 대한 이전지출을 증대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하는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나리오 2에서는 정부의 추가 수입 금액은 4,372,472로 시나리오 1보다 상당히 줄어든다. 가계에 대한 이전지출액의 증가액도 287,192로 작아지며, 그 비중도 6.6%로 감소한다. 시나리오 3의 경우 정부수입의 증가액은 6,069,478로 가장 커진다. 가계에 대한 이전지출 증가의 규모(781,120)와 비중(12.87%)도 시나리오 1보다 외형적으로는 증대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내실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적자재정의 확대에 의존하는 시나리오 4에서는 정부 수입의 증대는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2,266,827이나, 가계에 대한 이전지출은 706,016으로 시나리오 1과 동일하다. 주목할 점은 민간투자에 대한 이전지출이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모두 증가하지만, 베이스데이터에 비교하여 3,019,424만큼 감소됨으로써 미래의 자본축적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나리오 2와 3의 경우는 기업 측에 추가 부담을 주는데 그로 인하여 기업의 이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업데이트 된 SAM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시나리오 2와 3의 경우, 기업의 수입은 각각 297,681 및 1,475,566만큼 더 증가하며, 직접세에 대한 추가 부담은 각각 834,280 및 4,515,300만큼 늘어난다. 직접세 형태의 추가부담이 추가수입을 초과하기 때문에 가계, 정부, 민간투자자와 해외에 대한 이전지출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시나리오 2의 경우 그 금액은 각각 -35,530, -92,060, -302,720, -106,288에 이르게 되며, 3의 경우에는 -201,299, -521,580, -1714,672, -602,176에 달한다.

한편 SAM 데이터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증을 요하는 단서가 나타나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치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면 <표 11-11>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부의 이전지출액이 제4분위에서부터 제1분위까지 순차적으로 많은 것은 수긍이 가지만, 제10분위에 대한 이전 금액이 제8분위와 제9분위 보다 많은 점은 베이스데이터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하기 <표 11-12>는 소득계층별 근로소득과 저축을 보여준다. 계층별 근로소득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저축액을 보면 하위계층의 저축이 중상위 보다 많을 뿐 아니라, 제6분위에서 제9분위까지는 오히려 부채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연구에서 엄밀한 검증을 추가로 필요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표 11-12〉 소득 계층별 근로소득과 저축

(단위: 백만원)

소득분위	근로소득	저축
1분위	7,140,807	32,400,208
2분위	16,782,690	24,784,420
3분위	26,150,672	16,792,122
4분위	36,931,124	9,647,856
5분위	43,613,128	2,083,594
6분위	50,049,268	-417,083
7분위	54,790,180	-7,087,938
8분위	69,963,008	-2,494,452
9분위	74,734,336	-15,275,512
10분위	113,530,448	8,327,454
합계	493,685,661	68,760,669

## 제6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09년도 산업연관표의 통합대분류 중에서 교육 및 보건산업을 교육 및 위생, 의료 및 보건, 사회보장 서비스 산업으로 세분하여 전체 산업분류를 30개로 하고, SAM자료를 통합하여 확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성하였다. 교육 사회보장관련 3개 산업의 비중을 모두 합쳐서 보면 총산출에서는 6.08%, 종사자 인원에서는 12.77%로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의 증대가 초래할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정부의 복지 분야 지출증대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기타 주요 변수들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 비교하고 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정부지출 확대에 국내총생산은 증가하지만,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는 시나리오 1이다. 즉, 복지 관련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재원조달의 방안으로서 소득 10분위 계층 중에서 상위 3분

위 계층에 대하여만 소득세의 부과율을 5% 증대시키면서 정부의 실질재정수지를 이전대로 유지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상위 3개 층에 대한 직접세 부담의 증가는 9.6%대에 이르지만, 그 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4% 수준의 부담률이 추가될 뿐이다.

정부의 실질재정수지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동일한 제약 하에서 일종의 부유세 부과 대신, 기업의 부담증가를 통해서 정부의 복지관련 지출을 증대시키는 시나리오 2와 3의 경우엔, 산업 활동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킨다. 또한 재정수지를 위하여 전 가계에 대한 세율인상이 수반되고, 중상위계층에 대해서나,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인상률에서 큰 차이가 없거나 낮아서 소득재분배 효과는 별로 개선되지 못한다. 이 경우에 기업에 대한 부담의 크기를 더욱 늘리면 가계의 추가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욱 나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시나리오2와 시나리오3의 비교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복지지출의 재원으로서 부유세 이외의 방식을 택하고, 재정수지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기업부문과 가계부문 사이에 부담의 크기를 두고 선택과 절충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재원의 조달이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즉 다음 세대에게 전가시키는 시나리오 4의 경우 가계의 추가 부담은 가장 작게 증가하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나리오 3과 같다.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정책당국자들이 사회복지 관련 정부지출을 증대시키려 할 때에 재원의 조달방식에 따라서 소득 재분배와 산업 활동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세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여 정책수단의 디자인을 구성하여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 참고문헌

- 강신욱 외(2010).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구성열(1982). 가구규모와 연령구성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 4(1),
- 김광석, 김대영(1979). 단위소비자척도의 추정시도, 한국개발연구 1(3)
- 김상열·문석웅·이영준·이수호(2008). 부산항 신항의 개장과 물동량 증가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다지역 CGE 모형의 응용, 상경연구, 24(1), 경성대학교
- 김우철, 민희철, 박상원(2006). 소득재분배정책을 위한 동등화 지수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김진, 송헌재(2010). 노동패널을 이용한 주관적 동등화 지수 추정, 재정학연구 3(2)
- 김진욱(2003). 계층별 동등화 소비단위, 공공경제, 8(2), pp.27-55.
- 김진욱(2000). 한국 가계의 동등화 소비단위, 공공경제, 5(1), pp.251-283.
- 김혜련(2007). 우리나라의 소득이동 및 빈곤의 동태적 현황, 통계연구원
- 남상호(2012). 가구균등화지수가 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제학공동학술대회 재정학회 발표본
- 남상호 외(2011). 2011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남상호(2009). 사회복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상호(2007).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건강투자의 경제성장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용환·남상호(2005). 사회회계행렬을 통해 본 한국경제의 소득재분배 구조,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문석웅, 김진홍,(1996). CGE 모형에 의한 한국의 수출입구조 및 거시경제 중기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문석웅(2004). CGE 모형의 시뮬레이션기법을 이용한 2002년도 산업연관표의 창출, 산업혁신연구, 특별1호, pp.55-72
- 문석웅(2000). 정보통신산업 성장의 국민경제적 효과추정 - CGE모형의 응용, 계량경제학보, 11(4). pp.25-61.
- 문석웅·정삼화(2010). 정부의 CO2 중기감축목표에 의한 부산지역경제 및 에너지흐름 영향분석과 정책과제, 부산발전연구원
- 유경준(2009). 우리나라 빈곤변화추이와 요인분석, 재정포럼.
- 유종구(1987).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동등화소비단위: 응답, 한국개발연구, 9(2), pp.178-180.
- 유종구, 주학중(1987). 1984년 도시가구의 동등화소비단위 추정과 분석, 한국개발연구, 9(2), pp.71-88.
- 유종구, 주학중(1986).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동등화 소비단위, 한국개발연구, 8(4), pp.2-14.
- 윤석범(1987).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동등화소비단위: 논평, 한국개발연구, 9(2), pp.175-177.
- 장현준(1986). 최저생계비 산출모형과 도시부문 생계비계측 결과, 사회보장연구, 2
- 張鉉俊(1987). 韓國都市部門의 標準生計費, 韓國開發研究院
- 한국은행 (2011), 산업연관표 연장표 (2009년)
- Aaerge, Rolf, and Ingrid Melby(1998). The Sensitivity of Income Inequality to Choice of Equivalence Scal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4(4), pp.565-570.

- Armington, P.S.(1969). The Geographic Pattern of Trade and the Effects of Price Changes, IMF Staff Papers, XVI, July, pp.176-199.
- Atkinson, Anthony B., Lee Rainwater, and Timothy M. Smeeding(1995).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Evidence from the Luxembourg Income Study, OECD social policy studies no.18
- Banks, James, R. Blundell, and A. Lewbel(1997). Quadratic Demand Curves and Consumer Demand,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LXXIX(4), pp.527-539.
- Buhmann, Brigitte, Lee Rainwater, Guenther Schmaus, and Timothy M. Smeeding(1988). Equivalence Scales, Well-Being, Inequality, and Poverty: Sensitivity Estimates, Across Ten Countries Using the Luxembourg Income Study (LIS) Databas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4(2), pp.115-142.
- Buse, R. C., and L. E. Salathe(1978). Adult Equivalent Scales--An Alternative Approach, American J. of Agricultural Economics, 60, pp.460-468.
- Coulter, Fiona A.E., Frank A. Cowell, and Stephen P. Jenkins(1992). Equivalence Scale Relativities and the Extent of Inequality and Poverty, Economic Journal, Royal Economic Society, 102(414), pp.1067-1082.
- Cowell, F.A(2000). Measuring Inequality, Third ed., Prentice-Hall /Harvester-Wheatsheaf, Hemel Hempstead,
- Corong, Erwin L., and Mark Horridge(2012). PHILGEM: A SAM-based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of the Philippines, Centre of Policy Studies, Monash University General Paper No.G-227
- Creedy, John, and Catherine Sleeman(2004). Adult Equivalence Scales, Inequality and Poverty in New Zealand, New Zealand Treasury, WP.04-21,
- Danziger, S., and M. K. Taussig(1979). Income Unit and the Anatomy of

- Income Distribution, *Review of Income and Wealth*, 25, pp.365-376.
- Deaton, Angus S., and J. Muellbauer(1980). An Almost Ideal Demand System, *American Economic Review*, 70, pp.312-336.
- de Vos, Klass, and M. Asghar Zaidi(1997). Equivalence Scale Sensitivity of Poverty Statistics for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Communit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3(3), pp.319-352.
- Demoussis, Michael, and Vassilis Mihalopoulos(2001). Adult Equivalent Scales Revisited, *J. of Agricultural and Applied Economics*, 33(1).
- Dixon, P., B. Parmenter, D. Vincent(1978). Regional Developments in the ORANI Mode". In: Sharpe, R. (Ed.), *Papers of the Meeting of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Sectio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Third Meeting*. Monash University.
- Dwyer, L., P. Forsyth, and Ray Spurr(2005). Estimating the Impacts of Special Events on an Economy, *Journal of Travel Research*, 43, pp.351-359.
- Ferreira, M. Luisa, Reuben C. Buse, and Jean-Paul Chavas(1998). Is There Bias in Computing Household Equivalence Scales?, 44,(2), pp.183-198.
- Forsyth, F.G.(1960).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ize and Family Expenditure,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123, pp.367-397.
- Glewwe, Paul(1991). Household equivalence scales and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Transfers from the poor to the rich could decrease inequality, *J. of Public Economics*. 44(2), pp.211-216.
- Gottschalk, Peter, and Enrico Spolaore(2002). On the Evaluation of Economic Mobility,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69(1), pp.191-208.
- Harrison, W.J. and K.R. Pearson(2000), *GEMPACK user documentation*, Center of Policy Studies and Impact Project, Monash University.

- Melbourne, Australia.
- Horridge, Mark, B.R. Parmenter, and K.R. Pearson(1993), ORANI-F: A General Equilibrium of the Australian Economy, *Journal of Economic and Financial Computing*, 3(2), pp. 71-140.
- Horridge, Mark(2001). ORANI-G: A Generic Single-Country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internet web site: <http://www.monash.edu.au/policy/oranig.htm>).
- Jenkins, S.(2000). Modelling household income dynamic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2, pp.529-567.
- Jenkins, Stephen J., and Frank A. Cowell(1994). Parametric Equivalence Scales and Scale Relatives, *Economic Journal*, 104.
- Johansen, Leif(1960), *A Multisectoral Model of Economic Growth*, Amsterdam: North-Holland, (2nd edition, 1974)
- Jorgenson, Dale W., L.J. Lau, and T.M. Stocker(1982). The Transcendental Logarithmic Model of Aggregate Consumer Behavior, in Bassmann and G. Rhodes (eds.), *Advances in Econometrics 1*, JAI Press,
- Kakwani, Nanak C(1977). On the Estimation of Consumer Unit Scal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9(4), pp.507-510.
- Kim, K. and S.W. Moon,(2001). Foreign reserve crisis and the Korean industrial structure: A CGE approach," *Mathematical and Computer Modeling*, 33, pp.577-596.
- Lee, C.K., S.W. Moon and J.W. Mjelde(2010), Disentangling the effects on the Korean economy of the 9/11 terrorist attacks from the short-run effects of hosting the 2002 World Cup, using the CGE model, *Tourism Economics*, 16(3), pp.611-628.
- Muellbauer, J.(1980). The Estimation of the Prais-Houthakker Model of Equivalence Scales, *Econometrica*, 48, pp.153-176.

- Muellbauer, John(1975). Identification and Consumer Unit Scales Identification and Consumer Unit Scales, *Econometrica*, 43(4), pp.807-809.
- Schwarze, Johannes(2003). Using Panel Data on Income Satisfaction to Estimate Equivalence Scale Elasticit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9(3), pp.359-372.
- Shorrocks, A. F.(1978). Income inequality and income mobi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19, pp.376-93.
- Shorrocks, A.F.(1976). Income Mobility and the Markov Assumption, *Economic Journal*, 86, pp.566-578.
- Singh, Balvir, and A.L. Nagar,(1973). Determination of Consumer Unit Scales, *Econometrica*, 41, pp.247-255.
- Singh, Balvir, and A.L. Nagar(1978). Identification and Estimation of Consumer Unit Scales, *Econometrica*, 46(1), pp.231-233.
- Singh, Balvir(1972). On the Determination of Economies of Scale in Household Consumption,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3(2), pp.257-270.
- Slesnick Daniel T.(2001). *Consumption and social Welfa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edford, John R., Oral Capps, Jr., and Joseph Havlicek, Jr.,(1986). Adult Equivalent Scales Once More--A Developmental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8(2), pp.322-333.
- van der Gaag, Jacques, and Eugene Smolensky(1982). True household equivalence scal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or in the United Stat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28, pp.17-28.
- van Kerm, Philippe(2004). What Lies behind Income Mobility? Reranking and Distributional Change in Belgium, Western Germany and the USA, *Economica*, 71, pp.223-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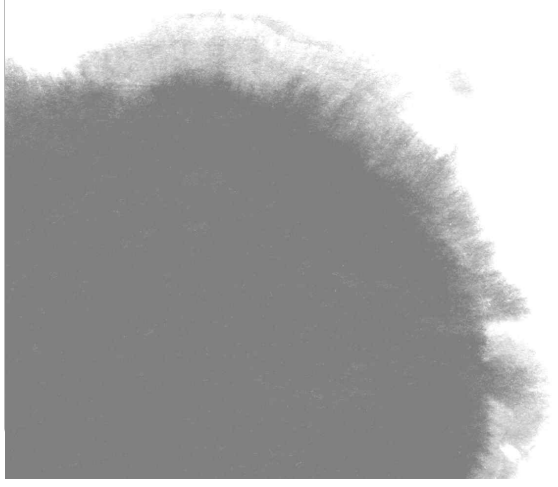


Wang, Chen, and Koen Caminada(2011). Disentangling Income Inequality and the Redistributive Effect of Social Transfers and Taxes in 36 LIS Countries, LIS Working Paper Series No. 567, Luxembourg Income Study (LIS).

Zaidi, Asghar, and Tania Burchardt(2005). Comparing Incomes when Needs Differ--Equivalization for the Extra Costs Disability in the UK,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1(1).



2017





# 부록

〈부표 9-1〉 가구원수별 기술통계량

(단위: 만원, 가구)

가구원수	통계량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균등화 경상소득
1	평균	2,023	1,918	1,975
	중위수	1,303	1,269	1,293
	N	1,473	1,473	1,473
2	평균	3,197	2,983	2,237
	중위수	2,468	2,327	1,739
	N	1,798	1,798	1,798
3	평균	4,569	4,194	2,618
	중위수	3,902	3,636	2,253
	N	1,092	1,092	1,092
4	평균	6,110	5,572	3,047
	중위수	5,352	4,844	2,676
	N	1,202	1,202	1,202
5	평균	6,004	5,544	2,668
	중위수	5,018	4,704	2,244
	N	356	356	356
6	평균	5,763	5,355	2,326
	중위수	5,162	4,670	2,107
	N	95	95	95
7	평균	4,783	4,539	1,808
	중위수	4,161	3,946	1,573
	N	15	15	15
8	평균	6,189	5,786	2,188
	중위수	6,403	6,043	2,264
	N	2	2	2
Total	평균	4,279	3,945	2,513
	중위수	3,552	3,316	2,108
	N	6,033	6,033	6,033

주: 복지패널 5차년도 자료를 분석한 것이며, 균등화지수는 제곱근을 사용하였음.

〈부표 10-1〉 가처분소득의 기술통계량

	Percentiles	Smallest	Obs	7,072
1%	-60	-239,088	Sum of Wgt.	7,072
5%	285	-119,591	Mean	2,067.913
10%	406	-117,104	Std. Dev.	4,037.711
25%	721	-9,288	Variance	1.63e+07
50%	1627	Largest	Skewness	-37.34831
75%	2,933.5	18,978	Kurtosis	2,024.725
90%	4,577	21,656		
95%	5,954	21,699		
99%	8,941	29,764		

〈부표 10-2〉 가처분소득의 기술통계량

	Percentiles	Smallest	Obs	7,072
1%	-33.88461	-119,591	Sum of Wgt.	7,072
5%	242	-119,544	Mean	1,236.485
10%	352.8463	-52,370.5	Std. Dev.	2,401.093
25%	543.3826	-9,288	Variance	5,765,246
50%	976.9	Largest	Skewness	-37.32149
75%	1,740	10,956.95	Kurtosis	1,849.099
90%	2,618.861	11,508.87		
95%	3,257	15,313.1		
99%	4,890	21,046.33		

## A. SAM 확장을 위한 방정식체계

한국의 경제분석을 위하여 개발된 ORANI-G류의 KORANINM은 SAM(social accounting matrix)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단히 유용한 토대가 된다. 이 부록에서는 모형의 확장을 위해 추가로 사용할 변수와 행동방정식 또는 항등식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SAM 확장과 관련된 계수와 변수의 이름은 원래의 시스템뿐 아니라 SAM의 관행과도 일치한다. 즉, SAM에 관련된 플로우(flow) 변수는 그 변수가 위치한 행과 열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다. 여기서 열은 수입을 행은 지출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VHOUGOS는 GOS(영업잉여, capital or gross operating surplus)로부터 얻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VTAXHOU는 가구가 납부하는 직접세를 나타낸다.

### A.1. GOS(영업잉여, Gross Operating Surplus)

Excerpt 43은 GOS 계정의 금액이 소비자, 기업 및 정부에 배분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첫 방정식 E\_wgos는 총 영업잉여의 증가율은 자본에 대한 수입과 토지에 대한 수입의 가중평균에 비례함을 나타낸다. 그 다음의 방정식들은 각 경제주체의 GOS로부터의 소득 증가율은 총 영업잉여 증가율에 비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주체들의 자본소득 비중은 해당 연도의 국민소득 계정에서 도출한다. 그리고 총자본소득 안에서의 각 가구별 배분은 보건사회연구원의 가구 서베이 자료를 사용한다.

! Excerpt 43 of TABLO input file: !

! Distribution of Gross Operating Surplus (GOS)!

Variable ! GOS payments!

wgos

# Total GOS #;

(all,h,HOU) whougos(h)

# Household receipts/income from GOS #;

whougos\_h # Total Household receipts/income from GOS #;  
 wentgos # Enterprises' receipts/income from GOS #;  
 wgovgos # Government receipts/income from GOS #;

Coefficient

VGOS # Total GOS #;  
 (all,h,HOU) VHOUGOS(h) # Household receipts/income from GOS #;  
 VHOUGOS\_H # Total Household/income receipts from GOS #;  
 VENTGOS # Enterprises' receipts/income from GOS #;  
 VGOVGOS # Government receipts/income from GOS #;

Read

VHOUGOS from file BASEDATA header "VHGS";  
 VENTGOS from file BASEDATA header "VEGS";  
 VGOVGOS from file BASEDATA header "VGGS";

Update

(all,h,HOU) VHOUGOS(h) = whougos(h);  
 VENTGOS = wentgos;  
 VGOVGOS = wgovgos;

Formula

$VGOS = V1CAP\_I + V1LND\_I$ ;  
 $VHOUGOS\_H = \text{sum}\{h,HOU, VHOUGOS(h)\}$ ;

Equation

E\_wgos # GOS from income side #  
 $VGOS * wgos = V1CAP\_I * w1cap\_i + V1LND\_I * w1lnd\_i$ ;  
 E\_whougos # Household receipts/income from GOS #  
 (all,h,HOU) whougos(h) = wgos;  
 E\_whougos\_h # Total Household/income receipts from GOS #  
 $VHOUGOS\_H * whougos\_h = \text{sum}\{h,HOU, VHOUGOS(h) * whougos(h)\}$ ;  
 E\_wentgos # Enterprises' receipts/income from GOS #  
 wentgos = wgos;  
 E\_wgovgos # Government receipts/income from GOS #  
 wgovgos = wgos;

Write



VGOS to file SUMMARY header "VGOS";  
 VHOUGOS to file SUMMARY header "VHGS";  
 VENTGOS to file SUMMARY header "VEGS";  
 VGOVGOS to file SUMMARY header "VGGS";

## A.2. 기업계정(Enterprises Account)

Excerpt 44의 계수와 변수는 모든 공공기업과 민간 기업을 망라한 기업계정과 관련이 있다. Excerpt 44의 첫 방정식이 보여주듯이, 기업의 소득은 요소소득 factors (gross operating surplus) 및 가구와 해외(ROW, rest of the world)로부터의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다음에 이어지는 방정식들은 각 가구의 기업에 대한 property payments는 각 가구가 GOS로부터 얻는 소득의 변화율에 비례하며, 해외로부터의 이전소득은 GDP(gross domestic product)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Excerpt 43 말미의 방정식들은 기업의 지출을 나타낸다. 먼저 정부에 소득세를 납입한 다음, 소득의 일부를 가구와 정부와 해외에 배당금 형식으로 이전한다. 이 주체들이 받는 이전소득의 백분을 변화는 기업의 세후소득의 백분을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 나머지는 기업저축 혹은 내부유보로 산출된다. 마지막 방정식은 기업에 부과되는 소득세율을 결정한다. 여기서 Ftaxent는 세금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 쉬프트 변수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A.11에서 설명할 것이다.

! Excerpt 44 of TABLO input file: !

! Enterprises account: Receipts, expenditures and savings !

Variable !Income!

went # Total income of enterprises #;

(all,h,HOU) wenthou(h) # Enterprise receipts from household #;

wenthou\_h # Total enterprise receipts from households #;

wentrow # Enterprise receipts from the rest of the world #;

Coefficient

```

VENT      # Total income of enterprises #;
(all,h,HOU) VENTHOU(h) # Enterprise receipts from household #;
VENTHOU_H # Total enterprise receipts from households #;
VENTROW   # Enterprise receipts from the rest of the world #;

Read
VENTHOU from file BASEDATA header "VETH";
VENTROW from file BASEDATA header "VERW";

Update
(all,h,HOU) VENTHOU(h) = wenthou(h);
VENTROW = wentrow;

Formula
VENT = VENTGOS + sum{h,HOU, VENTHOU(h)} + VENTROW;
VENTHOU_H = sum{h,HOU, VENTHOU(h)};

Equation
E_went # Total income of enterprises #
VENT*went = VENTGOS*wentgos + sum{h,HOU, VENTHOU(h)*wenthou(h)}
           + VENTROW*wentrow;

E_wenthou # Enterprise receipts from household #
(all,h,HOU) wenthou(h) = whougos(h);    ! default assumption !

E_wenthou_h # Total enterprise receipts from households #
VENTHOU_H*wenthou_h = sum{h,HOU, VENTHOU(h)*wenthou(h)};

E_wentrow # Row transfers to enterprises #
wentrow = w0gdpepx; ! default assumption !

Write
VENT to file SUMMARY header "VENT";
VENTHOU to file SUMMARY header "VETH";
VENTROW to file SUMMARY header "VERW";

Variable !enterprise payments!
went_posttax # Enterprise tax payments #;
(all,h,HOU) whouent(h) # Household receipts from enterprises #;
wgovent      # Government transfers to enterprises #;
wtaxent      # Enterprise direct income tax payments #;

```

wrowent # Row income from enterprises: repatriated profits #;  
 wsavent # Enterprise savings #;  
 ftaxent# Ad valorem rate of corporation tax #;  
 whouent\_h # Total household income/dividends from enterprises #;

## Coefficient

VENT\_POSTTAX # VGOS less VGOSTAX #;  
 (all,h,HOU) VHOUEENT(h) # Household receipts from enterprises #;  
 VGOVENT # Government transfers to enterprises #;  
 VTAXENT # Enterprise direct income tax payments #;  
 VROWENT # Row income from enterprises: repatriated profits #;  
 VSAVENT # Enterprise savings #;  
 VHOUEENT\_H # Total household income/dividends from enterprises #;

## Read

VHOUEENT from file BASEDATA header "VHET"; VGOVENT from file BASEDATA header "VGVE"; VTAXENT from file BASEDATA header "VTXE"; VROWENT from file BASEDATA header "VRWE";

## Update

(all,h,HOU) VHOUEENT(h) = whouent(h);  
 VGOVENT = wgovent;  
 VTAXENT = wtaxent;  
 VROWENT = wrowent;

## Formula

VSAVENT = VENT [sum{h,HOU, VHOUEENT(h)} + VGOVENT + VTAXENT + VROWENT];  
 VENT\_POSTTAX = VENT - VTAXENT;  
 VHOUEENT\_H = sum{h,HOU, VHOUEENT(h)};

## Equation

E\_went\_posttax # Enterprise post tax income #  
 VENT\_POSTTAX\*went\_posttax = VENT\*went - VTAXENT\*wtaxent;  
 E\_wgovent # Enterprise transfers to gov #  
 wgovent = went\_posttax;  
 E\_wrowent # Enterprise transfers to ROW #  
 wrowent = went\_posttax;

```

E_whoent # Enterprise transfers to households # (all,h,HOU)
    whoent(h) = went_posttax;
E_whoent_h # Total enterprise transfers to households #
    VHOUENT_H*whoent_h = sum{h,HOU, VHOUENT(h)*whoent(h)};
E_wsavent # Find savings as residual #
    VSAVENT*wsavent = VENT*went    [!sum{h,HOU, VHOUENT(h)*whoent(h)}!
    VHOUENT_H*whoent_h + VGOVENT*wgovgos + VTAXENT*wtaxent +
VROWENT*wrowent];
E_wtaxent # Corporation tax #
    wtaxent = ftaxent + went;
Write
    VHOUENT to file SUMMARY header "VHTE"; VGOVENT to file SUMMARY header
"VGVE"; VTAXENT to file SUMMARY header "VTXE"; VROWENT to file SUMMARY
header "VRWE"; VSAVENT to file SUMMARY header "VSVE"; VENT_POSTTAX to file
SUMMARY header "VEPT";

```

### A.3. 가구의 노동소득(labor income of households)

산업과 숙련도에 따라 각 가구의 노동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입한 것이 본 모형의 특징이다. 이것은 보조 항목 VILABINC(IND\*OCC\*HOU)를 도입함으로써 가능한데, 이 항목의 가구들의 합이 “핵심” 데이터인 VILAB(IND\*OCC)와 일치해야 한다. LABCHECK 계수에 대한 Assertion이 이 규칙을 부과한다.

Excerpt 45의 첫 방정식은 산업  $i$ 가 (비)숙련 노동자  $o$ 에 지불한 임금의 백분율 변화를 결정한다. Backsolve 명령은 wllab를 대체하여 변수와 방정식의 수를 감소 시킴으로써 빠른 해(解)를 구할 수 있게 한다. 다음 방정식은 각 가구의 노동소득이 산업  $i$ 가 노동자  $o$ 에게 지불한 임금의 백분율 변화와 인구를 따르도록 규정한다. 그런 다음, 보조 조건을 통하여, 숙련도에 따른 산업의 임금 지불액이 숙련도에 따른 노동을 산업에 제공함으로써 가구가 얻는 임금소득과 같아지도록 제약을 가한다. 그 다음의 세 방정식은 여러 방법으로 노동 임금을 합산하며, 이 결과는 이어지는

excerpts에서 사용될 것이다.

```

! Excerpt 45 of TABLO input file: !
! Labour income of households !
Variable
    (all,i,IND)(all,o,OCC)  w1lab(i,o) # Labour income #;
    (all,i,IND)(all,o,OCC)(all,h,HOU) w1labinc(i,o,h) # HH Labour income #;
    (all,i,IND)(all,o,OCC)  labslack(i,o) # Employment rate #;
    (all,i,IND)  w1labh_oh(i) # Labour bills #;
    (all,h,HOU)(all,o,OCC) w1labh_i(h,o) # Labour income of hh #;
    (all,h,HOU)  w1labinc_io(h) # Total hh Labour income #;
Coefficient
    (all,i,IND)(all,o,OCC)(all,h,HOU) V1LABINC(i,o,h) # HH Labour income #;
    (all,i,IND)  V1LABH_OH(i) # Labour bills #;
    (all,h,HOU)(all,o,OCC) V1LABOH_I(h,o) # Labour income of hh#;
    (all,h,HOU)  V1LABINC_IO(h) # Total hh Labour income #;
Read
    V1LABINC from file BASEDATA header "LINC";
Update
    (all,i,IND)(all,o,OCC)(all,h,HOU) V1LABINC(i,o,h) = w1labinc(i,o,h);
Formula
    (all,i,IND)  V1LABH_OH(i) = sum{o,OCC, sum{h,HOU, V1LABINC(i,o,h)}};
    (all,h,HOU)(all,o,OCC) V1LABOH_I(h,o)= sum{i,IND, V1LABINC(i,o,h)};
    (all,h,HOU)  V1LABINC_IO(h)= sum{o,OCC, sum{i,IND, V1LABINC(i,o,h)}};
Coefficient (all,i,IND)(all,o,OCC) LABCHECK(i,o) # Check V1LAB = V1LABINC #;
Formula    (all,i,IND)(all,o,OCC) LABCHECK(i,o) = V1LAB(i,o) sum{h,HOU,
V1LABINC(i,o,h)};
Assertion  (all,i,IND)(all,o,OCC) ABS[LABCHECK(i,o)] <0.1;

Equation
    E_w1lab # Labour income # (all,i,IND)(all,o,OCC)
    w1lab(i,o) = p1lab(i,o) + x1lab(i,o);

```

Backsolve w1lab using E\_w1lab;

Equation

E\_w1labinc # HH Labour income # (all,i,IND)(all,o,OCC)(all,h,HOU)

w1labinc(i,o,h) = qh(h) + labslack(i,o) + w1lab(i,o);

E\_labslack # Constraint # (all,i,IND)(all,o,OCC)

V1LAB(i,o)\*w1lab(i,o) = sum{h,HOU, V1LABINC(i,o,h)\*w1labinc(i,o,h)}  
+ IF[ V1LAB(i,o)=0, labslack(i,o)];

E\_w1labh\_i # HH Labour income # (all,h,HOU)(all,o,OCC)

ID01[V1LABOH\_I(h,o)]\*w1labh\_i(h,o) = sum{i,IND,V1LABINC(i,o,h)\*w1labinc(i,o,h)};

E\_w1labinc\_io # Total labour income of hh # (all,h,HOU)

ID01[V1LABINC\_IO(h)]\*w1labinc\_io(h) = sum{o,OCC,

V1LABOH\_I(h,o)\*w1labh\_i(h,o)};

! E\_w1labinc\_io # Total labour income of hh # (all,h,HOU)

sum{o,OCC, V1LABOH\_I(h,o)\*[w1labh\_i(h,o) w1labinc\_io(h)]} = 0; !

E\_w1labh\_oh # Labour bills # (all,i,IND) [TINY+V1LABH\_OH(i)]\*w1labh\_oh(i) =  
sum{o,OCC, sum{h,HOU,

V1LABINC(i,o,h)\*w1labinc(i,o,h)}];

Write

V1LABINC to file SUMMARY header "LINC"; V1LABH\_OH to file SUMMARY header  
"L\_OH"; V1LABOH\_I to file SUMMARY header "LOHI"; V1LABINC\_IO to file  
SUMMARY header "LIIO";

#### A.4. 가구 소득(Household income)

Excerpt 46은 세전 및 세후 가구소득을 산출하는 방정식을 포함한다. 먼저 가구 소득의 각 구성요소를 결정하는데, 첫 두 방정식은 정부와 해외로부터 가구로의 이전소득을 나타낸다. 이 변수들은 자동적으로 GDP의 움직임을 따르는데, 이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셋째 방정식은 한 가구로부터 다른 가구로의 소득이전은 공여가구의 세후소득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모든 가구 소득의 구성요소들이 설명된 후, 다섯째 방정식은 각 가구의 세전 소득을 결정한다.

Excerpt 46의 방정식의 마지막 블록은 각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산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가처분소득은 직접소득세와 정부로의 세외 소득이전을 차감함으로써 도출된다. 소득세율 방정식  $E\_w\text{taxhou}$ 은 세금구조가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두 개의 쉬프트 변수를 포함한다. 이 중에서  $f\_inctaxrate(h)$ 는 가구의 특정세율의 변화를 허용하는 반면에  $f\_inctaxrate\_h$ 는 모든 가구의 세율이 동일하게 변하도록 강제하는 전반적인 쉬프트 변수이다. 한편, 각 가구의 정부로의 세외 소득이전을 결정하는 다음 방정식  $E\_wgovhou$ 에는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첫째 옵션은 세외(non-tax) 지불이 가구의 세전소득에 비례하도록 하는 것이며, 다른 옵션은 위에서 방금 언급한 두 개의 쉬프트 변수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옵션은 가구의 정부로의 세외 지불은 소득세구조의 외생적인 변화를 따르도록 한다.

Excerpt 46의 마지막 다섯 방정식은 각 가구의 실질소득 및 실질가처분소득과 함께 세전 및 세후의 전체 가구소득 및 모든 가구에 부과된 소득세율을 산출한다.

! Excerpt 46 of TABLO input file: !

! Household Income, disposable income, savings and tax payments !

Variable

```
(all,h,HOU) winchou(h) # Pre tax h'hold income #;
(all,h,HOU) whougov(h) # Gov transfers to households #;
(all,hto,HOU)(all,hfrm,HOU) whouhou(hto,hfrm) # Intra hh transfers#;
(all,h,HOU) whourow(h) # Gov transfers to households #;
(all,h,HOU) wgovhou(h) # Hh tranfers to govt#;
(all,h,HOU) wtaxhou(h) # Household tax payments #;
(all,h,HOU) wdispinc(h) # Post tax h'hold income #;
```

Coefficient

```
(all,h,HOU) VINCHOU(h) # Pre tax h'hold income #;
(all,h,HOU) VHOUGOV(h) # Gov transfers to households #;
(all,hto,HOU)(all,hfrm,HOU) VHOUHOU(hto,hfrm) # Intra hh transfers#;
(all,h,HOU) VHOUROW(h) # Row transfers to households #;
(all,h,HOU) VDISPINC(h) # Post tax h'hold income #;
(all,h,HOU) VGOVHOU(h) # Hh tranfers to govt#;
```

(all,h,HOU) VTAXHOU(h) # Hh income tax to govt#;

Read

VHOUGOV from file BASEDATA header "VHGV";  
 VHOUHOU from file BASEDATA header "VHHO";  
 VHOURROW from file BASEDATA header "VHRW";  
 VGOVHOU from file BASEDATA header "VGVH";  
 VTAXHOU from file BASEDATA header "VTXH";

Update

(all,h,HOU) VHOUGOV(h) = whougov(h);  
 (all,hto,HOU)(all,hfrm,HOU) VHOUHOU(hto,hfrm) = whouhou(hto,hfrm);  
 (all,h,HOU) VHOURROW(h) = whourow(h);  
 (all,h,HOU) VGOVHOU(h) = wgovhou(h);  
 (all,h,HOU) VTAXHOU(h) = wtaxhou(h);

Formula

(all,h,HOU) VINCHOU(h) = VHOUGOS(h) + VHOUEENT(h) + V1LABINC\_IO(h)  
 + VHOUGOV(h) + sum{hfrm,HOU, VHOUHOU(h,hfrm)}  
 + VHOURROW(h);

(all,h,HOU) VDISPINC(h) = VINCHOU(h) VTAXHOU(h) VGOVHOU(h);

Equation

E\_whougov # Gov transfers to households # (all,h,HOU)

whougov(h) = w0gdpexp; ! default assumption !

E\_whouhou # Intra hh transfers# (all,hto,HOU)(all,hfrm,HOU)

whouhou(hto,hfrm) = wdispinc(hfrm);

! transfer proportional to post tax donor income !

E\_whourow # Row transfers to households # (all,h,HOU)

whourow(h) = w0gdpexp; ! default assumption !

E\_winchou # Pre tax household income # (all,h,HOU)

VINCHOU(h)\*winchou(h) = VHOUGOS(h)\*whougos(h) + VHOUEENT(h)\*whouent(h)

+

VHOUGOV(h)\*whougov(h) +

V1LABINC\_IO(h)\*w1labinc\_io(h) + sum{hfrm,HOU,

VHOUHOU(h,hfrm)\*whouhou(h,hfrm)}



$$+ \text{VHOUROW}(h) * \text{whourow}(h);$$

Variable !Post tax household income!

$\text{winchou}_h$  # Total pre tax h'hold income #;  
 (all,h,HOU)  $f\_inctaxrate(h)$  # Income tax shifter: by income #;  
 $f\_inctaxrate\_h$  # Income tax shifter: overall #;  
 $\text{wdispinc}_h$  # Total post tax h'hold income #;  
 $\text{avetax}_h$  # Average Tax Factor:  $\text{avedispwager}$   $\text{avewager}$  #;  
 (all,h,HOU)  $\text{xinchou}(h)$  # Real household income #;  
 (all,h,HOU)  $\text{xdispinc}(h)$  # Real household income #;

Equation

$E\_wdispinc$  # Post tax household income # (all,h,HOU)

$$\text{VDISPINC}(h) * \text{wdispinc}(h) = \text{VINCHOU}(h) * \text{winchou}(h) - \text{VGOVHOU}(h) * \text{wgovhou}(h) - \text{VTAXHOU}(h) * \text{wtaxhou}(h);$$

$E\_wtaxhou$  # Households to gov: income taxes # (all,h,HOU)

$$\text{wtaxhou}(h) = \text{winchou}(h) * f\_inctaxrate(h) + \text{winchou}_h * f\_inctaxrate\_h;$$

! note:  $f\_inctaxrate(h)$ , and  $f\_inctaxrate\_h$  are % changes in ad valorem rates !

$E\_wgovhou$  # Households to gov: transfers # (all,h,HOU)

$$\text{wgovhou}(h) = \text{winchou}(h);$$

!  $\text{wgovhou}(h) = \text{winchou}(h) * f\_inctaxrate(h) + \text{winchou}_h * f\_inctaxrate\_h$ ;

$E\_winchou\_h$  # Total pre tax household income #

$$\text{sum}\{h, \text{HOU}, \text{VINCHOU}(h) * [\text{winchou}(h) - \text{winchou}_h]\} = 0;$$

$E\_wdispinc\_h$  # Total post tax h'hold income #

$$\text{sum}\{h, \text{HOU}, \text{VDISPINC}(h) * [\text{wdispinc}(h) - \text{wdispinc}_h]\} = 0;$$

$E\_avetax\_h$  # Average tax factor #

$$\text{wdispinc}_h = \text{winchou}_h * \text{avetax}_h;$$

$E\_xinchou$  # Real household income# (all,h,HOU)

$$\text{xinchou}(h) = \text{winchou}(h) * \text{p3toth}(h);$$

$E\_xdispinc$  # Real post tax household income # (all,h,HOU)

$$\text{xdispinc}(h) = \text{wdispinc}(h) * \text{p3toth}(h);$$

Write

VHOUGOV to file SUMMARY header "VHGV";  
 VHOUHOU to file SUMMARY header "VHHO";  
 VHOURROW to file SUMMARY header "VHRW";  
 VGOVHOU to file SUMMARY header "VGVH";  
 VTAXHOU to file SUMMARY header "VTXH";  
 VINCHOU to file SUMMARY header "VSIH";

#### A.5. 가구 소비함수, 저축 및 기타 소득이전

Excerpt 47의 첫 방정식 E\_f3toth는 가구 소비를 가처분소득과 두 개의 외생 쉬프트 변수 - 각 가구의 특정한 소비변화를 허용하는 f3toth(h)와 모든 가구의 소비에 동일한 움직임을 강제하는 f3tot\_h - 에 연계시킨다. 방정식 E\_wrowhou는 가구의 해외로의 소득이전과 관계가 있으며 가처분소득과 같이 움직인다. 마지막으로 항등식 E\_delSAVHOU는 총소득에서 지출을 차감한 나머지를 가구저축으로 결정한 다.

! Excerpt 47 of TABLO input file: !

! Household consumption function, savings and other transfer payments!

Variable

(all,h,HOU) f3toth(h) # Consumption function ratio [consumption/GDP]#;

f3tot\_h # Over all shifter for consumption #;

(all,h,HOU) wrowhou(h) # Household transfers to row #;

(change)(all,h,HOU) delSAVHOU(h) # Household saving #;

Coefficient

(all,h,HOU) VROWHOU(h) # Household transfers to row #;

(all,h,HOU) VSAVHOU(h) # Household saving #;

Read

VROWHOU from file BASEDATA header "VRWH";

Update

(all,h,HOU) VROWHOU(h) = wrowhou(h);

Formula

$$(all,h,HOU) \quad VSAVHOU(h) = VINCHOU(h) \quad V3TOT(h) \quad \text{sum}\{hto,HOU, \\ VHOUHOU(hto,h)\} \\ VENTHOU(h) \quad VGOVHOU(h) \quad VTAXHOU(h) \\ VROWHOU(h);$$

Equation

E\_f3toth # Consumption function # (all,h,HOU)

$$w3toth(h) = f3toth(h) + wdispinc(h) + f3tot\_h;$$

E\_wrowhou # Household transfers to row # (all,h,HOU)

$$wrowhou(h) = wdispinc(h); \text{ ! default rule !}$$

E\_delSAVHOU # Household saving # (all,h,HOU)

$$100 * VSAVHOU(h) * delSAVHOU(h) = VINCHOU(h) * winchou(h) \quad V3TOT(h) * w3toth(h) \\ \text{sum}\{hto,HOU, VHOUHOU(hto,h) * whouhou(hto,h)\} \\ VGOVHOU(h) * wgovhou(h)$$

$$VTAXHOU(h) * wtaxhou(h)$$

$$VENTHOU(h) * wenthou(h)$$

$$VROWHOU(h) * wrowhou(h);$$

Write

VROWHOU to file SUMMARY header "VRWH"; VSAVHOU to file SUMMARY header "VSVH"; V3TOT to file SUMMARY header "3TOT";

## A.6. 정부소득(Government Income)

Excerpt 48은 정부소득을 결정한다. 첫 방정식 E\_wgovrow는 해외로부터의 소득이전 수입이 GDP를 따르도록 규정하며, 마지막 방정식 E\_wincgov는 정부소득의 구성요소들의 합을 제공한다.

! Excerpt 48 of TABLO input file: !

! Fill in government row (income) !

! Apart from VROWGOV, all entries are already determined !

Variable

wgovrow # Transfers from ROW to gov #;

wincgov # Government income #;

Coefficient

VGOVROW # Transfers from ROW to gov #;

VINGCOV # Government income #;

Read

VGOVROW from file BASEDATA header "VGVR";

Update VGOVROW = wgovrow;

Formula

$$\text{VINGCOV} = \text{V0TAX\_CSI} + \text{VGOVGOS} + \text{VGOVENT} + \text{VTAXENT} + \text{VGOVROW} \\ + \text{sum}\{h, \text{HOU}, \text{VGOVHOU}(h) + \text{VTAXHOU}(h)\};$$

Equation

E\_wgovrow # Transfers from ROW to gov #

$$\text{wgovrow} = \text{w0gdpexp}; \text{ ! default rule !}$$

E\_wincgov # Government income #

$$\text{VINGCOV} * \text{wincgov} = \text{V0TAX\_CSI} * \text{w0tax\_csi} + \text{VGOVGOS} * \text{wgovgos} + \\ \text{VTAXENT} * \text{wtaxent} \\ + \text{VGOVENT} * \text{wgovent} \text{ ! } \text{V1SUB\_I} * \text{w1sub\_i} \\ + \text{sum}\{h, \text{HOU}, \text{VGOVHOU}(h) * \text{wgovhou}(h) \\ + \text{VTAXHOU}(h) * \text{wtaxhou}(h)\} \\ + \text{VGOVROW} * \text{wgovrow};$$

Write

VINGCOV to file SUMMARY header "VING";

### A.7. 정부지출(Government expenditure)

Excerpt 49의 계수와 변수들은 정부지출 및 정부저축과 관련되어 있다. 첫 방정식 E\_wrowgov는 정부의 해외로의 소득이전을 GDP와 연계시키며, 다음 방정식 E\_wcurgov는 현재의 정부지출을 합산한다. 다음 방정식 E\_wcapgov는 초기의 투자 비중에 따라 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지출을 결정한다.

마지막 세 방정식은 정부저축을 나타낸다. 항등식  $E\_wsavgov$ 은 소득과 지출의 차이로 정부저축을 규정한다. 재정적자도 가능하므로 다음 방정식  $E\_delGOVSAV$ 은 GDP의 일정 비율로 변화는 정부저축  $delgovsav$ 를 결정한다.  $delgovsav$ 는 두 명목변수의 비율(의 변화)임을 주목하라. 마지막 방정식  $E\_realsavgov$ 은 명목저축을 GDP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실질정부저축을 산출한다.

! Excerpt 49 of TABLO input file: !

! Find current gov expenditure and capital gov expenditure !

! Hence find gov saving might be negative in levels !

! Government expenditure !

Variable

wcrgov # Current gov expenditure #;

wrowgov # GOV transfers to ROW #;

wcapgov # Investment gov expenditure #;

(all,i,IND) s2gov(i) # Gov share of investment by industry #;

wexpgov # Total gov expenditure #;

wsavgov # Gov (income expenditure) #;

! wgosgov # Gov payments to GOS #; !

(change) delsavgov # Gov (income expenditure)/GDP #;

realsavgov # Real gov (income expenditure) #;

Coefficient

VROWGOV # GOV transfers to ROW #;

VCURGOV # Current gov expenditure #;

VCAPGOV # Investment gov expenditure #;

(all,i,IND) GOVSHRINV(i) # Gov share of investment by industry #;

VEXPGOV # Total gov expenditure #;

! VGOSGOV # GOV GOS payments#; !

VSAVGOV # Gov (income expenditure) #;

Read

VROWGOV from file BASEDATA header "VRGV";

! VGOSGOV from file BASEDATA header "VSGV"; !

GOVSHRINV from file BASEDATA header "GVSH";

Update

VROWGOV = wrowgov;

! VGOSGOV = wgosgov; !

(all,i,IND) GOVSHRINV(i) = s2gov(i);

Formula

VCURGOV = V5TOT !+ VGOSGOV ! + VROWGOV + sum{h,HOU, VHOUGOV(h)};

VCAPGOV = sum{i,IND, GOVSHRINV(i)\*V2TOT(i)};

VEXPGOV = VCURGOV + VCAPGOV;

VSAVGOV = VINCGOV VEXPGOV;

Equation

E\_wrowgov # GOV transfers to ROW #

wrowgov = w0gdpepx; ! default rule !

E\_wcurgov # Current gov expenditure #

$$VCURGOV * wcurgov = V5TOT * w5tot + VROWGOV * wrowgov + \sum\{h,HOU, VHOUGOV(h) * whougov(h)\};$$

E\_wcapgov # Investment gov expenditure #

$$VCAPGOV * wcapgov = \sum\{i,IND, GOVSHRINV(i) * V2TOT(i) * [s2gov(i) + p2tot(i) + x2tot(i)]\};$$

! assume exogenous s2gov(i) # gov share of investment by industry # !

E\_wexpgov # Total gov expenditure #

$$VEXPGOV * wexpgov = VCURGOV * wcurgov + VCAPGOV * wcapgov;$$

E\_wsavgov # Gov (income expenditure) #

$$VSAVGOV * wsavgov = VINCGOV * wincgov VEXPGOV * wexpgov;$$

E\_deISAVGOV # Gov (income expenditure)/GDP #

$$100 * V0GDPEXP * deISAVGOV = VSAVGOV * wsavgov V0GDPEXP * w0gdpepx;$$

E\_realsavgov # Real gov (income expenditure)#

$$realsavgov = wsavgov p0gdpepx;$$

Write

VSAVGOV to file SUMMARY header "GSAV";

VCAPGOV to file SUMMARY header "GCAP";

## A.8. 민간 투자지출(Private investment expenditure)

Excerpt 50의 유일한 방정식 E\_wcappriv는 총투자(재고 포함)와 정부투자지출의 차이를 민간 총투자지출로 정의한다.

! Excerpt 50 of TABLO input file: !

! Find investment private expenditure !

! Private investment finance requirement is just the negative of this !

Coefficient

VCAPPRIV # Investment private expenditure #;

Formula

VCAPPRIV = V2TOT\_I - VCAPGOV + V6TOT;

Variable

wcappriv # Investment private expenditure #;

Equation

E\_wcappriv # Investment private expenditure #

VCAPPRIV\*wcappriv = V2TOT\_I\*w2tot\_i - VCAPGOV\*wcapgov + V6TOT\*w6tot;

## A.9. 해외부문(Rest of the world)

Excerpt 51은 국내경제와 해외부문의 관계를 요약한다. 첫 두 방정식 E\_wexpro와 E\_wrowinc는 각각 해외부문과의 소득이전을 정의한다. 끝에서 두 번째 항등식 E\_savrow는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로 경상수지를 정의한다.

! Excerpt 51 of TABLO input file: !

! Find ROW row and column sums !

Variable

wexpro # Total ROW expenditure #;

wrowinc # Total ROW income #;

wsavrow # ROW (income - expenditure) #;

Coefficient

VEXPROW # Total ROW expenditure #;

VROWINC # Total ROW income #;

VSAVROW # ROW (income - expenditure) = Current Account Balance #;

Formula

VEXPROW = V4TOT + VGOVROW + VENTROW + sum{h,HOU, VHOURROW(h)};

VROWINC = sum{h,HOU, VROWHOU(h)} + VROWGOV + V0CIF\_C + VROWENT;

VSAVROW = VROWINC - VEXPROW;

Equation

E\_wexprow # Total ROW expenditure #

$$\begin{aligned} \text{VEXPROW} * \text{wexprow} &= \text{V4TOT} * \text{w4tot} + \text{VGOVROW} * \text{wgovrow} + \\ &\text{VENTROW} * \text{wentrow} \\ &+ \text{sum}\{h, \text{HOU}, \text{VHOURROW}(h) * \text{whourrow}(h)\}; \end{aligned}$$

E\_wrowinc # Total ROW income #

$$\begin{aligned} \text{VROWINC} * \text{wrowinc} &= \text{sum}\{h, \text{HOU}, \text{VROWHOU}(h) * \text{wrowhou}(h)\} + \\ &\text{VROWENT} * \text{wrowent} \\ &+ \text{V0CIF\_C} * \text{w0cif\_c} + \text{VROWGOV} * \text{wrowgov}; \end{aligned}$$

E\_wsavrow # ROW (income - expenditure) = Current Account Balance #

$$\text{VSAVROW} * \text{wsavrow} = \text{VROWINC} * \text{wrowinc} - \text{VEXPROW} * \text{wexprow};$$

Write

VROWINC to file SUMMARY header "VRWI"; VEXPROW to file SUMMARY header "VEXR"; VGOVROW to file SUMMARY header "VGVR"; VSAVROW to file SUMMARY header "VSRW"; V4TOT to file SUMMARY header "4TOT";

### A.10. SAM의 일관성(SAM consistency)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저축/투자 계정을 제외한 모든 SAM 계정의 균형(행의 합 = 열의 합)을 보장하는 방정식들을 도입한다. 하나를 빼 나머지 SAM 계정들이 모두 균형을 맞춘다면, 나머지 하나도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지막 항등식까지 강제할 수는 없으며, 다만 과연 균형이 성립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Excerpt 52의 과제이다. 여기서 수준과 백분을 변화에서 모두 총소



득이 총지출과 동일한지를 점검한다. 수준은 VSAMCHECK 계수에 대한 Assertion 을 통하여, 백분율은 방정식 E\_wsamcheck를 통하여 점검한다. 계정의 등식들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다면 변수 wsamcheck의 값이 영(zero)이 되어야 한다.

! Excerpt 52 of TABLO input file: !

! Check Accounting !

! Check if this is so, both in levels and in changes !

Variable

wsamcheck # Global (income expenditure) #;

Coefficient

VSAMCHECK # Global (income expenditure) #;

(all,i,IND) PURE\_PROFITS(i) # PURE\_PROFITS, should be zero #;

Formula

$$\text{VSAMCHECK} = \text{sum}\{h, \text{HOU}, \text{VSAVHOU}(h)\} + \text{VSAVENT} + \text{VSAVGOV} \\ \text{VCAPPRIV} + \text{VSAVROW};$$

(all,i,IND) PURE\_PROFITS(i) = V1TOT(i) sum{co,COSTCAT,COSTMAT(i,co)};

Assertion ABS[VSAMCHECK]<0.9;

Equation

E\_wsamcheck # Global (income expenditure) #

$$\text{V0GDPEXP} * \text{wsamcheck} = \text{sum}\{h, \text{HOU}, 100 * \text{VSAVHOU}(h) * \text{delSAVHOU}(h)\} \\ + \text{VSAVENT} * \text{wsavent} + \text{VSAVGOV} * \text{wsavgov} \\ \text{VCAPPRIV} * \text{wcappriv} + \text{VSAVROW} * \text{wsavrow};$$

! note wsamcheck is expressed as a % of GDP: it should be tiny !

Write

PURE\_PROFITS to file SUMMARY header "PURE";

VSAMCHECK to file SUMMARY header "SCHK";

### A.11. 세입 중립성(Revenue Neutrality)

Excerpt 53은 정부세입의 중립성을 유지하기위한 방정식을 추가로 제시해주고 있다. 첫 방정식 E\_wtaxtot 는 정부의 세금(상품세 및 소득세) 수입을 합산하고, 다음 방정식 E\_rtaxtot 는 이것을 실질가치로 환산한다. 마지막 방정식 E\_f\_entinctax 는 ftaxent (기업에 부과된 세금)과 f\_inctaxrate\_h (총 가구 세금 shifter)라는 두 개의 쉬프트 외생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KORGEM은 세입중립성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중립성 시뮬레이션을 위해, 연구자는 3개의 규정들 중에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첫째, f\_inctaxrate\_h와 rtaxtot를 스왑하면 모든 가구에 대한 세율에 동일한 변화를 가져오도록 함으로써 정부소득의 변화를 보상한다. 둘째, rtaxtot는 외생으로 유지하면서 ftaxent를 내생화하면 정부소득의 변화를 보상하는 기업세율의 변화를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f\_entinctax 를 외생변수로 하고 ftaxent 혹은 f\_inctaxrate\_h를 내생화함으로써, 기업세와 가구세가 함께 움직이도록 강제할 수 있다.

! Excerpt 53 of TABLO input file: !

!Add conditions for revenue neutrality!

Coefficient VTAXTOT # Sum of income and commodity tax revenue #;

Formula

VTAXTOT = sum{h, HOU, VTAXHOU(h)} + VTAXENT + V0TAX\_CSI;

Variable

wtaxtot # Sum of income and commodity tax revenue #;

rtaxtot # Real tax collection: for nom homogeniety test #;

f\_entinctax # Shifter: tax on enterprises, Fgostax follows f\_inctaxrate\_h #;

Equation

E\_wtaxtot # Sum of income and commodity tax revenue #

$$VTAXTOT*wtaxtot = \text{sum}\{h, HOU, VTAXHOU(h)*wtaxhou(h)\} + VTAXENT*wtaxent + V0TAX\_CSI*w0tax\_csi;$$



Subset MainUser is subset of MSAM;

Subset MTAXES is subset of MSAM;

Coefficient

(all,i,IND) PRVSHRINV(i) # Private share of investment by industry #;

(all,i,IND) DOMINV(i) # Investment use of dom goods #;

(all,i,IND) IMPINV(i) # Investment use of imp goods #;

Formula

(all,i,IND) PRVSHRINV(i) = 1.0 GOVSHRINV(i);

(all,i,IND) DOMINV(i) = sum{c,COM, V2BAS(c,"dom",i) +  
sum{s,SRC, sum{m,MAR, V2MAR(c,s,i,m) } } };

(all,i,IND) IMPINV(i) = sum{c,COM, V2BAS(c,"imp",i)};

Coefficient (all,u,MainUser) DOMUSE(u) # all use dom, basic + margins #;

Formula

DOMUSE("Firms") = sum{i,IND, sum{c,COM, V1BAS(c,"dom",i) +  
sum{s,SRC, sum{m,MAR, V1MAR(c,s,i,m) } } } };

DOMUSE("Households") = sum{c,COM, V3BAS(c,"dom") +  
sum{s,SRC, sum{m,MAR, V3MAR(c,s,m) } } };

DOMUSE("GovCurrent") = sum{c,COM, V5BAS(c,"dom")};

DOMUSE("GovInvest") = sum{i,IND, GOVSHRINV(i)\*DOMINV(i)};

DOMUSE("PrvInvest") = sum{i,IND, PRVSHRINV(i)\*DOMINV(i)};

DOMUSE("ROW") = sum{c,COM, V4BAS(c) + sum{m,MAR, V4MAR(c,m)} };

DOMUSE("Stocks") = sum{c,COM, V6BAS(c,"dom") };

Coefficient (all,u,MainUser) IMPUSE(u) # Imports at basic prices #;

Formula

IMPUSE("Firms") = sum{c,COM,sum{i,IND, V1BAS(c,"imp",i)} };

IMPUSE("Households") = sum{c,COM,V3BAS(c,"imp")};

IMPUSE("GovCurrent") = sum{c,COM,V5BAS(c,"imp")};

IMPUSE("GovInvest") = sum{i,IND, GOVSHRINV(i)\*IMPINV(i)};

IMPUSE("PrvInvest") = sum{i,IND, PRVSHRINV(i)\*IMPINV(i)};

IMPUSE("ROW") = 0;

IMPUSE("Stocks") = sum{c,COM,V6BAS(c,"imp")};

Coefficient (all,i,IND) V2TAX\_CS(i) # Taxes on investment #;

Formula (all,i,IND) V2TAX\_CS(i) = sum{c,COM, sum{s,SRC, V2TAX(c,s,i)}};

Coefficient

(All,r,MSAM)(All,c,MSAM) SAM(r,c) # Macro SAM #;

(All,t,MTAXES) TAXREV(t) # Tax revenue#;

Formula

(All,r,MSAM)(All,c,MSAM) SAM(r,c) = 0.0;

SAM("Labour","Firms") = V1LAB\_IO; SAM("Capital","Firms") = V1CAP\_I + V1LND\_I;

! Use of labour and capital !

(all,u,MainUser) SAM("DomCom",u) = DOMUSE(u);! Use of Domestic Commodities !

(all,u,MainUser) SAM("ImpCom",u) = IMPUSE(u); ! Use of Imported Commodities !

Formula

! Commodity tax payments!

SAM("ComTax","Firms") = V1TAX\_CSI;

SAM("ProdTax","Firms") = V1PTX\_I + V1OCT\_I;

SAM("ComTax","Households") = V3TAX\_CS;

SAM("ComTax","GovCurrent") = V5TAX\_CS;

SAM("ComTax","GovInvest") = sum{i,IND, GOVSHRINV(i) \* V2TAX\_CS(i)};

SAM("ComTax","PrvInvest") = sum{i,IND, PRVSHRINV(i) \* V2TAX\_CS(i)};

SAM("ComTax","ROW") = sum{c,COM, V4TAX(c)};

! Payment of Import duties !

SAM("Tariff","ImpCom") = V0TAR\_C;

! Income tax !

SAM("DirTax","Households") = sum{h,HOU, VTAXHOU(h)};

SAM("DirTax","Enterprises")= VTAXENT;

! Transfers to government !

SAM("GovCurrent","Households") = sum{h,HOU, VGOVHOU(h)};

SAM("GovCurrent","Enterprises") = VGOVENT;

! Household receipts !

SAM("Households","Labour") = sum{h,HOU,V1LABINC\_IO(h)};

SAM("Households","Capital") = VHOUGOS\_H;  
 SAM("Households","Enterprises") = VHOUEENT\_H;  
 SAM("Households","Households") = sum{a,HOU,sum{b,HOU, VHOUHOU(a,b)}};  
 SAM("Households","GovCurrent") = sum{h,HOU, VHOUGOV(h)};  
 SAM("Households","ROW") = sum{h,HOU, VHOUROW(h)};  
 ! Other Household payments !  
 SAM("Enterprises","Households") = sum{h,HOU, VENTHOU(h)};  
 SAM("PrvInvest","Households") = sum{h,HOU, VSAVHOU(h)};  
 ! Enterprises Receipts !  
 SAM("Enterprises","Capital") = VENTGOS;  
 SAM("Enterprises","ROW") = VENTROW;  
 ! Other Enterprises payments !  
 SAM("ROW","Enterprises") = VROWENT;  
 SAM("PrvInvest","Enterprises") = VSAVENT;  
 ! Government receipts!  
 SAM("GovCurrent","Capital") = VGOVGOS;  
 SAM("GovCurrent","ROW") = VGOVROW;  
 (All,t,MTAXES) TAXREV(t) = sum{c,MSAM, SAM(t,c)};  
 (all,t,MTAXES) SAM("GovCurrent",t) = TAXREV(t);  
 !Government payments!  
 SAM("ROW","GovCurrent") = VROWGOV;  
 SAM("PrvInvest","GovCurrent") = VSAVGOV;  
 SAM("GovInvest","GovCurrent") = sum{r,MSAM, SAM(r,"GovInvest")};  
 ! Others !  
 SAM("Firms","DomCom") = sum{c,MSAM, SAM("DomCom",c)}; !MAKE=SALES!  
 SAM("ROW","ImpCom") = sum{c,MSAM, SAM("ImpCom",c)} V0TAR\_C; !CIF!  
 SAM("Stocks","PrvInvest") = sum{r,MSAM, SAM(r,"Stocks")};  
 !Foreign Savings!  
 SAM("PrvInvest","ROW") = VSAVROW;

Coefficient (all,rc,MSAM) VMSAMCHECK(rc) # Global check on macro SAM #;

Formula

(all,rc,MSAM) VMSAMCHECK(rc) = sum{c,MSAM, SAM(rc,c)} sum{r,MSAM,  
SAM(r,rc)};

Write

VMSAMCHECK to FILE SUMMARY header "SAMC";

SAM to FILE SUMMARY header "MSAM";

(postsim) VMSAMCHECK to FILE SUMMARY header "USMC"

longname "Post update Global check on macro SAM";

(postsim) SAM to FILE SUMMARY header "UMSM"

longname "Post update Macro SAM";

Assertion (all,rc,MSAM) ABS[VMSAMCHECK(rc)]<0.9;

B. 시나리오별 거시 SAM의 구조

〈부표 B-1〉 시나리오 1

(단위: 10억원)

SAM	1 Firms	2 DomCom	3 ImpCom	4 Labour	5 Capital	6 ProdTax	7 ComTax	8 Tariff	9 DirTax
1 Firms	0	9,724	0	0	0	0	0	0	0
2 DomCom	2,688	0	0	0	0	0	0	0	0
3 ImpCom	227	0	0	0	0	0	0	0	0
4 Labour	4,102	0	0	0	0	0	0	0	0
5 Capital	2,243	0	0	0	0	0	0	0	0
6 ProdTax	294	0	0	0	0	0	0	0	0
7 ComTax	171	0	0	0	0	0	0	0	0
8 Tariff	0	0	16	0	0	0	0	0	0
9 DirTax	0	0	0	0	0	0	0	0	0
10 Households	0	0	0	4,102	828	0	0	0	0
11 Enterprises	0	0	0	0	1,214	0	0	0	0
12 GovCurrent	0	0	0	0	279	294	363	16	4,076
13 GovInvest	0	0	0	0	0	0	0	0	0
14 PrvInvest	0	0	0	0	0	0	0	0	0
15 Stocks	0	0	0	0	0	0	0	0	0
16 ROW	0	0	556	0	0	0	0	0	0
Total	9,724	9,724	572	4,102	2,321	294	363	16	4,076



(단위: 10억원)

SAM	10 Households	11 Enterprises	12 GovCurrent	13 GovInvest	14 PrvInvest	15 Stocks	16 ROW	Total
1 Firms	0	0	0	0	0	0	0	9,724
2 DomCom	3,085	0	4,482	7	582	138	-1,257	9,724
3 ImpCom	285	0	0	1	59	0	0	572
4 Labour	0	0	0	0	0	0	0	4,102
5 Capital	0	0	78	0	0	0	0	2,321
6 ProdTax	0	0	0	0	0	0	0	294
7 ComTax	192	0	0	0	0	0	0	363
8 Tariff	0	0	0	0	0	0	0	16
9 DirTax	3,880	196	0	0	0	0	0	4,076
10 Households	0	73	706	0	0	0	87	5,796
11 Enterprises	78	0	0	0	0	0	4	1,296
12 GovCurrent	595	189	0	0	0	0	1	5,813
13 GovInvest	0	0	8	0	0	0	0	8
14 PrvInvest	-2,343	621	527	0	0	0	1,974	779
15 Stocks	0	0	0	0	138	0	0	138
16 ROW	23	218	12	0	0	0	0	809
Total	5,796	1,296	5,813	8	779	138	809	45,830

## 〈부표 B-2〉 시나리오 2

(단위: 10억원)

SAM	1 Firms	2 DomCom	3 ImpCom	4 Labour	5 Capital	6 ProdTax	7 ComTax	8 Tariff	9 DirTax
1 Firms	0	4,169	0	0	0	0	0	0	0
2 DomCom	1,076	0	0	0	0	0	0	0	0
3 ImpCom	172	0	0	0	0	0	0	0	0
4 Labour	2,326	0	0	0	0	0	0	0	0
5 Capital	514	0	0	0	0	0	0	0	0
6 ProdTax	-3	0	0	0	0	0	0	0	0
7 ComTax	84	0	0	0	0	0	0	0	0
8 Tariff	0	0	1	0	0	0	0	0	0
9 DirTax	0	0	0	0	0	0	0	0	0
10 Households	0	0	0	2,326	190	0	0	0	0
11 Enterprises	0	0	0	0	278	0	0	0	0
12 GovCurrent	0	0	0	0	64	-3	17	1	4,093
13 GovInvest	0	0	0	0	0	0	0	0	0
14 PrvInvest	0	0	0	0	0	0	0	0	0
15 Stocks	0	0	0	0	0	0	0	0	0
16 ROW	0	0	117	0	0	0	0	0	0
Total	4,169	4,169	118	2,326	532	-3	17	1	4,093

(단위: 10억원)

SAM	10 Households	11 Enterprises	12 GovCurrent	13 GovInvest	14 PrvInvest	15 Stocks	16 ROW	Total
1 Firms	0	0	0	0	0	0	0	4,169
2 DomCom	-770	0	3,977	-8	68	-7	-166	4,169
3 ImpCom	-68	0	0	-2	15	0	0	118
4 Labour	0	0	0	0	0	0	0	2,326
5 Capital	0	0	18	0	0	0	0	532
6 ProdTax	0	0	0	0	0	0	0	-3
7 ComTax	-68	0	0	0	0	0	0	17
8 Tariff	0	0	0	0	0	0	0	1
9 DirTax	3,259	834	0	0	0	0	0	4,093
10 Households	0	-36	287	0	0	0	35	2,803
11 Enterprises	18	0	0	0	0	0	2	298
12 GovCurrent	292	-92	0	0	0	0	0	4,372
13 GovInvest	0	0	-10	0	0	0	0	-10
14 PrvInvest	164	-303	95	0	0	0	120	76
15 Stocks	0	0	0	0	-7	0	0	-7
16 ROW	-24	-106	5	0	0	0	0	-9
Total	2,803	298	4,372	-10	76	-7	-9	22,945

## 〈부표 B-3〉 시나리오 3

(단위: 10억원)

SAM	1 Firms	2 DomCom	3 ImpCom	4 Labour	5 Capital	6 ProdTax	7 ComTax	8 Tariff	9 DirTax
1 Firms	0	10,720	0	0	0	0	0	0	0
2 DomCom	2,977	0	0	0	0	0	0	0	0
3 ImpCom	237	0	0	0	0	0	0	0	0
4 Labour	4,419	0	0	0	0	0	0	0	0
5 Capital	2,553	0	0	0	0	0	0	0	0
6 ProdTax	347	0	0	0	0	0	0	0	0
7 ComTax	187	0	0	0	0	0	0	0	0
8 Tariff	0	0	18	0	0	0	0	0	0
9 DirTax	0	0	0	0	0	0	0	0	0
10 Households	0	0	0	4,419	943	0	0	0	0
11 Enterprises	0	0	0	0	1,382	0	0	0	0
12 GovCurrent	0	0	0	0	318	347	426	18	4,862
13 GovInvest	0	0	0	0	0	0	0	0	0
14 PrvInvest	0	0	0	0	0	0	0	0	0
15 Stocks	0	0	0	0	0	0	0	0	0
16 ROW	0	0	635	0	0	0	0	0	0
Total	10,720	10,720	653	4,419	2,643	347	426	18	4,862

(단위: 10억원)

SAM	10 Households	11 Enterprises	12 GovCurrent	13 GovInvest	14 PrvInvest	15 Stocks	16 ROW	Total
1 Firms	0	0	0	0	0	0	0	10,720
2 DomCom	3,778	0	4,571	10	674	164	-1,453	10,720
3 ImpCom	348	0	0	1	67	0	0	653
4 Labour	0	0	0	0	0	0	0	4,419
5 Capital	0	0	89	0	0	0	0	2,643
6 ProdTax	0	0	0	0	0	0	0	347
7 ComTax	239	0	0	0	0	0	0	426
8 Tariff	0	0	0	0	0	0	0	18
9 DirTax	347	4,515	0	0	0	0	0	4,862
10 Households	0	-201	781	0	0	0	96	6,039
11 Enterprises	89	0	0	0	0	0	5	1,476
12 GovCurrent	618	-522	0	0	0	0	1	6,069
13 GovInvest	0	0	11	0	0	0	0	11
14 PrvInvest	497	-1,715	604	0	0	0	1,518	905
15 Stocks	0	0	0	0	164	0	0	164
16 ROW	122	-602	13	0	0	0	0	168
Total	6,039	1,476	6,069	11	905	164	168	49,639

## 〈부표 B-4〉 시나리오 4

(단위: 10억원)

SAM	1 Firms	2 DomCom	3 ImpCom	4 Labour	5 Capital	6 ProdTax	7 ComTax	8 Tariff	9 DirTax
1 Firms	0	9,724	0	0	0	0	0	0	0
2 DomCom	2,688	0	0	0	0	0	0	0	0
3 ImpCom	227	0	0	0	0	0	0	0	0
4 Labour	4,102	0	0	0	0	0	0	0	0
5 Capital	2,243	0	0	0	0	0	0	0	0
6 ProdTax	294	0	0	0	0	0	0	0	0
7 ComTax	171	0	0	0	0	0	0	0	0
8 Tariff	0	0	16	0	0	0	0	0	0
9 DirTax	0	0	0	0	0	0	0	0	0
10 Households	0	0	0	4,102	828	0	0	0	0
11 Enterprises	0	0	0	0	1,214	0	0	0	0
12 GovCurrent	0	0	0	0	279	294	363	16	530
13 GovInvest	0	0	0	0	0	0	0	0	0
14 PrvInvest	0	0	0	0	0	0	0	0	0
15 Stocks	0	0	0	0	0	0	0	0	0
16 ROW	0	0	556	0	0	0	0	0	0
Total	9,724	9,724	572	4,102	2,321	294	363	16	530

(단위: 10억원)

SAM	10 Households	11 Enterprises	12 GovCurrent	13 GovInvest	14 PrvInvest	15 Stocks	16 ROW	Total
1 Firms	0	0	0	0	0	0	0	9,724
2 DomCom	3,085	0	4,482	7	582	138	-1,257	9,724
3 ImpCom	285	0	0	1	59	0	0	572
4 Labour	0	0	0	0	0	0	0	4,102
5 Capital	0	0	78	0	0	0	0	2,321
6 ProdTax	0	0	0	0	0	0	0	294
7 ComTax	192	0	0	0	0	0	0	363
8 Tariff	0	0	0	0	0	0	0	16
9 DirTax	334	196	0	0	0	0	0	530
10 Households	0	73	706	0	0	0	87	5,796
11 Enterprises	78	0	0	0	0	0	4	1,296
12 GovCurrent	595	189	0	0	0	0	1	2,267
13 GovInvest	0	0	8	0	0	0	0	8
14 PrvInvest	1,110	621	-3,019	0	0	0	2,068	779
15 Stocks	0	0	0	0	138	0	0	138
16 ROW	117	218	12	0	0	0	0	903
Total	5,796	1,296	2,267	8	779	138	903	38,831





## 간행물회원제 안내

###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a href="http://www.yes24.com">http://www.yes24.com</a> | ▪ 알라딘 <a href="http://www.aladdin.co.kr">http://www.aladdin.co.kr</a> |

**KI HASA**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연구 20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출 및 수입구조 분석	조재국
연구 2011-03	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연구 2011-04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실비아
연구 20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연구 2011-06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농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연구 20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연구 20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연구 2011-09	인구집단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해	김동진
연구 20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방안	황나미
연구 20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신영석
연구 2011-12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연구 2011-13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연구 2011-1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연구 20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애·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연구 2011-16-1	선진국의 아동사태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연구 20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고경환
연구 20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연구 20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연구 2011-17-4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연구 2011-17-6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원종욱
연구 20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연구 2011-18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정책 개선방안	이태진
연구 20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연구 20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연구 20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연구 20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연구 20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연구 20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연구 20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연구 20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연구 2011-29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 구조 연구	강혜규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이삼식
연구 20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계고방안	정영철
연구 20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연구 20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연구 2011-37-1	출산율예측모형개발	이삼식
연구 20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외부)
연구 20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연구 2011-37-4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연구 20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외부)
연구 20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연구 20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연구 2011-37-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외부)
연구 20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연구 20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소정
연구 20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연구 20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연구 20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중적연구기반(I)	오영희
연구 20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연구 20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연구 20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편-	이삼식
연구 2011-37-17	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연구 20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시각지대 분석-	이소정
연구 2011-37-19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연구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외부)
연구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정영철(외부)
연구 20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이미정(외부)
연구 20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연구 20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김동진
연구 20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최은진
연구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김동진
연구 20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연구 20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신
연구 20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연구 20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연구 2011-42	취약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1-43	천사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이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44-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상호
연구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4 • 간행물위원회 안내 및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연구 2012-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김대중
연구 2012-03	초·중·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상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욱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건강보장체계의 New Paradigm 전환에 따른 기반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연구 2012-2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육구의 대응성 분석	고경환
연구 2012-24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연구 2012-25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과 노르디 모델을 중심으로	윤석명·신화연
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완
연구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 자산 분포와 노후빈곤 가능성 분석	남상호
연구 2012-31	현재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김미곤
연구 2012-3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옥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연구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연구 2012-34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 (터키)	이현주
연구 2012-35	인구구조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2-3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2-37	2012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2-38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강혜규
연구 2012-39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김미숙
연구 2012-40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김성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심층분석	
연구 2012-4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2-42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 개괄,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박수지
연구 2012-43	보건복지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정책과제	정영철
연구 2012-44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2	장영식
연구 2012-45	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세록
연구 2012-46	보건복지분야 통계조사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손창균
연구 2012-47-1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이삼식
연구 2012-47-2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저출산정책연계방안	이상립
연구 2012-47-4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김현식
연구 2012-47-5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이철선
연구 2012-47-6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염주희
연구 2012-47-7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이삼식
연구 2012-47-8	임신 및 출산을 위한 난임 시술비 자비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인공수정 대상	황나미
연구 2012-47-9	신생아기 저출생체중이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최정수
연구 2012-47-10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정은희
연구 2012-47-1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김현식
연구 2012-47-12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이현창)
연구 2012-47-13	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대응과제	이상립
연구 2012-47-14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정경희
연구 2012-47-15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 M시 종적연구(II)	오영희
연구 2012-47-16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17	노인장기요양육구필요도측정방식개발	이윤경
연구 2012-47-18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정경희
연구 2012-47-19	복지용구사업시정규모추계와활성화방안	김대중
연구 2012-47-20	저출산현상의동태적분석을위한지역사례조사	박종서
연구 2012-47-21	백세시대 대응 고령화 지역 연구	이윤경
연구 2012-47-22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영국 편	이삼식
연구 2012-47-23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국가의 활기찬고령화(active ageing)정책을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2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II)	오영희
연구 2012-47-25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정경희
연구 2012-47-26	출산력시계열자료 구축 및 분석	신창우·이삼식
연구 2012-47-2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공적 전달체계 개편 방안: 공적전달체계의 수직적연계와 수평적배열의 재구조화	정홍원
연구 2012-47-28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자녀의 만혼화	(이만우)
연구 2012-47-29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0	농업인의 노후준비실태와 정책대안	(최경환)
연구 2012-47-31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 연구	박종서
연구 2012-4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6년 및 2011년 결과 보고서 -	오영호
연구 2012-49-1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이상영
연구 2012-49-2	지방자치단체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김동진
연구 2012-49-3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및 정책과제	최은진

6 • 간행물위원회 안내 및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49-4	건강증진서비스이용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 연구	최은진
연구 2012-50-1	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김남순
연구 2012-50-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개선 방안	김정선
연구 2012-51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 연구: 빈곤정책	홍석표
연구 2012-52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3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2-5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확충 전략II: 영유아돌봄 및 초등 방과후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2-54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승권
연구 2012-55-1	2012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최현수
연구 2012-55-2	2012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남상호
연구 2012-56-1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정영호
연구 2012-56-2	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의료이용 심층연구	김대중
연구 2012-57	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2-58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년차)	이연희
연구 2012-59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이상영
연구 2012-60	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실태	황나미
연구 2012-61	사회보장 재정추계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원종욱
연구 2012-62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신영석
연구 2012-63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윤강재
연구 2012-64	우리나라의 자살급증 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영
연구 2012-65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세 재정정책 정립 방향 -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	고경환
연구 2012-66	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합의	김혜련
연구 2012-67	보건복지 지표·지수 연구	남상호
연구 2012-68	2012년 지역복지개발평가센터 운영보고서	김승권
협동 2012-1	2012년 사회보장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신호성
협동 2012-2	2012년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영호